외교통상역량강화를 위한 외교전략
- 세미나 발제문 및 연구용역 자료집 -

[제3분과위 2편]

2004. 4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문서번호 미중22000-762
시행일자 2003-11-07 (3년)
수신 정책기획관
참조 정책총괄과장

제목 2003년도 외교전략개발사업 결과물 송부

대 : 정총 22000-941(2003.10.21)

대호 우리국이 금년도에 추진해온 표제사업 결과물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아

- 1. 연구용역 보고서 (5건)

<table>
<thead>
<tr>
<th>순번</th>
<th>연구용역 주제</th>
<th>연구용역연구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미국의 대중미 및 카리브 정책</td>
<td>김진오 전문연구원(KIEP)</td>
<td>첨부 1</td>
</tr>
<tr>
<td>2</td>
<td>EU의 대중남미 정책과 항후 EU-중남미관계의 전망</td>
<td>최윤석 박사(라틴비즈넷)</td>
<td>첨부 2</td>
</tr>
<tr>
<td>3</td>
<td>미국의 대쿠바 정책과 전망</td>
<td>김기현 교수(선문대)</td>
<td>첨부 3</td>
</tr>
<tr>
<td>4</td>
<td>미국의 대남미 정책</td>
<td>이상현 연구원(세종연구소)</td>
<td>첨부 4</td>
</tr>
<tr>
<td>5</td>
<td>최근 중남미 경제통합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td>
<td>문남권 박사(외국어대)</td>
<td>첨부 5</td>
</tr>
</tbody>
</table>

2. 세미나 결과 요약 (5회)

<table>
<thead>
<tr>
<th>세미나 주제</th>
<th>발제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대쿠바 관계 개선 방향</td>
<td>장근호 중미과장</td>
</tr>
<tr>
<td>2</td>
<td>미국의 안데스무역특혜법(APTDEA) 개정과 우리기업의 안데스지역 진출방안</td>
<td>권기수 박사(KIEP)</td>
</tr>
<tr>
<td>3</td>
<td>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td>
<td>곽재성 교수(경희대)</td>
</tr>
<tr>
<td>4</td>
<td>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 빈번 발생원인 및 대책</td>
<td>김종섭 교수(서울대) 및 윤택동 교수(외국어대)</td>
</tr>
<tr>
<td>5</td>
<td>한-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대멕시코 관계개선 방안</td>
<td>정인교 책임연구원(KIEP)</td>
</tr>
</tbody>
</table>
3. Retreat (1회)
- "대중남미 외교 강화방안" 제하 직원 간담회 (첨부 11). 끝.
미국의 중미 및 카리브 정책과 향후 미국-중미·카리브 관계 전망

2003. 9.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미국의 황중미 및 카리브정책과 향후 미국-중미-카리브 관계 전망"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9월
<研究責任者>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專門研究員 金真梧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Ⅱ. 탈냉전시대 미국의 좌중미·카리브지역 정책과 경제관계 2.
1. 미국의 좌중미·카리브 정책 2.
   가. 좌중미 정책 2.
   나. 좌카리브 정책 5.
2. 경제협력 관계 6.
   가. 교역관계 6.
   나. 투자관계 11.

Ⅲ. 미국의 좌중미·카리브 주요 정책수단 및 목표 15.
1. CBI 15.
   가. 카리브지역지원계획(CBI → CBI II ) 15.
   나. 카리브무역동반자법(CBTPA) 17.
2. FTA 18.
   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18.
   나. 미국-중미 자유무역지대(CAFTA) 22.
3. Third Border Initiative 29.
4. 향후 미국의 좌중미·카리브 정책 변화 전망 30.

Ⅳ. 우리기업의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33.
1. 한국의 좌중미·카리브 교역동향 33.
   가. 중미지역 33.
   나. 카리브지역 34.
2. 한국의 좌중미·카리브 투자동향 36.
   가. 좌중미 직접투자 36.
   나. 좌카리브 직접투자 38.
3. 대응전략 40.
I. 연구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과 유사하게 중미 및 카리브 도서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주된 관심은 안보적 차원에서 집중되었음.

- 특히, 푸바 사회주의화 이후 지역에서의 공산화를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지역에 대한 무수한 군사적 개입으로 나타났고, 중미 및 카리브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보수 우파정부와 좌파간의 알력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치·사회 불안이 지속되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무상 지원이 시행되고,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일반특혜관세(GSP) 혹은 카리브지역지원계획(CBI) 등의 특혜조치가 부여되었음.

-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서는 정치·사회적 안정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이 조성되었는데,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민주화를 비롯한 각국의 노력들이 더불어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특히, 1994년 NAFTA 출범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중미 및 카리브지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멕시코에 비하여 약화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은 NAFTA에 준하는 특혜(NAFTA-parity)를 제공하도록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음.

- 그 결과 CBI에 입각한 무역특혜가 카리브지역무역촉진법(CBTPA)으로 확대·연장되고,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중미간 자유무역협정(CAFTA)이 추진되었으며, 테러·마약·AIDS퇴치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Third Border Initiative 등으로 구체화되었음.

- 미국의 최중미·카리브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지역 진출 혹은 투자회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왔는데, CBTPA와 최근 협상중
인 CAFTA 등이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응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미·카리브 관계 분석을 통해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II. 탈냉전시대 미국의 쾌중미·카리브지역 정책과 경제관계

1. 미국의 쾌중미·카리브 정책

가. 쾌중미 정책

■ 20세기 미국의 쾌중미 정책방향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냉전시대 공산주의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정되었음.

- 위험에 대응한 대외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중미지역에서 내전을 비롯한 장기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음.

- 냉전시대에 중미지역 공산화 방지를 목표로한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이슈였는데, 그 와중에 민주주의 정부들이 집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예를 들면, 1954년 과테말라에서는 미국의 바나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토지개혁을 시도한 Jacobo Arbenz 민주정부가 CIA가 주도한 유혈 쿠데타로 축출된 뒤 군사독재 정치와 내전이 장기화되었음.

○ 또한 1980년대에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정권과 좌익 게릴라간의 내전이 과테말라, 나이카라과, 엘살바도르에서 발발했는데, 매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미는 냉전의 주요 격전장이 되었음.

○ 나이카라과의 경우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Contras)이 조직되어 산디니스타(Sandinista)정부를 전복하는데 이용되고,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에
서는 대량원조를 조건으로 경찰력을 무장시키고 사회복지체제를 약화시키기도 하였음.

- 그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 중미지역은 끝없는 분쟁과 타협 및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지 않은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왕따화되었음.

■ 끝없는 내전을 야기한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미지역 정상들이 1987년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계획(Esquiplulas II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음.

- 그와 함께 1989년 파나마에서는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 대통령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시도되었음.


- 그 와중에 1989년 파나마에서는 노리에가(Manuel Antonio Noriega) 대통령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개입이 시도되었음.

■ 탈냉전시대 중미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위협 요소가 사라지면서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지원이 급격한 경제적 원조 축소, 중미지역 민주세력과의 협력 부족, 중미지역 군부세력과의 연계(군사훈련, 기지, 정보활동 등) 강화 등과 같은 정책들에 의하여 훼손되고 있음.

- 클린턴 정부의 경우 선언적으로는 중미 현실을 반영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냉전과 내전 종식에 따른 미국의 이해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원프로그램들은 유기적이지 못하고 실현되지도 못하였음.

■ 반군을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미국의 선거지원(1994년 엘살바도르), UN 선거감시단 지원(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프로그램들의 성과는 미국 대외정책의 또 다른 측면들에 의하여 훼손되었음.
대외원조 축소를 야기한 미국의 新고립주의적인 경향으로, 1990년 이후 중미지역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은 90% 이상 줄어들었는데, 경제적 지원 감소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승 작용하여 중미지역 거시 경제적 불균형과 민주주의 체제 약화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빈곤과 내전으로 황폐화된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는 산디니스타 정부(1979~90년)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 반환을 요구한 미 공화당 의원들에 의하여 지연되고, 1980년대 자행된 군부의 인권남용에 대한 온두라스 시민단체들의 진상조사는 미국의 비협조와 지연으로 차단되었음.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 지연되기도 하였음.

한편, 아리아스를 주축으로 중미지역 근비축소 노력이 추진되었지만, 미국은 중미지역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중미지역 군 인사를 정규 군사훈련(국제군사교육훈련프로그램·IMET, 미주군사학교·SOA)에 초청하고, 중미와 공동 군사훈련을 시행하며, CIA와 밀접한 연계 속에 마약밀매, 돈세탁 등에 연관된 군부의 역할 증대를 지지하고 있음.

그러한 미군의 지원은 중미 군대의 전문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인권 남용, 마약밀매, 돈세탁 등에 연관된 군부의 역할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중미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중미에 대한 미국의 바람직한 대외정책은

- 중미지역 기존의 군부와의 연계 축소, 병력 축소 및 군대 폐지 지원, 미주군사학교 폐지를 비롯한 군사원조 및 혼란 폐지를 포함한 비무장에 대한 명확한 지원,

- 온두라스 미군기지 철수, 인권 및 민주주의 지지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
내전 이후 복구 및 화해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 등 새로운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임.

나. 카리브 정책

■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냉전적 관점에 의하여 지배된 포괄적인 대외정책을 내에서 이루어진 극 중남미 정책의 일부분이었고, 전술한 극 중미 정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과 카리브지역은 민주주의, 법치, 민간부문 주도의 시장경제 촉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공유, 장기적인 상호 이익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은 자메이카(1962년)를 시작으로 카리브 국가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구축되었다.

- 1975년 출범한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독립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미지역과 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많지 않았음.

■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상의 위협요소 감소, 국제정치질서 재편, 세계화 확산에 따른 국제경제질서 재편으로 미국에 대한 카리브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특히, 미국의 안보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중동, 중국, 이라크, 북한, 구소련 및 동유럽 등으로 이동되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카리브지역은 미국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카리브 관계에서는 여전히 안보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들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바, 마약밀매 퇴치, 불법자금 세탁, 불법무기 거래, 이민(합법 및 불법 포함) 및 범죄자 송환, AIDS 퇴치, 환

1 CARICOM 회원국이 아닌 쿠바와 도미니카공(공)을 제외하고 1983년에 미군은 그레나다를 침공하고 1994년 아이티에 군사적 개입을 단행함.
경보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간 파트너십이 카리브지역의 경제적 이해 및 사회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2. 경제협력 관계

가. 교역관계

1) 미국의 쿠파수출입

미국과 중미지역(파나마 포함, 벨리세 제외) 사이의 교역량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여, 2001년에는 1995년보다 62.8% 증가한 228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01년 미국-중미간 교역량은 미국 총교역량의 1.2%에 불과하지만, 중미지역 총교역량의 50.9%, 미국-중남미 총교역량의 6.3%에 해당함.

- 1995~2001년 사이에 미국의 쿠파수출은 총수출 증가율(동 기간 평균 4.0%)을 상회(5.9%)하는 추세로 증가해 왔음.

- 그러나 2002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증가율(-2.8%)을 기록했음.

- 2001년 기준으로 쿠팰스티리카 수출이 쿠파총수출의 24.1%를, 훌손두라스가 23.5%를, 훌과테말라가 18.1%를, 훌엘살바도르가 17.1%를, 훌파나마가 12.9%를, 그리고 훌니카르과가 4.3% 차지함.

- 1995~2001년 사이에 미국의 쿠파수입은 수출과 동일하게 총수입 증가율(동 기간 평균 7.6%)을 상회(11.6%)하는 추세로 증가해 왔음.

- 그리고 2002년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마이너스 증가율(-4.8%)을 기록했음.
- 2001년 기준으로 축과테말라 수입이 총수입의 26.1%를, 옛은두라스가 26.0%를, 코스타리카가 24.8%를, 옛알살바도르가 15.5%를, 옛니카라과가 5.0%를, 그리고 옛파나마가 2.5%를 차지함.

<표 1> 미국의 축중미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과테말라</td>
<td>1,652</td>
<td>1,564</td>
<td>1,728</td>
<td>1,941</td>
<td>1,813</td>
<td>1,880</td>
<td>1,877</td>
<td>2,044</td>
</tr>
<tr>
<td>옛두라스</td>
<td>1,281</td>
<td>1,641</td>
<td>2,014</td>
<td>2,323</td>
<td>2,338</td>
<td>2,598</td>
<td>2,437</td>
<td>2,571</td>
</tr>
<tr>
<td>옛 ريال리아</td>
<td>250</td>
<td>263</td>
<td>289</td>
<td>337</td>
<td>369</td>
<td>378</td>
<td>443</td>
<td>437</td>
</tr>
<tr>
<td>옛알살바도르</td>
<td>1,111</td>
<td>1,072</td>
<td>1,398</td>
<td>1,515</td>
<td>1,521</td>
<td>1,763</td>
<td>1,771</td>
<td>1,664</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1,739</td>
<td>1,814</td>
<td>2,024</td>
<td>2,299</td>
<td>2,376</td>
<td>2,428</td>
<td>2,496</td>
<td>3,116</td>
</tr>
<tr>
<td>소계</td>
<td>6,033</td>
<td>6,354</td>
<td>7,453</td>
<td>8,415</td>
<td>8,417</td>
<td>9,047</td>
<td>9,024</td>
<td>9,832</td>
</tr>
<tr>
<td>파나마</td>
<td>1,391</td>
<td>1,378</td>
<td>1,538</td>
<td>1,753</td>
<td>1,726</td>
<td>1,613</td>
<td>1,333</td>
<td>1,407</td>
</tr>
<tr>
<td>총계</td>
<td>7,424</td>
<td>7,732</td>
<td>8,991</td>
<td>10,168</td>
<td>10,143</td>
<td>10,660</td>
<td>10,357</td>
<td>11,239</td>
</tr>
</tbody>
</table>

주: 1) US Census Bureau 기준.  

<표 2> 미국의 축중미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과테말라</td>
<td>1,632</td>
<td>1,786</td>
<td>2,380</td>
<td>2,441</td>
<td>2,767</td>
<td>3,316</td>
<td>3,257</td>
<td>2,796</td>
</tr>
<tr>
<td>옛두라스</td>
<td>1,542</td>
<td>1,900</td>
<td>2,439</td>
<td>2,662</td>
<td>2,792</td>
<td>3,174</td>
<td>3,249</td>
<td>3,261</td>
</tr>
<tr>
<td>옛 ريال리아</td>
<td>252</td>
<td>368</td>
<td>459</td>
<td>471</td>
<td>497</td>
<td>97</td>
<td>631</td>
<td>680</td>
</tr>
<tr>
<td>옛알살바도르</td>
<td>843</td>
<td>1,111</td>
<td>1,385</td>
<td>1,479</td>
<td>1,640</td>
<td>1,953</td>
<td>1,935</td>
<td>1,982</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1,998</td>
<td>2,121</td>
<td>2,489</td>
<td>2,927</td>
<td>4,085</td>
<td>3,717</td>
<td>3,091</td>
<td>3,142</td>
</tr>
<tr>
<td>소계</td>
<td>6,267</td>
<td>7,286</td>
<td>9,152</td>
<td>9,980</td>
<td>11,781</td>
<td>12,757</td>
<td>12,163</td>
<td>11,861</td>
</tr>
<tr>
<td>파나마</td>
<td>335</td>
<td>388</td>
<td>406</td>
<td>330</td>
<td>396</td>
<td>346</td>
<td>312</td>
<td>303</td>
</tr>
<tr>
<td>총계</td>
<td>6,602</td>
<td>7,674</td>
<td>9,558</td>
<td>10,310</td>
<td>12,177</td>
<td>13,103</td>
<td>12,475</td>
<td>12,164</td>
</tr>
</tbody>
</table>

주: 1) US Census Bureau 기준.  

■ 미국의 축중미 주요 수출품은 면직물, Apparel(가정용재품, 직물), 섬유류, 수공의류, 신문용지, 플라스틱제품, 컴퓨터 부품, 연료, 밀, 옥수수 등임.
- 반면, 주요 수입품은 Apparel(가정용제품, 면직물), Apparel(가정용제품 기타 직물), 과일 및 가공품, 커피, Apparel(가정용제품, 모직물) 등임.

○즉, 중중미 수입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의류와 그 부속품이라 할 수 있음.

○그 외에 파테말라에서는 원유 수입이, 코스타리카에서는 컴퓨터 부품 및 반도체 수입이, 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두드러짐.

2) 미국의 흐카리브 수출입

■ 미국과 카리브지역 사이의 교역량은 경기침체기인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기록한 바, 2001년에는 1993년보다 64.7% 증가한 181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01년 미국-카리브 교역량은 미국 총교역량의 1.0%에 불과한데, 미국-중남미 교역량의 5.0%에 해당함.

- 그러나 도미니카공화국을 제외할 경우 미-CARICOM 교역량은 미국 총교역량의 0.5%와 미국-중남미 교역량의 2.6%에 불과함.

■ 1994~2001년 사이에 미국의 흐카리브지역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13.6%를 기록했는데, 2001~02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1년 기준으로 흐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이 총수출의 46.0%를, 자메이카가 14.6%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11.3%를, 그리고 바하마가 10.6%를 차지하여 지역 내에서 편중이 심함을 알 수 있음.

<표 3> 미국의 흐카리브지역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안티과바부다</td>
<td>73</td>
<td>59</td>
<td>97</td>
<td>82</td>
<td>85</td>
<td>96</td>
<td>95</td>
<td>137</td>
<td>96</td>
<td>81</td>
</tr>
<tr>
<td>바하마</td>
<td>704</td>
<td>686</td>
<td>661</td>
<td>725</td>
<td>810</td>
<td>815</td>
<td>845</td>
<td>1,063</td>
<td>1,022</td>
<td>975</td>
</tr>
<tr>
<td>바베이도스</td>
<td>146</td>
<td>161</td>
<td>201</td>
<td>362</td>
<td>281</td>
<td>300</td>
<td>309</td>
<td>286</td>
<td>268</td>
<td></td>
</tr>
<tr>
<td>벨리즈</td>
<td>135</td>
<td>115</td>
<td>100</td>
<td>107</td>
<td>115</td>
<td>120</td>
<td>137</td>
<td>199</td>
<td>173</td>
<td>138</td>
</tr>
<tr>
<td>도미니카</td>
<td>27</td>
<td>26</td>
<td>25</td>
<td>34</td>
<td>38</td>
<td>52</td>
<td>40</td>
<td>37</td>
<td>31</td>
<td>45</td>
</tr>
<tr>
<td>그레나다</td>
<td>24</td>
<td>24</td>
<td>27</td>
<td>36</td>
<td>41</td>
<td>56</td>
<td>65</td>
<td>80</td>
<td>60</td>
<td>56</td>
</tr>
<tr>
<td>가이아나</td>
<td>123</td>
<td>110</td>
<td>141</td>
<td>137</td>
<td>143</td>
<td>146</td>
<td>147</td>
<td>159</td>
<td>141</td>
<td>128</td>
</tr>
<tr>
<td>아이티</td>
<td>221</td>
<td>211</td>
<td>551</td>
<td>474</td>
<td>500</td>
<td>548</td>
<td>608</td>
<td>572</td>
<td>550</td>
<td>573</td>
</tr>
<tr>
<td>자메이카</td>
<td>1,113</td>
<td>1,066</td>
<td>1,421</td>
<td>1,491</td>
<td>1,417</td>
<td>1,304</td>
<td>1,305</td>
<td>1,360</td>
<td>1,407</td>
<td>1,420</td>
</tr>
<tr>
<td>세인트바스네비스</td>
<td>56</td>
<td>58</td>
<td>58</td>
<td>52</td>
<td>56</td>
<td>62</td>
<td>69</td>
<td>83</td>
<td>66</td>
<td>49</td>
</tr>
<tr>
<td>세인트루시아</td>
<td>99</td>
<td>81</td>
<td>81</td>
<td>84</td>
<td>89</td>
<td>93</td>
<td>99</td>
<td>104</td>
<td>80</td>
<td>99</td>
</tr>
<tr>
<td>세인트빈센트그레나다</td>
<td>38</td>
<td>38</td>
<td>42</td>
<td>45</td>
<td>54</td>
<td>289</td>
<td>102</td>
<td>44</td>
<td>40</td>
<td>40</td>
</tr>
<tr>
<td>수리남</td>
<td>118</td>
<td>122</td>
<td>190</td>
<td>223</td>
<td>183</td>
<td>173</td>
<td>150</td>
<td>131</td>
<td>158</td>
<td>125</td>
</tr>
<tr>
<td>트리니담토바고</td>
<td>529</td>
<td>541</td>
<td>689</td>
<td>665</td>
<td>1,106</td>
<td>983</td>
<td>810</td>
<td>1,104</td>
<td>1,090</td>
<td>1,020</td>
</tr>
<tr>
<td>CARICOM 총계</td>
<td>3,406</td>
<td>3,238</td>
<td>4,284</td>
<td>4,517</td>
<td>4,936</td>
<td>5,018</td>
<td>4,772</td>
<td>5,372</td>
<td>5,200</td>
<td>5,017</td>
</tr>
<tr>
<td>도미니카(공)</td>
<td>2,350</td>
<td>2,800</td>
<td>3,017</td>
<td>3,183</td>
<td>3,928</td>
<td>3,977</td>
<td>4,077</td>
<td>4,423</td>
<td>4,436</td>
<td>4,250</td>
</tr>
<tr>
<td>카리브 전체</td>
<td>5,756</td>
<td>6,098</td>
<td>7,301</td>
<td>7,700</td>
<td>8,864</td>
<td>8,995</td>
<td>8,849</td>
<td>9,793</td>
<td>9,636</td>
<td>9,267</td>
</tr>
<tr>
<td>증감률(%)</td>
<td>59.4</td>
<td>19.7</td>
<td>5.5</td>
<td>15.1</td>
<td>1.5</td>
<td>-1.6</td>
<td>10.7</td>
<td>-1.6</td>
<td>-3.8</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몽세라 제외, 2) US Census Bureau 기준.

■ 한편, 1994~2001년 사이에 미국의 총카리브지역 수입증가율은 6.3%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데, 수출증가율과 동일하게 2001~02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

- 그러한 수입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카리브의 수입품이 아시아, 물론 중남미 주요 국가들 수입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됨.

- 2001년 기준으로 총도미니카공화국 수입이 총수입의 50.1%를, 트리니담토바고가 30.3%, 그리고 자메이카가 5.8%를 차지하여 수출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4 미국의 흑카리브지역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안티وغ바부다</td>
<td>16</td>
<td>5</td>
<td>3</td>
<td>9</td>
<td>5</td>
<td>2</td>
<td>2</td>
<td>2</td>
<td>4</td>
<td>3</td>
</tr>
<tr>
<td>바하마</td>
<td>375</td>
<td>220</td>
<td>171</td>
<td>178</td>
<td>180</td>
<td>154</td>
<td>200</td>
<td>278</td>
<td>328</td>
<td>450</td>
</tr>
<tr>
<td>바베이도스</td>
<td>35</td>
<td>36</td>
<td>52</td>
<td>43</td>
<td>43</td>
<td>37</td>
<td>60</td>
<td>41</td>
<td>41</td>
<td>34</td>
</tr>
<tr>
<td>벨리즈</td>
<td>57</td>
<td>54</td>
<td>56</td>
<td>73</td>
<td>82</td>
<td>70</td>
<td>91</td>
<td>94</td>
<td>103</td>
<td>78</td>
</tr>
<tr>
<td>도미니카</td>
<td>5</td>
<td>7</td>
<td>9</td>
<td>10</td>
<td>7</td>
<td>23</td>
<td>8</td>
<td>6</td>
<td>5</td>
<td></td>
</tr>
<tr>
<td>그레나다</td>
<td>9</td>
<td>8</td>
<td>6</td>
<td>4</td>
<td>7</td>
<td>13</td>
<td>20</td>
<td>27</td>
<td>25</td>
<td>7</td>
</tr>
<tr>
<td>가이아나</td>
<td>109</td>
<td>119</td>
<td>129</td>
<td>129</td>
<td>131</td>
<td>155</td>
<td>146</td>
<td>160</td>
<td>161</td>
<td>116</td>
</tr>
<tr>
<td>아이티</td>
<td>162</td>
<td>62</td>
<td>138</td>
<td>151</td>
<td>197</td>
<td>281</td>
<td>306</td>
<td>309</td>
<td>272</td>
<td>255</td>
</tr>
<tr>
<td>자메이카</td>
<td>766</td>
<td>790</td>
<td>895</td>
<td>890</td>
<td>780</td>
<td>798</td>
<td>728</td>
<td>669</td>
<td>496</td>
<td>396</td>
</tr>
<tr>
<td>세인트 kitts네비스</td>
<td>25</td>
<td>22</td>
<td>24</td>
<td>25</td>
<td>32</td>
<td>35</td>
<td>39</td>
<td>39</td>
<td>44</td>
<td>49</td>
</tr>
<tr>
<td>세인트루시아</td>
<td>33</td>
<td>28</td>
<td>36</td>
<td>23</td>
<td>35</td>
<td>23</td>
<td>28</td>
<td>24</td>
<td>31</td>
<td>19</td>
</tr>
<tr>
<td>세인트빈센트그레나단</td>
<td>5</td>
<td>6</td>
<td>8</td>
<td>7</td>
<td>5</td>
<td>5</td>
<td>8</td>
<td>9</td>
<td>23</td>
<td>16</td>
</tr>
<tr>
<td>수리남</td>
<td>61</td>
<td>46</td>
<td>105</td>
<td>102</td>
<td>97</td>
<td>113</td>
<td>132</td>
<td>137</td>
<td>148</td>
<td>133</td>
</tr>
<tr>
<td>트리나담투바고</td>
<td>873</td>
<td>1,199</td>
<td>1,054</td>
<td>1,106</td>
<td>1,227</td>
<td>1,071</td>
<td>1,407</td>
<td>2,353</td>
<td>2,590</td>
<td>2,440</td>
</tr>
<tr>
<td>CARICOM 총계</td>
<td>2,532</td>
<td>2,602</td>
<td>2,684</td>
<td>2,749</td>
<td>2,831</td>
<td>2,764</td>
<td>3,190</td>
<td>4,149</td>
<td>4,272</td>
<td>4,001</td>
</tr>
<tr>
<td>도미니카(공)</td>
<td>2,758</td>
<td>3,188</td>
<td>3,511</td>
<td>3,677</td>
<td>4,445</td>
<td>4,551</td>
<td>4,393</td>
<td>4,474</td>
<td>4,286</td>
<td>4,169</td>
</tr>
<tr>
<td>카리브 전체</td>
<td>5,290</td>
<td>5,790</td>
<td>6,195</td>
<td>6,426</td>
<td>7,276</td>
<td>7,315</td>
<td>7,583</td>
<td>8,623</td>
<td>8,558</td>
<td>8,170</td>
</tr>
<tr>
<td>증감율(%)</td>
<td>-</td>
<td>9.5</td>
<td>7.0</td>
<td>3.7</td>
<td>13.2</td>
<td>0.5</td>
<td>3.7</td>
<td>13.7</td>
<td>-0.7</td>
<td>-4.5</td>
</tr>
</tbody>
</table>

주: 1) 몽세라 제외, 2) US Census Bureau 기준.

■ 그러한 수출입 구조 하에서 미국의 흑카리브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무역수지 흑자는 1999년에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1998년보다 33% 줄어든 12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000년부터는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 등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 2000년 기준 미국의 흑카리브 품목별 수출 비중을 보면 기계수송장비 (30.4%), 기타 제조업(23.3%), 그리고 식음료담배(11.8%)가 주중을 이룸.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업(46%)과 원자재 부문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특성을 반영하듯이 도미니카공화국과 잉글리시의 보세가공상품과 트리니담 토바고의 석유 및 관련제품이 대부분이었음.

<표 5> 미국의 적가라브품목별1 수출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식품·동물</td>
<td>1,028.1</td>
<td>1,070.6</td>
<td>1,018.9</td>
<td>1,005.7</td>
<td>999.6</td>
<td>10.2</td>
</tr>
<tr>
<td>음료·담배</td>
<td>103.0</td>
<td>164.1</td>
<td>165.5</td>
<td>186.1</td>
<td>158.4</td>
<td>1.6</td>
</tr>
<tr>
<td>연료를 제외한 비식중 원료</td>
<td>209.2</td>
<td>250.2</td>
<td>233.7</td>
<td>245.4</td>
<td>249.5</td>
<td>2.5</td>
</tr>
<tr>
<td>광물연료, 음활동, 관련 원료</td>
<td>387.1</td>
<td>366.0</td>
<td>259.1</td>
<td>271.7</td>
<td>461.7</td>
<td>4.7</td>
</tr>
<tr>
<td>동물·식물성 유지·지방</td>
<td>71.9</td>
<td>92.9</td>
<td>93.6</td>
<td>92.8</td>
<td>67.8</td>
<td>0.7</td>
</tr>
<tr>
<td>화학 및 관련 제품</td>
<td>581.2</td>
<td>667.5</td>
<td>627.3</td>
<td>714.6</td>
<td>740.6</td>
<td>7.5</td>
</tr>
<tr>
<td>원자재 분류기준 제조업 상품</td>
<td>958.1</td>
<td>1,190.1</td>
<td>1,170.3</td>
<td>1,089.0</td>
<td>1,208.5</td>
<td>12.3</td>
</tr>
<tr>
<td>기계·수송장비</td>
<td>1,672.8</td>
<td>2,315.7</td>
<td>2,605.1</td>
<td>2,505.9</td>
<td>2,987.2</td>
<td>30.4</td>
</tr>
<tr>
<td>기타 제조업 상품</td>
<td>1,885.0</td>
<td>2,217.9</td>
<td>2,255.7</td>
<td>2,161.8</td>
<td>2,292.4</td>
<td>23.3</td>
</tr>
<tr>
<td>일용품</td>
<td>426.7</td>
<td>492.5</td>
<td>489.0</td>
<td>582.7</td>
<td>652.9</td>
<td>6.6</td>
</tr>
</tbody>
</table>

주: 1) SITC 1단위 기준, 2) 2000년 총수출 기준.

<표 6> 미국의 적가라브품목별1 수입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식품·동물</td>
<td>547.8</td>
<td>637.2</td>
<td>563.8</td>
<td>471.5</td>
<td>513.7</td>
<td>6.1</td>
</tr>
<tr>
<td>음료·담배</td>
<td>179.1</td>
<td>346.9</td>
<td>349.8</td>
<td>287.8</td>
<td>283.0</td>
<td>3.4</td>
</tr>
<tr>
<td>연료를 제외한 비식중 원료</td>
<td>292.9</td>
<td>235.8</td>
<td>350.2</td>
<td>325.2</td>
<td>303.1</td>
<td>3.6</td>
</tr>
<tr>
<td>광연료·음활동, 관련 원료</td>
<td>428.4</td>
<td>559.7</td>
<td>448.5</td>
<td>733.5</td>
<td>1,492.5</td>
<td>17.9</td>
</tr>
<tr>
<td>동물·식물성 유지·지방</td>
<td>0.5</td>
<td>0.6</td>
<td>1.04</td>
<td>0.4</td>
<td>0.2</td>
<td>0.0</td>
</tr>
<tr>
<td>화학 및 관련 제품</td>
<td>526.0</td>
<td>478.7</td>
<td>425.7</td>
<td>482.7</td>
<td>731.4</td>
<td>8.8</td>
</tr>
<tr>
<td>원자재 분류기준 제조업 상품</td>
<td>289.5</td>
<td>379.2</td>
<td>482.9</td>
<td>330.9</td>
<td>449.8</td>
<td>5.4</td>
</tr>
<tr>
<td>기계·수송장비</td>
<td>389.3</td>
<td>389.9</td>
<td>409.9</td>
<td>436.2</td>
<td>467.0</td>
<td>5.6</td>
</tr>
<tr>
<td>기타 제조업 상품</td>
<td>3,248.4</td>
<td>3,748.9</td>
<td>3,969.7</td>
<td>3,907.3</td>
<td>3,843.3</td>
<td>46.0</td>
</tr>
<tr>
<td>일용품</td>
<td>209.3</td>
<td>216.8</td>
<td>244.4</td>
<td>272.7</td>
<td>260.4</td>
<td>3.1</td>
</tr>
</tbody>
</table>

주: 1) SITC 1단위 기준, 2) 2000년 총수입 기준.

나. 투자관계

미국은 중남미지역의 최대 투자국인데, 1990년대 들어서는 효율성 제고와
시장전망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이 결정되었음.

- 효율성 제고: 미국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아시아 등 외국 기업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남미지역의 제조업, 특히 자동차, 전자 및 의류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확대하였음.

- 중남미 시장의 높은 발전 잠재력을 근거하여 사전 교육 및 확보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등을 신규시장에 진출하였음. 특히, 미국 기업들은 중남미지역의 민영화에 참여하여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전략에 집중하였음.

<표 7> 미국의 총중남미 연도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남미</td>
<td>21,685</td>
<td>1,194</td>
<td>1,639</td>
<td>4,138</td>
<td>2,416</td>
<td>8,642</td>
<td>11,751</td>
<td>7,957</td>
<td>11,628</td>
<td>11,652</td>
<td>12,055</td>
<td>8,117</td>
<td>3,146</td>
<td>-194</td>
<td>74,094</td>
<td>27.4</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2,135</td>
<td>318</td>
<td>300</td>
<td>496</td>
<td>1,115</td>
<td>1,450</td>
<td>2,048</td>
<td>371</td>
<td>1,703</td>
<td>1,893</td>
<td>2,254</td>
<td>675</td>
<td>672</td>
<td>-263</td>
<td>11,303</td>
<td>4.1</td>
</tr>
<tr>
<td>브라질</td>
<td>14,025</td>
<td>369</td>
<td>613</td>
<td>1,316</td>
<td>608</td>
<td>3,238</td>
<td>6,954</td>
<td>4,159</td>
<td>7,138</td>
<td>4,382</td>
<td>6,672</td>
<td>3,285</td>
<td>769</td>
<td>181</td>
<td>31,715</td>
<td>11.7</td>
</tr>
<tr>
<td>칠레</td>
<td>1,412</td>
<td>484</td>
<td>173</td>
<td>475</td>
<td>255</td>
<td>1,876</td>
<td>1,291</td>
<td>1,850</td>
<td>926</td>
<td>324</td>
<td>428</td>
<td>197</td>
<td>2,486</td>
<td>-811</td>
<td>11,625</td>
<td>4.3</td>
</tr>
<tr>
<td>콜롬비아</td>
<td>1,690</td>
<td>178</td>
<td>191</td>
<td>11,177</td>
<td>-123</td>
<td>336</td>
<td>164</td>
<td>120</td>
<td>74</td>
<td>-66</td>
<td>593</td>
<td>341</td>
<td>-16</td>
<td>584</td>
<td>3,735</td>
<td>1.4</td>
</tr>
<tr>
<td>에콰도르</td>
<td>301</td>
<td>-21</td>
<td>41</td>
<td>-26</td>
<td>260</td>
<td>218</td>
<td>113</td>
<td>32</td>
<td>-269</td>
<td>233</td>
<td>82</td>
<td>-322</td>
<td>8</td>
<td>540</td>
<td>1,082</td>
<td>0.4</td>
</tr>
<tr>
<td>파두</td>
<td>813</td>
<td>-216</td>
<td>-101</td>
<td>128</td>
<td>2</td>
<td>283</td>
<td>334</td>
<td>700</td>
<td>241</td>
<td>50</td>
<td>794</td>
<td>-19</td>
<td>79</td>
<td>36</td>
<td>2,532</td>
<td>1.1</td>
</tr>
<tr>
<td>에네수엘라</td>
<td>932</td>
<td>155</td>
<td>340</td>
<td>545</td>
<td>390</td>
<td>1,021</td>
<td>654</td>
<td>775</td>
<td>688</td>
<td>622</td>
<td>1,386</td>
<td>6,789</td>
<td>401</td>
<td>736</td>
<td>20,109</td>
<td>7.9</td>
</tr>
<tr>
<td>기타</td>
<td>327</td>
<td>8</td>
<td>80</td>
<td>17</td>
<td>108</td>
<td>119</td>
<td>192</td>
<td>-59</td>
<td>479</td>
<td>141</td>
<td>130</td>
<td>95</td>
<td>46</td>
<td>261</td>
<td>1,177</td>
<td>0.9</td>
</tr>
<tr>
<td>중미</td>
<td>17,830</td>
<td>2,560</td>
<td>3,597</td>
<td>1,552</td>
<td>2,686</td>
<td>5,469</td>
<td>4,444</td>
<td>3,180</td>
<td>6,448</td>
<td>6,363</td>
<td>10,766</td>
<td>6,135</td>
<td>14,639</td>
<td>6,924</td>
<td>81,199</td>
<td>29.8</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213</td>
<td>36</td>
<td>166</td>
<td>-143</td>
<td>24</td>
<td>194</td>
<td>271</td>
<td>362</td>
<td>316</td>
<td>607</td>
<td>-474</td>
<td>431</td>
<td>-28</td>
<td>2,602</td>
<td>1,062</td>
<td>0.6</td>
</tr>
<tr>
<td>젠텔레마코스</td>
<td>111</td>
<td>19</td>
<td>-23</td>
<td>8</td>
<td>24</td>
<td>16</td>
<td>36</td>
<td>100</td>
<td>24</td>
<td>29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온두라스</td>
<td>251</td>
<td>11</td>
<td>-7</td>
<td>-80</td>
<td>32</td>
<td>-8</td>
<td>-26</td>
<td>43</td>
<td>-53</td>
<td>197</td>
<td>59</td>
<td>257</td>
<td>23</td>
<td>184</td>
<td>0.1</td>
<td></td>
</tr>
<tr>
<td>연수</td>
<td>8,264</td>
<td>2,049</td>
<td>2,188</td>
<td>1,229</td>
<td>1,491</td>
<td>4,297</td>
<td>2,983</td>
<td>2,405</td>
<td>5,596</td>
<td>4,933</td>
<td>6,814</td>
<td>2,493</td>
<td>15,105</td>
<td>3,627</td>
<td>58,974</td>
<td>21.3</td>
</tr>
<tr>
<td>핀다바</td>
<td>8,913</td>
<td>376</td>
<td>1,195</td>
<td>554</td>
<td>1,095</td>
<td>773</td>
<td>781</td>
<td>920</td>
<td>354</td>
<td>682</td>
<td>2,571</td>
<td>1,328</td>
<td>39</td>
<td>946</td>
<td>29,003</td>
<td>7.3</td>
</tr>
<tr>
<td>기타</td>
<td>83</td>
<td>7</td>
<td>73</td>
<td>-80</td>
<td>22</td>
<td>-3</td>
<td>-19</td>
<td>48</td>
<td>116</td>
<td>331</td>
<td>308</td>
<td>114</td>
<td>-521</td>
<td>302</td>
<td>1,336</td>
<td>0.5</td>
</tr>
<tr>
<td>기타와 같은 지역</td>
<td>21,374</td>
<td>6,381</td>
<td>1,199</td>
<td>8,223</td>
<td>4,106</td>
<td>3,598</td>
<td>245</td>
<td>6,471</td>
<td>3,663</td>
<td>3,684</td>
<td>21,838</td>
<td>8,959</td>
<td>3,367</td>
<td>3,880</td>
<td>116,479</td>
<td>42.8</td>
</tr>
<tr>
<td>바하마</td>
<td>4,577</td>
<td>-573</td>
<td>-140</td>
<td>303</td>
<td>-1,029</td>
<td>52</td>
<td>-537</td>
<td>55</td>
<td>-323</td>
<td>-8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바레인</td>
<td>141</td>
<td>111</td>
<td>39</td>
<td>49</td>
<td>131</td>
<td>65</td>
<td>248</td>
<td>164</td>
<td>-39</td>
<td>115</td>
<td>1,476</td>
<td>-813</td>
<td>183</td>
<td>35</td>
<td>1,497</td>
<td>0.5</td>
</tr>
<tr>
<td>트리니다드</td>
<td>18,297</td>
<td>1,872</td>
<td>2,093</td>
<td>4,474</td>
<td>1,930</td>
<td>897</td>
<td>275</td>
<td>3,170</td>
<td>589</td>
<td>2,358</td>
<td>6,871</td>
<td>9,363</td>
<td>7,604</td>
<td>4,238</td>
<td>68,886</td>
<td>25.3</td>
</tr>
<tr>
<td>사우디아라비아</td>
<td>183</td>
<td>346</td>
<td>132</td>
<td>118</td>
<td>366</td>
<td>-19</td>
<td>69</td>
<td>66</td>
<td>91</td>
<td>78</td>
<td>125</td>
<td>175</td>
<td>249</td>
<td>19</td>
<td>1,123</td>
<td>0.4</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8,375</td>
<td>3,877</td>
<td>-571</td>
<td>3,083</td>
<td>1,927</td>
<td>1,112</td>
<td>43</td>
<td>751</td>
<td>-1,176</td>
<td>-11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트리니다드와도미니카</td>
<td>400</td>
<td>85</td>
<td>25</td>
<td>55</td>
<td>176</td>
<td>77</td>
<td>151</td>
<td>50</td>
<td>-214</td>
<td>39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영국형 책도</td>
<td>6,123</td>
<td>-194</td>
<td>-532</td>
<td>4</td>
<td>143</td>
<td>1,386</td>
<td>50</td>
<td>1,847</td>
<td>4,062</td>
<td>1,571</td>
<td>11,264</td>
<td>989</td>
<td>-20</td>
<td>-719</td>
<td>29,252</td>
<td>10.7</td>
</tr>
<tr>
<td>기타</td>
<td>5</td>
<td>585</td>
<td>-15</td>
<td>8</td>
<td>401</td>
<td>-186</td>
<td>-170</td>
<td>86</td>
<td>211</td>
<td>-104</td>
<td>2,100</td>
<td>-754</td>
<td>2,152</td>
<td>306</td>
<td>15,751</td>
<td>5.9</td>
</tr>
</tbody>
</table>

주: 1)은 1989년까지 누계.
인에 힘입어 1990년대 들어 급증했음.

- 그와 같은 투자 증가는 1989년까지 미국의 횡중남미 투자 누계가 621억 4,500만 달러였는데 반해, 1990~2002년 사이에 유입된 투자금액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2,312억 9,5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됨.

- 1990년대 가장 많은 투자가 유입된 시기는 1999년으로 446억 5,800만 달러의 직접투자가 행해졌음.

그러나 중남미지역에서 민영화 매물이 거의 바닥나고, 세계경제 충격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중국 등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좋은 국가에 우선순위가 뒤지면서 횡중남미 투자도 줄어들고 있음.

- 2002년의 경우 미국의 횡중남미 투자는 86억 달러에 머물렀음.

미국의 횡중남미 투자는 국별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 5개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카리브지역 및 파나마에 대한 투자가 횡중남미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카리브 및 파나마에 대한 투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카리브지역에 위치한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의 직접투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2002년말까지 미국의 횡중미 투자는 횡중남미 총투자의 29.8%인 811억 9,900만 달러를 기록 중인데, 멕시코를 제외할 경우 231억 2,500만 달러로 8.5%에 그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인 파나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할 경우 비중과 투자규모는 더욱 줄어드는데, 최근 과테말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 투자 감소의 원인은 NAFTA 출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횡중국 투자 등에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01년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전산의 점진적인 비례와 같이 금융산업 투자가 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수송장비 중심의 제조업이 2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8> 미국의 휴증남미 부문별 직접투자 현황(2001년 말 기준)

<table>
<thead>
<tr>
<th>국가/지역</th>
<th>전산업</th>
<th>석유</th>
<th>제조업</th>
<th>금융,보험 및 주류업</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축적액</td>
<td>총액</td>
<td>1차수출</td>
<td>기계장비</td>
<td>전자제품</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14,394</td>
<td>561</td>
<td>1,060</td>
<td>3,600</td>
<td>3,300</td>
</tr>
<tr>
<td>브라질</td>
<td>36,310</td>
<td>1,023</td>
<td>1,016</td>
<td>1,400</td>
<td>1,627</td>
</tr>
<tr>
<td>칠레</td>
<td>1,174</td>
<td>7</td>
<td>1,088</td>
<td>691</td>
<td>438</td>
</tr>
<tr>
<td>콜롬비아</td>
<td>4,844</td>
<td>1,049</td>
<td>1,141</td>
<td>349</td>
<td>388</td>
</tr>
<tr>
<td>에콰도르</td>
<td>417</td>
<td>117</td>
<td>187</td>
<td>69</td>
<td>112</td>
</tr>
<tr>
<td>페루</td>
<td>3,951</td>
<td>418</td>
<td>217</td>
<td>70</td>
<td>113</td>
</tr>
<tr>
<td>베네수엘라</td>
<td>10,680</td>
<td>2,932</td>
<td>1,549</td>
<td>439</td>
<td>255</td>
</tr>
<tr>
<td>기타</td>
<td>1,059</td>
<td>185</td>
<td>206</td>
<td>120</td>
<td>43</td>
</tr>
<tr>
<td>중남미/미국전체</td>
<td>39,568</td>
<td>1,574</td>
<td>4,817</td>
<td>3,234</td>
<td>2,708</td>
</tr>
<tr>
<td></td>
<td>3,521</td>
<td>-</td>
<td>3,436</td>
<td>1,669</td>
<td>-</td>
</tr>
</tbody>
</table>

2002년 말 누계기준으로 미국의 휴카리바 직접투자는 휴중남미 총투자의 42.8%인 1,164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함.

- 휴카리바 투자는 몇몇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자메이카와 도미니카의 가공수출산업, 바베이도스의 금융산업, 트리니담토바고의 석유산업이 주요 투자대상 업종이 되고 있음.
III. 미국의 중앙미·카리브 주요 정책수단 및 목표

1. CBI

중미와 카리브지역의 높은 수출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관계강화는 다른 어떤 지역과의 관계보다는 중요함.

그러한 관계강화의 결과로 미국으로부터 특혜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1984년부터 적용된 카리브지역지원계획(CBI)임.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의 설탕수입 퀄터 감소, 관광 관련 상품 및 섬유류에 대한 특혜 제외 등으로 카리브 교역이 위축되고, 1994년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 상품에 경쟁력과 시장을 잠식하면서 CBI 제도의 효과는 반감되었음.

이에 중미·카리브지역은 NAFTA 회원국에 준하는 관세 등의 특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2000년 대외무역개발법 제2장 "카리브무역동반자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CBTPA)"으로 나타났음.

가. 카리브지역지원계획(CBI → CBI II)

CBI 제도는 GSP 이외에 중미와 카리브 지역의 영연방 국가 및 남미 일부 국가들, 그리고 속령들에 부여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무역특혜조치임.


CBERA 제213절은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제211절은 적격 국가 및 속령의 적격 상품에 미

--- 22 ---

2 무관세 적용 상품은 1개 이상의 수출국내에서 제조, 생산 및 제조되어야 하고, CBI 국가로부터 수입한 부분품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직업가중비( 혹은 부가가치)가 최종제 가격의 35%를 상회해야
대통령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권한을 규정하며, 제212절은 적격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역관련 규정 이외에 CBERA는 수혜국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990년에 미국은 "관세무역법 Title II" 개정을 통해 "중미카리브지역경제부흥확대법(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Expansion Act)"을 제정하여 1990년 8월 20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 CBI II는 1995년으로 규정된 CBI의 시효를 영구적으로 재설정하고 무역과 세계특혜를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1995년까지의 관세면제 시한을 철폐하여 무기한 대미 시장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파격제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판세를 경감하였습니다. 단, 미국산 부분품으로 제조된 상품에는 15%가 적용됨. 그러나 성유협정 대상이 되는 성유 및 의류, 참치캔, 원유, 원유제품, 섬유, 근로용 장갑, 가방, 핸드백, 지갑과 같은 가죽제품, 가죽의류, 시계 및 시계부품 등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산 섬유적용지역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특혜관세(GSP) 규정에 포함된 국가들은 유지되고 "경쟁적 필요성"에 의해 성장의 무관세 수입은 제한됨.

3 미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 미국인 소유 재산 몰수에 있어서 특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 **미국으로의 야당수용 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 **미국과의 무역에 적합도를 갖추지 않는 국가**, **미국과의 무역에 적합도를 갖추지 않는 국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인 저작물이 유포되는 국가**, **미국과의 범인도표류를 제한하기 위한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시장과 자원개발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수혜국의 준비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역규범 수용 정도,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수출조세과제와 수출이행요건 및 국내부품조달요건 강화 요구 갱신 정책, ▼수혜국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자립조직 행정조직 수립, ▼수혜국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자립조직 행정조직 수립,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수출조세과제와 수출이행요건 및 국내부품조달요건 강화 요구 갱신 정책, ▼수혜국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자립조직 행정조직 수립, ▼수혜국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자립조직 행정조직 수립 등과 같은 11개 임의기준이 있습니다.

5 CBERA는 미 국가법을 수정하여 카리브지역에서 수입되는 땅주를 대상으로 정수한 세금을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이전토록 규정함. 또한 제222절은 CBI 수혜국 및 속령이 미국과 과세정보교환협정(TIEA) 체결하고 있을 경우, 동 지역들에서 개최한 국제회의, 세미나, 기타 회의 참가로 발생한 경비비용을 기업과 관광객에게 환급하되, 제한적 이용도를 기업과 관광객에게 환급하되, 제한적 이용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함.

6 ▼특정 가죽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중점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 ▼CBI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한 푸에르토리코산 제품 판세 폐지, ▼성유, 의류, 원유, 특정 섬유제품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원자재(100%)로 제조된 상품의 무관세 수입 허용, ▼CBI 수혜국을 관광하는 미합중국 면세범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 ▼CBI 수혜국 수입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이 요구하는 일반누증규정(general curtailment rule) 적용, ▼적정 장학금지원 확대 등입니다.
나. 카리브무역동반자법(CBTPA)

■ NAFTA 출범이후 지역 경쟁력 하락을 보완하려는 중미·카리브 국가들 의 노력은 평의회의 관련법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1995년 미국 하원세입세출소위원회 Phil Crane 의장의 "신흥무역협상권" 개신 안에 카리브지역에 대한 무역특혜 확대안이 포함되면서 본격화되었음.

- 특히 외채지원으로 중미지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CBI 확대 노력은 가속화되었는데, 이 같은 미 행정부의 노력은 ▼카리브지역 경제 및 무역개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에서의 카리브지역의 역할, ▼WTO 이행규정에 대한 카리브지역의 입장, ▼미국의 재정부담 축소, ▼美·수해국간 관계 강화 등을 고려한 것이었음.

■ 그러나 CBTPA가 제정된 배경에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욱 컸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미국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아시아산 저가 섬유의류제품에 대응하고 WTO 가입이후 예상되는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음.

-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국 섬유의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또한 FTAA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미치는 NAFTA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 2000년 10월 2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24개 CBI 수혜국들이 CBTPA하에서 더욱 개선된 무역특혜의 수혜국가 되고, CBTPA를 반영한 HTS 수 정과 담당부처(USTR)의 역할을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음.

7 수혜국 지정 기준은 CBERA 기준 이외에 ▼WTO 의무 준수 및 FTAA를 비롯한 기타 FTA 협상에의 참여, ▼TRIPS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결사권, 단체교섭권, 최저임금, 노동시간, 작업장의 안전·건강 등 근로환경), ▼작업의 아동노동 폐지 임금, ▼1961년 대외전차협상에 마약퇴치 노력, ▼미주무역怨정협정 가입 및 가입, ▼법률조달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 및 경제적 관계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됨.

- 24 -


■ CBTPA는 기존의 CBI를 확대 적용하여 특성을 갖는데, 특히 수혜국에서 생산된 의류제품에 대한 특혜가 확대되었습니다.

- 미국산 원사로 만든 직물을 이용하여 CBI에서 봉제된 의류에는 무관세 및 무쿼터 대우가 적용됨.

- 무관세 및 무쿼터는 직물 제조과정에 미국산 원사가 사용되었는 가정 하에 카리브지역산 직물을 이용하여 CBTPA 수혜국에서 봉제된 특정 니트의류에도 적용됨. 그러나 니트의류에 대한 특별 조항은 T셔츠와 함께 쿼터를 적용 받음.

- 도 무관세 및 무쿼터 대우는 미국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직물을 이용하여 CBI에서 봉제된 의류와 수공예품, 민속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됨.

2. FTA

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1) 미국의 입장

■ 1990년 6월 부시 대통령은 외채경감, 무역 및 투자확대,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을 제안하였으며, 그로부터 FTAA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 미국의 FTAA 협상추진은 우선적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미국기업이 무역 및 투자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 촉진과 미국상품의 수출증대를 도모코자 함임.

- 또한 미국의 FTAA 추진은 최근 급증한 양극간 및 북수극간 지역무역협정의 증가 등 지역블록 확산으로 인한 미국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EU의 중남미 진출에 대비하여 중남미

8 CBTPA이전 CBI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특정 품목(신발, 참치캔, 석유제품, 시계 및 부품)에도 NAFTA에 준하는 관세 적용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유지코자 하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음.

- 미국의 확보부동한 FTAA 추진 의지는 2003년 2월에 발표한 "FTAA 협상을 위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의 포괄적 압력안"9)에서도 명백히 확인 됨.

- 미국은 FTAA 9개 협상 분야 중 공산품, 농업,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의 5개 분야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장벽 철폐안을 내놓았는
국제무역장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 예정인 각국 무역장 관계에서의 FTAA 협상 진척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미국의 과격적인 제안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를 통해 FTAA 협상 참여국에게 무역장벽의 과감한 철폐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10)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2015년)이 WTO에서의 미국의 무관세 구상(Tariff-Free World)과 동일하여 미국의 양허안은 궁극적으로 WTO 협상에서의 미국의 협상전략과도 맞물렸음.

즉, 미국은 FTAA 협상 타결 이후 FTAA 회원국과 공조 하에 WTO에 개류되어 있는 중요한 무역 이슈들을 미국의 주도하에 타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FTAA 협상에 임하고 있음.

2) 중미의 입장

과테말라, 엘살바도로, 오르투아스, 니카라우, 코스타리카는 FTAA 협상초 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2002년 12월 13일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된 제22차 중미통합체제정상회의 이후 발표된 "San José 선언문"에서 2003년부터 개시되는 미국과의 FTA협상이 2005년 FTAA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WTO DDA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함.

- 곧, 중미 국가들은同 선언문을 통하여 FTAA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

---

10 각 분야별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종류나 관세 인하 정도는 향후 개별되는FTAA의 구체적 협상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하기로 동의함으로써 대외무역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FTAA 협상에 중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FTAA가 CACM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중미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건인 거래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점임.

- 그리고 FTAA가 NAFTA 출범이후 북미시장에서 약화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미 및 카리브 국가들이 북미시장에 요구해 온 영구적인 NAFTA-parity에 해당하기 때문임.11)

3) 카리브 도서국들의 입장

■ FTAA 협상에 임하는 CARICOM 및 카리브 도서국들의 입장은 서반구통합을 통해 향후 특별관계제도에 의한 억제적인 대우가 불가능한 세계화와 자유화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이후 고비용 기초농산물 생산에 견념할 수 있는 일방적인 특혜제도를 바탕으로 경제를 유지해 온으로써 극격한 특혜제도 폐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한 바, 보완적인 방법으로 경제통합(FTAA)을 통한 해소방안을 모색 중임.

■ 그러나 카리브 국가들이 지난 한계성을 고려할 때 무역장벽 및 규제조회에 입각한 FTAA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지니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음.

- 카리브지역은 그 소규모 경제가 갖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는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상대적인 고수용비용, 고유달리티(전기, 가스, 수도 등)비용, 높특화 및 소규모 내수시장으로 인한 다각화 미비, 마케팅 정보 및 유통망과 같은 분야에서 외국시장 진입시 지역 소기업들의 고비용, 자연계해 다발에 따른 고비용, 구조적인 행정 및 기술능력 부족 등이 대표적임.

11 NAFTA-parity의 일종으로 미국은 CBI를 강화한 CBTPA를 발표했지만, 그 또한 FTAA 출범과 동시에, 혹은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즉, 소규모 경제가 갖는 장애로 인하여 공식적인 시장통합의 사전 작업에서 개발목표를 실현시킬 수가 없는데, CARICOM의 경우 자체적인 시장 통합에서 조차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경제 및 정치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및 연대를 강조해 왔음.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FTAA에 대한 카리브 국가들의 입장이 결정되는데, 구조적 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서반구에서 CARICOM의 더욱 불평등한 무역 및 투자통합이었음.

즉, 미주지역 국가들과 CARICOM의 교역은 다른 지역 교역상대국들에 비하여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1~2개국에 집중된 증가율로 인하여 교역 확대를 위한 더 많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로 CARICOM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FTA와 부분적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또한 통합과정의 확대는 더딘 CARICOM 통합심화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았는데, 카리브단일시장(CSME) 형성안 조차 대외공동관세 도입과 기능적 협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FTAA 개방안에 비하여 심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처럼 FTAA에 대한 카리브 국가들의 입장을 결정한 구조적 요인들에 도 불구하고 협상 초기부터 추구해 온 소규모 국가들을 배려한 점진적인 시장개방안이 FTAA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낮음.

나. 미국-중미 자유무역지대(CAFTA)

1) 추진배경

미국과 중미 5개국은(CACM 회원국) 2003년 말 협상 종결을 목표로 FTA를 협상중인 바, 2003년 1월부터 시작된 공식협상은 9월말까지 7회 개최되었음.
- 주요 논의 주제는 5개 작업반별(시장접근,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분쟁해결 및 제도, 환경 및 노동)로 양측이 제안한 협상안을 상호 확인하고, 이견을 조정하며, 합의하는 것이었음.

- 제3차 협상까지는 5개 실무협상 분야별로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제4차 협상부터는 분야별 실질적인 이견 조정과 합의과정을 그치고 있음.

### CAFTA 공식협상 일정

<table>
<thead>
<tr>
<th>차수</th>
<th>협상장소</th>
<th>일정</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코스타리카 산호세</td>
<td>2003.1.27~31</td>
</tr>
<tr>
<td>2.</td>
<td>신시내티</td>
<td>2003.2.24~28</td>
</tr>
<tr>
<td>3.</td>
<td>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td>
<td>2003.3.31~4.4</td>
</tr>
<tr>
<td>4.</td>
<td>과테말라 과테말라시</td>
<td>2003.5.12~16</td>
</tr>
<tr>
<td>5.</td>
<td>온두라스 레구사갈레</td>
<td>2003.6.19~20</td>
</tr>
<tr>
<td>6.</td>
<td>뉴올리언스</td>
<td>2003.7.28~8.1</td>
</tr>
<tr>
<td>7.</td>
<td>니카라과 마나과</td>
<td>2003.9.15~19</td>
</tr>
</tbody>
</table>

■ CAFTA 태동 배경으로 먼저, 지역주의 강화에 따른 중미지역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들 수 있음.

-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중미 국가들의 경쟁력이 멕시코에 비하여 하락하고, 상당수의 섬유 및 의류 업체들이 멕시코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가운데 수출 감소, 실업 증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그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미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에게 NAFTA에 준하는 무역특혜(NAFTA Parity)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미국은 2008년 9월 30일까지 혹은 FTAA 발효 시까지 CBI 혜택을 확대하는 CBTPA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중미지역에 진출한 외국인기업들, 특히 섬유·의류부문에 진출하여 아시아산 원재료 사용에 익숙한 마케라도라 기업들이 엄격한 원산지규
정 적용과 관세 및 수량제한의 점진적인 이하와 폐지를 특징으로 하는 CBTPA에 적용하지 못하지만 미국과 중미간의 통상관계를 충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CAFTA는 냉전 이후 미국의 안보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냉전종식 이후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크게 줄어들다가, 제2기 클링턴 행정부에서 중미지역의 경제적 안정과 변영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민주주의의 후퇴 및 정치 불안정, 난민, 불법이민, 마약 거래, 테러 등)를 최소화시키는 타인식하에 다소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음.
  - 특히, FTAA가 세계적인 지역경제 전략화 추세에서 미국과의 안보(미국의 전략적 대무충돌 주권 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CAFTA는 중미지역의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식됨.

즉, 미국은 중남미지역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진출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FTA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중미지역에 대한 멕시코, 캐나다, 역외 국가들의 진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CAFTA를 추진함.

- 세계화 확산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는 것과는 달리 CAFTA는 미국과 중미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
  - 비록, 양측의 노동계 및 환경단체 등을 통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NAFTA 협상에서의 경험을 이론적 정책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한 미국의회는 조선적 CAFTA 지지하고 있고, 최근 중미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를 설치한 미국 기업들의 지지도 입증하고 있음.

12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CAFTA가 발효될 경우 도미니카 공화국의 카리브해 도서국들의 대미시장 진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13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코스타리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인텔을 들 수 있는데, 중미지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 및 캐나다 기업들의 중미시장 진출을 견제하
결론적으로 CAFTA 추진은 미국과의 통상관계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중미지역의 욕구와 환경(남)미 패권유지 및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모색하려는 미국의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됨.

2) CAFTA에 대한 미국과 중미의 입장

중미 국가들은 완전한 공동 입장을 설정하는 데 못했지만 지역 경제발전의 최고 수단으로 인식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CAFTA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14

첫째, 관세절제 등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과 시장진입 공교환을 통한 수출 증대 모색, 그리고 중미지역의 비교우위 적극 이용과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 제고임.

또한 CBTPA 등을 국제협정으로 격상시켜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정 가능성을 줄이고,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시장접근 개선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혜택을 유지하는 것임.

둘째, 수출증가와 동시에 소비재와 수출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품 다각화임.

셋째, 북미와 중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역내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임.

넷째,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줄이고, 민주주의 정치체제 공교환을 통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강화임.

여섯째, FTAA가 발효되기 이전에라도 미국 시장접근에 따른 혜택을 획득할 수 있는데, 특히 FTAA 협상이 지연될 경우 중미지역이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증가됨.

14 Eduardo Lizano y Anabel González, Marzo 2003,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el Istmo Centroamericano y los Estados Unidos de American Oportunidades, desafíos y riesgos, Documento de Divulgacion 9, Intal, pp.5~7.
CAFTA에 대한 중미의 입장은 중미정상들의 적극적인 대응에서도 나타나는데, 2002년 8월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TPA를 승인받자 9월 26일 결의안을 통해 CAFTA의 사전 및 공식협상 과정에 대한 전폭적인 정치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음.

한편, 주요 협상 의제별 추진 목표는 중미지역과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펑가되는 CAFTA의 장점도 중미지역 만큼이나 다양함.

- 첫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총중미 수출증대와 수출입부문 고용창출 효과

○ 미국에 있어서 중미는 멕시코, 브라질 다음가는 중남미 수출시장인데, 2001년 수출액(90억 달러)은 같은 해 총칠레 수출의 3배, 총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 수출총액에 해당함.

- 둘째,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 증대인데, 특히 가격인하로 소비자 편익 제공가 예상됨.

- 셋째, 이중과세방지협정, 지적재산권보호협정 등의 부가적인 양허를 통한 중미시장 투자환경 개선임.

- 넷째, FTAA 협상 이전에 미주지역에서 NAFTA 유형의 무역협정을 확대·공고화하고, 소규모 경제권도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되어 FTAA 출범을 위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임.

○ 미국은 2002년 12월 종결한 칠레와의 FTA를 CAFTA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칠레와의 협상은 물론 공동상에서 습득한 교훈을 통해 CAFTA를 출범시킬으므로써 유사한 협상방식을 FTAA 협상에서도 일관하려는 의도가 있음.

○ 즉, CAFTA는 미국이 추구하는 FTAA를 완성하기 위해 미주지역에서

---

미국이 추진하는 최후의 FTA라고 할 수 있음.

- 다섯째, CAFTA는 철강 세이프가드, 농업법(농업 보조금) 등 최근 미국이 보여준 보호주의적 조치와는 별도로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 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외이미지 개선에 일조할 것임.

- 여섯째, NAFTA와 같은 환경·노동 부속협정을 통한 환경보호 및 노동 권 이행 촉진임.

- 일곱째, FTA를 활용한 정책 공조를 통해 중미지역을 남미와 북미의 가 교로 활용하는 마약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 여덟째, 불법금융거래 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테러를 예방하고, 불 법 이민을 통제할 수 있음.

- 아홉째, NAFTA 불출 이후 멕시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도록 중미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임.

- 열 번째, 카리브해의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콜롬비아 및 베네수엘라주 원 유 및 가스의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PPP(Plan Puebla-Panama)에서 항유하고 있는 멕시코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의 지정학적 주도권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3) 향후 전망

■ CAFTA 협상의 절점은 공산품 관세철벽 보다는 농산물 관세철벽, 비관 세 장벽 해소, 서비스투자부문 개방, 분쟁해결장치, 환경 및 노동협상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각종 특혜제도를 통해 중미지역 수출상품의 75% 이상이 아 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고, 미국이 NAFTA와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거둔 장점을 활용한 협상을 추진하려 하기 때문임.

■ 농산품 시장개방 협상의 경우 중미 농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제4차 협상에서 중미가 제시한 6천여 개 관세인하 대상 품목\(^\text{16}\) 가운데 38%가 농산품이어서 중미 농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임.

- 농업계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산품이 중미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을 드러 농산품을 자유무역 예외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 협상에서는 농산품을 즉시 시장개방 품목이 아닌 10년, 12년, 15년 등 순차적 시장개방 품목으로 지정해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계획하고 있지만, 중미 각국도 생산하는 농산물, 곡물 등에 따라 주장하는 관세 인하, 관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단일 협상안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도 중미는 미국의 농업보호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농산물 위생검역 특별작업반이 구성된 것은 FTA 협상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됨.

그 외에 CAFTA 협상 추진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FTA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상호 보완적이고 농업계를 제외한 각종 산업계와 양측 정치권도 협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2003년 연말까지 종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의 참여 가능성 고조는 CAFTA 협상방향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03년 8월 4일 미루역대표부(USTR)는 도미니카공화국과 FTA 협상을 CAFTA 협상에 포함시켜 추진할 행정부의 공식적인 의향서를 의회에 통보했음.

3. Third Border Initiative

Third Border Initiative(이하 TBI)는 2001년 4월 캐나 및 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카리브지역에 대한 안보협력, 개발지원, 인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16}\) 동 품목은 FTA 대상 품목 중 58%에 불과한 것임.
미국에 있어서 “Third Border”는 카리브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미국은 탈냉전 이후 카리브지역에서 만연된, 미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문제들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카리브 국가들의 무역, 교육, 보건, 지역의 민주주의 등의 미국의 주요 관심사 항인데, 마약밀매, 불법이민, 돈세탁 등 불법금융거래, AIDS 등이 미국과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임.

TBI는 외교, 경제, 보건, 교육, 사법체계 강화 등과 관련된 미국-카리브지역간 협력과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에 새로운 자금지원 등으로 프로그램 되었음.

2002년 회계연도 HIV/AIDS 기금으로 2,000만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는 미국 HIV/AIDS 예방 및 교육기금의 3배에 해당함.

교사들의 교수법 개선을 위한 교사훈련센터(Center For Excellence)를 설립하여 세계화된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능력을 제고시킴.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중요한 상업적·환경적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및 완화 노력 기금을 증액함.

지역의 민간항공 감독 인프라 및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의 무역, 상업, 관광산업을 위한 항공안전망을 향상시킴.

돈세탁 방지, 경찰 및 검사 등 전문인력 개발, 반부패 훈련 및 지원과 같은 중용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함.

TBI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은 주로 USAID를 통해 시행될 전망인데, TBI가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은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과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4. 향후 미국의 횡중미·카리브 정책 변화 전망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황중미 및 카리브 정책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경제적 이해증대, 지역주의 정책 강화, 다자적 접근 확대, 순 안보의제에의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민간부문 역할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중미·카리브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이 1990년대 들어 미국과의 관목할 만한 교역 증가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협력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모든 정책도 경제적 이해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짐.

- 미국의 FTA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중남미지역의 경제성장, 이민 및 마약 문제 해결 등 단가적인 포석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가장 큰 추동력은 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TBI를 비롯한 미국의 각종 지원정책 확대도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인데, 대표적으로 주요 관광지인 카리브지역의 AIDS 퇴치 지원도 미국 시민들의 감염을 억제시키기 위함임.

○ 양질의 교사양성을 위한 지원도 미국의 시장 확대로 표현되는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음.

- 또한 미국의 경제협력 정책은 단순히 미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 미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아시아 지역산 제품의 미국 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 이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CBTPA 정책으로 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산 심유류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1990년대 미국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FTA를 통한 지역주의 확대 전략임.

- 미국은 멕시코를 포함하는 NA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2000년 5월에는 그간 지체되었던 NAFTA Parity법인 CBTPA를 발효시킴으로써 사실상 중미카리브지역을 NAFTA 경제권에 포함시켰음.
미국 정부가 미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을 획득함에 따라 FTAA 결성을 위한 협상은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 최근에는 칠레와의 FTA를 공식 체결한데 이어서 FTAA 협상 부진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미지역과 CAFTA를 협상 중에 있으며, 카리브지역 최대 경제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을 CAFTA 협상에 포함시킬 계획을 추진 중임.

■ 냉전시기 미국의 정책은 일방적이며 쌍무적인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기구나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선호되고 있음.

- 1990년대 들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다자주의 개념을 점차 선호하게 되었고, 다자주의 협력은 평화유지 및 지역안보 이외에도 원조프로그램, 외채탕감, 인프라개발, 환경보호, 난민 지원, 마약퇴치등과 같은 사안에서도 점차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를 통해 조작되는 경향이 강했음.

미국이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이유는 냉전종식이후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현실과 쌍무적 접근의 경우 국가간의 마찰을 빚어 미국의 대외이미지도 쇠퇴될 우려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여전히 일방주의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1990년대 미국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업정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기업의 이해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그 결과 정책입안과 시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증대했음.

-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약을 주선하고 행정업무를 부드럽게하며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해 중으로써 기업의 이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 측면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나 원조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든 예에서도 발견됨.
■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던 중남미지역은 최근 FTAA와 실화되고 있는 신안보 의제로 인하여 재차 주목받고 있을.

■ 중미 및 카리브지역의 경우 미국의 중중남미 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 FTAA 가속화를 위해 중미지역과는 CAFTA를 추진 중이고, 도미니카공화국과는 CAFTA 협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중임.
- 지역주의의 편익을 공유하고 미국의 상대적인 비경쟁적 부문을 국제 분업을 통해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 할당하기 위해 특혜제도를 개선하였음.
- 또한 신 안보위협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미 및 카리브지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그러한 중미 및 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최근 국際정치(국지적 분쟁, 테러와의 전쟁 등) 및 경제(WTO DDA 등)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한층 강화될 전망임.
- 특히 중미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이 한층 제고됨에 따라 미국의 대중남미 협력정책도 긴밀화될 전망임.

○ 미국은 중남미 지역을 중전의 단순한 기회의 망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고려, 1990년대부터 차츰 싹트기 시작한 동등한 협력파트너로서의 인식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더 이상 미주대륙을 2개의 대륙(Americas)이 아닌 하나의 대륙 (western hemisphere)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IV. 우리기업의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중미 카리브 교역동향

가. 중미지역
■ 중미지역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시장인데, 1994년 NAFTA 출범 이후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현지 투자진출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흑자 규모도 증가하였음.

- 2002년 기준으로 중미와의 교역량은 한국 총교역의 0.8%, 한국과 중남미 교역의 19.0%를 차지함.

■ 현지진출 투자기업이 집중된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그리고 선박수출을 비롯한 중계무역이 증적으로 이루어진 파나마에 대한 수출이 두드러짐.

- 그러나 중남미지역 지역주의화와 그에 따른 물류중심지 이동으로 중개무역과 경제중심지로서의 파나마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미파나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결과 중미 전체에 대한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 중임.

<표 9> 한국의 총중미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과테말라</td>
<td>83</td>
<td>96</td>
<td>110</td>
<td>130</td>
<td>191</td>
<td>267</td>
<td>367</td>
<td>485</td>
<td>470</td>
<td>501</td>
</tr>
<tr>
<td>엘살바도르</td>
<td>28</td>
<td>42</td>
<td>54</td>
<td>53</td>
<td>65</td>
<td>80</td>
<td>92</td>
<td>87</td>
<td>87</td>
<td>73</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70</td>
<td>62</td>
<td>57</td>
<td>51</td>
<td>66</td>
<td>75</td>
<td>107</td>
<td>110</td>
<td>111</td>
<td>111</td>
</tr>
<tr>
<td>니카라과</td>
<td>4</td>
<td>11</td>
<td>22</td>
<td>31</td>
<td>33</td>
<td>36</td>
<td>41</td>
<td>51</td>
<td>59</td>
<td>85</td>
</tr>
<tr>
<td>온두라스</td>
<td>66</td>
<td>76</td>
<td>83</td>
<td>91</td>
<td>112</td>
<td>113</td>
<td>131</td>
<td>142</td>
<td>136</td>
<td>138</td>
</tr>
<tr>
<td>소계</td>
<td>251</td>
<td>287</td>
<td>326</td>
<td>356</td>
<td>467</td>
<td>571</td>
<td>738</td>
<td>875</td>
<td>1,735</td>
<td>908</td>
</tr>
<tr>
<td>파나마</td>
<td>1,081</td>
<td>1,968</td>
<td>2,246</td>
<td>3,195</td>
<td>1,918</td>
<td>2,021</td>
<td>1,813</td>
<td>1,247</td>
<td>1,719</td>
<td>1,184</td>
</tr>
<tr>
<td>중미 전체</td>
<td>1,332</td>
<td>2,255</td>
<td>2,572</td>
<td>3,551</td>
<td>2,448</td>
<td>2,591</td>
<td>2,551</td>
<td>2,122</td>
<td>3,454</td>
<td>2,092</td>
</tr>
<tr>
<td>증감율(%)</td>
<td>-69.3</td>
<td>14.0</td>
<td>38.1</td>
<td>-31.1</td>
<td>5.8</td>
<td>-1.5</td>
<td>-16.8</td>
<td>62.8</td>
<td>-39.4</td>
<td></td>
</tr>
</tbody>
</table>

주: 1) 벨리세 제외.
자료: KOTIS 재작성.

■ 총중미 수입은 미미하지만 파나마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수출과 동일하게 중미파나마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규모도 줄어들고 있음.

■ 총중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선박 등을 포함한 수송기계, 직물, 섬유제품, 가정용 전자제품이고, 주요 수입품은 농산물, 수송기계, 전자부품, 섬유제품 등임.

- 40 -
나. 카리브지역


- 2002년 기준 양지역간 교역량은 한국 총교역량의 0.4%, 한국-중남미 총교역량의 10.4%에 불과함.

■ 1994~2002년 사이에 한국의 카리브지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8.5%로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보다도 높게 나타남.

- 이는 1996년 이후 바하마에 대한 수출(특히 선박 및 자동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임.

- 2002년 기준으로 바하마(75.4%)와 도미니카공화국(14.4%)에 대한 수출이 카리브지역 총수출의 89.8%를 차지하여 지역 내에서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도미니카공화국(64%), 안티과바부다(14%), 벨리세(9%)로부터의 수입이 휴커리브지역 총수입의 87%를 차지하여 소수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특히 휴안티과바부다 수입은 그 동안 거의 전무했는데, 2000년에 원유수입이 개시되면서 주요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도미니카공화국(64%), 안티과바부다(14%), 벨리세(9%)로부터의 수입이 휴커리브지역 총수입의 87%를 차지하여 소수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특히 휴안티과바부다 수입은 그 동안 거의 전무했는데, 2000년에 원유수입이 개시되면서 주요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음.

전술한 수출입 구조 하에서 한국은 카리브 시장에서 지속적인 무역수지
 tỏ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더욱 증가한 12억 달러를 상회했음.

한국의 희카리브 지역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안티과바부다</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31,521</td>
<td>153</td>
<td>459</td>
</tr>
<tr>
<td>바하마</td>
<td>1,849</td>
<td>5,900</td>
<td>211</td>
<td>410</td>
<td>63</td>
<td>700</td>
<td>464</td>
<td>607</td>
<td>10,712</td>
<td>13</td>
</tr>
<tr>
<td>바베이도스</td>
<td>236</td>
<td>391</td>
<td>384</td>
<td>448</td>
<td>189</td>
<td>60</td>
<td>60</td>
<td>25</td>
<td>100</td>
<td>111</td>
</tr>
<tr>
<td>벨리즈</td>
<td>103</td>
<td>179</td>
<td>1,777</td>
<td>2,655</td>
<td>2,744</td>
<td>123</td>
<td>4,377</td>
<td>2,180</td>
<td>9,855</td>
<td>3,060</td>
</tr>
<tr>
<td>도미니카</td>
<td>29,001</td>
<td>42,181</td>
<td>31,069</td>
<td>16,846</td>
<td>387</td>
<td>29</td>
<td>643</td>
<td>8,872</td>
<td>1,000</td>
<td>131</td>
</tr>
<tr>
<td>그레이나다</td>
<td>4</td>
<td>-</td>
<td>-</td>
<td>27</td>
<td>3</td>
<td>-</td>
<td>-</td>
<td>2</td>
<td>51</td>
<td>9</td>
</tr>
<tr>
<td>가이아나</td>
<td>3,689</td>
<td>9,079</td>
<td>7,738</td>
<td>3,339</td>
<td>9,350</td>
<td>1,961</td>
<td>1,957</td>
<td>1,967</td>
<td>1,471</td>
<td>2,836</td>
</tr>
<tr>
<td>아이리</td>
<td>-</td>
<td>-</td>
<td>-</td>
<td>10</td>
<td>43</td>
<td>220</td>
<td>39</td>
<td>19</td>
<td>0</td>
<td>3</td>
</tr>
<tr>
<td>자바이카</td>
<td>589</td>
<td>446</td>
<td>645</td>
<td>426</td>
<td>1,244</td>
<td>288</td>
<td>208</td>
<td>649</td>
<td>727</td>
<td>4,826</td>
</tr>
<tr>
<td>세인트로즈네비스</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d>2</td>
<td>14</td>
<td>23</td>
<td>6</td>
<td>23</td>
</tr>
<tr>
<td>세인트루이시아</td>
<td>5</td>
<td>5</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세인트V/G</td>
<td>258</td>
<td>2</td>
<td>-</td>
<td>500</td>
<td>-</td>
<td>28</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수리남</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6</td>
<td>3</td>
<td>37</td>
<td>-</td>
</tr>
<tr>
<td>트리니다드도바고</td>
<td>11,128</td>
<td>9,037</td>
<td>7,260</td>
<td>1,310</td>
<td>6</td>
<td>1</td>
<td>70</td>
<td>4,761</td>
<td>593</td>
<td>708</td>
</tr>
<tr>
<td>CARICOM 총계</td>
<td>46,856</td>
<td>70,315</td>
<td>49,084</td>
<td>26,273</td>
<td>14,030</td>
<td>3,410</td>
<td>7,760</td>
<td>50,632</td>
<td>24,671</td>
<td>12,217</td>
</tr>
<tr>
<td>도미니카(공)</td>
<td>894</td>
<td>1,585</td>
<td>6,167</td>
<td>29,310</td>
<td>45,850</td>
<td>28,733</td>
<td>23,259</td>
<td>45,083</td>
<td>37,573</td>
<td>21,808</td>
</tr>
<tr>
<td>카리브 전체</td>
<td>47,750</td>
<td>71,900</td>
<td>55,251</td>
<td>55,583</td>
<td>59,880</td>
<td>32,143</td>
<td>31,019</td>
<td>95,715</td>
<td>62,244</td>
<td>34,025</td>
</tr>
<tr>
<td>증감율(%)</td>
<td>-</td>
<td>50.6</td>
<td>-23.2</td>
<td>0.6</td>
<td>7.7</td>
<td>-46.3</td>
<td>-3.5</td>
<td>208.6</td>
<td>-35.0</td>
<td>-45.3</td>
</tr>
</tbody>
</table>

주: 1) 몽세라 제외.
자료: KOTIS 재작성.

2. 한국의 중미- 카리브 투자동향

가. 중미 직접투자

우리 기업들의 중미 투자는 멕시코나 남미 지역과 달리 섬유, 의류, 봉제 등 경공업 부문에 편중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멕시코의 경우 국내 산업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체 내수시장 규모가 커 섬유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그러나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진출은 미국으로의 우회진출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미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중미 투자도 줄어들고 있음.

- 중미지역에 대한 순투자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순투자 금액도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바, 2002년 6월 말 기준으로 투중미 순투자는 155건에 2억 5,395만 달러를 기록 중임.

- 투자 건수로는 과테말라가 앞서지만, 금액으로는 파나마, 온두라스, 과테말라 순임.

■ 이처럼 투자가 부진해진 원인은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체시장 부상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한국의 투중미 투자는 섬유 및 의류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NAFTA 출범,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과 같은 수출환경 변화의 충격을 쉽게 받음.

- 남미시장이 새로운 소비시장과 투자유망 지역으로 부상하는 것도 투중미 투자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중미와 남미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 중미에서 경험을 쌓은 한국 기업들이 쉽게 익히갈 수 있다는 점도 중미지역 업체들의 멕시코나 남미로의 철수를 부추기고 있음.

◦특히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의 무관세 통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미 진출 업체들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CBI, CBTEA 등 현재 이 지역에 부여되고 있는 미국의 각종 특혜 조치와 NAFTA Parity 확대 가능성, 양질의 저임 노동력 등을 고려한 다면 중미지역으로부터의 선부로 철수는 재검토 대상임.

<표 13> 한국의 투중미 직접투자 현황(2003. 6월 기준)
<table>
<thead>
<tr>
<th>대만, 중미 및 카리브 지역</th>
<th>총투자</th>
<th>순투자</th>
</tr>
</thead>
<tbody>
<tr>
<td>과테말라</td>
<td>71</td>
<td>94,544</td>
</tr>
<tr>
<td>온두라스</td>
<td>42</td>
<td>94,039</td>
</tr>
<tr>
<td>니카라과</td>
<td>10</td>
<td>11,952</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20</td>
<td>149,776</td>
</tr>
<tr>
<td>엘살바도르</td>
<td>14</td>
<td>21,193</td>
</tr>
<tr>
<td>소계</td>
<td>157</td>
<td>366,504</td>
</tr>
<tr>
<td>파나마</td>
<td>83</td>
<td>147,947</td>
</tr>
<tr>
<td>총계</td>
<td>240</td>
<td>514,451</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표 14> 한국의 대중미 및 카리브 지역 직접투자 현황(2003년 6월 총투자 기준)

<table>
<thead>
<tr>
<th>대만, 중미 및 카리브 지역</th>
<th>총투자</th>
<th>순투자</th>
</tr>
</thead>
<tbody>
<tr>
<td>과테말라</td>
<td>62,371(61)</td>
<td>51(1)</td>
</tr>
<tr>
<td>온두라스</td>
<td>9,979(2)</td>
<td>215(1)</td>
</tr>
<tr>
<td>니카라과</td>
<td>2,000(1)</td>
<td>436(1)</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2,498(1)</td>
<td>17,352(10)</td>
</tr>
<tr>
<td>엘살바도르</td>
<td>16,569(12)</td>
<td></td>
</tr>
<tr>
<td>소계</td>
<td>14,477(4)</td>
<td>1,340(4)</td>
</tr>
<tr>
<td>파나마</td>
<td>49,358(24)</td>
<td>38,150(8)</td>
</tr>
<tr>
<td>총계</td>
<td>63,835(28)</td>
<td>39,490(12)</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나. 카리브 적접투자


- 그러나 이는 CARICOM 회원국과 케이만군도, 버뮤다, 영령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것임.
CARICOM에 한정할 경우에는 23건에 5,035만 달러(총투자)와 17건에 1,766만 달러(순투자)로 미미한 실정임.

<표 15> 한국의 카리브지역 직접투자 현황(2003. 6월 기준)
(단위: 천 달러)

<table>
<thead>
<tr>
<th>국가</th>
<th>총투자</th>
<th>순투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건수</td>
<td>금액(천)</td>
</tr>
<tr>
<td>가이아나</td>
<td>1</td>
<td>3,600</td>
</tr>
<tr>
<td>도미니카공화국</td>
<td>8</td>
<td>5,640</td>
</tr>
<tr>
<td>바베이도스</td>
<td>1</td>
<td>608</td>
</tr>
<tr>
<td>바하마</td>
<td>3</td>
<td>34,400</td>
</tr>
<tr>
<td>벨리즈</td>
<td>1</td>
<td>200</td>
</tr>
<tr>
<td>세인트루이즈</td>
<td>2</td>
<td>500</td>
</tr>
<tr>
<td>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td>
<td>1</td>
<td>1,870</td>
</tr>
<tr>
<td>자메이카</td>
<td>10</td>
<td>17,130</td>
</tr>
<tr>
<td>수리남</td>
<td>2</td>
<td>1,786</td>
</tr>
<tr>
<td>합계</td>
<td>29</td>
<td>65,734</td>
</tr>
<tr>
<td>버뮤다</td>
<td>11</td>
<td>1,550,883</td>
</tr>
<tr>
<td>영령버진아일랜드</td>
<td>32</td>
<td>260,559</td>
</tr>
<tr>
<td>케이만군도</td>
<td>22</td>
<td>241,481</td>
</tr>
<tr>
<td>푸에르토리코</td>
<td>2</td>
<td>68,711</td>
</tr>
<tr>
<td>총계</td>
<td>96</td>
<td>2,187,368</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 총투자 기준으로 봐 CARICOM 국별로는 바하마(57.3%)와 자메이카 (22.5%)에,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3.6%), 건설업(22.4%), 제조업(12.9%)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카리브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에는 버뮤다가 총투자의 78.6%를, 부동산업이 77.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에 투자건수는 16건으로 부동산 다음이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5.1%에 불과함.

- 한편, 카리브지역의 주요 투자대상국들이 역외금융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함.

<표 16> 한국의 카리브지역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2003. 6월 총투자

- 46 -
기준) (단위: 천 달러)

<table>
<thead>
<tr>
<th>국가</th>
<th>농림어업</th>
<th>청력</th>
<th>제조업</th>
<th>건설업</th>
<th>도소매업</th>
<th>품수상업</th>
<th>전기</th>
<th>금융보험업</th>
<th>부동산</th>
</tr>
</thead>
<tbody>
<tr>
<td>가이아나</td>
<td>3,60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미니카공화국</td>
<td>4,07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바하마</td>
<td>436(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벨리즈</td>
<td>1,900(1)</td>
<td></td>
<td>26,975(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세인트루시아</td>
<td>500(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세인트바바로바</td>
<td>87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메이카</td>
<td></td>
<td></td>
<td>11,300(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리남</td>
<td>20(1)</td>
<td>64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 계</td>
<td>4,490(3)</td>
<td>645(1)</td>
<td>6,478(3)</td>
<td>11,300(3)</td>
<td>436(1)</td>
<td>26,975(2)</td>
<td></td>
<td></td>
<td></td>
</tr>
<tr>
<td>바하마</td>
<td>90,897(3)</td>
<td>656(1)</td>
<td></td>
<td>13,868(5)</td>
<td>5(1)</td>
<td>1,377,467(3)</td>
<td></td>
<td></td>
<td></td>
</tr>
<tr>
<td>영유권이탈원제</td>
<td>8,300(2)</td>
<td>110,118(10)</td>
<td>1,530(1)</td>
<td>2,928(3)</td>
<td>100(1)</td>
<td>25(1)</td>
<td>39,964(19)</td>
<td></td>
<td></td>
</tr>
<tr>
<td>카리만군도</td>
<td>500(1)</td>
<td>4,993(2)</td>
<td>833(2)</td>
<td>1(1)</td>
<td>700(1)</td>
<td>75,872(1)</td>
<td>1,650(3)</td>
<td>38,823(18)</td>
<td></td>
</tr>
<tr>
<td>푸에르토리코</td>
<td></td>
<td></td>
<td>67,426(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총 계</td>
<td>13,290(6)</td>
<td>57,336(6)</td>
<td>96,535(16)</td>
<td>12,831(10)</td>
<td>72,140(7)</td>
<td>27,975(3)</td>
<td>89,990(5)</td>
<td>1,650(4)</td>
<td>1,456,254(20)</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3. 대응전략

■ 미국의 중미·카리브 정책과 항후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과 중미·카리브지역간의 교역 및 투자 변화 등은 현지진출기업 및 항후 진출을 고려중인 기업들로 하여금 대응전략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지역주의 대응

- FTAA와 CAFTA로 중미·카리브지역의 통상환경이 대폭 변화될 것인 바,

- 내수시장용 수출기업의 경우 상대적인 관세인상 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을 품질향상을 통해 보완하고, 원·부자재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주의에 적응하기 위한 현지 기업의 세계화 전략에 편승한 제품개발과 생산지 재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임.

- 투자진출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주의로 인한 차별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
기존의 원부자재 공급원을 역내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임.

○투자진출을 수출 진흥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무의미함을 인식할 때, 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만이 생존을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 될 것임.

■ 지역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반감에 대응

- FTAA, CAFTA 등 지역주의는 역내 노동계, 환경단체 등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 중미·카리브지역에서는 투자와 노동이 대표적인 문제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 FTA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데, 그 동안 중미·카리브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은 반면, 경제성장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역할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음.

○즉, 저비용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마켓라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부가가치산업 육성, 기술이전 미비 등을 부산물로 하는 양적투자에 불과하며, 수출시장에 대한 지역의 의존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FTA와 그에 따른 양적투자 증대의 부작용으로 노동권 위반 사례 증가, 저임금 및 근로시간 연장 등 지역의 노동환경 악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중미·카리브지역에 기진출한 기업 및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bad practices에 대한 범칙 부가 경향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통상증진 방안

- 한국과 중미·카리브지역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지리적 거리감, 문화적 이질성, 협력기반 미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적 중요성, 상황에 대한
낮은 관심 등으로 미미했음.

○ 그러나 21세기에 지리적 거리감은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고, 중미·카리브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미국처럼 한국은 동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이해를 지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주지역에서 동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과 중미·카리브지역간의 교역이 미미했던 것은 그 동안 지역의 무역구조가 각종 무역특혜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동 지역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쌍방의 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이기도 함.

○ 따라서 새로운 출발하는 의미에서 양 지역에 기초적인 통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 지역간 통상에 장애가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이 요망됨.

○ 한국기업의 경우 중미·카리브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물류비용의 상승과 시장의 협소에 따른 단위 수출비용 증가를 최대의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기존 연구들에서 종종 제기되었던 지역공동물류망 구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양측간 교역량이 적은 것은 한국에 의한 수입이 절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임. 이는 카리브지역의 수출품이 다가화되지 못한 결과이지만, 최근 안티파바부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수입상품을 발굴할 경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중미·카리브지역은 벡시코와 비교할 때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중미와 카리브지역 상호간의 경쟁과 NAFTA하의 벡시코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투자가 미진하였음.

○ 미국의 CBTPA와 EU의 Cotonou협정 등이 발효됨으로써 투자대상지로서의 위상은 높아지고, 2005년 FTAA 촉벌을 앞두고 우회시장 진출을
기존에 본의 산업,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환경산업 육성에 정해진 현가와 병행하여 동부에 대한 진출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Lizano, Eduardo y Anabel González, Marzo 2003,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el Istmo Centroamericano y los Estados Unidos de American Oportunidades, desafíos y riesgos, Documento de Divulgacion 9, Intal.


US Census Bureau, Country Trade Data Updated for 2002[onlin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http://www.koreaexim.go.kr].
EU의 대중남미 정책과 향후 EU-중남미 관계 전망

한국유럽학회 연구교수 최 윤국 박사

I. 서론

II. EU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1. 대중남미 외교관계
2. 대중남미 외교정책의 특성
3. 대중남미 외교채널의 특성과 기능
4.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III.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통상정책

1. 대중남미 통상정책의 특성
2. 대중남미 통상협력 현황

IV. EU의 대중남미 기타 협력정책

1. 대중남미 개발협력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2.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및 차관

V. EU와 중남미 관계 전망

1.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외교·정치 협력의 강화
2.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경쟁
3. 미국과의 경쟁 심화
4. 개발협력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며
I. 서론

냉전의 종식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라틴아메리카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그 동안 축적되었던 체제전반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 시험장과 같았다. ‘범지구적 냉전연합(global Cold−War alliance)’이 불필요해진 반면에, 중남미는 보다 ‘자율적인 지역공간’(autonomous regional space)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남미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공통된 관심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되는 1980년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었다. 1980년대의 도전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수입대체산업화나 고율의 관세 그리고 국가의 지나친 역할을 축소해도 상관없이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고율의 인플레이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고등스런 경제안정화 조치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은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중남미 거시경제환경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중남미의 거시경제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은 1960년대 공공부문 자금이나 1970년대 민간 여신을 통해 중남미지역 정부들로 하여금 무역 및 재정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멕시코의 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여신 공여를 큰 폭으로 삭감하였고, 여타 국제금융기구들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중남미지역의 정부들은 막대한 외채상환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울이 미국은 대내적으로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NAFTA의 결성, FTAA(범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조기실현 등 지역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을 억제하고 범지구적인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여 미국에게 닫힌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폐쇄적 블록화는 궁극적으로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도 장기적으로

---

1 ‘다자주의를 향한 지역주의’의 적용으로서 미국이 강력하게 저지한 NAFTA−APEC−GATT 방식은 미대외경제정책의 전략적 우수성을 보인 사례이기도 하다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중남미지역에 대해 전통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해와 우월적인 위상은 곧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중남미 양 지역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연합은 중남미지역에 있어서 미국에 앞서 경제적·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중남미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럽과 정치적·문화적 가치의 동질성이 존재하는 유일한 개도권 지역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처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유럽의 이해가 국가안보상의 전략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도권에서 가장 유럽적인 가치를 지닌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의 지속적 유지라는 외교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정책 행보가 더욱 강화되는 동안, 집단안보와 경제통합 등의 문제에 집중해 있던 유럽은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시장의 개방화가 본격화됨으로써 유럽연합은 중남미에 대한 지역간(interregional) 통상협력 기반강화를 위해 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과 경쟁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지역간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양 지역간의 정치적·문화적 교류의 역사를 차지하더라도 현재 유럽연합은 중남미 지역에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이며, 제 2의 교역대상국이다. 유럽연합은 중남미의 다양한 지역공동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다자간 혹은 양자간의 각종 회담과 선언들을 통해 공고한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함께 중남미지역의 국가간

---

2 김성한, "클린턴외교 1년: 탈냉전기의 도전과 극복?", 개간 사상, 94년 별호, pp.233-4.
3 유럽연합은 다른 지역공동체와 비교할 때, 관세동맹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단일통화통합과 공동경제안보정책 및 공동사회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지역공동체 수준에 이르러 있다. 캐나다 및 미국의 북유럽 보도국과는 약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공동체의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경제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흑은 블록간 고유이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합종연횡’의 복잡한 협력 체제의 구축이다. 이것은 중남미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략과 정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과 거시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창출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기 시작한 선례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성과는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지역 자체의 다양한 변화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実제로 중남미지역의 발전 계획은 EU와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미국 주도의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 그리고 기존의 중남미지역의 경제블록을 개편 내지 확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의 전망은 보다 복잡한 다자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제 선자유주의적인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투자와 생산 그리고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등장한 중남미가 자신들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해나가는 능력과 과정에 이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거대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세계 무대에서 단일 목소리를 통해 세계적 위상과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및 통상정책은 지역에 대한 상품시장 일변도의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협력체제의 모색이 요구되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다자간 협의 과정이나 그의 모색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정부로서는 중남미 지역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다자간 협의모델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과거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지역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직면한 과제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역의 패무간 혹은 다자간의 협력 유형 및 형태를 살펴 보는 것은 중요하다. EU는 새로운 시대에 보다 발전된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적 환경의 이해 위에 협력의 형태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EU와 중남미 간의 협력의 기본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외교정책과 그 체널의 성격 및 기능, 경제블록의 확대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정책 그리고 정보화 협력 등 기타 다양한 협력정책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한 양 지역간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EU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류는 15세기 말 경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8세기부터는 영국,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도 확대되었다. 19세기에는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발원한 노동, 자본 및 기술 등이 본격적으로 중남미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 유럽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1975년 로마협정체결

유럽과 카리브안국가들(ACP소속 회원국)을 쏟함한 중남미 국가들간에 최초의 협력을 위한 초치들이 취해졌다.

1983년 최초 협력협정조인

유럽연합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최초 협력협정을 조인하였다.

1984년 San José 회담 시작

유럽과 중미국가들간의 San José 회담 시작.

1985년 협력협정조인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협정조인.

1. 대중남미 외교관계

유럽연합은 단일거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구 혹은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흡인 Central America, Andean countries, MERCOSUR과 같은 지역단위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 등의 개별국가와도 다양한 외교통상 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표 1" 유럽과 중남미지역간의 외교 연대기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975년</td>
<td>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창설, EEC-ACP간에 로마협정체결</td>
</tr>
<tr>
<td>1976년</td>
<td>유럽연합과 카리브안국가들(ACP소속 회원국)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간에 최초의 협력을 위한 초치들이 취해짐</td>
</tr>
<tr>
<td>1983년</td>
<td>유럽연합-Andean Pact간의 최초 협력협정조인</td>
</tr>
<tr>
<td>1984년</td>
<td>유럽연합과 중미국가들간의 San José 회담 시작</td>
</tr>
<tr>
<td>1985년</td>
<td>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간의 협력협정조인</td>
</tr>
</tbody>
</table>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은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세 가지를 주요 축으로 한다: 경제협력, 제도화된 정치회담, 교역관계 강화. 특히 제도화된 정치회담을 통해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은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외교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2. 대중남미 외교정책의 특징

EU는 기존의 외교 채널을 통해 협력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등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 사우,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통합의 심화 및 확대, 유로의 안정화 그리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전진적인 발전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경제적·정치적·사회적·안보적 협력에 맞는 전략적 외교정책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외교정책의 목표와 외교적 실제로서 대중남미 지역 전략의 내용을 살펴본다.

1) 유럽연합의 전략적 외교정책 목표

최근 유럽연합의 대외 활동은 유럽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외국가들과의 정치협력,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 그리고 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통상정책으로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이와 같은 수단이 외교, 경제, 무역 부문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첫째,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갖는 안정적인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다. 최근 보스니아와 코소브 지역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유럽전역에서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존중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교역국인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규제를 보다 자유화함으로써 교역을 증진하여 자신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4

셋째,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표이다. 유럽연합이 양 지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유럽연합은 유럽회의국간 혹은 대외협력 국가간의 경제적 이해의 증대를 위해 경제발전의 결과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재분배시스템과 인권존중, 그리고 평화수호’의 과제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자신의 영향력이 당하는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이런 외교정책 목표와 내용에 기초해 대중남미 지역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 금융지원과 이에 따른 인적자원과 법적 토대에 바탕을 둔 새로운 원조기구를 창설한다. 둘째, 두 지역간의 정치, 무역, 사회 등 모든 영역의 잠재력에서 상호 최대한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합의안에 도달한다. 셋째,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특히 중남미지역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완화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두 지역이 공동으로 두 영역에서 일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빈곤과 소외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해소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제의 도전에 맞서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e-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 정보협력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

양 지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의 목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과 구체 적이고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4월 22일 브뤼셀의 유럽이사회는 중남미지역과의 지역협력을 위해 두 가지 결정을 체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5년간의 지역전략이었다.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통합을 증진하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등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럽이사회가 책정한 예산만도 2억 5천만 유로에 해당하였다.

두 번째는 중남미지역이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민주적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부행정의 근대화라는 두 가지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 높은 학술연구 프로그램을 2002-2005년 사이에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은 유럽연합의 대중남미외교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의 지역전략은 중남미국가들의 하위 지역단위와 국가차원에서의 협력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보호, 마약남용통제 그리고 비정부기구(NGO)활동에 대한 지원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남미국가들간 혹은 개별 국가 내의 지역통합 그리고 이들 지역의 세계화와 중남미 전체인구의 40%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축소가 가장 주된 과제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조는 중남미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보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전략은 현재 모두 17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Mexico, Panam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Bolivia, Colombia, Venezuela, Peru, Ecuador, Brazil, Argentina, Chile, Uruguay and Paraguay 등.

이런 가시적인 관계 향상을 통해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

--- 58 ---

4 특히 유럽연합은 이런 자유화가 개발국가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과의 교역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하의 아메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대중남미 외교체널의 특성과 기능

유럽연합은 대외관계에 두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유럽연합이사회와 각료이사회의 조직 혁신을 단행한바 있다. 과거 유럽연합의 대외관계는 유럽연합이사회내의 두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6개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패튼위원장은 각료이사회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최고대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합의 정책방향을 견지한다.

1999년 이전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의 관계는 양 지역간 소규모 블록단위 혹은 개별 국가간 협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중남미지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주된 외교파트너는 San José Group (Costa Ric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and Panama), Mercosur (Argentina, Brazil, Paraguay and Uruguay), the Andean Community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and the Rio Group of countries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Ecuador, Mexico, Panama, Paraguay, Peru, Uruguay and Venezuela) 등이다.

그러나 1999년 리오 정상회담에 이르러서 중남미국가들과 카리브안국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가 이루어졌다. 2002년 마드리드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양 지역간의 관계가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유럽연합은 양 지역간의 협력체계로서 중남미국가들과 카리브안국가들과 별도의 외교적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남미국가들과는 Rio Group을 통해 그리고 중남미지역과 카리브안국가들을 포괄한 협력체계로는 LAC를 구축하고 있다. 전자가 유럽연합과 중남미의 국가정상 차원에서의 정치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장이라면 후자는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 그리고 카리브안 국가들의 수뇌정상회담이다.
1) 유럽연합과 중남미 지역간 협력관계

1) 유럽연합과 리오그룹(Rio Group)\(^5\)

1986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창설된 리오 그룹은 MERCOSUR 4개 회원국 외에 브라질, 친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등 모두 19개국의 중남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경제 협력대화의 기본들을 구성하고 있다. 리오 그룹은 당초 중미분쟁 문제를 흉의하기 위해 조직된 'Comadora 그룹'(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파나마)과 'Apoio 그룹'(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중남미의 실질적인 정상외교의 중요한 체제로 기능하고 있다.

리오 그룹은 공식적인 공동기구\(^6\)는 두지 않고 있으나 중남미지역의 민주화 문제와 같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국가 정상들간의 정치자문 기구 역할을 하며 최근 들어서는 지역 혹은 국제문제에 대한 중남미국가들의 임장을 조율하는 외교적 포럼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리오 그룹은 1990년부터 유럽연합과 회원국들간의 외무장관 연례회담을 제도화하였으며 중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기구 혹은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와 리오 그룹간의 회담은 두 지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핵심적인 정치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그리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양 지역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례 장관급회담>

\(^5\) 리오 그룹의 기본 목적은 회원국 정부들간의 정치 협력 증진,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와 공동 입장 수립, 라틴아메리카 통합 및 협력 메커니즘의 조정과 기능 강화, 지역 분쟁과 문제의 적절한 해결, 협력과 대화를 통한 국제관계의 개선 노력, 라틴아메리카에서 통합 및 협력 과정 추진, 기술, 과학, 사회, 경제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의 발굴이다.

\(^6\) 리오 그룹의 주요 협의 메커니즘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국 리오그룹 대표자 회담, 외무부 장관 회담, 임시 회장국과 임시 회장국 대표자 회담, 회원국 정상 연례 회담
-2001년 산티아고 정례회담: 2001년 4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있던 제10차 정례장관급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리오그룹 국가들은 "신경제, 기술격차 그리고 고용"의 문제들을, 유럽연합측은 "민주주의 수행능력, 효율적인 통치, 그리고 빈곤퇴치"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EU-LAC관계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전망에 관하여", 둘째, "사회통합 (social cohesion)과 새로운 경제환경에서의 민주적인 통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회담에서 장관들은 세계화가 야기하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한편 파생되는 기회들이 주는 이익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의무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각국의 장관들은 양 지역간 및 하위지역간 통합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화와 인권분야에서 양 지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달한다. 특히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권리보호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노동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의 진전을 통해 양 지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경제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하층그룹의 사회통합을 주도하며 특히 세계화로의 통합이 이들 그룹의 사회 참여에 기여하여야 한다.

세계, 2004년 말까지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강조한다. 즉 Doha work prigram을 설치하여 2004년 말까지 유럽연합과 중미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과 안데안 공동체간에 FTA를 포함한 상호간의 이익이 되는 공동체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다.
(2) 유럽연합과 LAC

유럽연합과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안국가들을 포함한 대표적인 외교채널이다. 유럽공동체와 LAC간의 최초 수뇌회담은 1999년 6월 28-29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이 리오 회담의 목적은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미래의 공동조치를 위한 우선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5월 17-1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는 리오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상호관계의 세기조를 계시하고 강조하였다. 첫째, 정치적 대화, 둘째, 무역과 금융을 포함한 경제 및 재정적 관계, 셋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다.

특히 유럽연합과 중남미지역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리오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양 지역간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99년 리오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의제와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의적, 참여적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강화한다.
▶ 법의 지배, 다원주의 존중
▶ 국제평화와 안보
▶ 정치안정과 국가간 신뢰강화

리오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치분야
  ▶ 양 지역간 대화를 제도적으로 강화
  ▶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증진하고 보호
  ▶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험에 공동대처

- 경제분야
  ▶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 지역주의의 개방 그리고 양 지역간의 경제관계를 심화

- 62 -
경제발전을 증대하는 수단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유동적인 재정유입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처

-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사회 및 인권분야
  ▶ 양 지역의 거대한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그리고 이해를 증진
  ▶ 대중 교육 환경 개선
  ▶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 및 보존

이 리오 정상회의의 후속으로써 양 지역의 고위급 장관들은 11월 핀란드의 Tusu1a에 모여 11가지의 전략적 과제를 제안했다.

<table>
<thead>
<tr>
<th>과제</th>
<th>전략적 우선과제</th>
</tr>
</thead>
<tbody>
<tr>
<td>과제 1</td>
<td>국제포럼에서의 협력</td>
</tr>
<tr>
<td>과제 2</td>
<td>인권보호</td>
</tr>
<tr>
<td>과제 3</td>
<td>여성의 역할 증진</td>
</tr>
<tr>
<td>과제 4</td>
<td>환경과 자연재해부문에 있어서의 협력</td>
</tr>
<tr>
<td>과제 5</td>
<td>무기밀거래와 마약퇴치에 대한 협력</td>
</tr>
<tr>
<td>과제 6</td>
<td>안정적이고 동적인 세계경제와 재정체계의 확립</td>
</tr>
<tr>
<td>과제 7</td>
<td>비즈니스 포럼 증진</td>
</tr>
<tr>
<td>과제 8</td>
<td>교육, 대학연구, 리서치, 그리고 신기술분야에서의 협력</td>
</tr>
<tr>
<td>과제 9</td>
<td>문화유산보호</td>
</tr>
<tr>
<td>과제 10</td>
<td>정보화사회에 대한 공동주도권 확립</td>
</tr>
<tr>
<td>과제 11</td>
<td>통합과정에 대한 리서치, 대학원연구, 그리고 혼련지원</td>
</tr>
</tbody>
</table>

유럽연합과 LAC는 특히 앞서 살펴본 우선과제를 통해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선언하고 향후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첫째, 강화된 제도적 회담으로서 양 지역의 최고위 담당 자들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회동한다. 그리고 각 외 무장관들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은 이런 동반자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무역 관련기술지원을 한다. 이 무역관련기술지원이란 자신의 비즈니스, 다자간 협상, 그리고 협정의 이행 과정에 대한 훈련과 정보를 개발국가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특히 개발국가들을 세계경제 질서에 통합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중요한 개발정책이기도 하다. 이 어려운 개발정책을 통해 유럽연합과 MERCOSUR간 그리고 유럽연합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카리브안, 그리고 태평양국가들간의 전략적 동반자협정이 체결되었다(Cotonou agreement).

셋째, 교류를 통한 협력이다. 최근에 유럽연합과 중남미지역은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 AL-INVEST: 유럽연합과 중남미지역의 기업들간에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정립하려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프로그램이다.
- URB-AL: 특정 농촌문제를 목표로 한 지역당국들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양 지역의 약 700개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카리브안 국가들에게 있어서 앞서 지적한 11가지의 우선과제들은 유럽연합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의 협력프로그램들을 통해 카리브안 국가들은 고등교육, 마약퇴치, 교역촉진 그리고 particularly 에이즈와 같은 의료증진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유럽연합과 중남미간 하위 경제협력 체제

앞서 살펴본 것들이 주로 유럽연합과 중남미지역간의 상위 외교채널이라면 다음에 살펴볼 것들은 유럽연합과 중남미의 하위 경제단위들간의 특화된 관계라 할 수 있다. MERCOSUR와 CACM 그리고 안데안공동체는 중남미의 주요 지역통합체이다. 유럽연합과 이들 세 파트너들과의 특화된 외교의 주된 기능은 유럽연합이 이들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체와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기
적인 측면에서 다자간 경제호혜주의를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보는 인식이다. 멕시코와 칠레는 이들 지역공동체의 회원국들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과도 상호적인 협의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1) 유럽연합과 MERCOSUR

MERCOSUR는 남미의 자유무역 촉진과 판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991년에는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여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MERCOSUR는 인구 1억9천만, GDP 6,000억불에 달하는 중남미 최대경제권으로서 94년 8월 아르헨티나 4국 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이 1995년 1월 1일부터 4개국간 역내관세 철폐 및 역외공동관세를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7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이런 MERCOSUR와 초창기부터 연계되어 지원해왔다. MERCOSUR의 조직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정(소위 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에 조인한 바 있다.


7 그러나 역내관세의 경우 각 회원국에서 94년 10월 31일까지 체계적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아르헨, 브라질 4년, 우루과이, 파라과이 5년)을 인정했다. 역외공동관세(0% - 20%)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자본재의 경우 2001년까지 14%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2006년까지). 아울러 정보통신 관련품목은 2006년까지 16%로 인하 조정하였다. 한편 역외 공동관세 유배품목을 확정하였던 바, 각 회원국별 300개 품목에 대해 2001년까지 유배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파라과이는 399개 품목), 역외 공동관세 유배품목은 역내 국산화 비율이 60% 이상인 것에 한하고, 파라과이는 50% 이상의 원산지 규정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 수출제도(CAUCE, PEC)를 2001년까지 존치시키고, 자동차 및 설비분야에 관한 장기 교역규모를 마련하는데 합의하였다.
획안을 승인하였고 MERCOSUR 국가들은 1995년 8월 공동시장위원회의 '결정 5/95'를 통해 EU와 협상을 위한 블록간 협정의 초안을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 진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마드리드에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위한 'MERCOSUR와 유럽연합 지역간 협력 협정'이 최종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 지역간의 향후 협력기구 건설을 위한 계반 조건을 준비하고 양 기구간의 기존 관계를 강화할 목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구간의 경제통합시행을 위한 협회 창설이나 무역자유화에 관한 구체적 일정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블록간의 협의체를 통해 추후 협상 진행하기로 하였다.

협의체로 양 블록의 회원국 각료대표들로 구성되는 '협력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주 실무기구로 '협력 협동 분과위원회'를,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게 될 '무역 소위원회'를 각각 두고 지역간 협력기구 건설에 필요한 세부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럽연합이 MERCOSUR와 진행하고 있는 혹은 준비하고 있는 협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다음의 의제들은 2002년 5월 17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MERCOSUR간 정상회담에서 최종확인을 거쳤다.

- Mercosur의 다양한 부속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 경제적 사회적 협의 포럼 개최 (약 95만유로)
- 관세분류 통일 (약 5백만 유로)
- 동식물 위생 및 검역 규제 (1천1백20만 유로)
- 기술규범 및 기준 (3백9십5만 유로)
- 통계 표준화 및 통일 (약 4백만유로)
- Mercosur 단일시장 운영 지원
유럽연합과 중미


유럽연합의 중미지역에 대한 협력은 주로 인권, 민주주의, 농촌 발전, 재해 예방과 재건, 그리고 사회발전과 지역통합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하위 단위들에게는 이미 유럽이사회 협력부처에 의해 상당액의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매년 약 1억4천5백만 유로가 1995-2001년 사이에 지원되었다.

2002년 중미국가들은 관세통일, 교역장벽 철폐, 공동관세행정 그리고 2004년 1월 1일까지 관세등용을 이루기 위한 대외통상정책을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에 관한 아시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중미지역에서의 지역경제통합 과정이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도전이자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2002년 5월에 있었던 유럽연합과 LAC간의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은 이들 6개 중미국가들과의 새로운 정치협력과 협력협정 조인을 위한 협상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중미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공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중기적으로는 FTA를 포함하는 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하게 되었다. 특히 후자의 자유무역지역협정으로 보다 심화된 지역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은 물론이다.

(3) 유럽연합과 안데안공동체

1969년 Cartagena Agreement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마련되었고 유럽공동체
는 처음부터 이 과정을 지원하였다. 유럽공동체와 안데안공동체(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and Venezuela)간의 회담이 제도화된 것은 1996년 로마선언이다. 이수가 된 정치의제 가운데 하나가 마약퇴치였다. 이런 과정에서 2003년 5월 브뤼셀에서는 유럽공동체와 안데안공동체간 새로운 정<br>치담화 및 협력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2001년 한 해 약 8억1천 유로 이상을 지원하여 안데안공동체에 있어 제1의 원조국(무상지원과 차관의 형태 모두)이 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사실은 유럽연합이 이 지역의 사회부문과 서비스부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이런 지원을 통해 안데안공동체 회원국들은 지역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지역재정협정(Regional financial Agreements)에 조인하게 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1992-2000년 사이 매년 6백만 유로에서 1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대외지원액의 약 6%를 이 안데안공동체에 할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유럽연합과 멕시코, 그리고 칠레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와 쌍무간 협정을 진행하였는데 멕시코와는 1997년에 칠레와는 2002년에 경제 및 정치 협의 협정(Economic and Political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기적인 목표로서 파트너간에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과 더불어 정치협력과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유럽연합은 여타의 다른 중남미 지역공동체들과도 이런 유형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살펴본 MERCOSUR의 경우일 것이다.
유럽연합과 칠레는 2000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협의협정에 조인하였다. 잠재적으로 2003년 2월 1일까지 적용되는 무역 및 제도적 틀 그리고 교역관계 협력을 마련하였다. 이 협정은 현재까지 양국의 경제적, 경제적 관계와 교역관계 및 협력의 내용을 기초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0-2006년 동안 유럽연합과 칠레 양 지역간의 상무적인 협력의 내용은 "양해각서"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포함된 주된 협력우선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생산개발과 기술혁신;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국가 근대화.

유럽연합과 멕시코의 관계를 살펴 보면 멕시코는 중남미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며, 유럽연합의 수출시장으로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이어 멕시코의 제2의 교역상대국이다. 유럽연합과 멕시코간의 교역규모는 2001년 2백2십억 유로에 상당하며 유럽연합의 수출액은 1백5십억 유로이다.

이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여타의 다른 것들과 달리 매우 광범위한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은 2003년까지 멕시코는 2007년까지 공산품의 완전한 자유화, 그리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근본적인 자유화 그리고 원산지규정과 시장접근조항 등 접근적인 개방과 같은 제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FTA는 유럽연합에게 NAFTA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멕시코조달과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들간의 상무적인 관계는 1997년 12월에 조인되어 2000년 10월에 실행된 the 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peration에 근거한다. 이 협정에 의해 최고위 담당자들간의 정기적인 정치적 모임이 제도화되고 상무적인 협력은 확장해 나가게 된다. 제도화된 정치회담 덕분으로 유럽연합과 멕시코는 다자간의 그리고 상무적인 의제, 예를 들면, 빈곤, 테러, 인권, 민주주의, 이민, 지역발전에 대한 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역의 측면에서, 이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상호 시장개방, 자본이동의 자유화 그리고 시장경제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규제 원칙들을 세우올 수 있었다. 유럽연합과 멕시코간의 연합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교역에 관한 협의에 도달했다.

첫째, 상품에 대한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자유화, 둘째, 양 지역의 합의된 정부조달시장 개방, 셋째, 경쟁부문에 대한 협력장치 마련, 넷째,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협의체 마련, 다섯째, 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정책면에서 상호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5년 12월에는 New Transatlantic Agenda (NTA)에 서명하여 정치·경제·통상 등의 세계 현안 및 국가간 교류 증진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과 동 협력이행을 위한 공동행동 계획을 밝혀 바 있다. 또한 1998년 5월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NTA 진전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EU-미국 경제관계의 기본 틀로서 범대서양 경제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유럽연합 공동안보방위정책 (ESDP), 발간 반도문제, NMD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간 일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양 지역간 협력관계에 두고 있는 중요성이 큰 만큼 미국-유럽연합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이 각종 국제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남미와는 상호 최대 교역상대국인 만큼 시장선점과 경제협력 차원에서 경쟁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대중남미 전략과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1994년 12월 9-11일,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민주주의의 유지 및 강화,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빈곤퇴치 및 각종 차별철폐,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의 보존 등 4개 분야에 관해 논의한 결과 미주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주장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미주지역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초점은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문제에 맞추어졌다. 본 회담에서는 역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
한 협상은 완료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한다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미주의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WTO하에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라는 기본정신에 입각한 것도 있지만 유럽연합의 진행과 확대에 따른 미주 내륙에서의 미국경제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NAFTA 발효는 남미 국가들에게 새로운 경쟁의 체제가 도래하였음을 나타내었다. 1994년 5월 브라질의 이마마르 대통령은 MERCOSUR 회원국들에게 NAFTA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러한 협상은 개별 국가차원이 아니라 MERCOSUR 전체 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의 건설에 대해 MERCOSUR와 NAFTA의 입장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했다.

MERCOSUR는 개방적 경제블록으로서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의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공극적으로는 중남미를 포함하는 미주 내륙전체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의 이러한 노력은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조기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와 달리 그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MERCOSUR와 NAFTA간의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두 경제블록의 중심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FTAA 건설에 대한 입장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

미국은 자국이 중남미 대다수 국가들의 중심적인 교역 대상국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NAFTA에서 멕시코의 경우처럼 미국과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주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남미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개방화 정도가 높고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은 NAFTA의 가입이나 FTAA를 위한 자유무역 협정의 조기 체결에 찬성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퀘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들 수 있다. 반면 브라질은 NAFTA와의 협상이나 FTAA의 조기 실행보다는 우선 남미지역의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 다음, 북미지역과 가능한 대등한 입장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당연히 MERCOSUR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입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미에서의 폐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지역 동맹주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외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남미국가들의 점진적인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통합 전략이 폐쇄적 지역 경제의 통합보다는 일부 비난을 얻기하기도 하지만, NAFTA가입 후에 야기된 멕시코의 위기상태와 미국의 조속한 통합협상 추진을 위한 미국의 'fast track'정책 포기, 그리고 최근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 하에서 국내시장의 부분적인 보호와 점진적인 개방화 전략이 보다 낳다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즉 NAFTA로의 가입에 따른 지나친 개방화의 위험이나 무리한 FTAA 조기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보다는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무역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유럽연합과의 구체적인 협력강화로 지역간 무역 비중이 북미 일변도에서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도 MERCOSUR 중심의 남미자유무역의 건설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

III.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통상정책

그러나 유럽연합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주의가 양 지역간 교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1차재 수출품에 대해 높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유럽연합제품들로 인해 중남미국가들의 유럽 시장진출이 어려워 통상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양 지역간의 무역구조상 중남미의 대유럽연합 수출품의 80%가량이 농산물, 광물, 원유 등 1차 산물인데 비해,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수출품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잠재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중남미의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연합은 제2의 교역상대국이며, MERCOSUR와 칠레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유럽연합은 지역차원에서의 교역(MERCOSUR, Andean Community, Central America)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즉 멕시코와 칠레의 상무적인 교역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1년 현재 중남미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총수출액은 570억 유로로서 주로 기계류, 설비, 화학제품 등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중남미지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액은 500억 유로로서 농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직접투자액 역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투자은행(EIB)은 1990년 초에 15개 중남미 국가들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 대중남미 통상정책의 특성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특징은 중남미 국가들을 크게 분쟁국가(conflictive areas)와 협력중점국(larger countries)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협력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남미 구호 등 정치위기로부터의 피해를 축소시키며, 경제재건, 역내 신뢰구축 및 통합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진다. 여기에는 마약거래 방지 및 통제와 같은 특별협력사업과 조치들도 포함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경제적 사안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협력관계는 원조형태보다는 합작투자, 민간기업 및 금융지원등 산업협력이 주를 이룬다.
1) EU의 주요 대외통상정책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기반은 EC(European community) 조약 133조 (중전 EEC 조약 113조)에 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공동관세율 조정, 관세 및 무역협정정정, 수출입정책, 역외국 수입에 대한 산업보호조치 등이 있다.

대외통상정책의 입안 중심 부처는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DG Trade)이며, 통상정책관을 DG Trade 홈페이지에 올려 각종 NGO 등 시민단체들과 사전 의견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관세율 정책: EU 공동통상정책의 핵심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FTA 대상국과는 회원국간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대내적으로 공동관세정책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EU의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확대는 우리나라에 있어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무역비중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공동수입정책: EU의 공동수입정책은 "자유화"가 기본 원칙으로 WTO 회원국에는 EC regulation 3285/94가, WTO 비회원국에는 EC Regulation 519/94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자유화에 대한 예외 조치로는 세이프가드, 쿼터제, 수입허가제 등이 있다. 농업 분야는 특별보호, 철강분야는 ECSC 조약 그리고 섬유산업은 MFA하에 체결된 섬유수출국과 양허협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섬유관련 쿼터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이다.

공동수출정책: 수출은 완전자유화가 원칙이며, 개별국들과 품목별로 수출자율규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전시회, 회의 등 수출전쟁 관련 활동에 수출진흥기금을 지원한다.

무역방어조치(TBR: Trade Barriers Regulation): EU 집행위원회는 대외통상 교섭권한 외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특혜무역협정: EU 집행위원회는 대개도국 통상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GSP(일반
반관세특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9월 1일 GSP 수혜 제외 대상국을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GSP 수혜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2-2004년간 적용되는 대상국은 총 179개국으로 2001년말 210개국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중남미 대다수 국가의 경우 GSP 적 용지역이나 품목별로 해당 지역이더라도 배제될 수 있다. 2003년 2월 13일 개정내역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및 우 루과이 등의 전통적인 1차제 수출상품이 배제되어 있어 중남미 국가들로서는 EU 수출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2) 통상관련의제

유럽연합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과 칠레간에 FTA가 성사되었고 MERCOSUR와는 FTA 협상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중남미 양 지역은 새로운 교역관계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연합과 LAC는 2002년 5월 17일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양 지역간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맡겨졌다.

첫째, 유럽이사회,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중남미개발은행으로 하여금 양 지역간의 협상권을 주도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교역을 증진하며 개방되고 안정된 그리고 차별이 없는 명백한 법적 기업적 환경을 통한 공정한 분배를 유지한다. 셋째,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한 Doha work program의 성취를 위해 다자간 규제의 명료화, 개선 그리고 강화는 협상의 성공적인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

세로운 라운드인 Doha Round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장에 대한 보다 향상된 접근이다. 공산품의 시장접근에 대해, 유럽연합은 특히 고율의 관세, 관세 장벽, 그리고 관세확대를 철폐하여 남-남간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역기회를 증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시장접근협상은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의료와 교육처럼 전반적인 탈규제나 공적 이해가 걸려있는 부문이나, 혹은 정부당국이 전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럽연합은 또한 새로운 라운드 협상에서 WTO 회원국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수입관세를 지금의 1/3로 삭감하고 수출보조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내리고 교역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절반으로 내림으로써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농업자유화를 가져올 것과 개발국가들에게 더 나은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DDA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기회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노력에 가시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때만 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음을 비쳤다. 또한 유럽연합은 개발국가들이 이런 다자주의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무역관련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 역시 무역관련지원에 대한 기부와 다자간의 지원에 의해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표하고 있다.
환경 특히 소비자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회발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리고 교역과 환경간의 증대되는 일관성도 DDA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규제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세계무역과 투자를 지배하는 예측가능하고 명백한 규제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투자, 경쟁 및 정부조달분야 그리고 무역촉진에 대한 협상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시장접근이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대중남미 통상협력 현황

중남미에 대한 외국직접투자(FDI)는 1996년과 1999년 사이에 312억 유로에서 74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된 민영화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 민영화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산업부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서비스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같은 기간에 유럽연합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투자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중남미는 유럽연합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공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유럽투자 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은 1990년대 초 15개 중남미국가간에 체결된 기본협정이래로 중남미 투자를 선도해 오고 있다.

표 3 EU의 대중남미 교역 동향

<table>
<thead>
<tr>
<th></th>
<th>1980</th>
<th>1990</th>
<th>2001</th>
</tr>
</thead>
<tbody>
<tr>
<td>수출</td>
<td>14,184 (7.0)</td>
<td>16,939 (4.3)</td>
<td>56,983 (5.8)</td>
</tr>
<tr>
<td>수입</td>
<td>17,809 (6.5)</td>
<td>27,051 (6.2)</td>
<td>49,946 (4.9)</td>
</tr>
<tr>
<td>무역수지</td>
<td>-3,625</td>
<td>-10,112</td>
<td>7,037</td>
</tr>
</tbody>
</table>

주: ()의 수치는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EU, DG Trade A2/CG/SG/WB

2001년 유럽연합의 대중남미지역 수출액은 약 570억 유로에 달하였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총수출액 가운데 5.8%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중남미지역에서의 수입액은 약 500억 유로로서 유럽연합 총수입액의 4.9%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0년 7.0%와 6.5%의 점유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0년에 비해선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면에서는 70억 달러의 홀자로 반전되었다.

- 77 -

<그림 1>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수출 구조: 2000년

<그림 2>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수입 구조: 2000년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주요 수입품목군은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품목군은 기계류 및 운송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V.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기타 협력정책

유럽의 대중남미 개발협력은 지난 1960년대에는 개발모델에 대한 지원에서 시작하여, 70년대에는 ‘일반대중의 발전’으로 현재는 현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특히 8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개발협력은 민간부문의 발전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균등한 지역발전 및 지역사회개발, 기술이전 등에 집중되었던 중전의 ‘개발원조’ 개념으로부터 ‘산업·경제협력’ 개념으로 전환하여 합작투자기업 설립과 민간부문 금융지원이 강화되었다.

향후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개발협력은 산업, 기술, 교육, 제도개선, 그리고 정보문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민주화 과정 등에 지원 및 협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 대중남미 개발협력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유럽이사회는 정부개발원조 이외에 5년간의 ‘지역협력’의 일환으로서 유럽과 중남미지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제지원을 위한 별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 지원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EuropeAid Co-operation Office가 수행한다.

- @lis: 정보문화사회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1년 12월에 선언되어 지금까지된 약 6,750만 유로가 할당되어 있다. 기업과 정보사회에 대한 특별 은결을 맡고 있는 유럽이사회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 Alaan: 약 3,900명에 이르는 중남미지역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유럽연합대학들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남미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개선과 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첫 단계는 2005년까지 약 4,500만 유로가 두 번째 단계인 2010년까지는 약 8,800만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ttp://europa.eu.int/comm/europeaid/projects/Alban

2) 경제지원 프로그램
- URB-AL: 유럽연합과 중남미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갖고 있는 약 1,200개의 도시에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한다.
http://www.urb-al.com/
- ATLAS: 양 지역의 상공회의소간에 상품가격변동지표(CCI)에 대한 know-how의 공유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 200개의 상공회의소에 600만 유로를 지원한다.
- AL-Invest: 양 지역의 중소기업간의 회담을 증진함으로써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 약 4,000만 유로가 지원된다.
- ALFA: 대학간 협력프로그램으로 2,700만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3) 사회불평등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회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 3,000만 유로의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회정책, 조세, 공공지출 그리고 의료체계 등을 개발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정한 집단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다양한 조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자료 개발
- 빈민자들을 위한 공공지출의 적합한 방법의 개발
- 직업훈련과 직업 창출 계획
- 자연재해예방책과 재건 및 복구체계 강화
- 관할당국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프로그램

한편 개별 국가별 자국의 경쟁력있는 정보산업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강화하고 있다. 예로 이탈리아는 남미 6개국 -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온두라스, 파나마, (공)모리시아-에 IDB와 합작으로 e-Government 추진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정부행정서비스망(AdminFR)을 구축하여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정부망과 연계하고자 한다.

- 80 -
2. 유럽연합의 개발원조 및 차관

중미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권에서 시작되었다. 중미지역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원조공여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당시 발의된 카리브지원계획(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에 따라 중미·카리브지역의 민주정부와 협력한다는 취지 하에 이 지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주었다.

그러나 CBI 계획은 많은 예외조항으로 인해 중미지역의 투자활성화와 산업 발전에는 기대 이상 못했다. 특히 특혜대상품목의 80%는 이미 미국의 GSP 혜택을 받고 있었고 단지 15%만이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 받는 데 그쳤다. 더욱이 CBI로 인한 혜택은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가 미국과 보다 포괄적인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을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CBI 계획은 1994년 NAFTA 발효 이래 멕시코가 미국과 보다 포괄적인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줄었다.

미국은 CBI가 당초 안보상의 동기에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업계의 반대로 주요 상품들을 특혜대상에서 배제시켰는데, 오늘날에는 수혜국가들의 대상품목 확대 및 ‘NAFTA 패러다임’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클린턴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NAFTA 패러다임 법안’은 CBI 수혜국들이 NAFTA의 환경, 노동, 지적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마약문제에 성실히 대처한다는 조건으로 섬유부문 등에서 NAFTA에 준하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유럽국가들은 특히 1980년대 중미지역이 냉전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인도적·기술적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미와 유럽은 1985년 폭 atleast 회의에서 중미의 평화정착과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89년에는 중미의 역내결제제도 (regional payment system)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이 EC와 중미통화위원회(Central American Monetary Council)간에 체결되었고, 유럽은 중미의 식량계획에도 관련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개발협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기도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의 규모는 기록적이다. 유럽연합은 이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뒤를 이어 5번째의 인권보호원조국이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OECD무상원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사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이다. 유럽이사회는 일년에 총 960만 유로의 대외원조를 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명실공히 중남미 최대 경제원조국이다. 1997년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정부개발원조(ODA) 지원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대중남미 총지원규모의 55%에 올랐다. 유럽위원회의 대중남미 정부개발원조 지원규모는 연 평균 5억 달러의 수준이었다. 주된 지원대상은 금융 및 기술협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협력, 식량지원, NGO 활동지원 그리고 긴급구호지원이 포함되었다.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정부개발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니카라과, 볼리비아, 페루 순이었다. 경제통합체별로는 안데스 공동체에 대한 원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미 공동시장, 그리고 카리브안 지역이었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는 회원국들의 이전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 연안국,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었다. 대외원조의 2/3가 동유럽, 이전 소련연방국가들, 그리고 발칸국가들, 중동과 지중해국가들,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국가들을 지향하고 있다. 대외원조는 개발목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재건, 제도구축, 거시경제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외원조 규모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1990년과 2000년 사이 그 규모는 세배로 증대되었다.

유럽연합의 중남미지역에 대한 부문별 원조를 살펴보면 주로 사회복지부문에 39%, 교육 및 의료부문에 17%, 경제서비스부문에 16%, 그리고 기타 부문의 원조에 19%를 할당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 대한 차관의 성격을 살펴보면 유럽이사회와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구간의 공동차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 차관들은 유럽 대외협력정책의 또 다른 협력 메체로서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되거나 비공식적이고 민주주의의 수호 등에 지원된다.

한편 유럽투자은행(EIB)은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다양한 투자계획에 재정지원을 한다. 이런 지원을 받는 분야로서는 특히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수질, 배수시설, 그리고 교통 등이다. 2000년 유럽개발은행은 약 3.7억 유로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및 멕시코 지역에 할당하였다.

카리브연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로마협정에 따라 유럽개발은행이 이 지역의 상당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력, 에너지,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체에 대해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중남미 원조정책과 상당부분 냉전시대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오늘날 냉전의 종식과 다자간 무역자유화라는 세계경제의 현실 속에서 상당부분 의미가 되새겨지거나, 지역블록화의 확대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로 말미암아 그 정책의 의의가 감퇴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과 중남미간에 체결된 협정들은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협력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협정들은 경제, 산업, 과학, 기술, 환경, 그리고 마약에 대한 공동대책 및 인권 황상 등 보다 시대적응적이며 상대국과의 상호호혜원칙에 입각한 협력의 틀을 운용하고 있다.

V. 유럽연합과 중남미 관계 전망

1. 유럽연합의 대중남미 외교·정치협력의 강화

현재 중남미에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외에도 안데안 공동체, 중미공동시장, 카리브 공동시장, G3(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경제통합기구들이 결성되어 회원국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지역협력기구가 이어 설립되었거나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MERCOSUR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합의한 것과 더불어 여타 개별국가들과의 FTA 추진으로 인해 중남미 지역에서의 지역주의의 양상을 미국의 움직임과 더불어 보다 복잡하게 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양상을 보일 전망

---

따라서 유럽연합과 중남미는 정치협력 강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첫째, 양 지역간 협력이 강화되고 국제문제에 대한 견해가 상호수렴될 경우, 국제무대에서의 지위향상은 물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국화된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정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양 지역간 정치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양 지역의 공동된 역사와 가치를 기반으로 중남미지역의 다양한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경제 및 교 역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관한 전방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과 중남미 지역이 함께 경제적 이슈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협력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실 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은 기존의 외교채널을 개선 내지 확대를 통해 협력을 다양화·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즉, 정치, 경제 등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 안정된 정부 유지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치권 중심의 외교체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시장 다각화 및 시장선점 경쟁

최근 유럽위원회는 MERCOSUR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주요 경제블록인 유럽연합과 MERCOSUR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안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본 계획에 따르면 양 블록은 2005년에 발효하여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관세, 수입쿼터, 그 밖의 제한적 규범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문제는 유럽상품이 장세이 신흥한 남미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될 것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경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기세를 겪
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위시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본 계획이 실현되어 유럽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값싼 남미산 곡물이 대량 수입되어 유럽농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및 설탕가격이 유럽내 판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우려의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 지역간의 자유무역지대가 단계적으로 실현된다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의 약 7백억 프랑에 달하는 추가지원금을 농가손실보존 명목으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한 계획안을 심의한 유럽위원회는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한 프랑스측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하여 실효성이 없는 모호한 타협안만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결국 유럽연합은 첫째, 중남미는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무역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다각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남미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에 대해 유럽연합의 보호주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주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전통적으로 중남미와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나 최근 무역수지가 흑자로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중남미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체 구성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했고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협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미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외교통상면의 노력이 배가될 것이다.

셋째, 유럽연합은 정보통신분야에서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뿌리를 유럽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유럽의 정보통신 업체의 대거 진출과 정보통신제품의 수출시장으로서 중남미를 매력적으로 설계적인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 분야의 상품 및 기술 수출 및 협력의 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협력전략이 구사될 것이다.
3. 미국과의 경쟁 심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중남미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포괄적인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출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서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국가들만의 경제통합을 더 타당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하는 FTAA가 미국의 의도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FTAA의 결성을 놓고, MERCOSUR의 확장을 통해 중남미지역만의 포괄적인 경제통합체를 출현시키려는 브라질의 입장과 FTAA의 실현을 통해 북미지역과 중남미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때 유럽연합은 미국과 함께 신대서양시장(NTM)을 창설하려고 시도했으나 달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유럽연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05년까지 남미와 북미를 잇는 거대시장 창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FTAA의 운명은 미 의회의 태도에 달려있다. 미 의회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의지를 백인시하고 언기에 본 계획이 순조롭게 실현되는 데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남미측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브라질의 주도하에 MERCOSUR와 안데스 그룹의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칠레는 다른 남미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 개방도와 무역 자유화 수준으로 인해 MERCOSUR보다는 북미자유무역기구(NAFTA)의 4번째 회원국
으로 유력시 되어왔었다. 미국은 FTAA 조기 창설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 남미국가들에 대해 가입에 대한 외교적인 비중을 두어 왔었다. 철레 역시 NAFTA 가입에 보다 많은 외교적 비중을 두어 왔으나 1995년 멕시코 위기사태의 발발로 NAFTA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MERCOSUR와의 협정이 먼저 태결되었다. 철레는 MERCOSUR와의 협정 이후에도 NAFTA와 협상이나 조기 FTAA의 창설에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나 97년 말 미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일괄협상(fast track) 안이 취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NAFTA와의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액은 멕시코 일국의 대미국 수출액보다도 작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총수출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정도로, 일본,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보다 그 비중이 낮은 설정이다. 따라서 NAFTA가 중남미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 무역창출효과보다는 오히려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써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누리게 되는 실제의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더욱이 철레 같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품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관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남미국가들이 과연 NAFTA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연합과 중남미, 그리고 미국과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계획들이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간의 외교적 그리고 통상적 노력들이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이다.

4. 개발협력

21세기 유럽연합은 역내적으로 확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확대 과정에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모든 국가에 있어 21세기 성장산업이자 전략산업이 되고 있다.

EU는 역내 IT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 IT 시장 개척 대상지로 중남미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21세기 지향적인 파트너쉽을 제정하고자 한다. EU는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대내적으로 IT 중심의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며,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식, 혁신, 사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대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협력관계 개선과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FTA 추진과 IT 협력을 통한 협력모델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U는 회원국간의 디지털 체제 구축을 위해 eEurope 2005로 대표되는 정보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회원국간의 행동계획이나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학습 서비스(e-learning), 전자보건 서비스(e-health), 전자무역 환경 조성(e-business) 및 보편적인 광대역 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이들 경쟁력의 제고로 대중남미 전자협력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이들 산업에 있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한 정보통신 수출 및 협력시장으로서의 중남미 시장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한다. 중남미는 미국보다 역사적으로 유럽친화적이기에 유럽연합은 외교, 통상 및 국제협력 부분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미래의 확실한 시장인 중남미로의 진출에 사활을 다할 것이다.

EU의 대중남미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위해 EU의 대외개발원조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까지 회원국별 ODA 규모를 평균 0.39%로 증대할 계획이며, 향후 원조의 내용도 점차 Untying의 비중을 제고하고자 한다. 원조의 목표도 외국상으로는 반고의욕 및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수행될 것이나, 경제파트너 지원 등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도 함께 어우러 질 것으로 사료된다.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며

EU에 있어 중남미는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큰 협력대상지역이다. 유럽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정치사상이 스며든 지역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15세기 이후 끈끈하게 연결되어 온 지역이다. 경제적으로는 18세기 영국 및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변에서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19-20세기 유럽의 경제적 지위에 원료 및 1차재 수출공급국으로서 기여한 효자지역이다.
21세기 들어 EU는 대내적 확대(2004. 5. 1자로 동구권 10개국을 포함하여 25개국이 됨)에서 더 나아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조하고 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세계경제질서에서의 주도권을 확득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지역을 놓고 경쟁이 가속화 되어 져 것이다. 미국은 과 거의 면으로 닥트린을 다시 한 번 재현할 것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으며, EU는 과거 ACP 지역에의 특혜를 개선하는 한편 최근의 경쟁우위산업인 IT 를 중심으로 중남미 대륙과 신협력모델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외교통상분야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FTA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며, 2005년 말에는 300 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주역은 미국과 중남미간의 2005년 발효 예정인 FTAA, EU-Mercosur간 FTA 2005년 발효 예정 이외에도 Mercosur-ANCOM간 SAFTA(남미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cluster by cluster 방식의 경제통합 움직임 외에도 양자간 FTA 역시 활발한 추세이다. 특히 EU는 교역 및 협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칠레 (2003 예정); 캐나다-칠레(1997), 캐나다-코스타리카(2001년); 일본-멕시코 (의 중); 중국-칠레, 중국-브라질(의 중); EU-멕시코(2000년), EU-칠레 (2002년), EFTA-칠레(2004년 예정); 미국-파나마, 미국-도미니카공화국(의 중)

특히 EU는 대내적인 통합의 공교화, 동력산업인 IT 분야의 세계화, 교역확 대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및 미국과의 경쟁 등의 환경요인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FTA에 의해 확대되는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 관계의 개선 강화를 중시할 것이며, 중남미 국가들은 개방과 경쟁에 따른 경제체질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디지털경제로의 통합 필요 등 양 지역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양 지역간 협력관계는 보다 다양화되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WTO의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로서는 EU의 외교통상 차원의 협력모델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한국적이며 상대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협력기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무 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전략적인 무역수지흑자시장을 유지 내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서비스의 현지화를 통해 중남미 시장을 유지하고 이를 계
기로 EU 지역으로의 우회 진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 중남미 지역의 FTA 확대 및 개선, EU 및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강화로의 이행으로 무역전환효과 발생 등의 환경 요인들은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 중남미 지역과의 FTA 등 외교통상 정책의 과감한 전개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전략적 통상정책수단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휴차 지역인 중남미에 대한 국가 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U의 대중남미 정책 중 유럽공동농업 정책(CAP)은 협력 확대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중남미 산 육류, 곡류, 포도주류, 유제품 등의 농산물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국이며, 중남미 국가의 경제 기반은 농업부문에 있어 향후 대중남미 관계 개선에서 이 분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IT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한편으로 해외시장이 정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있어 중남미 국가들과의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협력분야 발굴 및 발전 모델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 지역간 상시적인 외교채널을 구축 운영하여 협력 대화의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외교채널 확보가 구체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남미가 지속적인 우리의 수출효자시장이며, 아울러 21세기 우리의 IT 산업 진출에 있어 기회와 도전의 대폭이 되기 때문에 외교채널을 통한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로의 기틀을 놓아야 하며 협력의 분야가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 쿠바 정책과 전망

김 기 현(선문대학교)

1. 미국의 대 쿠바 정책변화


쿠바를 지배했던 미군정은 쿠바의 파트너들을 무시했고, 이들을 주요 결정에서 배제시켰으며, 쿠바 군인들에게는 허드렛일만 맡겼다. 미국은 쿠바 독립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쿠바지도자들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60년간 쿠바와 미국간의 관계의 본질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호세 마르티를 비롯한 쿠바의 독립 운동가들은 독립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된 데 대해 미국에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킨 장본인으로서 또 쿠바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는 구실을 들어 쿠바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개입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다. 따라서 4년간의 군정 이후 쿠바를 떠날 때도 플랫 수정안을 통해 쿠바의 주권을 제한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쿠바는 외부의 힘에 의해 독립을 달성했고 또 그로 인해 독립 후에도 약 30년간 외부세력에 의해 주권을 제한당해야만 했다. 플랫 수정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이 쿠바의 내정에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후에 독재자가 되는 마차도를 비롯한 쿠바의 민주개혁 그룹들은 1933년 쿠바의 보다 큰 자치권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선임정책 원칙에 따라 플랫 수정안을 폐지하게 된다. 플랫 수정안은 폐지될 때까지 쿠바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후 쿠바는 일련의 쿠데타를 거친 후 바티스타 장기 독재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와 민족 주권의 확립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쿠바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쿠바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쿠바의 반식민지 상태의 지속은 다른 어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쿠바가 왜 미국에 대해 보다 뿌리 깊은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카스트로의 등장은 바로 이런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쿠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의 표현이었다. 카스트로는 바로 이런 민족적 수치에 중지부를 찍었다. 카스트로의 미국에 대한 격렬한 반감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느끼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단순한 반발이나 앵글로 색슨에 대한 히스패닉의 반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산물이다.

"소련의 위성국": 쿠바 혁명 이후 1961년 1월 쿠바정부가 미국 대사관의 일부 인사가 쿠바 내에서 혁명에 대한 음모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국을 요구한 것을 결정적 계기로 미국은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고 그 후부터 경제제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피그만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후 미 의회는 그 해 9월에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승인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62년 2월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양국간의 무역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참할 것을 종용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결국 쿠바가 소련과 동구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 주된 이유가 되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쿠바는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소련 및 동구와 접근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한 카스트로는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처럼 국제주의 이상에 따라 미국에 반대하는 제 3세계주의의 선봉으로 등장했다. 비록 세계의 장에서 쿠바의 영향력 강화는 거의 실패로 돌아갔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카스트로는 라틴아메리카 반미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반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는 쿠바의 카스트로이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에게는 공산주의 보다 혼란 더 위협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도 쿠바를 "소련의 위성국"으로 간주 한동안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세계 정치의 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쿠바의 위상이 축소될을 의미한다. 쿠바는 소련의 원조 중류와 함께 쿠바의 해외 주둔군을 모두 철수했다. 냉전의 종식은 최소한 미국의 국제 정책에 있어 쿠바가 이제 더 이상 위협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1989년부터 특히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강경한 입장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압력을 오히려 강화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쿠바 동맹국들이 쿠바와 외교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러시아와 쿠바의 군사동맹 관계 단절에도 압력을 가했다. 96년 혼돌스-버튼 법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쿠바와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압력을 오히려 강화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쿠바 동맹국들이 쿠바와 외교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러시아와 쿠바의 군사동맹 관계 단절에도 압력을 가했다. 96년 혼돌스-버튼 법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쿠바와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압력을 오히려 강화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쿠바 동맹국들이 쿠바와 외교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러시아와 쿠바의 군사동맹 관계 단절에도 압력을 가했다. 96년 혼돌스-버튼 법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쿠바와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했던 쿠바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단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90년대 초 부시행정부는 쿠바체제가 동구처럼 곧 붕괴할 것으로 믿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여 미국은 냉전 이후 쿠바에 대한 적대감은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압력을 강화하여 쿠바의 체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외교적 비중을 두었다.

특히 재미 쿠바인 보수단체들은 이러한 조건을 카스트로 체제 붕괴를 위한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회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부시 행정부의 주된 관심은 이라크와의 전쟁에 있었다. 따라서 쿠바 문제가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중대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쿠바도 동구처럼 자연적으로 붕괴되도록 두는 것이었다. 때문에 부시 행정부로서는 쿠바 문제에 별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쿠바 문제의 주도권은 당연히 의회가 행사하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무관심과 장기적 전략의 부재 그리고 쿠바 정치체제 변화의 당위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합의 두 가지 조건은 냉전 이후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이 미국 내 극우파 쿠바인 그룹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이들 극우파 쿠바인들은 미국 내 정치과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킬 줄도 알았다.

"토리셀리 법"(Ley Torricelli): 1992년 "토리셀리 법"이라고도 알려진 "쿠바 민주화 법"(Ley para la Democracia en Cuba)의 통과도 바로 극우파 쿠바인 단체의 의도와 미국 국내 선거의 논리가 합쳐진 결과였다. 토리셀리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선거의 해를 기회로 잡았다.

물론 토리셀리 법의 내용은 쿠바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경제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토리셀리는 부시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카스트로 체제의 붕괴를 위해서는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철저히 계산된 개방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1993년 부시의 공화당 정부 이후 들어선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냉전 이후 새로운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럼지만 기대와는 달리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와 다를 바 없이 쿠바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전을 모든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물론 데 쿠바 정책의 법적 기초로 토리셀리 법을 연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클린턴의 이러한 대 쿠바정책의 기저에는 부시와 마찬가지로 클린턴도 쿠바 문제를 자신의 주요 정치 이슈에 삼지 않다는 점이다. 클린턴의 주요 관심사는 국내 문제였고 따라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의 신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가는데 그쳤다.

 było 탈출위기(Crisis de los balseros): 쿠바문제가 클린턴 정부의 외교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쿠바인의 맨복 탈출위기는 클린턴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관심을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미국의 대쿠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 쿠바 정책 기조의 획기적 변화이기 보다는 기존의 토리셀리 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소위 "토리셀리 법의 제 2 방안"으로 불리는 새로운 대 쿠바 전술은 쿠바의 현 체제에 대한 변화의 핵을 내부로부터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쿠바 사회 내의 특정 그룹들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쿠바가 비록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후 자신의 즉각적 붕괴는 피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다.

즉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 쿠바 정책은 미국의 지배 밖에서 존재함으로 인해 쿠바가 미국에 보여주는 모든 도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의 기본 인식 하에서 60년대부터 적용되어 온 대 쿠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쿠바 사회 내의 특정 그룹들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쿠바가 비록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후 자신의 즉각적 붕괴는 피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 쿠바 정책은 미국의 지배 밖에서 존재함으로 인해 쿠바가 미국에 보여주는 모든 도전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의 기본 인식 하에서 60년대부터 적용되어 온 대 쿠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는 대 쿠바 정책의 법적 기초로 토리셀리 법을 연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 쿠바 정책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조정의 부재와 최종결정권의 공백이라는 문제점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클린턴 행정부 8년 동안 있었던 쿠바와 관련된 3번의 위기 상황 -94년 쿠바인 맨복 탈출 위기, 96년 쿠바 영공을 침입한 제미 반 쿠바 민간단체인 "쿠바 해방을 위한 형제들"(Hermanos al rescate)의

이 세 번의 위기 상황에 있어 클린턴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부재는 결국 킴바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재미 우파 킴바 단체들(INC)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미국의 대 킴바 정책이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에도 여전히 국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의 대 킴바 정책 결정에 중서적 역할을 해온 FNC-A

미국의 압력단체들에 대한 공공 투명성 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의 연구 결과를 보면 FNC-A는 미국 내 압력단체들 중 가장 효율적 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FNC-A의 영향력에 비해 폴리리다와 뉴저지 주의 킴바인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뉴저지 주에서는 킴바계 민주당 하원 의원을 배출한 13구역을 제외하고 킴바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폴리리다 주에서도 킴바인의 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4~5%에 불과하다. 2000년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킴바인들이 사는 Miami-Dade 구역에서 알버트 고어 후보가 부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가 공화당인 FNC-A의 정치적 리더십을 의심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NC-A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육심과 정치적 동원력이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번째로 높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킴바인의 표가 킴바계 민주당 하원 의원을 배출한 13구역을 제외하고 킴바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킴바인의 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4~5%에 불과하다. 2000년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킴바인들이 사는 Miami-Dade 구역에서 알버트 고어 후보가 부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다수의 공화당인 FNC-A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육심과 정치적 동원력이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번째로 높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킴바인의 표가 킴바계 민주당 하원 의원을 배출한 13구역을 제외하고 킴바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킴바인의 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4~5%에 불과하다. 2000년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킴바인들이 사는 Miami-Dade 구역에서 알버트 고어 후보가 부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가 공화당인 FNC-A의 정치적 리더십을 의심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NC-A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의 정치적 육심과 정치적 동원력이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번째로 높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킴바인의 표가 킴바계 민주당 하원 의원을 배출한 13구역을 제외하고 킴바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킴바인의 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4~5%에 불과하다. 2000년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킴바인들이 사는 Miami-Dade 구역에서 알버트 고어 후보가 부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특히 국내문제에 집중했던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마이아미의 작지만 잘 조직된 우파들과 가급적 충돌을 피하고자 했다. 이미 예산이나 다른 국내 정책에 있어 공화당과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자신들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킴바 문제로 의회에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바로 90년대 미국의 대 킴바 정책이 보수적인 재미 킴바인들의 입맛에 따라 일반적인 이유이다.

대화 노선의 제기: 물론 미국의 대 킴바 강경정책에 대한 회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부터 미국 내에서도 경제제제 조치가 과연 킴바 체제를 변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토의는 주로 학계나 정부산하 연구소 혹은 언론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의회에서도 범안으로 기획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온건한 쿠바인 단체도 대 쿠바 강경노선이 변해야 한다는 입장에 지지를 보노기도 했다.

대 쿠바 대화정책 노선

경제제재정책의 유지 및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 대 쿠바 강경노선에 대해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온건 노선에 대한 토의가 주로 학계나 정부산하 연구소 및 언론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대 쿠바 정책을 완화하고 쿠바를 국제사회로 끌어들임으로써 쿠바는 완화된 대 테러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우선 의약품이나 식량 등에 있어 경제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고,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고,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증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그룹들 중에는 쿠바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쿠바민주주의 위원회(El Comité Cubano por la Democracia), 변화 쿠바(Cambio Cuba), 인권단체 조정 위원회(La Coordinadora de Organizaciones de Derechos Humanos)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 기업인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기본적 논리는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 정책이 미국의 총체적 이익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논리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의 주장은 쿠바를 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 재 가입시키는 데 맞춰 한다고 주장한다.

헬름스-버튼 법(la ley Helms-Burton): 그러나 대 쿠바 정책에 있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도 1996년 비행기 격추사건과 헬름스-버튼 법의 통과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헬름스-버튼 법의 제정은 쿠바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개입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남전 시대에 미국이 국제시스템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만 되지 않으면 내정에 대한 직접 개입을 자제해온 미국의 새로운 정책 논리로 이 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아무 거리를 두지 않고 쿠바에 대한 실질적 내정 간섭의 의지를 드러냈다.

헬름스-버튼 법 201조는 쿠바 국민의 자결권은 다른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방해 받지 않는 쿠바 국민 고유의 주권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다음 조에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

205조는 쿠바의 체제 변화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그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모든 정치 포로를 석방해야 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합법화해야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라디오 Marti나 TV Marti에 대한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쿠바로 귀환하는 쿠바 태생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여야 해야 하
며, 미국 시민들로부터 과거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6조는 쿠바의 경제시스템이 자유시장 경제로 나아가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헬름스-버튼 법이 난전 시대에 자제 되어 왔던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말한다. 먼저 독트린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체계를 규정하였고 그 후 테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간섭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적 권리를 잘못했다는 이론이 미국의 일방적 권리를 주장하였듯이 헬름스-버튼 법은 난전 시대에 자제되었던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었다.

헬름스-버튼 법의 통과도 역시 미국 내 정치 논리의 산물이었다. 1994년 총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같은 당의 헬름스와 버튼을 각각 상하원 외교위 의장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또한 쿠바 출신 의원 3명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승리를 기회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 보다 쿠바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막고 쿠바 무역에도 새로운 탐욕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쿠바에서 미국인들이 몰수당했던 자산을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는 기발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처음에는 그러한 처방이 미국의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에 따라 헬름스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자산 소송 내용을 폐지하였고, 95년 연방예산안이 주된 논점으로 부각되자 헬름스-버튼 법안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96년 대선을 앞두고 이 법안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 때는 토리셜리 법의 통과와 같은 선거 논리에 의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었다.

둘째 헬름스-버튼 법안이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법안은 쿠바정부의 강경대응 자세도 법안의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96년 "쿠바해방을 위한 형제들"이 쿠바 영공에 침입하여 쿠바정부를 비난하는 비행기를 격추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쿠바의 강경대응은 결국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 맞대응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는 설치어 62년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군사적 행동은 포기되었고 대신 헬름스-버튼 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둘째 쿠바정부의 강경대응은 결국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 맞대응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는 설치어 62년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쿠바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군사적 행동은 포기되었고 대신 헬름스-버튼 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HELLMAN-62년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보류하였고 또 다른
중대 사태 발생시 군사적 대응 말고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양국간의 관계도 양국의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게 되었다.

대 쿠바 강경노선 반대 그룹: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나타나는 데 대한 반대세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1988년 교황의 쿠바 방문 이후 미국의 칼로리 교회가 미국의 대 쿠바 강경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인 그룹도 대표적인 경제제재조치 강화에 대한 반대세력이다. 이들은 비행기 격추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업인 반대 그룹 중 약 700개의 기업, 상공회의소, 농민조직으로 구성된 "USAEngage"는 가장 대표적 단체이다. 이들은 쿠바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경제제제 조치들을 촉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회원 중에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 제조업자 연합, 코প타, 제너럴 모트스스 등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쿠바 관련 사항에 직접 관련된 운전과의 압력단계도 생겨나 기존의 쿠바 관련 의회 압력단계로서 FNC-A와 우익 단체들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위협했다. "쿠바와 인도적 교류를 지지하는 미국인"(AHTC: Americans for a Humanitarian Trade with Cuba) 그룹은 비록 기업가들이, 미국 정부의 전 관료들, 노조구성원들, 종교적 인도적 단체들, 심지어 온건과 쿠바인 단체 등 이질적 집단의 모임이지만 식량이나 의약품 등에 있어 쿠바와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쿠바에 식량과 의약품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구체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98년 10월에는 위너 상원의원에 의해 미국의 대 쿠바 정책 수정을 위한 양당 합동 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의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큰 정치적 비용 없이 쿠바에 대한 정책을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클린턴 정부는 대 쿠바 정책을 수정하는 데 국도의 조심스러움을 보였다. 클린턴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역시 2000년 대선을 의식한 탓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의 대 쿠바정책이 국내 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클린턴 정부는 양당합동위원회 조작을 거부하고 대신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약간의 조치들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쿠바에서 보다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게 Radio Marti와 TV Marti의 시설 개선, 쿠바와 미국간 직접 우편 왕래 허용, 3개월에 300불 한도 내에서 쿠바에 대한 송금 허용 확대, 쿠바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 허용, 마이아미 이외 지역에서 쿠바로 가는 전세기 허용, 교육 콜로스포츠 문화 인도적 차원의 교류확대, 쿠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에 식량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특별 혜택을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실험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엘리앙 소년의 위기: 제다가 1999년에 발생한 엘리앙 소년의 위기는 미국 내 쿠바계 강경세력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했다. 엘리앙 소년의 위기가 미국 내 쿠바에 대한 여론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모순적이다.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소년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데 지지를 보였으나,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감소했다.

2000년 6월 실시된 앙케이트 조사에서 엘리앙 소년의 귀환에 대한 지지는 58%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나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엘리앙 사건이 일어나기 전 1999년 5월 71%였던 것이 2000년 5월에는 57%로 하락했다.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의 폐지에 대한 지지도도 1999년 51%에서 2000년 48%로 감소했다.

또한 엘리앙 소년의 위기는 쿠바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쿠바계 2세들의 쿠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들은 전직들의 손에서 엘리앙 소년을 빼내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을 소수인종 사회에 대한 사법부의 권위의 파괴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심지어 쿠바계 2세들의 78.5%는 엘리앙 소년이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의심할 바 없이 강경파 쿠바 단체들 특히 FNC-A에 근본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엘리앙 소년의 위기는 그에 대한 미국인들의 모순적 태도로 인해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던 쿠바인 강경과 단체들을 다시 한 번 미국의 대 쿠바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뛰어들게 했으며 또한 그러한 입지는 2000년 대선이 다가올 때 따라 보다 강화되었다.

결국적으로 엘리앙 소년의 위기는 오히려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함으로써 당시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분위기에 반발을 거 רש고 나아가 2000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따라 그의 가능성은 당분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2. 부시 행정부의 대 쿠바 정책

부시의 대 쿠바 강경 입장: 부시 대통령은 선거에 당선되기 전 이미 쿠바에 대해서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쿠바의 정치 체제가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평화적 시위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민주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전 그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플로리다 주의 쿠바계 표를 의식한 것이었다.
부시 참모들의 강경 입장: 물론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부시는 쿠바에 대한 사전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닥 체니 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까지도 쿠바에 대한 강경 입장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쿠바의 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경제 제재조치에 대한 명백한 지지를 보였고, 쿠바에 대해 기존의 적대적 정책을 유지할 것을 확실히 밝혔다. 심지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인 콘돌로자 라이스는 엘리앙 소년 위기에 관하여 마이امي 거주 대통령의 형인 셰브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추천한 오토 라히를 지명하기도 했다.

또한 부시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도 대 쿠바 강경 입장은 그대로 드러났다. 주거 및 도시문제부 장관에 FNC-A의 간부를 지낸 멘 마르티네스를 지명했으며, 심지어 국무성 라틴아메리카 담당 차관보에선 마이امي 강경과 쿠바관계와 정치 경제적으 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형인 셰브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추천한 오토 라히를 지명하기도 했다.

"자유 쿠바 대사관": 한편 다시 힘을 얻은 FNC-A는 라이스 보좌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1년 2월초 거의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워싱턴에 "자유 쿠바 대사관"을 설치했다. 그의 의도는 물론 의회나 행정부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이 경제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쿠바를 국제 사회에서 보다 고립시키고, 나아가 쿠바 내부의 체제 반대세력을 촉진하기 위해 헬름스와 리베르만 상원 의원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4년간 2,500만 달러의 정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미 의회의 변화: 그러나 미 의회의 분위기는 2001년 5월부터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의회는 오토 라히를 국무성 라틴아메리카 담당 차관보에서 인준한 이래 쿠바에 대한 강경을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미 의회의 변화는 버몬트 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포드의 공화당 이탈로 인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쿠바에 대해 강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한 미 의회의 변화는 비모토 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포드의 공화당 이탈로 인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쿠바에 대해 강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한 미 의회의 변화는 비모토 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포드의 공화당 이탈로 인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쿠바에 대해 강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한 미 의회의 변화는 비모토 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제포드의 공화당 이탈로 인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쿠바에 대해 강경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쿠바와 의약품과 식량에 있어 교류를 우선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기초는 테러 위험국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력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선언은 쿠바가 비록 "악의 축"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대표적 반미 국가의 하나로 언제든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공동으로 쿠바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했던 루르데스 정보시설에서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칠수하게 되자 쿠바의 두려움은 더욱 컸다.

미국 거주 쿠바인들의 이라크 다음은 쿠바가 되어야 한다는 공공연한 요구나,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지금" 쿠바를 공격할 의도는 없다라는 언급 등은 쿠바가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만 아니라는 두려움을 쿠바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민 허가를 대량 축소하면서 대대적 불법 이민을 야기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이르기 위해 쿠바 주변 해상을 봉쇄하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最近 쿠바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미국은 쿠바가 이라크 전쟁을 든타 반대파를 탄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카스트로가 정치적 탄압을 실시한 것은 그가 아니라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카스트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무력적 개입의 가능성: 쿠바의 모든 우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쿠바의 체제 변화를 위해 군사적 개입까지 가지는 않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쿠바가 평화적으로 민주적 틀에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쿠바에서 그러한 군
사적 방법을 자제하는 이유는 첫째, 쿠바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리적 위치로 보나 군사적 포위로 보나 쿠바와의 전쟁은 미국에도 결코 적지 않은 회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쿠바 피난민들의 미국으로 향한 대대적 투입 또한 미국의 고민거리이다.

두 번째 이유는 9.11 이후 미국이 일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세계 여론이나 작게는 라틴아메리카의 반대 여론을 미국이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군사적 개입은 해당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최근 행태로 보아 미국이 국제기구의 지지 없이 쿠바를 침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정부가 쿠바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특과 실을 따질 때 국제 사회의 지지는 중요한 고려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은 헬름스-버튼 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으로 미루어 보아 쿠바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국제사회에 야기할 문제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상유지: 어쨌든 9.11 테러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쿠바를 여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부시 행정부 초기에 관심을 가질 듯이 보였던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는 다시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2차적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쿠바와 관련된 미국 정책의 수정은 단기적으로 보아 없을 것이다.

한편 9.11테러가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테러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피델을 낙천 시대처럼 미국의 두 번째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은 쿠바를 다른 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적으로 만들었다.

테러가 9.11이 만든 불확실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여론을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인들은 테러에 의해 외국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모든 음모에 대해 엄격한 법의 적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 있어 쿠바인들과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미국과 쿠바가 서로간의 오랜 불신을 극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9.11 이후 콘티넨탈 에어라인스(Continental Airlines)가 하바나 비행을 시작한 것은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하나의 좋은 정후로 보인다.

발레라 프로젝트(Varela Project): 물론 부시의 대 쿠바 강경발언이 비록 내용은 별로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미국이 발레라 프로젝트에 적극 지원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부시 행정부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쿠바체계의 붕괴를 위
해 외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국내 반대파들에 의해 쿠바체제가 자연히 붕괴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반대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발레라 프로젝트(Varela Project)

2002년 5월 10일 11,020명의 쿠바인이 발레라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서류를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서류는 라카르도 알라르콘(Ricardo Alarcón)이 의장으로 있는 쿠바 인민회의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은 종교운동가이자 정부의 반대파인 오스발도 파야(Osvaldo Payá)였다. 이러한 시도는 쿠바 혁명 이후 최초의 공식적 쿠바를 통한 합법적인 변화시도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 개정이 아닌 하부적인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우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 구성의 법적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 포도들의 석방과 다양한 기업 형태(민간, 조합, 혼합)의 법적 자유보장을 요구한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경제 정책을 통한 조밀한 법개정으로 쿠바가 자유시장경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선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발레라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둘째 이에 대한 카스트로의 응답은 쿠바 국가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었다.

FNC-A도 현재로서는 부시 정부의 쿠바 내 반대파들에 의한 카스트로 체제의 자연 붕괴에 대해 믿음과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쿠바 내 반대파들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대해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대 쿠바 전략에 있어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선호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3. 향후 쿠바 내 체제 변화 전망

최근 쿠바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쿠바국민들은 더 이상 혁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새로운 세대에게도 혁명 정신은 고취되지 않았다. 소련 및 동구의 붕괴 이후 처음으로 처하게 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틀 위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라고 했던 경제개혁은 달리 소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킨 채 경제적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데에는 사실상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미국이 경제제제개혁을 완화하지 않는 한 쿠바의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4-
해결책은 시장경제를 완전히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처방은 또한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 인당의 반대로 쉽지 않다. 이들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시장경제화의 개혁이 정치권력이나 통제력에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시장개혁의 채택이 경제적 위기의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시장개혁 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해도 소련 및 동구의 붕괴 이후 쉽게 무너질 것 같은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쿠바인들 또한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비록 카스트로인들이 이제 혁명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카스트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억압과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런 외부적 협의 개입 없이 카스트로 정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험한 것으로 보인다. 십지어 카스트로 사후에도 체제변화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카스트로 사후 쿠바 사회의 변화 전망으로 우리는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제1시나리오(중국식 변화모델)

먼저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 없이 경제혁명만을 추진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중국식 변화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모델은 카스트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나 폐지라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어려움: 이 모델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단기적으로 쿠바는 중국이 끌어왔던 것과 같은 대대적 외국투자 유입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 개방을 위해 이미 70년대부터 서서히 준비해왔던 것에 비해 쿠바는 경제의 전면적 개방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쿠바는 아직 노동자의 임금이나 그 외 활동은 국가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 무역도 여전히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카스트로 정권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 자의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광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홍콩이나 대만과 같은 역할을 할 우호적인 이웃나라도 없다.
미국의 대 쿠바 정책 불변: 따라서 쿠바의 중국식 모델 실현의 관심은 역시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혹은 해제하고 쿠바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제적한다면 쿠바에서도 중국식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쿠바를 보는 눈은 중국을 보는 눈과는 다르다. 미국은 쿠바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쿠바와의 적극적인 경제적 교류 특히 직접투자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접근과 같은 상황도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국에 비해 쿠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정치적 비중이나 시장의 규모 어느 면에서나 쿠바와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에 배포해 맹세 대응이나 우호적 태도를 쿠바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뿐만 아니라 쿠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서 미국의 제도에서 이탈했으며 또한 미국인들의 자산을 몰수하는 등 미국인들의 매우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따라서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정전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쿠바와 미국 양자간의 문제로 볼 때 높은 공식과 같은 세계적 환경의 변화로서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최근 미국 내 농산물 수출업자와 제약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제재 조치완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쿠바 경제 변화를 위한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음을에도 불구하고, 혁명으로 인해 자산을 잃어버린 쿠바 이민자와 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회복 및 보상 문제는 미국이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데 가장 큰 결점들이 되고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쿠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 정부는 경제제재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미국 내의 광범위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쿠바혁명을 인정하고 카스트로 혹은 그를 이어받은 혁명권력과 평화협상을 하거나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한다는 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한 개인 혹은 한 세력에 골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조치는 카스트로나 그의 혁명에 역사적 경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금까지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쿠바의 본질적 변화 없이 미국이 먼저 대 쿠바 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은 희소성은 현실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쿠바의 변화 없이 대 쿠바 강경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40년간의 쿠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게다가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쿠바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유지할 것을 전망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적 자세를 쉽게 포기할 자세가 아니다.

결국 쿠바가 현 정치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소위 "중국식 변화모델"의 시나리오는 쿠바의 현 정치권력이 그렇게 원하는 것
국의 경제 제재 조치는 쿠바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

외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나라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야 하며, 둘째는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국내 반대세력이 잘 조직화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볼 때 쿠바는 첫 번째 조건인 경제의 해외 의존도라는 측면에서는 외부의 경제제재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취약성을 갖고 있으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적 호응도나 국내 반대세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종결에 대한 유엔 총회의 투표에서 찬성 167, 반대 2, 기권 4표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대는 거의 절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기권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또한 쿠바에서 대중의 불만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또한 대중의 불만이 폭력적 양상을 띌 리도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대에 있어서 쿠바정치는 아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히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는 국내의 반대파들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반외세민족주의를 대체로 국내의 반대에 있어서 강화시키기 보다는 반외세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국내의 반대에 있어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쿠바는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고용을 향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쿠바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개 제재 조치가 지속되다는 것은 미국 내의 정치적 논리와 함께 미국과 쿠바 간의 특수한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 제 2 시나리오(동구식 붕괴 모델)

제 2의 시나리오는 "동구 및 소련의 변화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쿠바의 현 정치체제가 조기에 급속히 붕괴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델의 갑작스런 죽음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혁명정부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쿠바에서 공산주의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마이아미의 쿠바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자산을 반환하거나 최소한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혼돈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자유선택이 실시될 것이다. 만약 라울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거나 외국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신정부에 의해 인권 유린의 죄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리고 쿠바인들이 지금까지 누려 온 사회복지 시스템은 자유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모두 사라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 "중국식 변화모델"과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7-
쿠바혁명은 민족주의 혁명: 우선 국민적 신뢰를 아직 굳건히 다지고 있는 카스트로가 존재하는 한 쿠바 내부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카스트로는 특별한 신뢰를 아직 굳건히 다지고 있는 카스트로가 존재하는 한 쿠바 내부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카스트로의 정당성을 되돌려서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카스트로가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복구가 아니라 민족주의의luxury하다.

쿠바혁명의 본질이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족주의 혁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스토로 사회주의는 자신의 사회적 전통의 본래의 의미보다 민족주의의 방어에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카스토로 사회주의가 복구된 이후에도 카스토로 혁명정부가 여전히 지향하는 이유이다.

다만 카스토로 사후 혁명의 안정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카스토로 자신의 사후 혁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라울과 군부: 그중 하나가 동생인 라울을 통한 권력 계승의 기반작업 완수이다. 비록 라울과 피델과 같은 카리스마나 장악력은 부족하지만 그는 현재 쿠바 부통령이자, 군부의 리더이며, 공산당의 부총재로서 쿠바 권력의 핵심인 당과 정 그리고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특히 라울의 군부 장악은 피델 카스토로 사후 권력이양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예전을 가능하게 한다. 쿠바에서 군부는 과거 다른 어떤 공산국가에서 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군부의 높은 위상은 무엇보다 혁명과정에서 군이 중추적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반면 혁명에 있어 당(쿠바 공산당)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따라서 쿠바에서 군은 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군부의 끝나지 않아도 심지어 그의 위에 있다. 군부의 결정사항은 당에 의해 전히 간섭받지 않는다. 반대로 정치권이나 당의 주요 요직은 군부의 사람들이 맡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바의 군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존중을 받고 있다. 쿠바 국민들이 있어 군부는 국가 주권의 방어자로서 민족주의의 상징이며, 또한 그들이 외국의 민족해방전선에 나가 혼란 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매우 깊은 희생으로 여겨진다. 계다가 군부는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국민들에게 남용하는 것을 자제해 였음으로써 스스로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노력을 해왔다. 게다가 최근 쿠바의 군부는 매우 전문화된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부는 최
근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기술개발, 기업경영, 금융, 산업행정, 공학 등에 전문적 지식을 총각하고 군부로부터 관련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군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군부는 현재 관광, 군수 산업, 운행 등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산업, 수산업, 항만, 운송, 통신, 민간항공 등의 분야에는 군부 출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관료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군부는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군부는 피델과 라울에 여전히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그들의 충성은 부문적으로는 피델 사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절감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군부 내의 파벌 조성을 막기 위한 장교들의 지속적 로페이션, 군 내부 정보 담당자들에 의한 군 장성들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 등의 시스템으로 인해 군 내부의 반발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군을 장악하고 있는 라울에 의한 권력 이상 구도의 확립은 쿠바가 피델의 사후에도 동구나 소련과 같이 체제의 급격한 붕괴와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다만 대중의 대대적 시위가 발생하고 그에 군부가 개입하여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군부 내에서도 시위의 강력한 탄압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권력 내부의 분열이 체제 붕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남아 있다.

쿠바 국민의 의식: 그러나 현재 쿠바 시민사회의 역량은 그러한 대대적 시위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쿠바 시민사회는 군부가 통제하는 쿠바 공안 기구의 효율적 대응과 그들의 억압에 대한 둔감함, 카스트로의 반대파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쿠바의 일반 국민들은 혁명에 대해 이전에 이상 과거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지 않는 다. 그것이 이들이 체제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쿠바의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 해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카스트로 자신의 도입에 부정을 가지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과거 체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혜택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인해 체제 변화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이고 체념적으로 남아 있다.

공산주의 체제하의 대중들은 혼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정치적 자유를 목달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냉소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이끌고 주도할 세력도 여전히 미약하고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시민사회는 앞으로 쿠바의 가장 현실성 있는 변화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 3시나리오(니카라과식 선거를 통한 점진적 변화)

3번째 변화 시나리오는 "니카라과식 변화"라고 부를 수 있는 민주적 틀에 의한 점진적 체제 변화이다.

제한적 정치개혁: 실제로 라울의 나이는 피델보다 5살 아래에 불과하다. 현재 71세인 라울(피델은 76세)이 그의 후계구도를 물고히 하지 않고 죽을 경우 쿠바에는 현 부통령인 온건파의 카로스 라헤(Carlos Lage)와 강경파 페레스 로케(Pérez Roque) 사이의 권력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카스트로 형제가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권력 장악 능력이 부재한 이들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선거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군부는 계속 권력을 장악하지만 공산당 내 개혁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쿠바 공산당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복구식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과거 엽적을 계속 유지 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쿠바 공산당 내의 주요 개혁파 인물
- Carlos Lage: 현 부통령, 전직 의사, 부인도 공산당 당원, 1993년 개혁 주도, 강경파와 개혁파 양자의 지지를 받고 있음
- Ricardo Alarcón: 쿠바 인민회의 의장, 강경파와 개혁파 사이의 다리 역할, 미국과의 주요 협상 주도
- Jose Luis Rodríguez: 재정부장관, 테크노크라트, 학계출신
- Marcos Portal: 기초산업부 장관, 실용주의자, 쿠바외국인 투자 유입에 기여

미국의 전략: 이런 경우 미국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쿠바에서 공산당(아니면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꿀 가능성도 있음)정권을 종식 시키고자 노력 할 것이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정권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종식되었듯 미국은 쿠바도 니카라과처럼 선거를 통해 체제가 막을 내리는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하고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마이아미 거주 쿠바인들이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가해 조기에 쿠바체제를 무너뜨릴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는 쿠바 체제 변화의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역시 "니카라과식 변화" 모델이 될 것이다.
(쿠바 체제변화 3가지 시나리오)

<table>
<thead>
<tr>
<th>시나리오</th>
<th>내용</th>
<th>전망</th>
</tr>
</thead>
</table>
| 제 1시나리오 (중국식 변화모델) | 정치체제의 변화 없이 정치개혁만 단행 | •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이유:  
  i) 쿠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어려움  
  ii)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 조치 완화나 베타 없이는 불가능함 |
| 제 2시나리오 (동구식 변화모델) | • 쿠바 정치 체제 급속 동종  
  • 자유시장 경제 도입 | •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이유:  
  i) 후계구도 명확  
  ii) 혁명정권 군부 장악  
  iii) 쿠바 시민의식 변화에 소극적  
  iv) 쿠바사회사회 조직 미발달 |
| 제 3시나리오 (니카라과식 변화모델) | • 민주적 틀에 의한 점진적 체제변화  
  • 라울 사후 권력 내부 두쟁 후 체제적으로 정치개혁 단행  
  • 쿠바 공산당은 복구적 복지국가 모델 제시 | • 가능성이 크게 시나리오
• 미국의 전략도 선거를 통한 쿠바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짐 |

4. 향후 미국의 대 쿠바 정책 전망

현 상태 유지: 헬름스-버튼 법을 위시한 미국의 대 쿠바 압박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한 현제로서는 양국간에 어떤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없다. 헬름스-버튼 법이 계속 유지되는 한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비록 카스트로 사후 쿠바인들과 그와 관련된 의회 세력들이 쿠바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미국은 카스트로 사후 쿠바의 정권 후 쿠바인들의 네이티브 쿠바 탈출을 야기할 수도 있는 혼란상황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체제가 변화하는 나카라과식 변화모델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플로리다와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입김이 더 이상 미치고 같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니카라과식 체제 변화: 유도

카스트로 사후에도 즉각적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쿠바 내부의 체제 반대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 사회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쿠바에 있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나아가 세계 이론을 고려하여 형식적이나마 민주적 통치에 의한 "니카라과식" 체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핵심은 경제 체제 조치를 지속하는 가운데 쿠바 내의 반대 세력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직접적 사례로 2002년 9월 아바나에 있는 SIE(la Sección de Intereses de Estados Unidos)의 주요 직원으로 파견된 제임스 카슨(James Cason)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쿠바 반대파와 미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SIE는 원래 미국과 카리브에 대한 중요한 관계를 외교 정책의 주요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카스토로는 처음에 그의 역할에 대해 의심이 없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좋은 의도로 파악하고 그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SIE의 쿠바에 대한 내정간섭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 카슨은 쿠바 내정에 직접 간섭의 시도로 현 체제의 반대파인 쿠바자유당(Partido Liberal Cubano)의 청년조직 설립을 돕기도 했다.

실제로 그 해 10월에는 카슨이 쿠바의 반대파 그룹들과 미국인들음을 함께 자신의 집에 초청한 일도 있었다. 쿠바에 나와 있는 미국의 외교관들이 반대 세력들과 접촉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분명 파격적 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2003년에 들어서는 카슨이 반대파 집회에 참가해 카스트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SIE는 쿠바 반대파들의 거점으로 변했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는 미국에 경고를 보내고 반대파의 주요 인사를 구속하는 것으로 막았다. 쿠바는 이미 96년 헬름스-버튼 법에 따르면 반대파 내정에 간섭하는 외세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97년에는 쿠바 주권 방어법을 제정했고 99년에는 쿠바 독립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카스트로 정부는 국내의 반대파를 미국의 용병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쿠바의 이러한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쿠바 내 반대파 지원을 멈추지 않는 점이다. 헬름스-버튼 법에 따라 반대파는 완전히 반대하고 미국과의 체제 변화를 완수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성 쿠바 프로그램의 2003년 수정안에는 쿠바 내 반대파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쿠바 반정부지원 그룹"(Grupo de Tareas de Disidencia de Cuba)이 이미 설립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그룹은 주로 쿠바 내 독립적 언론이나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제발전 사무국"(Agencia Estadunidense para el Desarrollo Internacional)의 웹사이트는 쿠바의 반대파들을 지원하기 위함 기금을 모금하는 기
관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쿠바 반대파들에 대한 지원이 미국 정부 차원의 것이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행위로서 합법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무성은 쿠바 반대파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원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의 전략: 니카라과식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단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 쿠바 반대파들에 대한 협력은 민간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런 변화 와중에도 여전히 쿠바 내에서 제 일당의 위치를 고수할 것이며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쿠바의 정치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의 정치적 분열을 막고 이들의 결합을 위해 개인적 정당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고 연합조직에 선택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 사회적 측면의 전략: 그러나 쿠바 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쿠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주로 연금, 보건, 퇴직자 사회보장, 공직자 재훈련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변화와 동시에도 여전히 쿠바 내에서 제 일당의 위치를 고수할 것이며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가 될 것이다.

정치적 측면의 전략: 그러나 쿠바 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쿠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주로 연금, 보건, 퇴직자 사회보장, 공직자 재훈련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도 여전히 쿠바 내에서 제 일당의 위치를 고수할 것이며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가 될 것이다.

정치사회에 대한 전략: 현재 반대정당이 없는 쿠바의 상황에서 민주적 통치를 위한 점진적 제제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쿠바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서로 격리되어 발전하지 못했다. 쿠바의 정치적 환경은 매우 억압적이고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화는 단지 경제적 필요성 혹은 제제 정당화를 위한 시위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쿠바의 시민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화와 정부의 더 많은 정치적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쿠바인 만여명의 시민들에 대한 변화는 반대파가 쿠바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한 미국은 쿠바 시민사회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한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시민사회가 정치와 제도에 대해 반감이나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그 후 민주화의 정착과정에서는 정치제도의 공고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바 시민사회

쿠바 시민사회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비조직적 반대세력이다. 비조직적 반대세력의 특정은 비조직화이다. 유형은 주로 지하경제, 의도적 결근, 갈거리의 비관적 언설, 미국식 패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극적 저항 형태는 90년대 경제위기의 결과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비조직적 반대세력이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조직화된 반대그룹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인권 그룹이 가장 두드러진다. 1987년에 설립된 "쿠바인권과 민족 화합위원회"(CCDHRN)와 1976년에 설립된 "쿠바 인권 위원회"(CCPDH)가 대표적 조직이다. 이들은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적인 정치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들 보다 조금 더 정치적인 단체로는 민주주의 추진 그룹인 "조화를 위한 운동"(Harmony Movement)과 "쿠바 개방 프로젝트"(PAIS)가 있다. 이들은 선거개혁, 다원주의, 시장경제의 이식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반대 그룹이다. 이들 중에는 "쿠바 화합"(Concilio Cubano)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5년에 40개의 작은 단체들의 연합으로 시작된 "쿠바화합"은 1996년에 140개의 단체를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CCDHRN이나 CCDPH와 같은 인권 그룹을 포함해 정치적 반대 그룹, 여성, 청년, 전문가, 환경 그룹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의 투주자로서 보는 쿠바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그들의 대중적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 실제 대부분의 쿠바인들은 이들의 존재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그룹은 종교단체이다. 교황의 방문 이후 쿠바 사회에서 종교계의 입김이 커지고 있으나 교회가 쿠바 현 재에서 대한 정치적 반대를 주도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 교회가 중간 씩체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주도하기는 힘들 것이다. 내내 세법 용지 세력과 씩체 반대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한편 교회와 가까운 세력들 중에서는 기독교 민주당 개열의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고 이들은 씩체 내의 운동과 세력을 결합하여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룹은 독립적 언론 단체이다. 카스트로 체제는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아미의 쿠바계 방송사인 Radio Marti와 TV Marti를 제외하고 쿠바 내부의 반반한 독립적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1995년 소규모 독립 언론인들의 보호 조치로 "쿠바 독립 언론 사무국"(BPIC)이 설립되면서 독립 언론은 다소 활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들 수 있다. 개인 가정 식당인 paladares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가정농민들로 대변되는 이들 그룹은 정책의 부분적이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예견되는 쿠바의 민주화 시기의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부에 대한 전략: 미국은 쿠바의 군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하게

-114-
결론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초점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공극적으로 쿠바 체제의 변화라는 중장기적 목표 하에 쿠바 내 반대파 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결론 및 우리의 대 쿠바 외교정책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은 결국 헬름스-버튼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 조치라는 문제로 집결된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 조치가 쿠바의 체제 변화에 미치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 쿠바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대 쿠바 정책에서 쿠바와 투자 무역, 경제교류 증대,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쿠바에 대한 경제교류와 인권의 상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쿠바와의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캐나다는 쿠바와의 경제교류를 늘리고자 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카스트로 사후에 이는 입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은 결국 헬름스-버튼 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 조치라는 문제로 집결된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 조치가 쿠바의 체제 변화에 미치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 쿠바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대 쿠바 정책에서 쿠바와 투자 무역, 경제교류 증대, 인권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는 쿠바에 대한 경제교류와 인권의 상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쿠바와의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캐나다는 쿠바와의 경제교류를 늘리고자 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카스트로 사후에 이는 입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화하고자 하는 그룹과, 식량이나 의약품 수출업자를 대표로 하는 경제 제재 조치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대 쿠바 정책 결정은 주로 전자의 그룹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것은 마이아미 거주 쿠바인들이 가지는 미국 내 정치에서의 특별한 영향력 때문이다. 미국의 대 쿠바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한 기조는 부시 행정부 들어서고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9.11 테러 이후 쿠바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 -주로 쿠바인- 이 있으나 물론 그 가능성이 또한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쿠바의 분절적 변화 없이 미국이 현재의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희박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은 현재의 경제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 쿠바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소위 쿠바의 가장 가능성 있는 체제 변화 모델로서 "니카라과식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쿠바가 카스트로 사후 점진적 정치적 개혁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반대파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쿠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암언리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핵심도 바로 이런 쿠바 내 반대파에 대한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쿠바의 점진적 체제 변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은 우리의 대 쿠바 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 준다. 우선 우리는 쿠바의 정치체제 변화나 미국의 대 쿠바 경제 제재조치 해제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던는 한 우리의 대 쿠바 정책에 있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아니면 전수교 후 교역과 같은 기본 원칙에 엄격히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미국의 대 쿠바 경제 봉쇄 정책에 대해 기존의 기관요를 단단히 것이다. 벗어나 반대표를 단지, 또한 KOTRA가 정치외교와 무역 통상을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쿠바와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사랑 선언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쿠바 당국과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촉을 정례화하고 당국자간에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EU가 93년 이후 쿠바와의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면서 거의 2억불에 달하는 경제사회적 원조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쿠바와의 경제교류가 중대함에 따라 KOICA 등을 통한 대 쿠바 원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적 문제는 우리의 대 쿠바 정책에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쿠바와 활발한 경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와 EU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는 반대하면서 쿠바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대 쿠바 정책을 결단
온 EU도 최근 카스트로의 반체제 인사 탄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대 쿠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 인권 문제에 있어 캐나다와 EU의 이런 입장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자칫 쿠바 인권 문제에 대한 성급한 언급이 경제교류 단절이라는 쿠바의 본보기 대응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EU에 비해 한국이 쿠바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쿠바의 이런 보복성 대응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미국 주도의 유엔 인권위 쿠바인권 개선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인권 문제로 인해 쿠바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먼 미래를 고려하여 한국-쿠바 간의 민간 교류협회 등을 조직하여 쿠바의 시민 단체들이나 지식인 그룹들과의 교류를 경건적으로 조심스럽게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쿠바에는 현재 이미 100년 전에 멕시코로 건너간 한인들의 후손이 약 수천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으며 정치권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도 있고 지식인들로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장차 쿠바와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안데스 마약 정책: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1. 서론

2000년에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지난 3년간 콜롬비아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마약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공급영역에서 마약 생산량을 줄여 국내 마약소비를 줄이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대대적인 마약전쟁이 콜롬비아 국내는 물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이미 콜롬비아의 정치질서는 마약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망성의 위기를 겪고 있고, 통치조차 힘든 실정이다(Estrada 2003; McLean 2002a, 2002b). 최근 들어 미국의 대대적인 개입과 군사원조는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의 정치질서를 더욱 폭력의 소용돌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는 논자까지 등장하고 있다.

플랜 콜롬비아를 통한 마약전쟁은 이웃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인접국인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접경 지역에서 이미 마약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유민의 유입, 코카 밭의 확산, 게릴라와 자위대의 잦은 출현으로 이웃 정부들도 이 마약전쟁을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9-11 테러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가 그 방향을 ‘마약 테러리즘’(Narcoterrorism)의 박멸로 수정한 결과 ‘마약 전쟁’(War on Drug)은 대테러 전쟁의 차원을 띠게 되었다. 2002년에 들어선 알바로 우리베 정부도 미국의 대테러 전쟁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마약 퇴치와 게릴라 퇴치에 공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미국의 마약 퇴치전략이 지난 수십 년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결과를 낳았을까? 공급 사이드에서 마약의 유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이미 수많은 정책에서 표명되었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으로 뒷받침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미국 내마약의 유입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대 콜롬비아 군사원조는 6,900 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15배나 증액되었지만, 코카 생산면적은 되려 67,200 헥타르에서 169,800 헥타르로 150%나 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가뜩이나 붕괴되어 있는 콜롬비아 정치질서에 나쁜 영향을 주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콜롬비아는 ‘허약한 국가’(weak state)의 차원을
떠나 ‘국가의 붕괴’(state collapse)를 걱정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글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의 대 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것의 근간이 된 현실주의 외교 논리의 한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 마약 공급량을 줄이려는 군사원조와 군사적 해결책이 콜롬비아와 지역 질서에 미친 파괴적 영향을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대 콜롬비아 마약정책의 계보

(1) 현실주의와 마약전쟁: 1980년대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국내에 급증하는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퇴치 전략을 선포했다. 연방정부는 이 마약퇴치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1989년에는 63억 달러까지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요소는 미국 군부가 국내와 국외에서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이었고, 마약 생산지(source)와 이동경로(transit)의 국가들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레이건 행정부는 임기 내내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전략에 몰두했고, 예산의 70% 정도는 공급측면 프로그램에 투입했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16). 마약퇴치 프로그램에 '전쟁'이란 극적인 수사도 부가되었다. 1986년 4월 '마약전쟁' (war on drugs)이란 용어가 '국가안보결정문 221호'에 등장했다. 이제 마약거래는 미국의 안보이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규정되었고, 미국 군부는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해 7월에 미군은 볼리비아의 마약퇴치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다. 같은 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마약퇴치법안도 주 내용이 금압과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국제 마약퇴치 전선이 하나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렸다.

첫째, 레이건 행정부는 일방주의적인 조치로 마약전쟁을 끌어갔기에, 정당성이 결핍되어 있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위성탄에서 결정되었고, 혐성의 여지가 없었으며 현지 사정은 간단히 무시되었다. 둘째, 마약의 ‘소스’에서 생산을 차단한다는 논리가 앞섰기에, 국내의 수요 억제책이란데, 마약정제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의 수출을 통제한다든가, 재래식 무기 거래를 억제하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높은 퇴치 전략이 되기 힘들었다. 셋째, 경기규칙을 강제하는데 소요되는 인적, 재료적,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기에 대칭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레이건 행정부는 마약거래를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적 위협’(external threat)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 대외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당사국에 대외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다.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에는 군사원조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이 동원되고, 이에 따라 당사국은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밑바탕에는 다분히 현실주의(realism) 시각의 국제정치관이 깔려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주의의 국제정치관은 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 국제체계는 어차피 무질서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 자조(自助) 전략을 취해야 한다. 마약거래는 이미 미국의 국내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로 다뤄져야 하고, 당연히 민주주의, 인권, 비군사화, 환경 등과 같은 로우 폴리틱스(low politics)보다는 우위에 놓인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16–8).

레이건 행정부 이래 역대 행정부가 마약전쟁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런 특징을 지닌 현실주의 사고방식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서방구에서 공산주의를 대신하여 등장한 새로운 적이 마약이라고 보았다. 이제 서방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된 위협요소는 마약과 마약조직들이다. 레이건 정부는 일찌감치 마약전쟁(War on Drug)을 ‘저강도 갈등’(low intensity conflict)으로 분류하고, 그 대상에 마약거래 조직들도 포함시켰다. 이런 분류방식에 의해 마약근절 정책(counternarcotics)은 곧 봉기진압(counterinsurgency)의 차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왜이은 부시 행정부(1988–92)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 1989년 9월 국방부 장관 리처드 레이너는 “불법 마약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을 포착하고 억제하는 것이 (펜타곤의) 최우선적, 국가안보 차원의 의무”
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마약 자금의 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파나마의 노리애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을 감행했고, 아울러 콜롬비아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콜롬비아의 영해에 미국 함대를 보내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군사적 개입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마약 차르'(Drug Czar)였던 윌리엄 베넷은 그린 베네를 안데스 코카 밭에 직접 투입해야 하며, 멕시코의 허락 없이 첩보위성을 이용하여 감시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Bagley and Tokatlian 1992: 231).


레이건 시절부터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마약 정책의 기조는 현실주의에 기초한 일방주의이다. 이들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영역에서 힘과 군사력으로 마약의 유입을 억제하려고 했다. 따라서 복잡한 마약문제를 국가 안보적 차원의 대외위협으로 정형화시켰다. 이런 단순화된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마약게릴라론’(narcoguerrilla theory)이다.

‘마약게릴라론’란 용어는 1980년대 당시 콜롬비아 대사를 지냈던 루이스 탬스(Lewis Tambs)가 콜롬비아혁명군(FARC)를 비판하면서 불렀던 말이다. 원래 게릴라 단체로 출범했던 이 세력이 이제는 코카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세금을 걷는 것을 비꼬았던 것이다. 그러나 마약 카르텔

1) 대표적인 좌익 게릴라 세력으로 군사력은 15,000 명에서 17,000 명을 헤아린다. 두 번째 게릴라 세력은 ‘민족해방군’(ELN)이다. 이들은 도시의 과로화된 중간계급 출신이 주요 구성원을 이룬, 약 5,000 명에서 7,000 명을 헤아린다. M-19란 게릴라 단체도 과거에 활동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무기를 내려고 의회정치에 합류하며 해산되었다. 게릴라 단체들은 지역적으로 고립화된 콜롬비아 지역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정부’로 기능하고 있다. 게릴라 단체의 장기적 존속은 콜롬비아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우익 성향의 중군사조직 ‘콜롬비아 통합자위대’(AUC)의 병력 수는 12,000 명에서 14,000명을 헤아린다. 이 조직은 개원의 70%를 마약거래에서 조달한다.
이 지원하는 조직 MAS(Muerte a Secuestradoras: 게릴라, 노조 등의 활동가나 지지자를 암살하는 민병대 조직으로 후일 AUC로 발전한다)도 1980년대 초부터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FARC에만 이런 조언을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도 했다.


(2) 플랜 콜롬비아: 클린턴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는 칼리 카르텔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유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삼페르 정부(1994-98)를 불신하였던 까닭에, 1996년에 대통령인 미국 비자까지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차관의 협력이나 연계 미지 사라지지, 경제 제재의 위협에 직면한 삼페르 정부는 오히려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미국의 현실주의적 위험 외교가 잘 먹혀들어갔던 것이다. 삼페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유치였던 범죄인 인도조약을 회복하고, 강력한 고교법 살포 시책을 수용하였다. 또 적극적인
마약 카르텔 소탕작전에 나섰고, 이에 따라 양대 세력인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조직은 점차 와해되었다. 하지만 마약거래 조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거대 카르텔은 보다 작은 단위로 분화되면서 수평적으로 확산되었고,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로 활동하여 향후 이들의 검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Tickner 2001: 48).


당시 행정부 내에서는 콜롬비아가 ‘문제국가’(problem state)로 서반구의 지역안정에 가장 우려를 자아내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상황을 내버려 두면 콜롬비아의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고, 나아가 허약한 국가기구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엄격한 점유였었다. 당연히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의 초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7월 워싱턴의 의회는 2000-2001년 2년간 총 13억 달러의 원조안을 승인하였다. 콜롬비아는 일약 미국의 군사원조 수혜국가로서 이스라엘, 이집트를 이어 제3위 국가로 부상했다. 원조액 가운데 25%는 인권, 사법부 개혁, 법치, 난민 지원, 평화 등에 사용될 것이지만, 나머지 75%는 곧 군사원조 훈련, 장비 구매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원조액은 대부히 컸지만, 그 내용은 파스트라나가 제시한 종합적인 ‘마약플랜’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첫째,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남부를 압박하는 전략("Push into Southern Colombia")에 초점이 맞춰졌다. 75%에 해당하는 군사원조액의 대부분이 남부 푸투마요와 카케타 지역에 있는 9개의 마약퇴치대대(1개 대대는 900명 단위로 총 2,700명 규모이다)의 훈련비용과 고가의 장비 구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2) 푸투마요는 FARC가 코카 재배 농민을 보호하는 지역에, 아니라, 코카인 경제공장과 소형비행기 세스나가 이착륙을 하는 비행 장소도 많은 곳이었다. 고엽제 살포를 지원할 3개 마약 퇴치 대대가 이동할 고가의 헬리콥터(18대의 신형 UH-60 볼랙호크, 42대의 슈퍼-히어 UH-1 헬

2) 헬기 회사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United Technologies)와 텍스트론(Textron)은 푸투마요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주된 정치자금 공급자로 의혹도 받았다. Adelman 2002: 68.
리눅서) 구매에 배정된 자금만 3억 5천만 달러였다. 대대들은 이 헬기를 이용하여 기동력을 향상시키고 또 고엽제 공중살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임무를 했다.

둘째, 이전 원조와 달리 수혜 집단은 국립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 군부의 역할은 악화되어가는 국가의 새로운 건설자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군사원조 자체가 군부와 FARC의 투쟁을 격하시키고, 나아가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강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셋째, 클린턴 행정부는 원조금을 수혜한 마약퇴치 단위들의 작전은 직접적으로 마약 통제에 연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고 꼬리표를 달았다. 명시적으로 마약퇴치(anti-narcotics)와 봉기진압(anti-subversive)을 구분했다고 하지만, 양자의 경계는 압도적인 군사적 성격의 원조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넷째, 미국인들의 참여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엽제 살포나 경계 활동에 민간기업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형식을 취했다. 폴렌 콜롬비아에 직접 동원된 미국인의 수자는 160-180명 수준이라고 하나, 미국인을 포함하면 민간인의 수자는 300명을 상회한다. 민감한 대외 지원 활동을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있다는 신뢰성의 문제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2001년 4월 미국 선교사 일행을 태우고 폐루 상공을 날던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고에 민간기업의 책임성이 언급되었고 책임성 논란이 일었다.

다섯째,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군부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마약퇴치 대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아울러 군부나 경찰이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은) 민간자위대 그룹과 관계를 맺었다는 인권 저하를 방지하기도 했다. 콜롬비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페트릭 리하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부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퇴치에 투입된 대대들을 모니터링하도록 했고, 매년 이를 인증(certification)하는 의무를 익년의 원조와 연계시켰다.3)

3) 리하이 수정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콜롬비아 대통령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직책의 군부 인사 전원을 민간법정에서 재판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2. 콜롬비아 참모총장은 인권침해나 민간자위대 집단을 도운, 책임이 있는 직책의 모든 군부 인사 전원을 해임한다. 3. 인권침해에 연루된 책임이 있는 보직의 군부 인사에 대해 민간법정이 조사를 하고 기소할 경우 육군은 전적으로 협력한다. 4. 콜롬비아 정부는 민간자위대 대원과 지도자에 대한 기소를 민간법정에 맡기고, 군부 내 혐의인사나 통조각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5. 콜롬비아 정부는 모든 코카와 아편 생산을 2005년에 제거할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는 대안적 발전 프로그램, 수공 제초작업, 공중 제초제 살포, 환경에 무해한 비생물 제초제(마약 식물만 공격하는 제초제)의 살포, 마약생산 공장과의 파괴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콜롬비아 육군 경찰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전 지역 군인들의 어긋난 행동 조사해야 한다. Issacson, 2001: 70-71.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콜롬비아의 마약전쟁은 격화일로를 걸었다. 푸투마요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코카의 2/3가 생산되는 지역이자, 또 게릴라 FARC가 코카 농민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지대이기도 했다. 곧 이 지역에 대한 제조제의 대량살포가 행해졌고, 게릴라와 정규군의 충돌이 빈번해졌다. 1999년에 4만 헥타르의 코카 밭에 제조제가 뿌려졌지만, 2000년에는 그 대상이 8만 헥타르로 늘어났다. 하지만 코카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 코카 밭은 다른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또 이동하고 있었다. FARC는 플랜 콜롬비아를 “은폐된 전쟁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게릴라 단체는 미국의 외부 개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곧 이들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암살과 납치, 농민의 대중적 동원에 힘을 쓰기 시작했고, 콜롬비아 정부는 다시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3) 마약테러리즘 논의 확산: 9-11 테러의 충격

현실주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관은 마약전쟁을 ‘마약게릴라에 대한 투쟁’으로 비화시켰다. 마약퇴치와 게릴라 퇴치를 역을격 구분한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도 구체적인 실현에서는 거의 양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혼동은 부시 행정부(2000~2004)가 출범하고, 감자가 찾아온 2001년 9-11 테러 사태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9-11 테러 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얻게 된 신보수주의자(neocon)들은 국내외의 애국 여론에 힘입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대의 안보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이에 플랜 콜롬비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던 유럽 열강들의 눈치조차 두려지지 않았다. 자연스레 반테러 전쟁의 논리가 확산되자, 서반구에서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 논리는 기존의 마약전쟁(War on Drug) 논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제 마약 퇴치는 곧 봉기진압(counterinsurgency) 내지 테러퇴치(counterterrorism)로 바뀌었다(Tickner 2003).

9-11 테러 한 달 뒤인 10월 10일에 국무부의 테러퇴치 담당관인 프랜시스 테일러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협한 국제 테러그룹은 바로 콜롬비아혁명군(FARC)”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과 미국의 콜롬비아 대사 페더스는 콜롬비아 내부의 무장 세력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테러 조직들이라고 주장하였다. 9-11 테러 정체 아래에서 곧 테러리즘과 마약 그리고 무기밀매를 연결시키는 ‘마약테러리즘’(narcoterrorism)이란 조어가 탄생했
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무장 세력으로 게릴라 단체인 FARC(1만 7천 명 규모), ELN(4천 내지 5천명 규모)와 민간자위대 조직인 AUC가 지목되었 다. ‘마약테러리즘’ 논리는 9-11 테러 폭격 아래에서 새로운 탄력을 얻게 되 었다.

2002년 2월 20일 콜롬비아의 파스트라나 행정부가 추진했던 FARC와 정 부의 협력은 평화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파스트라나 대통령도 곧 워싱턴의 ‘마약테러리즘’ 논리를 수용하였다. 이전까지 파스트라나는 게릴라 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어서 5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도 경쟁은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국민들은 강경파인 알바로 우리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그의 당선으로 이 마약테러리즘 논리는 더욱 강력한 추 진력을 얻게 되었다4).

하지만 이런 논리에도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FARC가 코카와 코카 페 이스트(coca paste)에 대해 과세를 하고, 그 자금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편법 을 쓴다고 있지만, 이들이 마약카르텔이 하듯이 마약을 수송하고 유통시키는데 개입한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도 이 게릴라 단 체를 국제마약 카르텔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민간자위대인 AUC가 마약거 래에 개입한 사실은 명백하다. 플랜 콜롬비아 이래 미국은 엄청난 군사원조 와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불구하고, 코카 필드가 줄지 않고, 콜롬비아 내전의 격화시키는 조치는 그 마약 전쟁과 마약테러리즘 논리의 효능은 엄청난 의문시되고 있다.

(4) 안데스 지역 이니셔티브(ARI)


국무부는 8억 8천 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ARI를 군사 대 경제 원조의 비


-126-
중을 50:50으로 균형을 취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받는 부분 가운데 군사원조 비중은 63% 나 된다. 전년도의 원조액 가운데 미집행액으로 2002년으로 이월된 금액을 합치면 ARI는 총 10억 4천 1백만 달러가 된다. 당연히 군사원조에 차지하는 비중도 57%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콜롬비아에 돌아갈 폐는 5억 2천 6백만 달러로, 이 중 71%가 군사원조에 해당한다. 여전히 군사원조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접국가로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원조 수혜대상이 되었다. 특히 브라질(345%), 파나마(220%), 베네수엘라(144%), 페루(82%)가 군사원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었고, 반면 에콰도르(63%), 브라질(20%)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증가하였다. 크게 증가한 지원액은 주로 콜롬비아의 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국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5)

페루의 군부는 주로 해군의 해상경비 강화, 공군과 경찰의 장비 업그레이드에 도움을 얻게 되었다. 반면 에콰도르는 군과 경찰의 훈련, 병참지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도움을 받았다. 또 미국 공군은 태평양 연안의 ‘만타’를 초계비행을 위한 중간기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브라질 이는 코카 재배 지역인 카라카스에 병영을 건립했고, 여기서 미군들로부터 마약퇴치 훈련을 받게 되었다.

반면 브라질 경찰은 2002년 처음으로 상당액의 마약퇴치 원조를 받게 되었다. '시브라 작전'이라 불리는 콜롬비아 접경지역 강화에 주로 원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군부가 없는 파나마 역시 대 콜롬비아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경찰이 장비와 훈련을 받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지난 50년간 사용한 카라카스의 타우나 요새 사령부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해, 미국과의 관계는 쌩어졌다. 하지만 마약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국방경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마약전쟁의 효과

(1) 코카 생산량의 증가

미국의 공급 사이드 정책은 엄청난 군사원조와 제초 사업을 중심으로 진


그림-1: 안데스의 코카 생산
스캔003.jpg

지도-1: 코카 생산지의 이동: 페루-볼리비아에서 콜롬비아로
스캔005.jpg

(2) 인권침해
국무부의 2001년 판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사살당한 민간인 숫자는 3,7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간자위대가 자행한 학살자 숫자가 70%를 점한다. 이 민간자위대는 일반적으로 콜롬비아 정규군의 18개 대대 가운데 절반이 끊임없이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도 161건의 학살이 있었고, 1,021명이 살해되었다. 2001년 한해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된 사람은 하루 평균 20명을 넘었다. 아울러 남부 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총 275,000에서 347,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작전상 이유로 포함되어 생업을 잃게 되었다.

현재 4천 5백만 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난민 숫자가 290만 명 가량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콜롬비아에서 농촌지역의 폭력 사태로 집을 떠난 난민 수는 1백만 명이 넘는다. 미국의 원조가 압도적으로 군사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당한 코카 농민들을 구제하는 ‘대안적 농업’ 기금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도 점차 고조되고 있고, 지역별로 정부와 미국의 시책에 항의하는 데러도의 시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FARC가 요인 납치와 코카 농민에 대한 세금부과와 같은 탈법행위를 한다면, 정부의 보안요원들과 민간자위대는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주 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 남부 지역에서 국가와 관료계는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에, 민간자위대가 준국가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나, 효율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명목으로 보안요원과 민간자위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흡수하여 1996년 9월 미국 의회는 민주당 리하이 의원이 발의한 세칭 ‘리하이 수정법안’(Leahy Amend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에 연루된 장교를 재판에 회부한 콜롬비아 정부의 조치를 미 국무부 장관이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미 정부는 해당 군부 예하 단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까지 이러한 일방조치를 ‘군부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콜롬비아군부도 이 리하이 제약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제공된 원조의 대부분은 주로 국립경찰 쪽에 배정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시도된 ‘플랜 콜롬비아’는 미국이 마약전쟁의 과트너로 국립경찰 보다는 군부 쪽으로 이동시킨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콜롬비아는 이 계획으로 12억 달러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비용이 마약퇴치 대대의 훈련과 장비에 투입되는, 군사 부문 원조였고, 비군사용 할당은 불과 25%에 그쳤다. 당연히 원조 자체가 인권침해에 연
결렬 여지가 그만큼 컸다.

2002년 6월에 미국의회가 이미 지출된 예산이 인권침해에 사용된 부분이 없음을 입증해 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 '리하이 조건'(Leahy conditionality)에 따르면, 콜롬비아 군부는 인권침해에 관여한 장교들을 정직시키고 기소해야만 했다. 또 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재판소의 관할권이 적극적이어야만 했다. 이와 더불어 군부와 민간자위대 집단 사이의 연계를 명백히 단절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도 취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적 국익이 문제가 될 때 위 조건을 연기할 특권이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 문제를 유야무야시킬 수 있었다. 그만큼 군사원조와 인권침해의 연계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다.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콜롬비아 정부의 대 개렬라 소탕작전은 강도를 더해갔다. 2002년 8월, 우리베 대통령은 비상조치 상태를 신포하고 대통령 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찰과 군부의 사법 관할권은 확대되었고, 군부의 입김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우리베의 초강수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다.

(3) 국가의 약화

2002년 9월에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허약한 국가는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마약과 테러리즘을 퇴치하고,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콜롬비아 군부들 도와야만 한다. 즉 군부가 영토적 통제권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콜롬비아 국가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표명하였다.

콜롬비아의 국가는 오랜 전통의 후원-수혜 관계, 보수 양당의 장기집권 등으로 인해 허약한 전통을 지녀왔다. 이 허약한 국가는 1990년대 마약 문제에 확산됨에 따라, 이와 더불어 미국의 '마약전쟁'의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더욱 허약해졌다. 콜롬비아 정치에 마약 카르텔의 개입은 자연스레 정치적 부패와 폭력을 만연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의 폭력 독점도는 그만큼 약화되었다. 마약 카르텔, 갈라로, 민간자위대의 난무로 콜롬비아 사회의 정치적 폭력은 더욱 사상화되었고, 공적 권위는 그만큼 실추되었다. 콜롬비아의 일간지 <엘 티엔포>(El Tiempo)의 2002년 6월 28일자에 실린 세 개의 기사를 보
면 ‘통치 불가능의 위기’(crisis of ungovernability)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Estrada 2003).

“민족해방군(ELN)의 관할 아래에 있는 시청. 나리뇨 주의 페들에서 게릴라들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한다. 반군은 수요일부터 공무원들을 도로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여성들에게 식사를 준비시키고 있다. 시청은 텅 비었다. 27명의 공무원들은 필기구, 등록부, 컴퓨터 대신에 곡괭이와 삼을 들고 일을 한다. 민족해방군의 ‘남부 공동체 주민’ 전선에 소속된 게릴라들은 수요일 아침 8시에 시청 정사 앞에서 질경하였고, 시를 폐쇄하는 강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시청 직원들을 도로의 정비사업에 투입시켰다.”

“민간자위대(paras: paramilitares의 준말)의 부패분자 위협. 부카라망가의 자위대 고급간부들은 이 도시에서 부패한 마피아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위협이 일으로는 병적자와 마약상용자들에게 가해졌다. 하지만 수요일에는 부카라망가의 노조지도자 12명, 그리고 시민운동 리더들을 위협했다. 데모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부패와 적들이 설득과 화해한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곳 부카라망가나,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이들 국가 마피아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정치가들이 공공사업, 보건, 교육, 공공 서비스에 할당된 예산을 훔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시청의 봉쇄. 원주민들은 페에세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 페에세 원주민들은 칼도소의 독직을 비난하면서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 칼도소는 이들에 따르면 공금을 유용했고, 원주민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부추겼다. 페에세는 이 군청의 행정을 접수하려고 한다. 이 군청 인구의 80%가 페에세 사람들이다.”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는 마약단체의 박멸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 큰 암세포는 발견하여 제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지역 곳곳에 작은 세포들이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메데인 카르텔이나 칼리 카르텔이 해체되었지만, 폭력의 강도나 마약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 카르텔을 대체한 중소형 조직들은 수평적으로 분산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되었고, 보다 세련된 전략으로 기존의 거래 방식을 대체하였다. 이 때문에 시장의 공백 일부를 FARC와 같은 게릴라 단체, AUC와 같은 민간자위대 세력이 채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의 약화 과정에 미국의 마약 경책도 분명히 일조하였다. 미국이 공급 영역에서 마약을 차단하려는 정책은 곧 마약 문제를 안보로 젖혔고...
이해하게끔 했다. 안보 문제로 이해된 마약 정책은 곧 콜롬비아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협력을 얻으려는 위협적인 일방주의 정책으로 변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마약 카르텔로부터 선거자금을 얻으려는 것으로 소문난 삼페르 정부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국내사정을 무시한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정당성을 크게 실추시켰고, 허약한 국가를 더욱 약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4) 지역불안정

미국의 대규모 군사원조로 콜롬비아 정부와 재럴라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자, 인접국들의 국경 지대에도 폭력 사태의 여파가 감지되고 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미국의 군사원조가 지역의 평화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부의 푸투마요 지역에 고엽제 살포가 시작되자, 재럴라와 마약퇴치 대대의 무력 갈등이 심화되자,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브라질의 접경지대는 재럴라나 민간 자위대 세력들이 도피하는 안전지대로, 무기나 마약을 밀매하는 거래지로 바뀌었다. 국경 지대에는 고엽제 살포로 살길을 잃은 코카 재배 농민들의 난민 물결도 밀려들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국경지대 마을에는 일정한 재럴라 세력들에 의한 납치와 강탈 사건이 거의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차베스 대통령은 미 공군의 영공 이용도 거부하며, 콜롬비아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마약전쟁을 비판하였다.
에콰도르에서도 1999년 말엽에 콜롬비아 무장 세력이 12인의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또 2000년에는 2천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캐럴라와 자위대 사이의 전쟁을 피해 영내로 도피해왔다. 파나마에서도 미국이 운하지대(Canal Zone)에서 철수한 이래 캐럴라와 민간 자위대 세력이 유입되어 치안이 악화되었다. 국방경비대 세력으로는 도무지 이들의 무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브라질 역시 국경 지대로 캐럴라를 비롯한 무장세력들이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코카 밭에 대한 고압성 살포로 코카 이파리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폐류를 비롯한 안데스 인접 국가들에서도 코카 농사가 다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급증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필랜 콜롬비아가 안데스지역 이니셔티브로 바뀌어, 콜롬비아에 집중하던 원조가 다시 안데스 국가들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지간의 사정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접국들은 미국의 필랜 콜롬비아 발표 이후에 국경지대의 군비를 증강하고, 콜롬비아의 무장 세력들이나,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이 지역 불안정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마약전쟁에 협조적이었던 피투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조차도 필랜 콜롬비아가 콜롬비아의 무장 갈등을 “베트남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

2002년의 ‘안데스 지역 주도권’(ARI)에 인접국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일부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이들 나라 다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4. 결론

의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심지어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에게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능력도 크게 하락했다.

인권 상황은 난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매년 4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죽는다. 마약전쟁으로 이미 2백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남치되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불안정의 달레마’에 빠진 사회세력들은 정부나 공적 제도를 믿기 보다는 개인적 해결책을 찾는다. 이들은 법률 송사보다는 뇌물이나 연줄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라리 건맨을 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외국으로 도피해버린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밀리 몰여진 수도 보고타의 권위를 믿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무력 집단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케릴라 세력이나 자위대 세력에게 세금을 내고, 이들의 말을 따른다.

미국의 군사원조로 뿌리지는 고압체로 농민들의 코카 농사가 망쳐지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미국과 정부를 원망한다.

미국은 이 허약해진 국가에 대해 군사원조를 통해 무력을 회복케 하고, 나아가 콜롬비아 중앙정부와 군이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원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플랜 콜롬비아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마약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주의적 처방은 콜롬비아의 복잡한 현실을 무시하고, 군사적 문제로만 파악했다. 미 행정부는 콜롬비아의 내부 문제를 덮어두고 자신의 전략을 강요하였고, 마약문제는 과도하게 안보 장치화(over-securitization of drug problems)시켰다. “수용국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협력을 얻어내라”는 일방주의 외교는 안정적인 대응의 구축에 필요한 협상 과정을 무시해버렸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오류가 콜롬비아의 불안정 달레마를 더욱 증폭시킨 것이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콜롬비아 내부의 폭력 수준을 더욱 고조시켰고, 허약한 국가를 더욱 약화시켰다. 나아가 코카 밭에 대한 엄청난 고압체 실시가 있었음에도, 반입되는 마약의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전략적 달레마에 빠져 버린 것이다.

콜롬비아의 갈등은, 한 논자의 말처럼 ‘애매한 전쟁’(ambiguous war)이다 (Gomez Buendia 2002). 케릴라 세력은 강력한 ‘무장’ 세력이지만,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남자, 사보타지, 세금 감취를 통해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만, 결국 사회혁명이나 정치적 변화를 부르짖는 이념적 집단은 아니다. 농촌 지역에 압세포처럼 번식하고 있지만, 보고타를 노릴 만큼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무너뜨릴 군사행동은 필요하지만, 대상에 대한 접근은 보다 세밀해야 하고 정치적 필요가 있다. 고메스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대규모 군사행동보다는 경찰을 통한 게릴라 척결이 훨씬 유효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군사 행동보다는 전쟁 지역에 무너지기 전, 지역 공동체를 건전하게 가꾸는 노력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게릴라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마약 "전쟁은 이념적 차이보다는 콜롬비아 분쟁에 사는 일반 주민이 당면한 일상적 기회구조와 인센티브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Gomez 2002:4). 따라서 대체작물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한 고엽제 살포는 농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코카 필드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

콜롬비아와 미국은 마약전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마약 퇴치에 관심이 있는 데 반해, 콜롬비아는 폭력의 종식과 평화가 궁극적 관심이다. 마약과 폭력은 동일한 병의 두 경로군일 것이다. 보다 훌륭한 정책은 정부군을 보고 처방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마약 퇴치 전략은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의 '원인들'에, 미국에 난무하는 마약 소비의 '원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학계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도 공급 측면의 마약 퇴치 전략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논소가 높아져 있다. 예산 투입액 단위당 효과성은 수요 측면이 훨씬 높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활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은 31% 증가했지만, 해외 투여금은 175%나 증가했 다. CIP 2002:9.


Hsiang, Antonio C., 2003


Counternarcotics to Counterterrorism," *Current History*, February.  

콜롬비아 연보

1982. 도시에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을 일련의 진압 작전이 이어진다. 하지만 MAS(Muerte a Secuestradores)와 같은 민간 자위대 세력도 진압 작전에 가담하는데, 이 조직도 마약거래에 개입했다.

1982. 5. 30. 보수당 후보 벨리사리오 베탕쿠르 쿠아르타스가 46.8%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콜롬비아 정치의 특정인 양당 정치의 균형이 이뤄진다. 베탕쿠르는 전통적인 친미 외교에서 벗어나 콜롬비아를 비동맹정치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

1982년 6월 11일. 게릴라 단체 M-19는 정전을 실시하다.

1982. 11. 20. 국내 화전의 일부 조치로 게릴라에게 전면 사변을 부여하는 법률이 효력 발한다.

1984. 4. 30. 법무 장관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가 마약 카르텔에게 암살을 당한다. 정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까지 준수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범죄인도조약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다.


1986. 3. 게릴라 단체 FARC와 정부가 무기한 정전협정에 서명하다.

1986. 5. 25. 자유당 후보 비르힐리오 바르코 바르가스가 58%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바르코는 마약사범을 미국에 인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한다. 메데인 카르텔은 범죄인 인도 정책을 반복시키기 위해 일련의 폭력 캠페인을 시작한다.

1987. 10. FARC, M-19, ELN(민족해방군, 마오주의 게릴라 단체)를 포함한 6개의 게릴라 단체들이 ‘시몬 본리바르 게릴라 협의체’(CGSB)를 결성한다. FARC와의 정전은 이전에 이미 끝을 맺었다.

1987 연말. 대법원은 콜롬비아와 미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다.


1989. 3. ELN, CPL, FARC, 모두 정부와 평화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다.


로 변신한다.

1990. 3. AD-M-19의 대통령 후보 카를로스 피사로가 1989년 8월 이래 후보로는 둘 번째로 암살된다. 애국연합의 후보 베르나르도 하라미요도 하라미요도 암살된다.

1990. 5. 27. 자유당 후보 세사르 가비리아 트루히요가 47.4%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메데인 카르텔은 요인 납치는 계속하지만, 게릴라식 공격은 멈춘다. 가비리아 대통령은 피랍자들이 풀려나고, 카르텔 대원들이 항복한다면 범죄인 인도 법침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한다.

1990. 11. 9.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73석의 제헌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다. 자유당은 24석, AD-M-19는 19석을 얻었지만, 보수당은 9석에 머문다.

1991. 2. 5. 새 헌법이 발효된다.


1992. 11. 8. 90일 동안의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칼리 카르텔에 연루된 마약관련 폭력 사건이 다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메데인 카르텔이 부분적으로 약화된 다음 칼리 카르텔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다. 에스코바르의 탈옥도 부분적으로 폭력 사태의 제발에 영향을 준다.


1994. 2. 28. 가비리아 대통령이 미군의 파병 문제를 상원과 상의도 않고
결정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국가위원회의 결정이 있자, 미군은 철수하다.

1994. 6. 19.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자유당의 에르네스토 삼페르 피사노 후보가 50.4%의 지지로 당선된다. 보수당의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아랑고 후보는 48.6%의 지지를 얻다.

1994. 11. 17. 정부는 게릴라 그룹들과 무조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다.


1995. 9. 11. 알바로 베파안디아 우르타도 주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정부가 인권침해로 기소된 고위 장교를 처벌하기 전이다.

1995. 11. 2. 저명한 보수당 정치인의 암살이 있은 뒤 다시 90일간 비상사태가 선포된다. 이 조치는 1996년 1월과 4월에도 계속 연장이 된다.

1996. 국방부 장관 페르난도 보테로, 대통령 선거 당시 재정책임자였던 삼페르, 전직 자유당 상원의원 마리아 이스미에르도가 선거 당시 유 입된 마약 자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모두 구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총장 오를란도 바스케스 벨라스케스는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할 권한에 기소된다. 그도 곧 마약 자금에 관련된 죄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996. 7. 11. 미국 행정부는 삼페르 대통령이 마약거래의 확신을 저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의 미국 여행 비자를 취소한다.

1996. 8. 30-31. FARC와 ELN이 시작한 대공세로 100 명 이상의 사상자
가 나다.

1996. 9. 정부는 수천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여 케릴라 그룹 박멸에 나서다.

1996. 9. 10. 부통령 엄베르토 델라 카에는 삼페르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언급하고 사임한다.

1997. 5. FARC가 포로로 잡은 70명의 정부군의 석방을 위하여 카케타 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안에 정부가 동의한다.

1997. 9. 27. 정부의 대대적인 공세로 652명의 FARC 케릴라가 죽고, 1,600여 명이 생포 된다.

1997. 11. 민간 자위대 그룹에 의한 공격이 크게 증가한다. 8일 동안 47명의 사람이 살해된다.

1998. 5. 케릴라, 민간 자위대 그룹에 의한 폭력 사태 확대에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항의 테모를 한다.

1998. 6. 21. 보수당의 파스트라나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50.4%를 얻어 당선이 된다.

1998. 7. 9. 대통령 당선자 파스트라나는 FARC의 지도자 마누엘 마룰란다 벨레스와 비밀회담을 갖고, 90일간 남부의 5개 군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고 선언한다.


1998. 10. 18. ELN은 안티오키아 주의 석유 송유관을 공격하여 적어도 66명의 민간인이 희생된다.

1998. 11. 7. FARC가 보안군에 대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부 5개 군 중 42,000 평방 킬로미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다.
1999. 1월 중엽. FARC가 평화회담을 중지한다. 이들은 원초에 있었던 130여명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이 민간 자위대 세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다.

1999. 1. 7. 정부와 FARC 사이에 평화회담 준비모임이 산 비센테 델 카구안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다.

1999. 2. 파스트라나 대통령은 무장 기간을 3개월 연장하다. ELN과 계획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다. ELN은 그 책임이 브리바라 주의 4개 지역을 비무장 지대화할 거부하는 정부측에 있다고 주장하다.

1999. 4. 9. 민간 자위대 그룹은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고참 장교가 강제로 전역하다.

1999. 4. 12. ELN은 46명이 탑승한 국내선 항공기를 하이제킹하다.

1999. 5. 6. 파스트라나 대통령과 마롤란다는 미래 평화협상을 위한 포괄적 의제에 합의하다. 비무장 해제 기간은 다시 연장된다.

1999. 5. 26. 국방부 장관 로드리고 요레다가 FARC에 대한 양보에 불복하고 사임하다.

1999. 5. 30. ELN은 칼리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보던 140여명을 납치하다.

1999. 6. 18. 파스트라나 대통령은 ELN에 대한 정치적 승인을 청취하고, 인질들의 석방이 미래 평화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다.

1999. 7. 17. 정부와 FARC 사이의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다. 양자는 비무장 지대에 대한 국제사찰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다.

1999. 10. 24. 파스트라나 대통령이 국제참관인단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자, 정부와 FARC와의 협상이 라우리베에서 재개된다.

1999. 11. 게릴라 세력이 13개의 마을에 대한 공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FARC와의 협상은 계속된다.


2000. 1. 29. 정부와 FARC는 미래 평화협상의 형식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다.

2000. 4. 20. 남부의 불리바르 주에 비무장지대를 만들기로 ELN과 합의에 도달하다.

2000. 4. 30. FARC는 새로운 정당인 ‘신 콜롬비아를 위한 불리바르주의 운동’(NBNC)을 창당하다.

2000. 7. 미국 의회는 플랜 콜롬비아로 알려진 13억 달러 원조 안을 승인하다. 이 원조는 보안군과 사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콜롬비아 국가를 강화하고, 코카 제조 및 작물 대체를 통해 마약 생산을 금압하기 위한 것이다.

2000. 8. 30.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콜롬비아를 방문하다. 하지만 데모대는 콜롬비아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에 대해 항의한다.

2000. 9. FARC는 콜롬비아에서 코카 생산의 중심지인 푸투마요 지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여 코카 밭에 대한 고엽제 공중살포를 저지시킨다.


2001. 1. 플랜 콜롬비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2001. 2. 불리바르 주에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ELN에 대한 비무장 지대의 설치에 반대하여 평화적으로 시위한다.

- 143 -

2001. 3. 9. 정부가 블리바르에 대해 군사적 공세를 가하자, ELN은 정부와의 평화회담을 중지한다.

2001. 5. 국방부와 경제개발부의 장관들이 사임한다.

2001. 5. 15. 민간자위대 조직 AUC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사병들이 200여 명의 농장 노동자들을 납치하다. 이는 4월에 있었던 석유 노동자들을 ELN이 납치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2001. 6. 5-28. 정부와 FARC가 포로들을 교환하다.

2001. 8. 7. ELN과의 평화회담이 재개된 바로 후에 정부는 비무장지대 창설을 위한 세부조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지시킨다.


2001. 10. 7. 정부는 FARC의 비무장지대 이용기간을 2002년 1월 20일까지 연장한다.

2002. 2. 23. 산소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여성 정치인 엥그릿 베당쿠르가 게릴라 세력에게 납치되다.


2002. 12. 유엔은 콜롬비아의 코카 경작이 252,000 에이커로 전년 대비 약 35% 줄었다고 보고한다.

2003. 2. 7. 보고타 부유층 주거지의 사교 클럽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30 여명이 죽고, 150 여명이 다치다.


2003. 5. 5. 전직 국방부 장관 헤르베르트 에체베리, 안티오기아 주의 주지사 기예르모 가비리아, 그리고 군인 8명이 암살당한다.

2003. 6.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되어, 전국의 치안 관할권이 군에게도 허용 된다.
### Worldwide Illicit Drug Cultivation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strong>Opium</stron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Afghanistan</td>
<td>30,750</td>
<td>1,685</td>
<td>64,510</td>
<td>51,500</td>
<td>41,720</td>
<td>39,150</td>
<td>37,950</td>
<td>38,740</td>
</tr>
<tr>
<td>India</td>
<td></td>
<td></td>
<td></td>
<td></td>
<td>2,050</td>
<td>3,100</td>
<td>4,750</td>
<td></td>
</tr>
<tr>
<td>Iran</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Pakistan</td>
<td>622</td>
<td>213</td>
<td>515</td>
<td>1,570</td>
<td>3,030</td>
<td>4,100</td>
<td>3,400</td>
<td>6,950</td>
</tr>
<tr>
<td><strong>Total SW Asia</strong></td>
<td>31,372</td>
<td>1,898</td>
<td>65,025</td>
<td>53,070</td>
<td>44,750</td>
<td>45,300</td>
<td>44,450</td>
<td>50,440</td>
</tr>
<tr>
<td>Burma</td>
<td>78,000</td>
<td>105,000</td>
<td>108,700</td>
<td>89,500</td>
<td>130,300</td>
<td>155,150</td>
<td>163,100</td>
<td>154,070</td>
</tr>
<tr>
<td>China</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275</td>
<td></td>
<td></td>
</tr>
<tr>
<td>Laos</td>
<td>23,200</td>
<td>22,000</td>
<td>23,150</td>
<td>21,800</td>
<td>26,100</td>
<td>28,150</td>
<td>25,250</td>
<td>19,650</td>
</tr>
<tr>
<td>Thailand</td>
<td>750</td>
<td>820</td>
<td>890</td>
<td>835</td>
<td>1,350</td>
<td>1,650</td>
<td>2,170</td>
<td>1,750</td>
</tr>
<tr>
<td>Vietnam</td>
<td>1,000</td>
<td>2,300</td>
<td>2,300</td>
<td>2,100</td>
<td>3,000</td>
<td>6,150</td>
<td>3,150</td>
<td></td>
</tr>
<tr>
<td><strong>Total SE Asia</strong></td>
<td>102,950</td>
<td>130,120</td>
<td>135,040</td>
<td>114,235</td>
<td>160,750</td>
<td>191,100</td>
<td>193,670</td>
<td>176,745</td>
</tr>
<tr>
<td>Colombia</td>
<td>6,500</td>
<td>6,500</td>
<td>7,500</td>
<td>7,500</td>
<td>6,100</td>
<td>6,600</td>
<td>6,300</td>
<td>6,540</td>
</tr>
<tr>
<td>Lebanon</td>
<td></td>
<td></td>
<td></td>
<td></td>
<td>90</td>
<td>150</td>
<td></td>
<td></td>
</tr>
<tr>
<td>Guatemala</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39</td>
<td></td>
<td></td>
</tr>
<tr>
<td>Mexico</td>
<td>2,700</td>
<td>4,400</td>
<td>1,900</td>
<td>3,600</td>
<td>5,500</td>
<td>4,000</td>
<td>5,100</td>
<td>5,050</td>
</tr>
<tr>
<td><strong>Total Other</strong></td>
<td>9,200</td>
<td>10,900</td>
<td>9,400</td>
<td>11,100</td>
<td>11,600</td>
<td>10,600</td>
<td>11,490</td>
<td>11,779</td>
</tr>
<tr>
<td><strong>Total Opium</strong></td>
<td>143,522</td>
<td>142,918</td>
<td>209,465</td>
<td>178,405</td>
<td>217,100</td>
<td>247,000</td>
<td>249,610</td>
<td>238,964</td>
</tr>
<tr>
<td><strong>Coca</stron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Bolivia¹</td>
<td>24,400</td>
<td>19,900</td>
<td>14,600</td>
<td>21,800</td>
<td>38,000</td>
<td>45,800</td>
<td>48,100</td>
<td>48,600</td>
</tr>
<tr>
<td>Colombia</td>
<td>144,450</td>
<td>169,800</td>
<td>136,200</td>
<td>122,500</td>
<td>101,800</td>
<td>79,500</td>
<td>87,200</td>
<td>50,900</td>
</tr>
<tr>
<td>Peru</td>
<td>36,600</td>
<td>34,000</td>
<td>34,200</td>
<td>38,700</td>
<td>51,000</td>
<td>68,800</td>
<td>94,400</td>
<td>115,300</td>
</tr>
<tr>
<td>Ecuado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trong>Total Coca</strong></td>
<td>205,450</td>
<td>223,700</td>
<td>185,000</td>
<td>183,000</td>
<td>190,800</td>
<td>194,100</td>
<td>209,700</td>
<td>214,800</td>
</tr>
<tr>
<td><strong>Cannabis</stron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Mexico</td>
<td>3,900</td>
<td>3,900</td>
<td>3,900</td>
<td>3,700</td>
<td>4,600</td>
<td>4,800</td>
<td>6,500</td>
<td>6,900</td>
</tr>
<tr>
<td>Colombia</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d>5,000</td>
</tr>
<tr>
<td>Jamaica</td>
<td>317</td>
<td>527</td>
<td>305</td>
<td>305</td>
<td>305</td>
<td>305</td>
<td>305</td>
<td>305</td>
</tr>
<tr>
<td><strong>Total Cannabis</strong></td>
<td>8,900</td>
<td>8,900</td>
<td>8,900</td>
<td>8,700</td>
<td>9,600</td>
<td>10,117</td>
<td>12,027</td>
<td>12,205</td>
</tr>
</tbody>
</table>

---

1995–2002 (All Figures in Hectares)

Beginning in 2001, USG surveys of Bolivian coca take place cover the period June to June.
중남미 경제통합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03. 9

외교 통상부
I. 서론 ...................................................................................................................... 1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1.2. 연구내용 ...................................................................................................... 2
  1.3. 연구 방법론 및 추진전략 ......................................................................... 2
  1.4.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학 ......................................................................... 3

II.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의 배경 ...................................................................... 4
  2.1.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 ............................................................................... 4
  2.2. 경제통합의 개념과 효과 ......................................................................... 7

III. 중남미 경제통합의 발전과 현황 ................................................................ 12
  3.1.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와 현황 ............................................................. 12
  3.2. NAFTA 발전전망 ..................................................................................... 20
  3.3. MERCOSUR와 SAFTA(남미자유무역지대) .......................................... 24
  3.4. FTAA의 출범전망과 시사점 ..................................................................... 28

IV. 결론 .................................................................................................................. 32
  4.1. 중남미 경제통합의 전망 ......................................................................... 32
  4.2. 한국의 대응방안 ..................................................................................... 35

참고문헌 .............................................................................................................. 39
I.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세계무역체제는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와 소지역 경제통합체의 지역주의로 양분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체제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Two track strategy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자 라운드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자국의 수출증진과 경제 효율성 향상은 한계가 있으며 EU나 NAFTA와 같은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지역 경제통합체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며 그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및 서구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적 수출 시장 외에 새로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떠오른 중남미 지역도 소지역 경제통합체 형성 응지역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 및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CACM(중미공동시장) 등을 필두로 세계경제의 지역 불리화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는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 34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지역경제통합체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현재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며 나가고 있으며 동지역은 우리의 전통적 무역수지 직후자 지역이다. 일본 등의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지역이 해소시켜 주는 수출 효자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점점 더 강화되는 이 지역의 경제 불리화는 한국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중대에는 차별대우 확대로 인한 시장 점유율이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불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미의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을 마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세계 FTA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중남미 지역의 불리화 현상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중남미 시장이 한국 상품 수출과 국제수지 균형에 중요한 효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남미 경제통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우리 수출의 중남미 시장에서의 차별과 후퇴는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당위성
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NAFTA와 MERCOSUR 같은 지역경제통합체와 별개로 전 미주의 FTA체제인 FTAA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향상되었다. 즉, 중남미 지역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변모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이 지역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1.2. 연구내용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다. 이후 2장과 3장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분석된다. 2장에서는 중남미 경제 통합 과정 가속화의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세계 무역체제 변화에 따라 살펴보고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중남미 경제통합체 동향이 분석된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경제 통합체들에 대한 기본설명이 서술되고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통합체들이 사례분석 형태로서 분석된다. 중남미 대국들이며 한국과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멕시코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가 참여하고 있는 NAFTA와 MERCOSUR의 기존 경제 블록이 분석되고 현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전 미주 자유무역지대인 FTAA의 출범 전망과 효과 등이 분석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한 중남미 경제통합 동향을 정리하고 정부 입장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한국과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맺고 있는 교역 및 협력의 기준 를 위해 이 지역의 경제 블록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한다. 지역기구 가입확대, 적극적 생동 FTA 체결 그리고 다자무대에서 표준화 작업 확대 등 한국이 국가적 또는 기업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본다.

1.3. 연구방법론 및 추진전략

문헌조사:
미주지역 경제통합체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 국내외의 각종 참고자료를 분석한다.

면담조사:
한국의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실무자들을 면담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남미 주요국 대사관의 상무관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전략들의 효용성을 파악한다.
인터넷 자료수집:
새로운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한다. 또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에도 인터넷을 통한 서신 왕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1.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 블록화라는 현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현재 양 지역간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교류는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한국과 중남미 지역 국가들 간에 발생하는 경제관계에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변수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관계한다. 양 지역간 교류 확대 및 긴밀화를 위한 연구는 당연히 양 지역 경제 교류에 관여하는 제반 변수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하는 중남미 지역 경제 블록화 현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은 양 지역간 경제 교류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제반 변수를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향후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때는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민간 분야 투자 등의 타 변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주제인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개별 통합체에 대한 상세 분석은 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제블랙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개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중남미 지역 경제 통합의 배경

2.1.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

전후 전 세계 국가들 간의 무역에 대한 규제는 1947년에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규정(GATT) 체제하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기구는 1995년에 WTO(세계무역기구)로 확대 개편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라운드라라는 협상 제도를 통해 무역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자유무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다자체제라 한다.

이러한 다자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들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무역은 WTO의 다자체제보다도 소지역 경제 통합체의 양자체제에 의해 관리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WTO 체제가 비차별과 상호호혜의 일반 원칙에 운영되는데 반해 지역주의는 2개국 이상의 특정 국가들이 특혜 협정을 통해 회원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본질적으로 차별적 무역체제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블록의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GATT가 24조에 '면책조항'을 두어 지역 경제통합체의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1) 2003년 8월까지 GATT와 WTO에 설립이 통보된 지역 경제통합체는 총 255개, 발효중 184개, 협상 진행중인 것이 70여개에 달해 이제 몇 개 국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한개 이상의 지역 경제 블록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역 경제통합체는 현 유럽 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설립된 1950년대 말 이후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제 1차 붐을 이룬다.2) 중남미 지역의 경제 통합도 1960년대의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60년대 말에 이르러 그 활동을 잃고 70년대에는 추진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 경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통합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전에 주춤하던 소지역 통합

1) 협세 지역경제통합의 다자주의에서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조항들은 1947년의 GATT 24조와 1994년의 WTO 설립협정의 GATT 24조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 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그리고 WTO 서비스협정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 5조이다.

체 결성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 1960년대의 세계 소지역 경제 통합체 활황 움직임과 비교해서 80년대의 경제 복록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틀은 60년대의 경제 복록 형성의 주요 추진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개도국과 후진국들 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전에 다자주의의 최대 베타쪽이었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역주의 추진 가도에 참여한 점이다.

미국이 1985년에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발로 1989년에 캐나다 및 1994년에 캐나다,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제히 FTA 체결 레이스에 동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은 이전에는 다자주의의 최대 후원자 역할에서 이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병행해서 자국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양면전략(Two track strategy)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중남미,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나라없이 지역주의를 선호하게 된 데에는 세계 경제의 여러 변수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세계 다자 체제의 무역 자유화 추진력 약화 및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생산 및 소비의 지역화 현상이 그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WTO 탄생을 가져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부진은 세계 주요국들에 게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 자유화와 교류 증가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세계 무역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세계 교역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 80년대 중반 이후 GATT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추진하고 지적 재산권, 서비스 교역과 농산물 개방 확대 등 새로운 의제를 상정했지만 라운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그룹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협상은 예정된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 1990년대 초에 타결되었다. 이 기간동안 자국 경제의 새로운 황토를 모색하는 세계 각국이 다자체제라는 논의의 장 이외에 소지역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자국의 안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는 1995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새로이 출범하여 GATT를 대신해 다자체제 무역질서를 관할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협상의제 발굴 및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에 세계 경제의 지역화와 경제복록화 현상도 동시에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는 다자체제와 지역주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표면적으로 상충되어 보이는 현상이 세계무역 자유화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3)

다자체제의 대표적 웅호론자인 MIT의 Bhagwati(1999)나 Panagariya(1993)는 지역주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경제적 효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역 자유화 행진에서 결국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의는 소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체제로서 경제적으로는 무역창출보다 무역전환 효과가 큰 비 효율적 체제이며 무엇보다 다자주의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상쇄시켜서 4) 세계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한다. 경제통합체 중에서도 대외공통관세 (CET)를 채택하는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경우는 통합 이전 경제적 성장과 자유화 수준을 보유했던 국가의 관세로 CET를 통일할 경우 관세 인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각각 다른 개별실체 정책을 시행하는 FTA의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지역주의가 실시한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들이 다자무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일부 FTA들은 관세동맹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통합체는 편협적이면서 차별적이어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세계경제를 악화시켜 경제난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자주의는 때로는 자유화의 진척에 있어서 정체를 보인적이지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이 현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고 교역이 활성화 된 것은 GATT와 WTO가 기여한 점이 절대적이다.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무역에서 관세 수준은 70~80%에 가까웠던 것이 지금은 평균 관세 10%대로 하락하고 무역 자유화의 범위가 투자와 지적 재산권 등으로 확대 된 것은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등의 주요 라운드를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온 다자체제의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주의나 세계무역 자유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간주하고 다자체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Lawrence(1996) 교수 같은 저자들은 지역주의가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80년대에 1,2차 지역주의 물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지역간 경제통합으로 재편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이 체제는 편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세계 경제의 성장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자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탄생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 체제에 새로운 활용력을 불어넣으며 자유화를 선도했다. 편협적 성격의 제 1차 지역주의가 마감하고 1980년대에 새로이 탄생한 제 2차 지역주의 물결은 역내 관

4) Bhagwati(1999)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국가들이 다자주의의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이 현상은 관심전환 (Interest Diversion)으로 정의하였다.

- 154 -
세 인가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차별이 아니라 무역자유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회원국 가입 확대와 자유화 범주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의 자유화 심화를 가져왔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많은 논쟁의 중심은 양자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지 아니면 배타적인지 하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와 함께 세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세계 경제를 폐쇄적 블록으로 세분하여 자유화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지 여부이다.

현재 이 논쟁은 대체적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정하며 지역주의의 순기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 통합체는 보호 무역주의적 원산지 규정의 설치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 경제 블록들은 폐쇄적 이라기보다는 개방적이며 자유화에 역행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의 각종 자유화 조치는 다자주의의 자유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주의는 포함하는 학자들도 지역주의만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담당할 체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자주의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을 인정하며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통해 세계 무역자유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세계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와 APEC, EU, NAFTA와 같은 지역주의가 공존하며 세계 무역을 이끄는 시대로 진입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주의 체제와 일정 거리를 두며 무역을 수행해온 한국의 경우에도 칠레와의 FTA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주의 참여가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2. 경제통합의 개념과 효과

지역경제 통합체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통합하는 특혜협정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의 기원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경제사에서 오랫동안 각국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일부 국가들과 선박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시장을 통합하여 왔기 때문이다. 중세까지의 식민지 교역도 그러한 하나의 예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사상 최초 경제통합체로서는 1833년의 Zollverein(독일관자연체제)로 수석으로 수색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사상 최초 경제통합체로서는 1833년의 Zollverein(독일관자연체제)

5) 지역경제 통합체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환한 불리어지는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과 특혜 협정 (Preferential Treatment)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각국의 관리 관계에 따라 무역을 간에도 어느 방향까지의 특혜 협정이 근대적 의미의 경제 통합체인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관련 논의로서 Machlup(1977)를 참조하시오.
세종대(이) 거론된다. 이후 경제통합체는 1950년대까지 관세동맹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Zollverein의 등장 이후 유럽 내에서 관세동맹이 거의 유일한 경제 통합체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6)
소지역 경제통합체가 세계 각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탄생한 이후이다. 이때부터 학계와 정부당국은 경제통합체의 개념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제통합은 다자주의와 함께 각국 경제가 수출 확대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 떠올랐다.


경제통합 협정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통합의 깊이와 관련하여 구분된다. 시장통합의 정도와 기타 부문에서 역내국간 조율의 정도와 관련하여 경제통합 협정이 구분된다. 통합 정도가 가장 낮은 형태의 경제 통합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이 그 예로서 역내국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 시장을 통합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독자적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FTA 협정은 운영상의 메커니즘으로서 원산지 규정을 필요로 한다.

7) 무역창출이라 경제통합 이전에는 더 효율적인 역외국 생산자에게 상품을 구매하던 역내국이 경제통합체 구성으로 관세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내 상대국에게서 상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무역창출이 전환된다는 것으로서 전 세계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무역배치를 역내 시장이 통합되고 관세가 제거됨에 의해 이전에 무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역내국들 간에 새로운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것은 역외국의 상품이 역내국 중 관세 수준이 제일 낮은 국가로 수입된 후 무관세로 다른 역내 국가로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국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역내국간의 특혜관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역내산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원산지 규정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보호 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역외국에 대한 차별 조항으로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른 형태의 경제통합체로는 관세 동맹(Customs Union)이 있다. 중남미 지역의 여러 통합체인 안데스공동체(ANCOM)와 중미공동체(CACM) 등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와 다른 점은 역내 국가들이 대외공동관세(CET)를 채택하여 역외국에 대해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FTA에 필요한 원산지 규정이 필요 없게 되고 경제통합체 운영의 행정적 간편성이 증가하게 된다. 관세 동맹 설립 시 중요한 점은 무역전환을 줄이고 무역장후를 늘려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협정 발효 이전 재일 낮은 수준의 관세를 보유했던 국가의 관세 수준이나 그 이하로 CET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할 때만이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무역패턴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제 통합체의 세 번째 형태로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있다. 이는 관세 동맹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의 통합체로서 중남미의 대표적 경제통합체인 MERCOSUR가 추구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통합형태에 역내 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역내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 체제 구축과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는 140여개가 넘는 전 세계 경제 통합체 중 오직 유럽연합만이 도달한 경제통맹의 형태가 있다. 이 단계는 아직 계속 진화되는 상태이므로 이 단계와 다음의 발전 단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명 또한 사실상 진행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시장까지의 경제 통합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그리고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같은 시장 통합에 중점을 둔 경제 통합이었다면 경제 통행 단계는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 단일 통화 사용, 공동 중앙은행 설립, 재정과 통화 정책 조정과 같은 경제 주권의 통합까지도 의미한다. 이제는 시장 통합을 넘어서 경제 운용을 통합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 단계가 완성되면 정치와 외교 및 군사 등의 분야까지도 통합하는 연방체의 형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경제 통합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진행 중이고 세계 각국
은 이들 중 하나 이상의 경제 통합에 참여 중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경제 통합체에 참여하는 것인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통합체 형성과 가입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각 효과는 참여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경제통합체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효과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과는 경제 개방과 개혁의 제도화이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에 시장의 문을 닫고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고 때로는 기존의 개혁 조치들을 후퇴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990년대 들어 경제의 개방과 개혁 조치를 단행해도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고 외국인 투자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체 구성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정권이 설혹 반시장적이나 반통적인 성격의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미 제도화된 시장 개방의 틀을 뒤집기 어렵게 되고 개혁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모든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이런 개혁의 제도화 요건으로서 경제통합체 가입이 자국 경제 안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경제 통합은 외국인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오랜기간 생산의 국제화와 지역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각 지역 내에서 국가별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 기기가 배치되고 유통과 관배가 지역화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지역경제 통합은 각 산업별 특성에 의거하여 투자를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8)

위의 효과들과 함께 지역 경제통합체가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의 증가로 인한 효율성 증대이다. 시장이 통합되면 이전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 발생이 어려웠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산업의 발전이 지역 수준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각국의 개별 산업들도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생산 규모를 늘리고 이는 생산 단가 하락과 시장 규모 확대로 선순환 된다. 이와 함께 시장 개방과 통합으로 경쟁자의 수가 증가하면 경쟁이 확대되고 이는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로 이어진다. 이전에 독과점 체제에 머물렀던 일부 산업도 개방됨으로써 효율성 증가와 가격 인하가 발생해 결국 소비자의 효용이 향상되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 경제통합체는 다자체제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NAFTA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다자 무대에서 합의가 어려운 투자의 자유화 같은 문제들이 소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단기간 내에 합의가 도출되고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주의에서 선례가 있는 사안들은 다자무대에서 보다 합의

8) 이와 관련하여 UN은 지역 경제통합체의 투자유발과 투자전환 효과에 대하여 언급한다. UN(1990)를 참조하시오.
가 쉽게 되고 따라서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범효과(Demonstration Effect)도 또한 지역주의가 세계 무역자유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하나이다.
중남미 경제통합의 발전과 현황

중남미 경제통합의 역사와 현황

현재 중남미 지역은 크고 작은 규모의 경제통합체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개 이상의 경제 통합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며 더욱이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한 미국 대륙의 자유무역지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로 여러 측면에서 세계 주요 지역의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 통합 노력이 활발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경제통합의 역사는 세계 여타 지역에서의 지역주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설립된 것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1960년에 체결한 몬테비데오 협정에 기반하여 출범했다. 당초 가입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리시, 우루과이, 멕시코 등의 7개국이었지만 그 후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여 총 11개국이 되었다. 몬테비데오 협정은 1961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12개장 65개 조항과 2개의 결의안(무역금융 및 결제와 볼리비아 가입문제)으로 구성되었다.

몬테비데오 협정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 역내 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경제통합 프로그램 도입의 기반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무역 자유화는 1) 매년 양허안이 작성되는 국가별 특정 리스트와 2) 일반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협상을 통해 추진하였다. 매년 회원국은 제 3국에 적용하는 무역장벽의 8%를 철폐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자유화 품목 리스트는 최초 3년간 금액 기준으로 25%, 6년 후 50%, 9년 후 75%, 12년 후 대부분을 포함하여 협정 발효 후 12년의 기간 내에 자유화를 달성하고자 목표하였다.

국가별 특정 리스트는 회원국간 협상을 통해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일반 자유화 품목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또한 일국이 특정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 양보를 함으로써 매년 자유화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협정 회원국들 중에서도 상대적 저개발국인 에콰도르와 파라과이에 한해서는 농업 부문의 보호를 허용하였으며 여타 국가도 국내 산업 피해나 국제수지 불균형

이 발생할 경우 SafeGuard 제도의 발동이 가능하였다.

당시에 중남미 경제가 통합 기구를 발족하게 된 배경에는 중남미 경제가 처한 특수성과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가 주요했다. 전후에 중남미 경제는 서구 제국의 지원하에 소비재 산업위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고 있었다. 1950년대 들어서는 여러 국가들이 소비재 산업을 뒤어가며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수입능력 부족이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빠른 인구 성장은 산업화 추진의 압력으로 작용하였지만 협소한 국내시장은 산업과 경제의 추가적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초의 중남미 경제통합체인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은 역내 관세인하를 주요 시장통합 수단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제한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회원국들 간에 경제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였다. 또한 관세를 폐지하는 방식의 문제, 회원국들간의 경제 수준의 격차와 경제정책의 차이 등으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상당기간 경제상태에 머무르다 1980년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으로 대체된다.

10) 이외에 저발전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협정은 1)여타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양허 2)특혜적 자유화 프로그램 시행 3)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특별조치 허용 4)여타 회원국의 원조 실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 인정과 역내 저개발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서명일: 1960년 2월 18일, 발효일: 1961년 6월 2일
1차 가입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베루, 우루과이, 멕시코
2차 가입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총 11개국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총 5개국
카리브 자유무역연합(CARRIFTA)
서명일: 1965년 12월(Dickensen Bay 협정)
회원국: 안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브리티시 기아나
1968년 5월 1일 새 협정 공식 출범, 회원국: 안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기아나, 트리니다드도바고
안데스 공동시장(ANCOM)
서명일: 1969년 5월 26일
회원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레루, 베네수엘라, 총 5개국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서명일: 1973년 7월 4일, 발효일: 1973년 8월 1일
회원국: 안티가바부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이아, 몬세라트, 세인트바시끄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도바고, 바하마, 수리남, 아이티, 총 15개국 브리티시바하마령, 트리그스, 카이코스 음서비 3개국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서명일: 1980, 8, 12일, 발효일: 1981, 3월 18일
회원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라과이, 레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12개국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은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이 관세인하와 무역자유화에 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자 LAFTA를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해체한 후 재결성하자는 가맹국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1980년에 새로 출범한 중남미 경제 통합체이다. 가맹국은 LAFTA의 가맹국과 같은 11개국이었으며 본부는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있다.

LAFTA가 정체된 원인이 다각화 협의에 의한 관세 인하와 철폐 규정 때문에으로 판단하고 2개국간의 협정과 부분 협정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합체를 구성하였다. LAFTA와 마찬가지로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 규정도 내부 역내국간 발
전의 격차가 경제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 또한 LAFTA와 마찬가지로 경제 통합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민간 산업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통합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 외에 이 통합체가 결실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에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외채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수지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국내 경제 혁신에 적합한 국가들은 자유화보다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였고 라틴아메리카의 사장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 미주 대륙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경제통합이 가시화 되었다. 2005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그것인데 이것이 기존의 두 차례 범 미주 자유무역 시도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중남미 모든 국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 발할해진 소지역 경제통합체 형성과 운영의 경험을 이미 대다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 중남미 국가 경제가 개방과 개혁의 길을 걷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들이 FTAA의 출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FTAA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분석한다.

LAFTA에서 LAIA 그리고 FTAA로 이어지는 범 미주 자유무역 추진과 함께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중남미 대륙에서는 소지역 경제통합체 출범이 있어왔다. 1960년에 결성된 중미공동시장(CACM)에서부터 1995년에 발효된 G-3까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블록들이 이 지역 국가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런 소지역 경제통합체 의에도 2개국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도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펼쳐진 많은 경제통합 협정들은 통합의 길이와 정도 그리고 형태가 모두 다르며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 그리고 FTAA를 분석하기 전에 중남미 국가들 간에 발효되어 있는 주요 FTA들의 개요를 살펴본다.

### 표 2 라틴아메리카 소지역 경제통합체 현황

<table>
<thead>
<tr>
<th>기구명</th>
<th>설립 년도</th>
<th>유형</th>
<th>회원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중미공동시장 (CACM)</td>
<td>1960년</td>
<td>관세통행</td>
<td>파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td>
<td>93년 코스타리카 제외한 4개국 대외공동관세(CET) 15% 설정</td>
</tr>
<tr>
<td>안데스공동시장</td>
<td>1969년</td>
<td>관세통행</td>
<td>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td>
<td>95년 2월부터 CET 적용 단 볼리비아</td>
</tr>
</tbody>
</table>
에콰도르는 예외규정
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이사, 몬세르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티바고, 수리남, 아이티
93년부터 97년까지 최고 CET 단계적 인하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관세동맹 세인트루시아, 몬세라트, 93년부터 97년까지 CET 단계적 인하세인트커흐네비사, 리니다토바고, 수리남, 아이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최고 CET 단계적 인하 2005년에 CET 0-20% 적용. 예외품목은 2001년까지, 나머지 품목은 2006년까지 통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관세철폐 15년의 기한 내에 관세철폐 1993년부터 적용. 예외품목은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관세철폐 2005년 출범 예정으로 구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2005년 출범 예정으로 구바를 제외한 전 미주의 모든 국가 참여

자료: Business America, December 1994 (김원호 외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에서 재인용)

<table>
<thead>
<tr>
<th>주요 동맹체</th>
<th>설립년도</th>
<th>행정</th>
<th>예외품목</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카리브공동시장 (CARICOM)</td>
<td>1973년</td>
<td>관세동맹</td>
<td>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이사, 몬세르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티바고, 수리남, 아이티</td>
<td>93년부터 97년까지 최고 CET 단계적 인하</td>
</tr>
<tr>
<td>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td>
<td>1991년</td>
<td>관세동맹</td>
<td>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td>
<td>철레와 물리비아가 준회원국 95년부터 CET 0-20% 적용. 예외품목은 2001년까지, 나머지 품목은 2006년까지 통일</td>
</tr>
<tr>
<td>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td>
<td>1993년</td>
<td>FTA</td>
<td>미국, 캐나다, 멕시코</td>
<td>CET 없음 15년의 기한 내에 관세철폐</td>
</tr>
<tr>
<td>G-3 자유무역협정 (G-3)</td>
<td>1994년</td>
<td>FTA</td>
<td>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td>
<td>95년부터 10년 기간동안 관세철폐</td>
</tr>
<tr>
<td>미주자유무역지대 (FTAA)</td>
<td>미정</td>
<td>FTA</td>
<td>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td>
<td>2005년 출범 예정으로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의 모든 국가 참여</td>
</tr>
</tbody>
</table>

자료: Business America, December 1994 (김원호 외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에서 재인용)
위의 표 2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에는 1960년부터 여러 경제통합체가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중미공동시장(CACM)의 경우 개발 도상국들간에 결성된 경제블럭들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1960년 12월에 나카라과의 마나구아시에서 체결된 중미 경제통합 일반조약에 의거 1963년 공식 출범한 중미공동시장은 역내 교역의 자유화, 역내 간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역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역내 간 산업정책의 조정 및 통합 등을 공동시장의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수년간 통합의 이익이 일부 역내 선진국에 집중되고 교역불균형이 심화되자 80년대까지 정체기간을 맞이한다. 1990년대에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화와 경제 통합 공고화가 추진되고 있다. 11)

구체적인 그 과정을 살펴보면 63년에 발효된 중미공동시장은 관세대상품목 약 95%에 대해 무역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으며 66년 7월까지 관세의 완전철폐를 명시 했다. 역사 문화적 동질성, 1차 산품에 의존하는 농업국으로 경제구조가 유사한 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 성장률 증가로 노동력 흡수를 위한 고용창출 필요가 중대한 점 등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빠른 관세철폐 일정이 잡힌 이유였다.

그러나 역내 선진국인 파테말라와 엘살바도르가 지속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이 외의 회원국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자 협력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극복할 만한 제도적 틀이 없었다. 1970년에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역내수입에 관세를 부과해서 출범 9년만에 협정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중미에 평화가 찾아오고 경제적 안정이 도래하자 1990년 6월 정상회담에서 중미공동시장 활성화가 합의되고 중미경제협력계획을 포함한 ‘안티구아 선언’이 발표된다.

1993년에는 불공정 무역관행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구를 대체하기 위해 중미통합기구를 신설한다. 1993년 3월에는 중미판세제도 발족에 합의하여 교역 대상품 중 95% 가량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고 관세 수준은 5~20%로 유지하며 1994년 말까지 각국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 경쟁관세를 허용하게 된다. 이후에 역내 무역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자 1995년 초에는 중미공동관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듯 중미공동시장은 현재 불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통합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전미주 차원에서 진행중인 FTAA와 병행하여 미국이 중미공동시장과 추진하고 있는 미-중미공동시장 FTA도 주요 미주 지역 FTA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미 5개국과 미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코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일반 여론 뿐 아니라 정치와 기업계 모두에서 큰 활력을 얻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16일 미주기구(OEA)에서 행한 연설에서 축발된 민의이다. 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미국은 중미 국들과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했으며 그 이유로는 양자간의 기존 경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중미국들의 경제, 정치 및 사회 개혁을 지원하며, 미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2)

이와 같은 미국과 중미지역의 자유무역 의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이후 기존의 CBI(카리브 개발 계획) 수혜국들은 멕시코 대비 역내 국가들의 차별 대우와 이에 따른 미국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NAFTA에 상응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집단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수차례 표명해 왔다.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도 이런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결국은 양 지역 무역 담당자들 간의 수차례 비공식 회담 끝에 부시 대통령의 공식 의지 표명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양측은 1년여의 기간 안에 실제로 자유무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외적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13)

미-중미공동시장 FTA와 더불어 FTAA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안데스 공동체와 MERCOSUR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이다. 안데스 공동체는 현재 중남미 지역에서 중미공동시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경제통합체 중의 하나이며 MERCOSUR는 남미의 주요 경제가 모두 참여하고 있

13) 양 지역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 교섭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마지막 6차 회의에서 미국 뉴올리언즈가 중미전략의 교섭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훈련원(Instituto de Capacitacin Comercial)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여 현재로서는 코스타리카에 설치가 유리하다.
는 명실공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블럭이다.

안데스 공동체는 1969년에 브리비야,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베루 등 5개국이 안데스 소지역 통합협정에 서명하면서 공식 출범한 블록으로서 1973년에 베네수엘라 가입으로 회원국이 6개국으로 확대 되었다가 1976년에 칠레의 탈퇴로 현재까지 5개 회원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와 MERCOSUR간의 남미자유무역지대 출범은 당초 2000년 1월 1일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본래 회원국들은 1998년 4월에 양자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 협력협정을 체결 한 바 있다. 양자간의 통합체별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개별 국가와 안데스 공동체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많은 진척을 보였다.

브라질은 안데스 공동체와 1999년 4월 21—23일 브라질리아에서 제1차 회담을 갖고 기존에 합의한 1,100개 품목에 대한 특별 판세 혜택을 정리하고 275개 품목에 대해 특별 판세 적용에 합의했고 이후 2차례의 추가협상률 통해 1999년 7월 4일 특별관세협정 체결에 최종 합의, 8월 16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브라질의 독자적인 행보는 다른 MERCOSUR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르헨티나도 2000년 6월 29일 아르헨티나와 안데스 공동체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 하여 동년 8월 1일 발효시켰다. 반면에 안데스 공동체와 MERCOSUR간의 협상은 회원국들의 연이은 경제위기로 협상이 지체되어 2001년 4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재개 되었다. 2002년 12월 6일에 브라질리아에서 양 봉絡은 경제 보완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FTA 출범을 위한 협상 완료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가 SAFTA 출범을 위한 협상이 재배에 완료 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하의 FTAA 협상이 진행중이며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들이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관점에서 MERCOSUR와의 FTA보다는 미국이 참여하는 FTAA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열두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미국시장에서 ANCOM의 경쟁상대인 중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MERCOSUR 회원국들과의 바램과는 별개로 SAFTA 추진에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다.  14)

3.2. NAFTA의 발전전망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NAFTA는 여타 중남미 경제통합체와는 다른 점을 많 이 보유하고 있다. 첫째는 미주대륙에서 북미에 속하는 두 선진국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들 국가가 멕시코가 합평한 블록,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직적 통합 모형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 협정은 여타 FTA의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선진적 체제를 여러 분야에서 이룩하였다. 협정 출범부터 관세인하 스키줄을 모든 경제 분야에 적용하였으며 무역외에도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한 점 등이 이전에 존재했던 여타 FTA를 능가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1989년에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킨 상태에서 이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1990년 6월에 미국에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고 이후 캐나다가 이에 참여하여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각국의 국내여건과 세계 경제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으로서는 80년대의 국내 경기 침체와 세계무대에서 유럽과 일본에게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야망이 결절했다. 이에 북미지역의 교역자유화를 통해 역내 교역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때 미국이 자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교역 자유화와 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협상이 지지부진 했던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멕시코로서는 체제 중요했던 것이 개혁의 제도화와 미국과 캐나다 시장의 확보였다. 80년대의 외제inecraft과 경제파산 상태 이후 추진된 경제의 구조조정과 개혁 과정에서 살리나스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했다. 과거의 개혁 후퇴를 되풀이 하지 않고 개혁이 이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적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4일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MERCOSUR-ANCOM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양 블록간 통합체 결정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또한 당시에 총수출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의 회생에 꼭 필요한 요건이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기득권이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캐나다의 상품, 서비스, 자본의 대 멕시코 시장 접근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북미 삼국간의 자유무역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탄생한 자유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세부 협정 내용이 북미 삼국 간 산업 재배치와 공동생산,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산국의 경제 성적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관세장벽의 철폐와 관련해서는 대상상품의 각 산업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총 15년에 걸쳐서 역내 무역에서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정하였다. 올해가 NAFTA 10주년이므로 앞으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북미 역내 산업에 대한 모든 관세가 폐지된다.

또한 북미 산업은 GATT 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제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때 사람, 물품, 기술, 환경보호 등을 위한 예외적인 수입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섬유 등의 교역에는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NAFTA 규정들 중에서 한국과 같은 역외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본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련하는 협정 운영상의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역외국의 상품이 대외관세가 낮은 국가로부터 높은 국가로의 우회수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역내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 특혜 수혜 대상 상품을 구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최근에는 일부 자유무역협정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역외국에 대한 차별이 심한 보호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NAFTA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15)

* 섬유산업의 섬유사 산지주의, 전자산업의 생산 공정 기준 등의 극히 제한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북미 산국은 대외 경쟁에 취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이들

15) NA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세부 변경과 부가가치 기준 적용이다. 세부 (Clasificación Arancelaria) 변경은 재품에 사용된 부품의 HS코드가 상품의 HS 코드와 다를 때 교역 대상 상품의 세부 변경으로 교역제의 원산지를 판명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은 현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현지 상품으로 원산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산정에는 순비용 방식과 거래비용 방식이 있다. 이에 생산 공정 기준이 있다. NAFTA는 이를 원산지 산정 방식 중에서 민감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세부 변경 기준 외에 부가가치 기준과 생산 공정 기준을 병행 또는 단독 적용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역내로 유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였다. 실제로 NAFTA 발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산업에서 무역전환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도 이들 분야에 집중되었다.

투자와 관련해서 NAFTA는 다른 중남미 경제통합체 뿐 아니라 다자무대에도 모범이 되는 조항들을 신설했다. 투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설정했으며 협정국 역내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의 시장환율 적용에 의한 본국송금도 보장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가 직접 대상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객관적 형태의 상세한 투자 분야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NAFTA 발효 이후 동 협정의 시장개방 효과로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 관세인하를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 사안은 같은 품목에 대해서 1회에 한정되며 기한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인데 지적재산권 보호는 내국인 대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GATT 및 여타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에 의거하여 협정국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집적회로, 의장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제도화의 틀을 구현한 것이 NAFTA의 분쟁해결제도이다. NAFTA 각국은 공정한 분쟁해결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협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를 만들었다. 무역 등의 문제에서 각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협정 운용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정국의 자료규모상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FTC)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잘 정비된 경제통합체인 NAFTA는 그간 10년의 기간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내외적 변수를 경험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4년 12월에 발발한 멕시코의 폐쇄화 외환위기였으며 외적인 것으로는 1998년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외적 변수들 하에서 NAFTA의 지난 10년간 운영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신경제의 호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미국시장에 의존하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경제가 순항하였다. 북미 삼국의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삼국간 역내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도 증가하였 다. 멕시코는 NAFTA 출범 이전 76% 정도였던 미국시장 의존율이 2002년 수출업을 합해 90%에 달함으로써 미국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이 되었다. 2001년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멕시코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대미 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작용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NAFTA가 북미 삼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섬도있는 개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좌중앙미 경제 통합 동향에 대한 NAFTA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NAFTA 삼국의 개별 무역정책 결과로서의 경제통합체에 대한 정책과 단일 경제 블록으로서의 NAFTA 진로 분석이 중요하다.

NAFTA의 중심 국가이며 현 중남미 경제통합의 주축국이 된 미국은 이전에 추구해 오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면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면서 지역주의 내에서도 각 무대별 자유화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NAFTA 확대의 계일 추보였던 칠레와의 양무 FTA를 체결하고 독자적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NAFTA의 공교화와 지역무대에서 개별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자체 산업 경쟁력 확대와 무역 자유화 확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NAFTA외에도 현재 6개의 양무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 4개를 이스라엘, 베트남, 요르단, 싱가포르 등 역외국과 맺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호주와의 FTA 협상 예외도 최근에는 중동 및 아시아의 국가들과 양무 FTA 협상으로 시작하였다던 의사로 밝히고 있어 미국의 FTA 네트워크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의회의 신속협상권 부여가 필요 없는 다자무대에서의 각종 의제 상정과 자유화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신, 미국은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후보국과의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하여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compile deficiencies and deficiencies in another country and the NAFTA 공교화와 더불어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개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북미 삼국의 개별적 무역정책의 별개로 NAFTA는 지속적으로 공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전 NAFTA-PLUS 라는 멕시코가 추진하는 NAFTA 공교화 계획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행되며 삼국간에 이해관계가 투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방향으로 NAFTA가 발전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NAFTA 공교화에 대한 의지로 삼국이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가 밝힌 NAFTA PLUS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유무역지대 형태의 NAFTA를 EU식 통합으로 전환하여 공동 화폐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국경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 제한 없는 취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카날레스 경제부 장관은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장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들 미국과 캐나다의 두정상은 올해 '10년차'인 NAFTA 내에서 새로운 둘을 마련한다는 안을 "받아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경개방 통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화폐의 도입은 경제적 과장이 단순한 무역자유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상기 의제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여러 차례에 깨어 밝혔다.

하지만 북미 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는 별개로 NAFTA를 발전시키는 것에는 삼국이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이는 10년차를 맞이한 NAFTA가 각국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과 양자FTA를 완료하고자 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으나 북미 삼국은 권한과 전략을 통한 솔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3. MERCOSUR와 SAFTA(남미자유무역지대)

1991년 파라과이에서 조인된 아순시온 조약에 의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MERCOSUR는 초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양국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기구에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6년 6월과 12월에 칠레와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중화국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초기에 MERCOSUR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진행되어온 남미의 거시 경제적 변화과정과 더불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출범한 경제통합체이다. 80년대의 일어난 10년 동안 고통을 겪은 이 지역 유권자들이 반 포퓰리즘적인 지도자들을 선택한 후 이들 국가들에서 정치개혁에 따른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의한 경제회복과 안정화 추세 속에서 설립된 경제통합체인 것이 다.

1995년 1월부터 상기 아순시온 조약에 의해 수입품목별로 0-20%, 그리고 평균 14%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범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사
장의 통합을 지향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생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4> MERCOSUR의 경제규모

<table>
<thead>
<tr>
<th></th>
<th>인구 (백만명)</th>
<th>GDP (억달러)</th>
<th>1인당 GDP (달러)</th>
<th>총수출 (억달러)</th>
<th>총수입 (억달러)</th>
</tr>
</thead>
<tbody>
<tr>
<td>브라질</td>
<td>163.7</td>
<td>5,197</td>
<td>3,208</td>
<td>468</td>
<td>487</td>
</tr>
<tr>
<td>아르헨티나</td>
<td>36.6</td>
<td>2,835</td>
<td>7,747</td>
<td>236</td>
<td>242</td>
</tr>
<tr>
<td>우루과이</td>
<td>3.3</td>
<td>207</td>
<td>6,272</td>
<td>22</td>
<td>32</td>
</tr>
<tr>
<td>파라과이</td>
<td>5.4</td>
<td>81</td>
<td>1,500</td>
<td>27</td>
<td>28</td>
</tr>
<tr>
<td>칠레</td>
<td>15.0</td>
<td>689</td>
<td>3,926</td>
<td>156</td>
<td>140</td>
</tr>
<tr>
<td>볼리비아</td>
<td>8.1</td>
<td>83</td>
<td>1,024</td>
<td>9</td>
<td>13</td>
</tr>
<tr>
<td>합계</td>
<td>232.1</td>
<td>9,092</td>
<td>3,946</td>
<td>918</td>
<td>942</td>
</tr>
</tbody>
</table>

자료: 월간 중남미 정보, 2000

MERCOSUR는 당초 아순시온 협정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공동시장의 구축이었다. 당시에 경제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가 국제적 추세였기에 시장을 통합하고 나아가 상호 거시경제정책의 조율과 경제 상호보완성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ERCOSUR는 세부 기관으로 공동시장위원회와 공동시장그룹을 두었다.

공동시장위원회는 통합체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공동시장의 목표 달성과 공동시장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원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이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공동시장 그룹은 공동시장의 집행기관으로서 4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 총재와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이 구성하여 협약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위원회가 제정한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또한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의 실행, 거시 경제 정책의 조정, 제3자와의 교섭 등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의하며 공동시장결성이 단계적으로 진척되기 위한 실무계획의 작성을 책임진다.

공동시장 그룹은 통상문제, 관세문제, 기술 표준, 무역관련 재정 및 통화정책, 운송, 산업 및 기술정책, 에너지 정책, 거시경제정책 조정 등의 11개 소그룹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그룹이 증가하여 14개로 구성되어있다.

MERCOSUR는 출범과 함께 공동시장으로부터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역내 교역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설탕 등 일부 특수 예외 품
목을 제외하고는 무관세 역내교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정제위기로 인해 양국이 자의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잇달아 시행 자유화가 지연되고 있다. 역외국에 대한 대외공통관세의 경우 1995년부터 역외수입품에 대해 0-20%의 CET를 부과하여 2006년까지 완전한 관세동맹을 달성할 목표지만 역외공동관세 수준에 대해 품목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


물론 상기와 같은 수치도 여타 경제통합체의 역내 교역량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지만 기존의 흐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역내 교역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한 데는 역사 역내 최대 경제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MERCOSUR가 발전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MERCOSUR 공동체의 강화이며 다른 것은 SAFTA와 미주 지역 국가들에게 가장 큰 현안인 FTAA 참여의 문제 그리고 대외관계 다변화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MERCOSUR가 진정한 공동시장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국제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 MERCOSUR 규정에 위배되는 보호무역 조치를 채택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 등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2000년 8월에 아르헨티나가 엡瘾협의로 브라질산 닭고기에 최저수입 가격제를 적용한 것이나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역내 국가들이 합의한 CET 수준을 위반하고 자분계와 소비계의 수입관세를 낮춤으로써 브라질과 통상마찰을 일으킨 것 들이다. 2001년 7월에는 아르헨티나가 역외산 자동차, 정보통신제품, 자본재 수입품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와의 모든 관련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 17) 

16) 자동차와 설탕은 특별 약관 품목으로 분류되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경밀화학제품 등에 역외수입에 대한 공동관세 책정이 이전보다 크게. 상기 산업에서 자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브라질은 일정기간 동안 관세정보를 통해 보호조치를 하용해 줄 것을 원하지만, 여러 국가들은 가능한 한 제후의 관세를 적용하여 신진국 업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7) 이외에도 우루과이가 2001년에 일부적으로 역외산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것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역내 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MERCOSUR의 통합을 가속화 시켜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 안정화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이다.

정보통신, 자본재를 제외한 전 품목 대외공통관세 인하조정에 합의하는 등 CET의 전반적 재조정에 합의하였으며 거시 경제정책의 공동 조정 및 대외관계 다변화를 통해 역내 경제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ERCOSUR의 경제 대국과 소국들이 상호 의존성 강화를 실감하고 회원국간의 결집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로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두한 MERCOSUR 위기론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MERCOSUR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철레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ET 조정과 기타 역내 현안 조정 등 공동시장을 향한 통합 강화와 더불어 MERCOSUR 회원국들이 복록으로서 당연한 사안이 SAFETA(남미자유무역지대)와 FTAA에 대한 입장 정리 및 협상 가속화이다. 안데스 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SAFETA는 지금까지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FTAA에서 미국에 대해 남미 국가들의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어왔다.

따라서 안데스와 남미 지역의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남미의 시장 단일화를 이룩하기 위한 ANCOM과 MERCOSUR간 FTAA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경제적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SAFETA는 초반에 협상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역내 경제의 침체와 위기로 인해 많이 지연되어왔다. 2003년 1월 1일까지 수립토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이제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이상 협상이 기한내에 완료되고 SAFETA 협상 마무리 이전에 SAFETA가 출범할 수 있을지 지켜 보아야겠다. MERCOSUR 국가들에게 SAFETA는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이 추진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FTAA에서의 협상 주도권이 Fast Track을 부여받은 미국으로 넘어감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협상의 한 축인 ANCOM 국가들에게는 SAFETA 보다도 역내 국가들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의 FTAA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SAFETA가 제 기한내에 결성될 수 있으면 또 다른 결성되기도 어느 정도의 통합을 이루어 널지가 중요하다. 현재 경쟁국인 중미 국가들이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COM 국가들로서는 자동차 협정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된 것이 MERCOSUR 심화 정책의 예들이다.
FTAA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MERCOSUR는 SAFTA 추진에 대한 의지와 함께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FTAA를 2005년 12월 이전에 출범시킨다는 합의를 재확인 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단독으로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MERCOSUR 국가들 모두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대외관계 다각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FTAA에 전개할 수는 드러지 않지만 나설 가능성이 있다.

3.4. FTAA의 출범 전망과 시사점

기존에 미주대륙에 존재하던 많은 소지역 경제통합체와 별개로 쿠바를 제외한 미주 대륙의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2005년 출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전 대륙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 없는 것으로서 실험이 실험된 경제통합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 경제적 과장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역사는 1990년 6월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범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이 구상의 목표는 미주 국가들의 무역증대, 투자 확대, 외채 경감 및 환경보호 강화였다. 이 제안의 결과로서 1994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34개국 정상들이 2005년까지 전미 대륙을 포괄한 FTA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A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대규모 FTA가 제안, 합의,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경제 의제별로 견해가 달라서 진척이 더딘 반야도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국 업체들의 중남미 지역에서 자유로운 무역 및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이 FTAA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하게 되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FTA가 급증하면서 중남미 지역이 미국의 경제 상대로 유럽연합 및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전통적인 텃밭인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이 FTAA를 추진한 측면도 강하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들 경제의 중심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같은 지역의 이웃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마당에 자국만 소
외되게 되면 심각한 경쟁력 상실과 시장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FTAA 참여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앙숙 관계인 쿠바만 제외된 전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민주주의 보전 및 공고화,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을 통한 반영 축 구축, 빈곤 및 차별의 추방,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및 자연환경 보전의 4개 원칙과 실천계획을 체택하였다. 이후 1995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미주통상장관회담에서 7개 실무그룹-시장접근, 관세 및 원산지 규정, 투자, 무역업무 표준화, 식품위생 관련 조치, 정부보조금 및 반덤핑, 상해관계, 약소국-이 결성되었다.

1996년 3월의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제2차 회담에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에 관한 실무그룹이 추가로 설치되어 11개 실무그룹 체계가 구축되었다. 1997년 5월의 제3차 통상장관 회담에서 분쟁해결 그룹 추가로 12개의 실무그룹 체계가 완성되었지만 협상은 일관적이며 동시에 협상을 주장하는 미국측 주장과 3단계의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MERCOSUR 측 주장이 엇갈려서 구체적인 협상 방법 및 일정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후 여러차례의 통상장관 회담과 차관회담을 거쳐 2001년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FTAA를 2005년까지 결성하는데 합의하였고 동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천명하였다. 제3차 정상회담에서 이런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까지는 각국의 통상차관으로 구성된 통상협상위원회(TNC)가 효율적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

제3차 정상회담 시 합의한 선언서와 실천계획의 결과로서 제품 및 분야별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FTAA 협정문 초안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통합체 역사에서 전무한 사례로서 앞으로 세계 여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제블록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국들은 민간부문이 FTAA 협상 과정과 진척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적 상호교류를 통해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FTAA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굴곡을 거쳐 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제경제 상황과 협상 참여국들의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다. 처음 FTAA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미국과 FTAA의 양대 축으로서 협상을 이끌어온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의 입장 변화가 이러한 협상 굴곡을 만들었다.

미국은 FTAA 제안이후 1994년 NAFTA가 발효되고, 제1차 미주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 이 당시 논의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고 협상 참
여국들은 미국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폐소와 외환 위기 이후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이론이 거세자 상황이 바뀌었다. 1997년에 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IMF의 자 본금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클린턴 대통령이 Fast Track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FTAA 논의가 추진력을 잃게 되고 중남미의 각국은 FTAA 보다는 소지역 경제통합체 강화와 유럽연합 또는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에 발생한 남미의 경제위기와 미국의 Fast Track 확보는 다시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전에 미국의 주도권 상실 하에서 큰 목소리를 내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 경제위기로 협상력이 실추되자 미국은 무역증진권한에 대한 방해를 당하게 되고 2003년 FTAA 제1차 양해 약정을 교차하면서 FTAA 축결에 대한 비판적 반응을 불식시켰다. 이에 미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을 주도하면서 협상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고 각국이 대세로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1월까지 합의된 협상 종료 시한 안에 협정이 완성될지 여부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남미 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이다. 아르헨티나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국가 에서든지 경제 불안정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면 협상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다자무대인 WTO 농산물 관련 차기 라운드 협상의 진척도 FTAA 협상이 기간내에 빨리 종결될수 있는지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미국이 FTAA 협상의 최대 갈등인 농업 보조금 등 농산물 관련 문제를 WTO 내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타결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각국이 FTAA의 대세로에 동참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SAFTA를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였던 브라질이 아직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의 악화된 입장을 고려할 때 또한 새로운 부임한 폴라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분석할 때 결국 협의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MERCOSUR 정상회담에서 FTAA를 기반 내 출범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도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해준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국의 주도하에 협상의 가속화와 협상
방식의 선진화 및 제도화를 꿈을 수 있었다. 전 세계 FTA 사상 최초로 협상문 초안 공개와 초안에 기반한 협상 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각 분야별 각국의 입장 정리와 협상 진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FTA 협상의 Know-How를 보유하게 된 것도 협상 기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협상의 Know-How를 보유하게 된 것도 협상 가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FTA 사상 최초로 협상문 초안 공개와 초안에 기반한 협상 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각 분야별 각국의 입장 정리와 협상 진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FTA 협상의 Know-How를 보유하게 된 것도 협상 가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는 협상의 Know-How를 보유하게 된 것도 협상 가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FTA 사상 최초로 협상문 초안 공개와 초안에 기반한 협상 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각 분야별 각국의 입장 정리와 협상 진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많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FTA 협상의 Know-How를 보유하게 된 것도 협상 가속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4.1. 중남미 경제통합 전망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은 통합의 가속화와 다변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 중남미 자유무역협정이 첫 통합 시도로서 기록된 이래 이 지역 경제 통합은 전 대륙 차원에서 그리고 소자역별로 또한 양자간에 다양한 범주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설립되어 발효 중인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그 형태와 통합의 정도가 모두 다르며 구성원도 모두 틀린 상황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합이 이제 수렴과 발산의 양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표 5 미주지역 경제통합체 현황

<table>
<thead>
<tr>
<th>자유무역협정 (FTA)</th>
<th>관세동맹 (CU)</th>
<th>합계</th>
<th>1차 지역주의</th>
<th>2차 지역주의</th>
</tr>
</thead>
<tbody>
<tr>
<td>25(20)</td>
<td>4</td>
<td>30(25)</td>
<td>6</td>
<td>26</td>
</tr>
</tbody>
</table>

주1) 중 30개의 미주지역 경제통합체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대륙 모든 국가들의 경제통합 협정 의미. 6개의 수치는 북미의 두 나라가 상호간에 그리고 역외국과 체결한 FTA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협정 수이다. 중 30개중 도미니카 공화국 -CARICOM, CACM-파나마, 칠레-EU, 칠레-한국, 미국-싱가포르, 미국-칠레, 칠레-EFTA, 대만-파나마가 맺은 8개의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FTA 25개와 관세동맹 4개를 합하면 현재 미주지역에 결성되어 있는 총 30개의 경제통합체 수와 1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LAIA를 FTA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주2) 관세동의 수치는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FTA 수를 의미한다.

표 6 미주지역 제2차 지역주의

<table>
<thead>
<tr>
<th>시기</th>
<th>경제통합체(유형)</th>
<th>발효일</th>
<th>회원국</th>
</tr>
</thead>
<tbody>
<tr>
<td>1985년 4월</td>
<td>미국-이스라엘 FTA</td>
<td>1985년 8월 19일</td>
<td>미국, 이스라엘</td>
</tr>
<tr>
<td>1988년 1월</td>
<td>미국-캐나다 FTA</td>
<td>1989년 1월 1일</td>
<td>미국, 캐나다</td>
</tr>
<tr>
<td>1990년 9월</td>
<td>G-3 (FTA)</td>
<td>1995년 1월 1일</td>
<td>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td>
</tr>
<tr>
<td>1991년 3월 26일</td>
<td>MERCOSUR(CU)</td>
<td>1995년 1월 1일</td>
<td>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td>
</tr>
<tr>
<td>1992년 8월</td>
<td>멕시코-나카라과 FTA</td>
<td>1998년 7월 1일</td>
<td>멕시코, 나카라과</td>
</tr>
<tr>
<td>1994년 4월 5일</td>
<td>코스타리카-멕시코 FTA</td>
<td>1995년 1월 1일</td>
<td>코스타리카</td>
</tr>
<tr>
<td>1994년 9월 10일</td>
<td>불리비아-멕시코 FTA</td>
<td>1995년 1월 1일</td>
<td>불리비아, 멕시코</td>
</tr>
<tr>
<td>1995년 2월</td>
<td>멕시코-EU FTA</td>
<td>2000년 7월 1일</td>
<td>멕시코, EU 회원국</td>
</tr>
<tr>
<td>연도</td>
<td>개정일</td>
<td>계약명</td>
<td>발효일</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96년 7월 31일</td>
<td>캐나다-이스라엘 FTA</td>
<td>1997년 9월 1일</td>
<td>캐나다, 이스라엘</td>
</tr>
<tr>
<td>1996년 12월 5일</td>
<td>캐나다-칠레 FTA</td>
<td>1997년 7월 5일</td>
<td>캐나다, 칠레</td>
</tr>
<tr>
<td>1998년 4월 16일</td>
<td>CACM-도미니카 공화국 FTA</td>
<td>2001년 10월 3일</td>
<td>중미공동시장 회원국, 도미니카 공화국</td>
</tr>
<tr>
<td>1998년 8월 22일</td>
<td>도미니카 공화국-카리브공동시장 FTA</td>
<td>미발효</td>
<td>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공동시장 회원국</td>
</tr>
<tr>
<td>1998년 10월 1일</td>
<td>칠레-멕시코 FTA</td>
<td>1999년 8월 1일</td>
<td>칠레, 멕시코</td>
</tr>
<tr>
<td>1999년 10월 18일</td>
<td>CACM-칠레 FTA</td>
<td>2002년 2월 15일</td>
<td>중미공동시장 회원국, 칠레</td>
</tr>
<tr>
<td>2000년 4월 10일</td>
<td>멕시코-이스라엘 FTA</td>
<td>2000년 7월 1일</td>
<td>멕시코, 이스라엘</td>
</tr>
<tr>
<td>2000년 6월 29일</td>
<td>멕시코-북중미 3국 FTA</td>
<td>2001년 3월 14일</td>
<td>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td>
</tr>
<tr>
<td>2000년 10월 24일</td>
<td>미국-요르단 FTA</td>
<td>2001년 12월 17일</td>
<td>미국, 요르단</td>
</tr>
<tr>
<td>2000년 10월 24일</td>
<td>멕시코-EFTA FTA</td>
<td>2001년 7월 1일</td>
<td>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td>
</tr>
<tr>
<td>2001년 4월 23일</td>
<td>캐나다-코스타리카 FTA</td>
<td>2002년 11월 1일</td>
<td>캐나다, 코스타리카</td>
</tr>
<tr>
<td>2002년 2월 6일</td>
<td>CACM-파나마 FTA</td>
<td>미발효</td>
<td>중미공동시장 회원국, 파나마</td>
</tr>
<tr>
<td>2002년 11월 18일</td>
<td>칠레-EU FTA</td>
<td>미발효</td>
<td>칠레, EU 회원국</td>
</tr>
<tr>
<td>2003년 2월 15일</td>
<td>칠레-한국 FTA</td>
<td>미발효</td>
<td>칠레, 한국</td>
</tr>
<tr>
<td>2003년 5월 6일</td>
<td>미국-싱가포르 FTA</td>
<td>미발효</td>
<td>미국, 싱가포르</td>
</tr>
<tr>
<td>2003년 6월 6일</td>
<td>미국-칠레 FTA</td>
<td>미발효</td>
<td>미국, 칠레</td>
</tr>
<tr>
<td>2003년 6월 26일</td>
<td>칠레-EFTA FTA</td>
<td>미발효</td>
<td>칠레, EFTA 회원국</td>
</tr>
<tr>
<td>2003년 8월 21일</td>
<td>대만-파나마 FTA</td>
<td>2004년 1월 1일</td>
<td>대만, 파나마</td>
</tr>
</tbody>
</table>

주: 1) 발효일 순서대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맺은 FTA가 발효되었다.
2) 발효일 순서대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발효되었다.
못했던 것이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FTAA로서 전 미주 대륙이 2005년을 목표로 경제 통합체 출범 협상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발산된다는 것은 기존에 설립된 수많은 경제통합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시장 다양화과 대외관계 다각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 미주 대륙의 FTA 추진과는 별도로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MERCOSUR-EU 협상과 같은 미주 대륙 이외의 국가들과 FTA 추진은 물론 미국-중미 FTA 협상에서 보듯이 역내 국가간 새로운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FTA 체결의 양방향 움직임과 더불어 분석되는 중요한 점이 바로 기존 경제통합체들의 통합 심화이다. NAFTA는 NAFTA PLUS로 MERCOSUR와 ANCOM 및 CACM은 판세통행체제의 완성 및 공동시장 지향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의 결과19)는 이들 경제를 이끌어 향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종합해 볼 때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은 다차원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의 범위와 강도가 확산 및 심화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경제통합체인 FTAA의 경우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주도권 경쟁이 있었다고도 하였다. 각 경제통합체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도 각국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장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경제통합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거미줄처럼 확산되는 것은 지역주의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확립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와 더불어 무역과 투자와 자유화를 선도하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경제 위기의 과정에서 길러진다. 최근에 겪었던 국가들로 그와 경제주의의 강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경제를 체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때때로 페이지의 조절은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지 중남미 대륙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 및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 예를 들어 지난 8월 15일 개최된 MERCOSUR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MERCOSUR를 유럽연합식 경제통합체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MERCOSUR 환매기관 창설 추진, 세관 및 국경 통합, 공동의회 창설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2. 한국의 대응방안

중남미의 경제통합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실제 교역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정부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의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안은 한국이 지역주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이 다양한 범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하나의 블록으로 거듭날수록 한국의 불이익은 분명하다. 그동안 여러 논문과 연구에서 분석되어 왔으며 실제 경제활동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외국가로서의 차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높은 관세 벽과 각종 비관세 차별이 그러하다.

중남미 시장의 특성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관세의 차별 폭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는 분명하다. 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에 의한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현대화의 경우 차별이 매우 커서 이 지역 진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recently actively progressing in the process of free trade agreement modernization, the case of Mexico is very severe as a barrier to entering the market of this region. A high tariff wall and various non-tariff barriers act as a barrier.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types of internal market policies that are not working for Korean companies. This is because the Korean companies have to face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from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차원에서는 수요가 꾸준히 확보될 수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로 수출 품목을 전환하고 현지에 직접투자를 실시하여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멕시코와 같은 이 지역 국가들과 FTA망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국은 중남미 FTA 네트워크의 허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한국과 FTA 협상을 타결하고 비준 및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칠레와 멕시코가 그 대상국들이다. 칠레는 NAFTA 확대 시 가입 후보 순위 1순위 국가이며 작년에 캐나다와 FTA를 맺었고 현재는 미국과 FTA를 준비중이다. 또한 남미의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기도 하다.

멕시코는 전 세계 32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 전 세계 FTA망의 중심국이기도 하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미국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에 이어
이제 일본과도 FTA를 발효시키면 실질적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주요국가와 FTA를 맺게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철제에 이어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여 중남미 대륙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거점 국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조속히 철제와의 FTA를 국회 비준하고 발효시키는 것이 한국의 FTA 및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국제적 약속으로서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멕시코와 더불어 중요한 FTA 대상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남미 경제의 중심 국가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다.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경제규모를 볼 때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보다 한국의 FTA 상대국으로 선호될 수 있지만 양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 FTA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양국 중 일국을 선정하여 FTA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남미 경제가 멕시코 및 미국의 북미와 함께 미주대륙의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FTAA에 가입되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최대 시장이므로 철제의 경우와 같이 한국이 FTA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평가된다. 남미 경제가 유럽연합식으로 통합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제가 비로 MERCOSUR와 FTA를 맺고 있지만 양 지역의 상이한 조세차이로 통합의 심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브라질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중요하다 판단된다.

두 번째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다자무대에서 자유화의 확대이다.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이 WTO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경제블록에서 한국이 역외국가로서 받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의 각종 라운드를 통한 자유화를 확산시켜서 역외국가에 대한 전반적 장벽을 낮추어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가 갖을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추진해야 하는 전략은 보호무역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역주의의 각종 운영 방면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 규정과 반덤핑 관세 등이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NAFTA에서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의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역외 국가들의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역내에서 생산된 음극관은 장착된 텔레비전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원사부터 역내에서 제조된 의류만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규정들이다.

원산지 규정이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세
계적으로 단일한 규정이 합의되지 못함으로서 이것을 막지 못했다. 현재의 WTO도 GATT 시절 마련된 원산지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원칙만 나열하고 있을 뿐 개별 상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우후죽순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의 각종 자유무역협정들이 한국과 같은 역외국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정을 만들어 지역주의에서도 이를 체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과 함께 반덤핑 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덤핑 관세는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도 단일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덤핑 관세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을 막고 안정적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이 지역주의의 각종 기구에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주개발은행(IDB)는 물론 각 지역주의가 보유하고 있는 역내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들, 예를 들어 중미공동시장의 중미경제통합은행과 같은 기구들에 가입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여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가입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여 가입을 앞당겨야 한다.

네 번째는 제도적 협력의 강화이다. 한국과 중남미 지역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부간의 각종 조약을 맺은 국가들과 확대해야 한다.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과학 기술 협정 등과 같은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물꼬를 터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과 이 지역 국가들이 개척하고 있는 각종 협의체를 설치적인 협력체로 변모시켜야 한다. 한-MERCOSUR 협의체, 한-중미 대화 협의체와 같은 이 지역 경제 협력체들은 한국의 대화 협력을 실질적인 협의체로 만든다면 탈바꿈 시켜서 한국이 해당 경제협력체의 교류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도록 추진하는 채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중남미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한국의 자체 FTA망 구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최근에 치례와 FTA를 맺기는 하였지만 아직 비중이 안 된 상태이며 발효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지역주의 동향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경제적 결속에 대응하여 자국의 보호막을 만들기 위
해 NAFTA를 결성하였듯이 세계의 모든 지역에는 소지역 경제통합체가 해당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APEC 이외의 별다른 지역 경제 통합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지역주의 동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 들어 냈지만 실질적인 통합의 전진은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과연 비차별과 문호개방이라는 개방적 지역주의가 지역주의 결성 방법으로서 현실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APEC에 가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별도의 소지역 경제 통합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주지할 때 한국도 이제 APEC을 실질적인 경제블록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별도의 한-중-일 FTA와 같은 소지역 경제블럭을 출범시키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하겠다.
김원호·김수용·윤미경·이경희(1997),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 정책연구 97-12.
박영호(1995), 「중미공동시장(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현덕(200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이경희(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력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권기수(200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1996),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박영사.
한국수출입은행(2000a),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추진 현황과 전망」.
(2000b), 「남미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첫걸음」.
Borja, Arturo(2001), Para Evaluar al TLCAN, ITESM-Porrúa.
Cardero, María Elena(comp.)(1996), Qué Ganamos y Qué Perdimos con el TLC, Siglo XXI-UNAM, 1996.
CEPAL(1994), El Regionalismo Abie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De Meio, Jaime and Arvind Panagariya(1993),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stevadeordal, Antoni and Carolyn Robert(2001), Las Americas sin Barreras, IDB.
Frankel, A. Jeffrey(1997), Regional Trading Blocs in the World Economic


Lizano, Eduardo and Anabel González(2003),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el Istmo Centroamericano y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IDB.


Machlup, Fritz(1977), A History of Thought on Economic Integration, Macmillan.

Pedro da Motta Veiga(1997), "MERCOsu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FTAA", Integration and Trade, No.3, Buenos Aires:INTAL.

Texto Oficial(1998),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 Grupo Editorial Miguel Ángel Porrúa.

Rubio, Luis(1992), ¿Cómo va a afectar a México el Tratado de Libre Comerci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Wionczek, Miguel S.(1979),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참고 웹사이트

미주개발은행, www.iadb.org
미주기구, www.oas.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 www.sice.org
대 쿠바 관계 개선 토론회 결과

2003.7.4(금) 중미과

□ 일 시 : 2003.7.3(목) 15:00~17:00

□ 주 제 : 중남미국장

□ 참석자(약 20여명)
   ○ 문화외교국 심의관, 중미과장, 남미과장, 중남미지역협력과장, 인권사회과 조태익 외무관, 특수정책과 이인호 외무관 등

□ 전 행
   ○ 국장 인사말
   ○ 쿠바 관련사항 설명(중미과장)
       - 한·쿠바관계, 쿠바·미국·EU 관계, KOTRA무역관 개설 등 설명
   ○ 토의

□ 토의 결과

< 소수 의견 >
   ○ 대 쿠바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간접적으로 미국의 대한국관에 영향을 주어 남북 관계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 추진 요망
   ○ 특히, Bush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의 대북 정책변에서의 입장조율이 절실한 상황하에서 우리의 대쿠바 관계개선이 한·미 관계에 있어 이상치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대 쿠바 관계 개선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 선진관계를 추구하는 보편성에 기초한 외교 필요

미국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논리적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함
- 미-북한관계와 남북관계 미-쿠바 관계를 감안할 필요는 있음.
- 한-쿠바 통상관계, 우리 국민의 쿠바 방문시 보호 등 필요성을 감안, 쿠바내에 조속한 한국의 institutional presence 필요
- 우리의 기본 입장인 ‘중간단계 없는 직접 수교’원칙은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통상대표부나 이익대표부를 현실적인 중간단계 적극 검토 필요
- 중남미 국가들과 쿠바와의 동질성 및 연대감 고려 한-쿠바 관계 개선은 중남미 국가들에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를 수행하며 중남미 국가와의 진솔한 협력의지의 표현으로 비추어짐.

쿠바측과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이 필요함.
- 우리의 입장과 다를 때는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도 중요

외교부 간부들 다수가 대쿠바 관계개선으로 인한 대미 관계의 영향에 대해 일종의 obsession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쿠바 관계개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의 대안데스무역특혜법(ATPA) 개정과 
한국 중소섬유의류업체의 진출방안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3. 7. 15(화), 15:00-17:00, 외교부 3층 회의실
나. 참석자
   o 발제자 : 권기수 KIEP 전문연구원
   o 참석자 :외교부 신숭철 중남미국장 및 중남미국 직원, 김부흥 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팀장, 박의준 한솔섬유 부사장, 박양순 태평양 물산 이사, 조성현 대우인터내셔널 차장 등

2. 주요논의내용
   o 미국의 안데스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ATPDEA, ATPA의 개정안)의 제정 배경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
        · ATPDEA 수혜국 자격요건의 하나로 “FTAA 협상 적극 참여”를 명시
        · 9.11 사태 이후 대중남미 정책이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미국정부의 FTAA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신속처리협상권에 대한 미의회 승인 지체
        · 무역증진권한(신속처리협상권) 승인 및 ATPDEA 추진으로 미국정부의 신뢰도 제고 및 향후 FTAA협상 가속화
   - 안데스 지역(특히 콜롬비아) 마약 및 개يلة 억제 수단
      · 침체에 빠진 안데스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의 마약퇴치 노력 강화
      · 기존 ATPA의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마약억제 효과가 미미 했다고 판단, 중미카리브지역무역특혜법(CBTPA)에 준하는 무역특혜 도입
미국의 안데스 국가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박 수단

1. ATPDEA의 주요 내용
   - 수혜기간 연장
     · 10년 시한(1991.12.4~2001.12.4)으로 제정된 ATPA의 4년 확대, 연장
     · ATPA 연장 지역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2001.12.4로 소급 적용, 실제 수혜기간은 5년
   - 수혜품목의 확대
     · 기존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한 특혜부여
     · 신발류, 석유 및 부산물, 시계 및 부품, 패드백, 가방, 작업장갑, 가죽의류 등
     · 미국 대통령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

2. 중미카리브지역무역특혜법(CBTPA)과의 비교
   - 원사, 원단, 재봉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
     · CBTPA의 경우 미국산 원사, 재봉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트 의류의 경우에 한해 수혜국산 원단 사용
   - 원산지규정의 완화 적용
     · CBTPA가 NAFTA 규정과 동일하게 역내부가가치, 상품 가격의 60%로 규정한다 반해, ATPDEA는 35% 규정
   - 특혜대상 확대 (양말 등)

3. 우리기업의 안데스 진출 방안
   - 섬유의류산업 분야에서 중미 카리브지역에 대한 대체투자 지역으로서 안데스 지역 활용 가능 여부 조사 필요
   -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
외교전략개발 세미나 개최 결과
2003.7.15(화)
중앙미지역협력과

주 제 :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발 제 : 곽재성 경희대 아태평화대학원 교수
일시 및 장소 : 2003.7.15(화) 17:00~18:30, 외교통상부 3층 회의실
토 론 : 중남미국장 이하 각과 직원

주요 토론 내용
- 부시 정권의 대중남미 정책 현황
- 부시 정권의 대중남미 경제통합 추진 정책 개요 및 한계
-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정책에서의 대중남미정책
  - 미국의 대테러 및 민주주의, 인권 중시 정책의 대중남미 파급효과
-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전망
  - 미국의 국제정치(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와 국제정치
    (대테러 동맹국 확대, 미주지역통합 추진)라는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끝/
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 빈번발생 원인 및 대책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03. 8. 14(목), 15:00-17:00, 외교부 3층 회의실

나. 참석자

0 발제자 : 김중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택동 외국어대학교 교수
0 참석자 : 신숭철 중남미국장, 전홍조 남미과장, 김상일 지역협력과장, 오동일, 상승만, 신상목 외무관 등

2. 주요논의내용

0 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 빈번발생 원인
    - 대외부채와 공공재정의 부실 및 이로 인한 대외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그 근본 원인
    -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과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필요
    - 그러나 환율에 의한 안정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 환율에 기초한 안정화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환율의 평가절상과 경상수지적자 증가를 수반
    • 평가절상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평가절하율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긴축적 운용이 필요함
    • 브라질의 경우 재정적자 감축과 낮은 물가상승률 유지 모두에서 실패하였으므로, 엘레강가는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음
그러나 멕시코는 재정적자 감축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
- 안정화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미 하강국면에 대응하는 정책 전개가 필요

남미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 1980년대초 외채위기에 처했던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의 경우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향후 장기간 지속되어 그간의 안정화 및 개혁 정책의 효과가 상쇄된 경우
- 그러나 1982-85년간 칠레의 경우처럼 경제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안정성장 경로로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음
- 최근 시행되고 있는 개혁의 경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개혁 정책들이 거시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향
- 따라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음

남미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대한 평가 및 교훈
- 환율에 기초한 안정화정책은 정책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적자 감축 등 본질적인 안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재정적자 감축이 외에도, 성장속도 조절, 건전성 규제감독 등 제도의 완비, 그리고 실질환율의 지나친 평가절상 방지 등의 노력이 필요
- 또한 정책 초기 경기부양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하강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조기 실시하는 것이 필요

- 195-
한-멕시코 관계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2003.10.1 (수)
중 미 과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3.9.30 (화) 17:00-19:00, 본부 9층 회의실

나. 참석자

1) 발제자: 정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책임연구원
※ 한-멕시코 FTA의 타당성 검토 제한 원고 발표

2) 주요 토론자
   - 이성형 세종연구소 연구원
   - 김우중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 김진오 KIEP 연구원
   - 박선태 중미과 외무관

3) 기타 참석자: KOTRA, 한-중미 카리브경제인협회 등 관계 기관 인사 및 본부 중남미국, 다자통상국 직원

2. 주요 논의내용

가. 한-멕시코 FTA 체결의 타당성

1)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평균 13%) 및 32개국과 FTA 체결로 우리에 대한 상대적 차별, 마길라도라 제도 특혜관세 폐지로 인한 우리 투자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 시정을 위한 양국간 FTA 체결 바람직

2) 멕시코는 일본과의 FTA 협상 전개, 자국 상품의 대한국 수출 증가 가능성 부족, 한국 상품의 멕시코시장 잠식에 대한 자국 제조업체의 우려 등 감안, 한-멕 FTA 체결에 소극적
- 멕시코측이 한-멕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일장에서의 양국간 FTA 추진 Selling Point 발굴 필요
- 멕시코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협력 방안 연구 등

나. 멕시코에서의 한국/한인 이미지 제고
  o 최근 한국사회 규모 급속 팽창 및 구성원 다양화로 인한 문제점 노정
    ※ 작년말 동포 32명 구속사건 발생
  - 멕시코 언론의 "한국 면퍼기"식 보도 지양 및 재발 방지 요망
  o 2005년 한인여주 100주년 기념사업 등 계기 멕시코내 우리 이미지 제고 노력 적극 전개 필요

다. 한-멕시코 FTA 체결 사전 분위기 조성 및 사후관리
  o 중남미지역 최대의 협력 파트너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협력 방안 강구
    - 멕시코는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의 25%(22억불), 투자의 30%(14억불)를 차지(2002년)
    ※ 우리의 전체 무역흑자의 약 20% 차지(19억불)
  o FTA 체결을 위한 국내외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체결후 양국관계 심화 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한 Road Map 작성
    - 여론 주도층을 통한 대국민 멕시코 중요성 홍보, 국내 멕시코 전문가를 통한 멕시코 정부.학계.민간 대상 홍보, 양국 업계의 FTA 연구회 결성 및 민간교류 확대

3. 향후 추진계획
  o 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한인 이미지 개선 사업 전개
    - 2005년 멕시코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통합적 한국 문화 홍보 추진
    - 양국 주요 방송사간 협력 방안(다큐멘터리, 음악회 등 공동제작)
발굴
한-멕시코 21세기위원회 제3차 회의 (11.24~25, 서울) 개최 준비
- 내년 최종회의를 거쳐 양국간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vision statement" 채택 예정인 바, 동 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협조 요망

일-멕 FTA 체결 관련사항 면밀 연구로 한-멕 FTA 체결 추진에 시사점 도출
- 멕시코 기체결 FTA와의 차별화 부각 (IT 분야 및 중소업체의 기술이전 가능성 강조).
중남미 외교전략개발 간담회 개최

2003.10.17(금) 중 남 미 국

1. 일시 및 장소

   ○ 2003.10.17(금) 19:00, 황우촌

2. 참석인원 : 16명

   ○ 신승철 중남미국장, 황의승 중남미업무지원, 맹달영 중미과장, 진형주 남미과장, 김상일 중남미지역협력과장 등

3. 주요 토의 내용

가. 정상외교 적극 활용 필요

   ○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여타지역에 비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상방문을 통한 외교적 효과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크며, 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정상순방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특히, 정상순방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중남미 외교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대중남미 외교적 비전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로 활용 희망

나. 국제무대에서의 중남미 국가의 협력 확보

   ○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남미국가와의 협력강화, 지지확보가 긴요함. 비교적 대국들과는 여러가지 이익이 교차하고 외교체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국들 특히 카리브국가들에 대하여는 지난 89년 이후 모든 공관을 폐쇄하는 등 소홀히 다루어온 측면이 없지 않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ODA는 일종의 대중남미 외교의 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중남미에서 우리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 수준인 연간 50억 ~ 60억불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작년도 ODA의 비중은 11.7%에 불과하였음. 이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한편, ODA의 공여를 통해 우리의 국제기구 진출 지지 확보 등 비교적 쉽게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음.

현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중남미 지역의 주요 이슈 즉, 마약, 테러, 군축(핵 확산), 환경, 인권, 빈곤 등의 사안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해야가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도 필요다. 중남미 지역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중남미의 경우 역내 지역통합 움직임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별국가 뿐 아니라 각 지역협력체와의 다자간 협력관계 정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Rio Group, Mercosur, Caricom, Ancom, Sica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한·리오그룹 토로이카 외교장관회의, 한·중미 대화협의체, 한·Mercosur 협의체 등 기존협의체를 통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

라. 경제협력 기반 조성 노력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양자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 협정,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등 제도적인 정비와 중남미 국가 들의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대한, 중남미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함.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대중남미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도 중요함.
한편으로는 좋은 경제협력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함. IT 분야와 같이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중남미지역의 필요성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의 개발은 양지역간 호혜적인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마. 국가 이미지 개선

최근 중남미지역에서도 한국의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올림픽, 월드컵 등을 계기로 한국의 이미지도 좋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법체류, 보따리 장사, 노사문제 등으로 나쁜 이미지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임. 대중남미 외교강화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음.

어느 국가간 또는 지역간 상호이해와 관계발전은 양국 또는 지역 간 사람들의 이해와 교류없이는 불가능한 것임. 특히, 최근에는 문화적 능력이 그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소개와 이미지 개선 사업 등에 좀 더 힘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제 2차 대아중동 외교전략개발 세미나

2003.7.24(목)
남동아프리카과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3.7.24(목) 10:00-12:00, 외교통상부 3층 회의실
※ 오찬: 12:00-13:30, 아중동국장 주최

나. 세미나 주제 및 진행 방식

○ 주제: 오낙영 남동아프리카과장
○ 발제

- AU 출범이후 아프리카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부연 외대 아프리카과 강사
-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참여 방안
  : 서상현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다. 참석자 명단

○ 부내직원: 오낙영 남동아프리카과장 및 직원 5명
○ 외부 전문가

- 서상현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 조부연 외대 아프리카과 강사
-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용빈 삼성물산 대리
- 강준수 수출입은행 중동중남미팀장
-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주선 국정원 아프리카 담당
- 주영태 한국-아프리카 협회 사무차장
2. 세미나 요약

가. 개회사
: 지역정세개관(남동아프리카과장)
-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세 안정화를 이루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건설을 주창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AU, NEPAD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AU 출범 이후 아프리카 통합의 전망, NEPAD 등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 수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나. 주제발표
1) AU 출범이후 아프리카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주연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
(AU 창설의 역사적 배경)
- 아프리카 연합의 뿌리는 19세기 말 범아프리카 주의에서 비롯
- 1960년대 이전까지 범아프리카 주의는 아프리카 제국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주제로 활동하였으며, 독립 획득 이후에는 아프리카 통일에 관한 것으로 주제로 확대
(AU 출범기구-OAU)
- OAU는 최초의 범아프리카 기구이자 정부간 조직으로써, 아프리카 제국의 통일과 단결 증진, 주권 및 영토보전, 식민 지배 종식과 독립, 경제개발문제, 가맹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목표로 하였음.
- 조직 구성은 국가원수로 구성되는 국가정부 수뇌회의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대부분의 중엽한 결정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OAU는 구조적 결합, 강제 규정 부재, 내정 불안정성 원
직 강조로 인한 역내 분쟁 해결 능력 미비 등 한계를 노정하였음.

(아프리카 연합의 출범과 그 전망)
○ AU는 정치, 경제, 사회, 금융 협력기구로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집단적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와 선정, 법치주의, 인권 등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AU는 국가간 이해의 대립, 경제 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만성적 외채 문제, 지역 분쟁 해소, 에이즈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AU 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 향후 NGO 및 민간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 참여 증진, 정부 고위 사절단 교환 및 학술교류 확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육성 지원, 아프리카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이 노력이 필요함.

2)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 참여 방안
   : 서상현 한국 외국어대 아프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아프리카 경제 현황)
○ 아프리카에는 광물자원, 원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나, 투자 인프라 부족 및 내수시장 협소,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음.
   (NEPAD)
○ NEPAD는 세네갈 와데 대통령이 주창한 Omega Plan과 남아공 음베키 대통령 등이 주창한 아프리카 부흥 프로그램(MAP)을 통합한 것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내용으로 함.
○ NEPAD 회원국들은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써 민주주의, 선정 실시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였음.
○ 이에, 선진국들은 2002년 G8 정상회의시 대 아프리카 개발 원조액을 증액하고, 아프리카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 우리나라도 인간안보 확보 측면에서 아프리카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자구 노력인 NEPAD를 지원하는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FTA)
○ 아프리카 주요 경제 공동체로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동맹), UDEAC(중앙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PTA(동남아프리카특허무역지대),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COMESA(동남부아프리카 공동체) 등이 있으며, 이중 SADC는 가장 발전된 경제공동체이며, COMESA는 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공동체임.
○ 또한, COMESA 회원국 9개국이 결성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2000년)는 역내 교역 촉진 및 경제 유대관계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들도 대아프리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AGOA(아프리카 성장기회법), 미·남아공 자유무역 협정 추진, 유럽·아프리카간 코토누 협정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경제 현황)
○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무역규모는 저조한 수준인 바, 향후 선홍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감안,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시설, 플랜트 수주 등을 중점분야로 하여 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참석자 자유토론
(심의섭 명지대 교수)
○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역내 영향력이 큰 지도자(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전문가, 현지 한인 사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아프리카 진출 방법론에 있어,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이 유리하며, 문화상품 수출, 현지 한인을 위한 비즈니스 육성 등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음.
(오낙영 남동아프리카과장)

○ 이와 더불어,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논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들은 개발권을 인정하여, 아프리카의 개발을 원조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촉진시키려는 추세임.
(김용빈 삼성물산 대리)

○ 삼성은 앙골라에서 플랜트 수주 사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
앙골라는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바, 우리의 상주 공관이 없는 것이 아쉬움. 향후 외교부가 이러한 중점적인 나라들에 대한 외교론 강화해 주기를 기망함.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프리카는 무한한 경제 잠재성을 가진 대륙이지만,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렇게 볼 때, 아프리카는 아시아나 중남미 등 타대륙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민권, 외채, 인권 등 아프리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서 personal connection이 매우 중요한 바, 외교부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람.

라. 요약 및 강평
: 남동아프리카과장
○ 우리나라라는 AU의 추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외시장 확보
와 동시에 아프리카 개발 지원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NEPAD 추진이 본격화되는 경우 도로, 항만 등을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산업 등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바, KOICA 무상원조 및 EDCF를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끝.
대아중동 외교전략개발 리트리트 세션

2003. 11. 3(월)
남동아프리카과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3.10.31(금)-11.1(토), 1박 2일, 청평 풍림콘도

나. 세미나 주제 및 진행 방식
   ○ 주제 : 오낙영 남동아프리카과장
   ○ 발제
      - 서상현 연구원: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사례
      - 조부연 연구원: AU와 NEPAD의 당면과제와 전망
   ○ 토론 : 신원용 영산대 교수 및 부내직원

다. 참석자 명단
   ○ 부내직원
      - 남동아프리카과 과장 및 직원(3)
      - 북서아프리카과 과장 및 직원(3)
   ○ 외부 전문가
      - 서상현 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 조부연 외대 아프리카과 강사
      - 신원용 영산대 아프리카문제연구소 교수
2. 세미나 요목

가. 개회사(남동아프리카과장)

○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기구회의(AASROC) 및 제3차 아프리카 개발 동경국제회의(TICAD Ⅲ) 참석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최근 동향 및 우리 외교정책 방향 설명
○ 주제 발표자 및 주요 발표내용 소개

나. 주제 발표

1)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사례

: 서상현 한국 외국어대 아프리카 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현황)
○ 남아공은 의료기기, 문구류, 안경테, 다이아몬드, 잡화류, 자동차 등이 시장잠재력이 높은 상품이며,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임.
○ 나이지리아는 석유화학 제품 및 섬유류의 수출이 많았으나 고 가의 운송 통관비 드물

(진출유망분야 및 사례)
○ NEPAD는 세네갈 와데 대통령이 주창한 Omega Plan 과 남아공 음웨키 대통령 등이 주창한 아프리카 부흥 프로그램(MAP)을 통합한 것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내놓으므로 함.
○ NEPAD 회원국들은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써 민주주의, 선정적 실시를 악순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였음.
○ 이에, 선진국들은 2002년 G8 정상회의서 대 아프리카 개발 원
조약을 중역하고, 아프리카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 우리나라도 인간안보 확보 측면에서 아프리카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자구 노력인 NEPAD를 지원하는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A프리카 경제공동체와 FTA)

○ 아프리카 주요 경제 공동체로 ECOWAS(서부아프리카 경제동맹), UDEAC(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PTA(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 SADC(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CU(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체) 등이 있으며, 이중 SADC는 가장 발전된 경제공동체이며, COMESA는 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공동체임.

○ 또한, COMESA 회원국 9개국이 결성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2000년)는 역내 교역 촉진 및 경제 유대관계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들도 대아프리카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AGOA(아프리카 성장기회법), 미·남아공 자유무역 협정 추진, 유럽·아프리카간 코토누 협정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 우리나라는 대아프리카 무역규모는 저조한 수준인 바, 항후 신호장으로써의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감안,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시설, 플랜트 수주 등을 중점분야로 하여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AU 출범이후 아프리카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부연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
   (AU 창설의 역사적 배경)

○ 아프리카 연합의 뿌리는 19세기 말 범아프리카 주의에서 비롯
○ 1960년대 이전까지 범아프리카 주의는 아프리카 제국의 식민지
로부터의 독립을 주제로 활동하였으며, 독립 획득 이후에는 아프리카 통일에 관한 것으로 주제를 확대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 OAU는 최초의 범아프리카 기구이자 정부간 조직으로써, 아프리카 제국의 통일과 단결 증진, 주권 및 영토보전, 식민 지배 종식과 독립, 경제개발문제, 가맹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목표로 하였음.
○ 조직 구성은 국가원수로 구성되는 국가정부 수뇌회의 중심으로 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OAU는 구조적 결함, 강제 규정 부재, 내정 불간섭 원칙 강조로 인한 역내 분쟁 해결 능력 미비 등 한계를 노정하였음.
(아프리카 연합의 출범과 그 전망)
○ AU는 정치, 경제, 사회, 금융 협력기구로써,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집단적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와 선정, 법치주의, 인권 등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AU는 국가간 이해의 대립, 경제 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만성적 외채 문제, 지역 분쟁 해소, 에이즈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AU 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 향후 NGO 및 민간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 참여 증진, 정부 고위 사절단 교환 및 학술교류 확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육성 지원, 아프리카 인적자원 개발 지원 등이 노력이 필요함.

다. 참석자 자유토론
(심의섭 명지대 교수)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역내 영향력이 큰 지도자(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전문가, 현지 한인 사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아프리카 진출 방법론에 있어,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이 유리하며, 문화상품 수출, 현지 한인을 위한 비즈니스 육성 등이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음.

(오낙영 남동아프리카과장)
이와 더불어,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 논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들은 개발권을 인정하여, 아프리카의 개발을 원조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을 촉진시키려는 추세임.

(김용빈 삼성물산 대리)
삼성은 양골라에서 플랜트 수주 사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음. 양골라는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바, 우리의 상주 공관이 없는 것이 아쉬움. 향후 외교부가 이러한 중점적인 나라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함.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아프리카는 무한한 경제 잠재성을 가진 대륙이지만,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는 기회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렇게 볼 때, 아프리카는 아시아나 중남미 등 타대륙에 비해 매리트가 멀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빈곤, 외채, 인권 등 아프리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아프리카 사업에 있어서 personal connection이 매우 중요한 바, 외교부에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강평
남동아프리카과장
우리나라는 AU의 추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해외시장 확보와 동시에 아프리카 개발 지원 및 인도주의적인 고려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NEPAD 추진이 본격화되는 경우 도로, 항만등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산업등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바, KOICA 무상원조 및 EDCF를 활용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끝.
제3차 대아중동 외교전략개발 세미나
(동아시아 아프리카학자 초청 학술대회)

2003. 11. 17(월)
남동아프리카과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2003.10.15(토), 동국대학교 학술관

나. 세미나 주제: 아프리카 경제성장과 지구환경

○ 발제

1)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관계: 과제와 정책대안
   : Guimei Yao, 중국 CASS IWASS 교수

2) 남부아프리카의 지역통합: 이론적 접근
   : 신원용, 영산대학교 교수

3) 동아시아 에너지 문제와 아프리카의 석유와 가스
   : SHIMIZU Manabu, 일본 Utsunomiya 대학 교수

4) 아프리카 평화정착과정과 외부요소: 시에라레온을 중심으로
   : Zhan Shiming, 중국 IWAAS

5)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 홍성민, 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

○ 토론: 박복영 KIEP 부연구위원 및 부내직원
2. 세미나 요목

가. Session I

1)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관계 : 과제와 정책대안
   Guimei Yao, 중국 CASS IWASS 교수

(중-아프리카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 발전)
○ 무역협력: 중-아프리카 양국의 무역규모 증가
○ 경제협력: 아프리카 17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계획
○ 중국의 후아프리카 투자
   i) 중국의 입장: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무역량 증대효과 기대
   ii) 아프리카의 입장: 일자리 창출과 세수의 증가 효과로 중국의 투자에 대하여 우호적 반응

(중-아프리카 무역관계의 문제점)
○ 무역 규모: 무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교적 작음
○ 무역 불균형: 중국의 수출이란 치우쳐 있는 불균형적 무역구조
○ 무역의 집중화: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의 수출 상황
○ 저부가가치의 상품 무역구조: 중국의 주 수출품목들은 저부가 가치들이며 제품 이미지가 부정적
○ 중, 기업들의 소규모 투자계획: 기업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에 대한 소극적 참여
○ 중-아프리카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은 편으로 아프리카와 중국간의 우호적인 협력은 증가될 것임.
상호 무역 활동력 촉진을 위한 노력
- 중-아프리카간의 상호 이해력의 노력과 중국상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필요
- 중국에 대한 중앙 아프리카의 무역 적자와 앙골라 및 남부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적자 색갈을 위한 노력 필요
  i)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입 증가 노력
  ii) WTO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아프리카 수입 품목에 대한 축진 노력
- 저가이나 낮은 품질에 대한 중국제품의 인식 해소를 위하여 아프리카내에서 갖는 전람회 참석의 중요성 인식
- 투자로 인하여 보다 넓어지는 무역망을 고려
- 아프리카 국가들의 엄격한 외환통제로 인하여 중국 기업의 송금이 사실상 어려우며 정치적 불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을 초래, 적절한 보험 보험제가 필요

(상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
-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자원의 요구와 관련, 아프리카 자원 개발의 시작과 전략적인 해외자원 개발 계획의 중요성 인식
- 아프리카에 대한 기업의 직접투자는 아프리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동반되어야 효율적 수행 가능
- 중국 벤처기업들의 현지화로의 변화 모습
- 외환 정책의 변동이 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상 외환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보 시스템의 도입
- UA(Unification Africa)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중앙 아프리카와의 보다 넓은 무역망 구축 필요
2) 남부아프리카의 지역통합: 이론적 접근

SHIN Won-Yong, 한국 영산 대학교 교수

(지역통합의 배경)
○ 세계화: 서비스 및 자본의 움직임이 독국가, 지역화 되어 이익을 취하는 자유주의적 무역 시스템
○ 지역주의: 소수의 집단이 그들만의 자치 공동체를 동맹/통합하려는 움직임
  i) 지역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의도되지 않은 관계 형성
  ii) 지역통합은 공동의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사회-문화, 정치적 통합까지 시도
○ 남부 아프리카 14개국을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설립

(남부 아프리카의 통합)
○ 통합이론의 근원
  - 협동 vs 상충
  - 3세계 국가들의 지역통합 급증
○ 시장통합 모델
  i) 자유무역 지역: 특히 관세제한
  ii)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동맹
  iii) 경제통합을 위한 초국가적인 경제정책 및 제도 마련
  iv) 초국가적 제도를 통한 정치적 통합
○ 기능주의
  - 연방주의와 기능주의
○ 새로운 기능주의
  i) 연합들의 균형
  ii) 가치들의 상복성
  iii) 다원론의 존재
  iv) 회원국의 국내적 상황 및 국력의 중요성
① 탈기능주의: 지역통합 안에서의 정부간의 정책수렴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시도

3) 동아시아 에너지 문제와 아프리카 석유와 가스

: SHIMIZU Manabu, 일본 Utsunomiya 대학 교수

(아프리카의 다양한 면: 빈곤과 에너지 자원)
- 빈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 에너지 자원: 아프리카 일부 발전국들의 이익은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원이 되는 천연자원에서 비롯

(9.11 테러와 에너지 수급)
- 9.11 테러: 알카에다와 사우디의 관계에 관한 미국의 불신
- E・Situation: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사우디 정부

(일본의 태도와 석유 정책)
- Azadegan 지역의 국익(일본의)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Khafji 지역의 공동개발협정의 실패에 기인
- 일본 정부는 새로운 지역을 얻음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 노력 - 실제, 인도네시아 및 다른 지역들로 넓혀 가는 정책의 성공

(아프리카 원전 조사에 대한 중국의 노력)
- 중국, 전략적 상품으로 원유를 인식
- 가까운 미래 자국상품의 수출 감소에 대비 원전 확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
동 시베리아의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일·중 트레드

- 동 시베리아 지역의 파이프라인에 관하여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먼저 시도하였으나 러시아의 정권 교체로 합의 도출 실패
- 최근 위의 지역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이해가 맞물리며 일·중간의 경쟁 발생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전지역 간 새로운 협력 모색

- 동북아 지역(한, 중, 일) 갖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 지역 간의 협력을 장려

4) 아프리카 평화정착과정과 외부요소: 시에라레온을 중심으로
   - Zhan Shiming, 중국 IWAAS

아프리카의 평화정착과정과 국제사회의 간섭

- 아프리카의 계속되는 전쟁원인: 종교, 인종, 국가기원 등
- 아프리카의 국제적 입장
  - 냉전이후 국제사회의 외교적 전략위치에서 벗어남.
  - 자의식이 강한 아프리카 의식으로 인하여 자국의 문제들에 대한 자체해결 선호

시에라레온의 평화정착과정내에 의적인 힘: case study

- UN
  - 1998.07 UN 안보리, 시에라레온에 감시단을 파견 결의
  - 1999, 시에라레온의 평화정착과정에서의 UN 역할 개시
  - 시에라레온 내전 기간 중 파견했던 나이지리아 자군 철수
  - UN은 나이지리아 평화유지군이 철수됨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회원국에 요청
- 2000.07 UN, 다이아몬드업체에 시에라리온 반군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
- 시에라리온에 들어온 각국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막지 못하는 한계점과 많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UN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라는 국제기구의 책임을 임하고 있다.

○ 영국(The United Kingdom)
  - 과거 영국의 종속국으로 영국과의 경제적 관계 계속적 형성
  - 시에라리온의 영국의 이권 위협으로 보호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국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 적극적 개입
  - 시에라리온에 간섭한 여타국가들과 비교하여 영국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시에라리온의 평화정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

○ 미국
  - 냉전 이후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참여는 최근 국제분쟁의 필수적 요건
  - 그러나 시에라리온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는 외교적 수단의 발휘, 경제제재와 인도주의지지 정도

○ 용병력
  - 반정부군의 대응하기 위한 정부군의 고용
  - 이들을 위한 박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용병들은 시에라리온 주민들의 평화, 안정,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하여 절대 필요함.
(결론)
○ 아프리카 지역기구들은 평화유지 영향력 부분은 비경제적이며 복잡하게 처리하여 여전히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프리카국들의 참여는 재정적, 군사적 문제점 외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국제기구와 아프리카국가들의 합동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녕을 지속할 것이다.

5)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 Hong Seong Min,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and Society

(중동-북아프리카)
○ 중동-북아프리카의 일반적인 배경
  - 목표: 지역 내 개안투자의 확대 용이를 포함하여 지역간의 협력과 발전 강화
○ 중동-북아프리카 수뇌 회의
  - 모로코 왕국이 주도하여 중동, 북아프리카국들, 미국, 유럽, 아시아 대표급 초청 지역간의 경제협력과 자연과학 교환 논의
  - 카이로에서 갖은 3차 회의에서는 지역간의 협력을 통한 평화과정의 강화와 지역 내에 투자를 위하여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을 것을 논의하는 한편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정치적인 사안과 경제적 사안 분리 시도

(MDF: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 핵심국: 지중해 지역의 개발국가들, 아랍연합국, 이란, 터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협력-발전을 위한 은행(카이로)과 중동과 지중해 지역을 연계하는 관광 협회 설립

- 222 -
○ MDF의 성과는 그들이 당면한 도전과 기회가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 그들의 경제를 세계화하여 보다 통합화한 것이다.

(결론)
○ 최근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보가 유연한 대응은 아랍 세력과 비아랍 세력의 경제협력에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아랍연합의 경제적 블록화(해심: 자유무역과 면세혜택)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아랍연합은 아랍 지역을 넘어 개발 도상국들로 구성된 EU와 같은 경제블록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쟁은 최소화하고 지역적으로 영역을 넓히려 한다. 이러한 것들은 비아랍세력인 터키와 같은 지중해 국가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며 이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올해에는 중동 경제질서는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어 아랍국과 이스라엘, 발전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양분화 될 수 있다.
AU와 NEPAD의 당면과제와 전망

1.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출범

1. 아프리카 연합의 설립 배경

동, 서 간의 냉전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감과 제3세계의 대규모 독립, 1950년대 이후 일기 시작한 비동맹주의 확산은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사회 적응을 위한 기구 탄생을 강구하게 되었고 1963년 아프리카의 정치적 통합을 OAU의 설립으로 그 실현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영원을 담아 설립된 OAU는 단결, 연대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아프리카 국가의 의민주주의 정신과 아프리카 혁명을 완성하고 공통의 주체성(identity) 확인, 통일 달성을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묶여 실질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정치 지도자들 스스로의 권익보호에만 처중함으로써 아프리카 각국에서 벌어지는 혼합과 인권 유린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무력분쟁, 정치적 불안, 부패, 빈곤, 질병, 저개발 등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등 세계 각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세계화의 가속화 등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문제는 아프리카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1세기 아프리카의 발전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단일 의회와 은행, 법원, 통화를 이룬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이 출범하게 되었다.

2. 아프리카 연합 출범과 의의

OAU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장 개정을 목적으로 1999년 7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OAU 제35차 정상회의에서 리비아의 국가 원수인 카디파는 아프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후 카디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OAU 제4차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연합(AU)의 현장 채택과 결정적 기반이자 입법기능을 담당할 아프리카 의회의 구성, 1991년 아부자(Abuja) 조약이 규정한 아프리카 중앙은행, 재판소 등을 조속히 설립하여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르테(Sirte)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아프리카 연합(AU)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었고 아프리카 정상들은
EU를 모델로 집행위원회-평화안보위원회-의회-사법재판소-중앙은행의 설치와 단일 통화 도입 등을 규정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그 과정에서 2000년 7월 제36차 정상회의(Lomé)에서 채택된 AU 헌법(Constitutive Act of the African Union)이 2001년 4월 26일 나이지리아가 3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법적 요건(회원국 2/3)을 충족, 2001년 5월 26일자로 발효되어 제5차 특별 정상회의(Sirte)에서 AU설립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1) 2001년 7월 잠비아(Zambia)의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된 제37차 OAU 정상회의(Lusaka)에 참석한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은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성격의 ‘아프리카 연합(AU)’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OAU는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 공통의 주체성(Identity) 확인, 통일달성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별다른 연대장치가 없는 가운데 부패 및 역내 분쟁, 경제(외채, 빈곤, 보건[특히 HIV/AIDS]), 교육 등 대내 내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남긴 채 2002년 7월 제38차 정상회의(Durban)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본격적인 AU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AU는 그 구상의 즉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OAU의 실패와 세계 경제의 주변라는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의 공동된 인식에서 출발한 만큼 OAU와 달리 경제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통해 정치적 연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선각적 접근을 강조한다.2) AU는 아프리카의 숙원인 ‘분쟁 종식’과 ‘빈곤 추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1994년 르완다 후투족의 대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 평화유지군 소집의 권한이 군인의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도자가 각국 국민은 물론 AU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상호 감시 체제’(Peer-Review Mechanism)를 채택, 회원국을 구속하고 있다.3) 따라서 AU가 지닌 가장 큰 차별성은 OAU가 크고 작은 분쟁에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던 것에 비해 대형 학살, 전쟁, 범죄와 비민주적 상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AU의 조직으로는 각국 수반으로 구성되는 아프리카 의회를 비롯해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평화안보위원회, 사법재판소 등이 있고 재정 관리조직으로 아프리카 은행(The African Bank), 아프리카 통화기금(The African Monetary Fund)과 아프리카 투

2 AU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제4차 특별정상회의의 원래 목적은 OAU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장 수정이었음. 따라서 정상회의의 주제도 AU 출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세기를 보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OAU 능력 강화(Strengthening OAU capacit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w millennium)"였음.
3 뉴스메이커 491호 2002년 9월 12일.
자은행(African Investment Bank) 등이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본떠 15개국으로 만든 평화 안보위는 대륙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된 AU의 핵심부분이다.4
이는 AU가 아직은 초기의 시착 단계이지만 의욕적인 출발을 통해 향후 정치적인 통합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을 우선 탁실히하여 아프리카대륙을 빈곤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I. 아프리카연합의 당면 과제

OAU가 내포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세계 각 지역의 불확정 심화 및 빠른 세계화 추세는 AU의 출범을 예상보다 빠르며 진행했지만 AU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빈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역내 국가들보다 과거 식민국가였던 유럽의 교역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아프리카 국가들끼리의 교역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남아공처럼 비교적 잘사는 나라와 빈아프리카 각계각층의 경제적 격차도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 그 격차를 좁히고 경제통합을 이루기 쉽지 않다.

여기에 역내 국가들간의 끊임없는 분쟁은 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국들이 상호 분쟁에 휘사여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차원의 연합체를 실현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지정되고 있다.5

1. 외채문제

외채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문제로 오늘날 아프리카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1960~1970년대 식민지 독립 과정에서 경제사회 개발의 명목으로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오일쇼크의 여파와 80년대의 1차 생산품에 대한 국제가격 하락 및 이자율 급등으로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5 Ernest Harsch, 위의 책, p.3.
특히 1차 생산품 가격의 하락은 농산물 및 광물에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프리카 경제를 세계 경제의 외곽에 머물게 하는 주 요인이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총 외채 규모는 2000년에 이미 3,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 수입의 30~40%가 이자로 중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중한 외채 부담은 1인당 국민소득이 470달러(2000 기준)에 불과한 데 비해 1인당 외채는 360여 달러에 이르고 있어 사회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물론이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채 문제는 또한 해외 민간 투자에 대한 신뢰와 저결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중 채무는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과중한 외채로 인하여 아프리카 대륙 경제가 마비될 경우 아프리카 자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우로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미 1980년대부터 외채 지불 능력을 상실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하에 포괄적인 채무 구제조치로 과중채무빈국 지원 계획(HIPC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이 채무 구제 계획의 목적은 IMF와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거시경제정책 조정 및 사회정책 개혁을 수용하는 빈국에 대하여 채무 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sustainable
levels)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외채 위기 해소하려는 데 있으며 1996년 결정된 후 1999년에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건을 개선하였다.\(^9\).

세계은행은 구제 프로그램이 완수될 경우 이들 국가의 외채 상태를 1/3 수준으로 낮추고 지속 가능성의 채무 상태로부터 벗어나 개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탄자니아, 우간다, 모잠비크, 세네갈 등 22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무상환 구제조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내의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정치불안, 내전, 국경분쟁 등으로 구제 지원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구제 조치가 사회·경제적 개발 조건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외채 발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빈곤 해소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여전히 외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처해 있는 외채 위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기아, 안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퍼져있는 AIDS와 같은 기본적 생존권 유지에 대한 지출까지 억제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채 문제는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통합·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10}\)

2. 지역분쟁

식민통치 과정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식민지배층이 자의적으 로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이질적인 종족이 같은 국가에 편입되거나 같은 종족이 서로 다른 국가로 분리되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이는 내전으로 전개되었다.

생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적 제도와 가치, 절차를 중시하는 정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평화가 분명을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다당제를 수용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독재, 파벌, 권력 부패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

---

9 http://sookmyung.ac.kr/~djchoi/file/sdafrica.html
10 설규상, 위의 책, p.16.
특히, 냉전 종식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감소는 오히려 아프리카 대륙내 국가들의 갈등과 간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AU의 출범에 따른 대륙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함께 분쟁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한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등 간접 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02년 4월 조인된 평화협정에 따라 내전 종식 절차를 밟아온 청과 루완다 정부와 반군 단체인 "앙골라전독립민족동맹(UNITA)"이 분쟁 종식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8월 2일 발표함으로써 27년 동안 50만 명에 달하는 인명 손실과 400만명 이상의 난민을 양산한 아프리카 대륙 최장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11)

또한 7월 30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반군을 지원해 온 루완다가 평화협정에 서명, 89년 이후 4년 동안 양 당사국과 우간다, 앙골라, 잠비브웨, 나미비아 등 6개국이 개입되어 250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아프리카 최대의 분쟁으로 기록된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종식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수단에서도 최근 정부측과 반군 수단인민해방군(SPLA)이 종전에 합의하고, 남부 기독교 주민들이 향후 6년간 남부의 자치를 실시한 후 분리독립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아프리카에서의 분쟁이 종식되거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분쟁과 내전의 역사를 청산하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회복해 가는 국가는 있는 반면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는 종족, 종교, 이념 차이로 또는 국경, 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에 의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발하는 분쟁은 단일 대립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면서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이에에는 종족간 갈등이 개입되어 있으며 종족간 갈등으로 빚어진 분쟁에도 경제적 혹은 이념적 요소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1965년 쿠데타로 집권 30년 이상 장기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모두부 정권과 이에 대항해 온 카빌라 반군 세력간 정권 쟁탈로 시작된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은 이 지역 주요 세력인 후투족과 투쳐족의 종족간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카빌라 집권 후 정부군을 지지하는 잠비브웨, 앙골라, 나미비아, 수단 등과 반군을 지지하는 루완다, 우간다 등이 개입, 복잡한 국제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남부지역에 대한 차별 철칙과 민주화 요구로 시작된 수단 내전은 이슬람 원리주의 정부와 남부 기독교 세력간 대립 속에서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등 주변국이 가세, 민족, 종교, 분리주의 및 이념분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12)

이처럼 끝이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의 분쟁은 대부분 서구의 식민통치 유산으로부터

---
12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참조.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사례

1부.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현황

Ⅰ. 남아공 진출현황 및 진출기업
Ⅱ. 나이지리아 교역현황
Ⅲ. 케냐와의 교역품
Ⅳ. 앙골라 진출현황

2부. 진출유망 분야 및 사례

Ⅰ.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
Ⅱ. 아프리카 IT산업
Ⅲ. 전자제품
1부.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현황

I. 남아공 진출현황 및 진출기업

1. 대남아프리카공화 수출증가율 상위품목 [금년실적순, 만불이상]

<table>
<thead>
<tr>
<th>MTI 품목 명</th>
<th>2002 금 액</th>
<th>2003.1-04 금 액 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1 850020 통신용동축케이블</td>
<td>734 6.4</td>
<td>489 24907.2</td>
</tr>
<tr>
<td>2 229000 기타영상회화제품</td>
<td>13 92.6</td>
<td>1,461 21647.6</td>
</tr>
<tr>
<td>3 449003 손수건 스키바</td>
<td>67 -69.9</td>
<td>43 20151.7</td>
</tr>
<tr>
<td>4 911000 서적</td>
<td>1 -97.8</td>
<td>55 3382.6</td>
</tr>
<tr>
<td>5 015990 기타음료</td>
<td>1 -8.3</td>
<td>52 8401.6</td>
</tr>
<tr>
<td>6 811150 개인용컴퓨터</td>
<td>48 -70.7</td>
<td>542 7222.8</td>
</tr>
<tr>
<td>7 721520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td>
<td>9 801.3</td>
<td>26 7094.4</td>
</tr>
<tr>
<td>8 320310 승용차용타이어</td>
<td>259 -72.3</td>
<td>494 4839.6</td>
</tr>
<tr>
<td>9 813510 스케너</td>
<td>349 299.5</td>
<td>368 3007.8</td>
</tr>
<tr>
<td>10 814610 X선발사선기기</td>
<td>12 -88.0</td>
<td>28 2914.5</td>
</tr>
<tr>
<td>11 815190 기타계측기</td>
<td>49 61.4</td>
<td>630 2368.9</td>
</tr>
<tr>
<td>12 711160 원통기판</td>
<td>8 234.7</td>
<td>13 1642.8</td>
</tr>
<tr>
<td>13 224090 기타표면활성제</td>
<td>218 -46.9</td>
<td>176 1355.1</td>
</tr>
<tr>
<td>14 421990 기타사</td>
<td>19 -22.6</td>
<td>46 1324.4</td>
</tr>
<tr>
<td>15 715210 광학렌즈</td>
<td>18 307.9</td>
<td>10 1306.5</td>
</tr>
</tbody>
</table>

위의 수치는 데 남아공 수출에 관한 통계이다, 수출 증가율로 보면, 정보 통신 분야, 기계, 공업용 산업재, 의류 및 섬유 등의 경공업 분야의 수요가 크게 나타났다. 남아공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을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 단말라 신 정부 이후 의료시설 개선이 확충되고, 흑인위주의 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 수술대, X-Ray기 등 의료기기의 진출이 유망함

▷ 문구류
- 현재 중국산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문구류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지의 대형 마켓 (CNA)등과 꾸준한 협상으로 가격보다는 품질의 면을 강조할 필요성 있음

▷ 안경대
- 최근 광학렌즈 및 안경대의 수입이 급증해 남아공은 여름이 까고 햇빛이 강하기
때 문에 선글라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고품질의 한국제품 수출 시 유망함. 그리고
안 경제의 경우, 같은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국산이 설 자리가 마땅하지
않지 만, 가격대비 품질면에서 충분히 통로가 가능함.

▶ 다이아몬드 공구
- 독일, 이테리 산이 많이 들어와 있으나 한국제품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도
충분하여 진출 유망.

▶ 잡화류
- 한국에서 생산된 모자, 티셔츠 등이 남아공에서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남아공에는 주변국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모이고 있다. 남아공에
수출된 모자, 티셔츠 등이 실제로 주변국의 바이어들에게도 잘 팔리고 있다. 남아공
의 니트류의 옷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한국산의 품질대비 가격이 경쟁력이 있음

▶ 자동차
- 중고 자동차는 현지의 자동차 달러의 대 정부로비로 달리아가 중고차 수출이 불
가능하나 남아공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되고 관세도 없는 특장차의 수출이 아주 유
력시됨.

2. 한국상품 인식도

▶ 현황
남아공 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높으며 한국상품은 일본상품과
품질수준이 동일하되 가격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평가.
- 한국 가전 3사의 남아공 가전시장 석권. 시장진출 3-4년만에 점유율 10%대를 확
보한 자동차 진출 등이 한국상품의 전반적인 인지도를 높였으며 특히 건설 중장비,
일반기계류, 화학제품 등 중화학 제품 위주의 시장진출도 한국상품의 성가를 크게
향상시킴에 기여.
이러한 성가의 근본배경은 우리나라의 대남아공 진출이 늦은 관계로 저가품부터 시
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중고가품 위주의 시장진출이 성공했기 때문.

▶ 평가
남아공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및 유럽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
는 반면, 중국산은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이하게 대만, 홍콩 등도 중국산과
동일시 되는 측면에서 한국산의 인식도는 실제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 이
러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인종구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일본은 백
인과 더불어 ‘WHITE’로 분류되며, 중국, 인도 등은 ‘ASIAN’으로 분류 된다는 점에
서도 남아공 시장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양호.

3. 진출기업
LG전자 남아공법인 (LG Electronics S.A.(Pty) Ltd.)
기아자동차 남아공지사 (Kia Motors)
대우 남아공지사 (Daewoo Corporation)
대우자동차 (Daewoo Motors(S.A.))
대우전자 현지법인 (Daewoo Electronics (Pty) Ltd.)
대우중공업 남아공법인 (Daewoo Heavy Industry Pty Ltd.)
대한전선 남아공 지사 (Malesela Taihan Electric Cable (Pty) Ltd.)
삼성물산 남아공지사 (Samsung S.A. (Pty) Ltd.)
삼성전자 현지법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제본 남아공지사 (Jebon S.A. (Pty) Ltd.)
포스크롬 남아공 합작법인 (PosChrome (Pty) Ltd.)
현대자동차 남아공지사 (Hyundai Motor South Africa Office)

II. 나이지리아 교역 현황

1. 대나이지리아 교역품
주요 수입품목은 액화가스(프로판, 부탄가스)이며, 기타 소량의 1차산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대나이지리아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원유가 차지 하였으나 수입금액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2001년 7천5백만불을 수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2002년 9월 말 기준, 원유수입은 전무한 상태임.

2. 진출기업
피엔시 (PNC Continental LTD.)
III. 케냐와의 교역품

1. 교역규모


2. 교역품목

케냐의 경제구조는 소비재 상품 대체산업으로 대부분의 원자재 및 기계류의 수입의존형이며 대규모 투자 및 규모의 경제에 달하는 소비재 상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국내 제조업체가 진출하여 수요 전망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케냐와의 교역은 가전제품에 이어 1990년 초 들어 자동차의 수출이 본격화 되면서 교역규모가 신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현재는 자동차 수출이 주
3. 진출기업

금바우 (Goldrock Int’l Enterprises Ltd.)
대우 나이로비지사 (Daewoo Corporation Nairobi Branch)
사파리파크 호텔 (Safari Park Hotel)
코리안오토모바일 (Korean Automobile (K) Ltd.)
퍼시스 케냐 (Fursys (K) Ltd.)
한강상사 (Han Kang Enterprises Ltd.)

Ⅳ. 앙골라 진출현황

1. 대앙골라 교역품

대앙골라 주요 수출품목 : 선박, 철구조물, 수송기계, 시멘트, 전자 및 전기, 기타 섬유류 등
대앙골라 주요 수입품목 : 원유가 99.9%를 점하고 있음.

2. 진출기업현황

Inter-Burgo
- 82년 수산업으로 앙골라에 진출
- 어선 20여척, 선원 약 500명
- 현지 합작회사인 World-wide International Ltd. 설립 등 수산활동 활발

삼성물산
- 정유공장 프로젝트 추진중

현대중공업
- 원유생산, 저장, 운반선 등 수수활동 등
2부. 진출유망 분야 및 사례

1. 건설업

1.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

아프리카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은 취약한 산업기간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해 이를 확충하기 위한 경제개발사업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설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협소한 띠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 1>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1998-2000년) 아프리카(43개국) 건설시장 규모(건설 투자액 기준)는 1,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세아니아 3개국(1.3%)과 비슷한 1.6%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아프리카 건설시장의 영세성은 저소득과 경제발전의 후진성에서 비롯되고 있음.

<표 1> 세계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비교(건설투자액 기준)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유럽(39)</td>
<td>22,314</td>
<td>9,579</td>
<td>10,157</td>
<td>42,050</td>
</tr>
<tr>
<td>아시아(25)</td>
<td>10,534</td>
<td>10,391</td>
<td>10,634</td>
<td>31,559</td>
</tr>
<tr>
<td>오세아니아(3)</td>
<td>448</td>
<td>465</td>
<td>498</td>
<td>1,413</td>
</tr>
<tr>
<td>북미(2)</td>
<td>7,709</td>
<td>8,263</td>
<td>8,845</td>
<td>24,817</td>
</tr>
<tr>
<td>중남미(25)</td>
<td>2,381</td>
<td>2,315</td>
<td>2,414</td>
<td>7,110</td>
</tr>
<tr>
<td>중동(13)</td>
<td>927</td>
<td>867</td>
<td>982</td>
<td>2,776</td>
</tr>
<tr>
<td>아프리카(43)</td>
<td>569</td>
<td>552</td>
<td>601</td>
<td>1,722</td>
</tr>
<tr>
<td>전세계(150)</td>
<td>44,881</td>
<td>32,432</td>
<td>34,133</td>
<td>111,446</td>
</tr>
</tbody>
</table>


또한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지역과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전 증증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로는 북부지역 4개국(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이 아프리카 전체 건설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 알제리 등 산유국들이 풍부한 석유수입을 바탕으로 공업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활발
2. 아프리카 건설진출 여건 및 한국의 진출실적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으로 잠재적 수요는 크지만 빈약한 개발자원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여타 개도권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아프리카 건설대국이라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리비아 등 산유국들도 투자 재원을 지탱하고 있는 원유수출 소득의 변동에 따라 건설시장이 치달란 영향을 받고 있어 건설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 때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각국은 새로운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에 따른 건설과급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진출은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첫째, 국가위험이 여타 개도권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임. 이는 사업특성상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진출에 상당한 위험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둘째,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력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도 여타 개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아프리카지역은 잠재적 건설수요가 큰 시장이지만 자국 내 개발재원이 부족하여 공급자의 금융부담이 여타 개도국들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자금여건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업체에게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넷째, 건설공사 집행에 따른 원자재 조달에 있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 건설수주활동을 벌일 때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건설자재 조달비용,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특히 노동 집약적 건설공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다섯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시설이 열악하여 건설자재 운송과 공사관리가 쉽지 않아 비용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공급측면에서 본 때 현지업체가 맡당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이외에는 주로 해외발주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럽 등 선진업체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있어 시장진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한편,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규모는 매우 빈약한 형편임. 한국의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건설진출은 아직 개척초기 단계로 수주액이 30억 달러 미만(2002년 10월 말 누계기준)으로 전체의 2.0% 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다만, 사하라 이남 수주액의 8배 정도에 달하는 리비아(230억달러)를 포함할 경우에 15%에 이르고 있어 리비아 이외에는 진출이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음. 아프리카 건설 진출이 부진한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 오일달러를 배경으로 한 중동의 건설시장이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비해 월등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임. 따라서 진출 초기부터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중동시장에 집중된 반면에 아프리카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대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이 개발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설 밸류창출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건설시장으로서 아프리카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음. 더욱이 정세가 불안정한 중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해외건설기반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표 6> 한국의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현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아프리카(A)²</td>
<td>2,984</td>
<td>63</td>
<td>658</td>
<td>360</td>
<td>1,903</td>
</tr>
<tr>
<td>중동</td>
<td>102,503</td>
<td>28,452</td>
<td>54,347</td>
<td>6,368</td>
<td>13,336</td>
</tr>
<tr>
<td>아시아</td>
<td>55,150</td>
<td>1,520</td>
<td>7,499</td>
<td>17,482</td>
<td>28,649</td>
</tr>
<tr>
<td>북미·태평양</td>
<td>4,475</td>
<td>178</td>
<td>558</td>
<td>1,395</td>
<td>2,344</td>
</tr>
<tr>
<td>중남미</td>
<td>3,040</td>
<td>59</td>
<td>-</td>
<td>147</td>
<td>2,841</td>
</tr>
<tr>
<td>유럽</td>
<td>4,601</td>
<td>0</td>
<td>17</td>
<td>1,136</td>
<td>3,448</td>
</tr>
<tr>
<td>전세계(B)</td>
<td>172,753</td>
<td>30,272</td>
<td>63,073</td>
<td>26,887</td>
<td>52,522</td>
</tr>
<tr>
<td>A/B(%)</td>
<td>1.7</td>
<td>0.2</td>
<td>1.0</td>
<td>1.3</td>
<td>3.6</td>
</tr>
</tbody>
</table>

* 주 : 1) 사하라 이남. 합계는 2002년 10월까지 누계기준(계약액)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2년 10월까지의 수주실적 누계에 따른 공증별 수주구조를 보면 토목과 건축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분야인 플랜트부문은 18%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수주에 따른 토목의 비중을 제외하면 플랜트 분야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아프리카는 최근 나이지리아, 가봉, 앙골라, 수단 그리고 카드 등의 국가에서 대규모 신규 유전의 발견으로 원유·가스생산 설비 발주가 급증해 한국 기업의 새로운 플랜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를 추진중인 물량이 2003년 상반기 총 플랜트 수주실적(39억,5,000만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74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또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자원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에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해주고 대금은 원유나 가스 등 현물로 받는 방식의 진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인 연간 100억달러 플랜트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아프리카 건설진출 강화방안

대규모 신규 유전의 발견으로 원유·가스생산 설비 발주가 급증한 아프리카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플랜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자원부 차관을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에 공정화하는 등 아프리카를 제2의 중동시장으로 육성하기 본격 대응에 나섰음.

7일 산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를 추진중인 물량이 올 상반기 총 플랜트 수주실적(39억,5,000만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74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또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자원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음.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 신흥 자원부국에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해주고 대금은 원유나 가스 등 현물로 받는 방식의 진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음.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인 연간 100억달러 플랜트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미개척 지역으로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을 강화하기에 앞서 종합적인 시장조사와 프로젝트 정보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한국기업은 진출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중동지역이나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보가 밝은 편이라지만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서 그 역사가 일천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빈약한 실정.

모든 해외시장의 개척활동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성공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음. 아프리카 시장은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불확실성이 높고, 프로젝트 발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질을 구축하는 것은 수주의 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음.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정부, 지역사회, 발주처
등과 밀접한 유대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시공자 금융조달 요청 및 투자개발형 공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과 공사발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으로 건설외교 또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한류기업이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금융조달 능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는 자체 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프로젝트 수주조건으로 시공자 금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금융조달 능력이 프로젝트의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아프리카 건설시장에서 일본 및 구미 선진업체들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계능력 등 기술적으로 우위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조달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음.

4. 아프리카의 건설업 발전과 당면과제

경제력이 허약한 나라 중 많은 아프리카에서 건설업은 가마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취약한 산업이 아닐까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건설업은 6~10%의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에서는 새로 민영화된 기업의 신축과 함께 교회와 회교사원의 건축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도 싼지어 많은 가난한 마을에까지 이러한 종교 건물이 들어섰음.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건설시장은 시장규모가 매년 500억 랜드(미화 66억 8천달러)에 이르는 남아공이다. 최근 우간다에서 완공된 주요 건설 작업 중에는 민간 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이 주도한 엔테베(Entebbe) 국제공항의 수리와 연달아 무너진 여러 학교 건물들의 재건촉을 들 수 있음.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간다의 건설업 분야는 GDP의 12%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음. 우간다의 주요 공사계약이 이처럼 대부분 국내업체에게 돌아가는 데 비해, 나이지리아에서는 90%이상의 계약이 외국업체로 돌아감. 나이지리아 기사 협회(Nigerian Society of Engineers; NSE)는 협회 회원들이 하청계약 공사에서만 경쟁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연방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음.

NSE는 정부에 전달하는 서신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운영중인 다국적 기업들이 전문 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직원들을 불러들임으로써, 나이지리아내에 협업한 인력이 있는데도 나이지리아 건설업체들이 주요공사를 맡을 수 없도록 전략을 쓸고
이나지리아의 각종 건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나이지리아 전문가들과 공유하도록 국내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작업을 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국내 건설업체들의 건전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역시 활용 가능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건전한 경제성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업 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함. 그 중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이는 국내 회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한다는 것과, 동시에 건설의 질과 건설현장의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것임. 몇몇 정부들이 여전히 해외 기업들에게 공사를 맡기는 단기적 선택을 하고 있고 전문적 사업인 경우 그러한 전략이 유용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국내 회사들이 경험을 쌓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함.

따라서 아프리카 정부들이 직면한 과제는 외국업체와의 협력공사가 이루어질 때 국내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2. 사례 :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잡아라

나이지리아가 국내 가스산업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2002년 6월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석유개발회사인 SPDC에서 발주한 300만달러 규모의 CCAGG 프로젝트의 가스설비 시운전 및 교육훈련 분야를 수주했음. 특히 나이지리아는 가스설비 및 원유설비가 노후되어 향후 10년간 약 10억 달러 상당의 설비교체와 신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이 기대됨.
현재 가스공사는 신규로 SSAGG, KGPR, BTI 프로젝트의 계약을 추진중이며 이러한 사업이 성사될 경우 수주액은 총 3,0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CCAGG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유전지대에서 원유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존 및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프로젝트임.
SPDC가 발주했으며 계약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이며 대우건설이 미화 300만달러에 계약했다.
가스공사측이 맡고 있는 교육훈련 분야는 올해 1월부터 착수해 현재 기본과정을 마치고 분야별 전문과정을 수행중에 있으며 발주처인 SPDC 직원들에게 호응을 받아 당초 계약기준인 교육생 20명에서 89명으로 훈련생이 증원됐다. 또한 SPDC는 설비 운영 인력도 추가로 약 60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어 기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본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SPDC에서 옵션으로 추진중인 2년간 설비 유지보수 역무에 대해 약 700만달러의 추가수주가 예상되고 있음.

SSAGG 프로젝트
CCAGG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유전지대에서 원유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를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나이지리아 Bayelsa주 Warri 남서쪽 40km 지점의 Tunu 지역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는 SPDC로 6월말 최종 적격자가 확정될 예정임.

KGPR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콜레지역의 가스 및 원유처리설비의 신증설 공사 프로젝트로 발주자는
NAOC(Nigeria Agip Oil Company)이다. 설비 시운전, 교육훈련 및 설계기술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선적입찰서 제출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상 수주액은 약 27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무수행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로 예상됨.

BTI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Cawthorne Channel 인근 Bonny 터미널의 원유 처리시설의 확장과 설비개선 공사일. SPDC가 발주하고 주계약자는 현대중공업으로 입찰 참여범위는 설비시운전과 교육훈련 및 설계기술 지원임. 계약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56개월이며 계약금액은 4억5천만달러규모이다. 현재 가스공사와 현대중공업이 계약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우 - 나이지리아

최근 계속되는 해외건설 가뭄속에서 총 3억4000만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나이지리아에서 수주, 대우건설의 시장 신뢰회복은 물론이고 쇠퇴해가는 국내 해외건설업체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함.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것은 지난 1980년 5월. 다부족 커뮤니티 등으로 공사수행 여건이 극히 불량했지만 대우는 착실하게 국제 석유 회사인 셰일(Shell)과 나이지리아 석유회사(NNPC)로부터 파이프라인 공사를 수주해 총 38개 프로젝트, 12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완료했거나 수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부족간의 전쟁 등으로 국제업체가 철수하고 공사가 중단 되기도 했으나 대우는 확실한 책임사공 이미지를 구축해 신뢰를 확보했음. 이로 인해 50억달러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서남부 보니섬 LNG생산설비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 앞으로도 30억달러 이상의 추가공사가 발주될 예정.

■ 삼성물산 - 앙골라 산업개발 본격 참여

1차 44억불 규모의 정유공장 및 해양설비 참여 협의.

경제력 점검력은 크지만 개발경험과 노하우 및 운영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정책 제안과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삼성물산의 컨트리마케팅이 서남아프리카의 자원 부족 양골라에서 본격화 되고 있음. 삼성물산 양골라 산업개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우선 1차적으로 양골라 국영석유공사인 소남골라가 추진하는 총 44억달러 상당의 정유공장과 해양설비 프로젝트를 삼성물산측이 참여한다는 점에 합의했음.
삼성물산과 SK건설이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해 추진하게 될 사업규모 27억 달러의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앙골라 남부 향구도시인 로비토에 일산 20만 배럴의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4년을 목표로 추진하게 됨.
해양설비 프로젝트는 앙골라 최대 유전인 카빈다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저장하기 위한 해양 유전설비를 건설하는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프랑스의 스톨트사, 삼성중공업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추진함.
삼성물산은 그동안 시장 잠재력이 큰 앙골라를 전략적 개척시장으로 선정하고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부 및 관련 기업체에 제안하는 등 이 지역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앙골라는 한국의 경제개발 형태를 자국에 가장 적합한 경제개발 모델로 인정해 지난 6월 초 한국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과 MOU를 체결하고 산업개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따라서 삼성물산과 앙골라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정유공장 및 해양설비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산업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하면서 지속될 전망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은 가동중단 상태인 섬유공장의 경영 정상화, 조선소 현대화, 농업개발 및 다이아몬드, 동 철 등 자원개발사업과 도로, 항만 등 건설토목사업 등 8개 분야로 삼성물산은 광업진흥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내는 물론 세계은행 등 국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들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임.
앙골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도 100억 배럴에 달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제2의 원유산국이며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지만 장기간의 내전과 경제개발 실패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부흥을 위한 산업발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삼성물산의 앙골라 개발사업 참여는 양국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밖에 삼성물산은 가나에 1억900만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및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함. 또 가나텔레콤의 통신망 확충 공사와 송유관 건설에 참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3억7000만달러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44-
II. 아프리카의 IT산업

1. 아프리카 IT 현황

이동통신업과 기타 정보 및 통신기술에서의 투자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다. 프랑스 기업인 지오링크(Geolink)와 같은 회사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서비스 구역을 공급하는데 투자하였고, MSI와 같은 투자자들은 아프리카의 GSN 네트워크 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오로지 소수의 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와 컴퓨터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

짐에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인구 수를 비교해볼 때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인구가 50%인 반면, 아프리카는 단지 0.4%에 불과함.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사용 후 요금을 내는' 이동통신 개념이 도입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식의 인터넷 사용은 크게 불가능하고 있음. 인터넷 카페, 위성센터, 우체국과 관공서의 무료 인터넷 사용지점 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 지역에 전화선이 끼하지 않은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도 이메일과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이에 수천명의 정부 관료나 사무직원들은 직장에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또한, UNICT, 즉 UN 정보통신기술의 특별조사단이 네트워크에 따르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아프리카 인구 수가 2001년 1월과 2002년 7월 사이에 20% 증가했다고 함. 이는 아마도 연결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 UNICT 특별조사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간의 인터넷 이용 및 이동통신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조직되었음.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정보 통신 기술은 아프리카의 빈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경제 발전과 가난 문제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도 세계 시장에 통합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함.

아프리카에서는 선이 고정된 일반 전화 시설의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이동전화가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보다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어 왔다. 따라서 현재 이동전화는 여러 지역에서 일반 전화보다 더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음.

이는 정부와 개인 및 국영 전자통신업체들이 고정전화 시설에 대한 소비를 더욱 증가하도록 부추겼다.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견지하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맞이하고 있음.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기술적인 면에서 국제사회를 따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선전국이 거쳐야 한다고 한 기술적 단계를 회피하여, 그동 안 가장 고정전화 네트워크가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최대의 이동전화 소유자수를 자랑하는 쪽으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이 견해는 충분히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을. 특히 전화선 연결로 아프리카의 기후
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아프리카는 향후 10년까지도 위성 인터넷을 기술 및 정책적인 면에서 구축할 능력이 없으며, 고정선 전화의 부족은 결국 인터넷 사용 증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그 결과, 일부 아프리카 정부들이 나서서 인터넷 연결과 통신업과의 관계를 새로 조사하기 시작했음. 그 중 가나 정부는 알카텔 상하이 벨(Alcatel Shanghai Bell)과 큰 계약을 맺었는데, 가나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 연결을 확대시키기를 바라고 있음. 이 계약으로 알카텔 상하이 벨은 65만개의 새 전화선을 가나에 설치하여 세입 수급을 용이하게 하고, 가나 텔레콤과 천 오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 조건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소개하게 될 것임.

이러한 해외 민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원조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UNDP와 국제 통신연합(IUT)은 개발도상국들의 IT비용 절감과 선진국과 아프리카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여러 행사를 계획하였음. 한편 나이지리아 공항에 설치될 사업가 대상 온라인 서버스도 미국 기업인 해외 민간 투자 회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가 지원함. 이러한 움직임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이 IT에 연결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아프리카적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

아프리카 원(One) 계획

아프리카 대륙은 전화나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는 하지만 인터넷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임.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인터넷 인구는 3백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만명은 남아공사람들이, 이는 아프리카 인구 250만 명 당 1 명 꼴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세계 평균치인 35명당 1명에는 물론 북미와 유럽지역의 3명당 1명 꼴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음.

이러한 근본적인 정보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에집트 등 아프리카 30개국 정부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컨소시엄인 "아프리카 원.ONE(Africa Optical Network)"은 아프리카 대륙의 42개 도시를 잇는 해저케이블 구축사업을 시작하였음. 이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 아프리카 주요 도시들에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프리카의 인터넷 환경은 급속히 좋아질 것이며 아프리카의 사이버 교육은 활기를 띄게 될 것임.

이 거대한 사업은 아프리카대륙이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을 위한 대행진을 시작했음을 선언하는 것임. 해저케이블망은 해안지역 24개소에 설치된 연결망을 통해 내륙 각지로 연장되며, 직접 접속이 어려운 오지나 섬지역과는 위성통신망을 통해 연결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아프리카 전지역이 광케이블 통신망으로 이어지는 셈임. 이 사업은 16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돼 2002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프리카ONE의 스티브 파스리스 컨소시엄 위장은 "이 광케이블망은 초당 40기가바이트(4백억바이트)의 초고속으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 아프리카의 통신난을 일거에 해결하게 된다"고 말.
그는 "케이블망이 완성되는 2002년 이후 아프리카는 전세계 인터넷망과 접속, 글로벌 시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을 뿐. 또 이 아심한 프로젝트는 93년 국제 통신기구 (ITU가 아프리카 정보화를 위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해 말 아프리카 30개국 통신장관들은 청담을 갖고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97년 30개국 대표와 투자 가들은 컨소시엄 회사 아프리카 원 (ONE)을 설립, 사업을 추진해왔음.

2. 사례: 남아공의 IT산업 현황과 정책
남아공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이 빠른 국가임. 2000년 12월 현재 7백만명의 인구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남아공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보다콤 (Vodacom)의 휴대전화 스텔렌보쉬 (Stellenbosch) 대학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남아공에서는 2006년이 되면 2천만명의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은 남아공에서의 휴대폰 급성장은 1994년 흑인정권 정권이후 기존의 부유한 백인들 뿐만 아니라 흑인 젊은층들이 휴대폰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경제계의 옹 허반가 남아공 경제 상승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IT관련 산업의 성장률은 당초 14% 이상에서 10.2% 정도 될 것으로 남아공 전문 IT 컨설팅기관인 BMI-T 사는 분석하고 있음. 남아공의 IT산업은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하지만 여전히 IT 관련 산업은 지속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BMI-T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남아공 IT산업의 총 규모는 339억유로(약 33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 했으며 올해는 10.2%, 2003년에는 11.2%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IT 관련 업종 중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분야로 올 성장률은 전체 IT업계 평균보다 높은 17%, 12.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남아공에는 약 3,000여개의 IT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6만6천명의 근로자가 IT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IT관련 매출이 총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임. 남아공의 IT산업이 세계 전체매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매출 규모면에서 남아공의 IT 규모는 세계 30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IT강국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와 같은 IT비중으로 인해 남아공 정부는 급격한 IT산업의 성장과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정부정책
정부통신부는 '국가 전자 통신과 거래법'을 주도하였음. 2001년 8월 정부 경제장관과 투자 장관 등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전자상거래 법에 적용하기 위해 발표하였음.

주요 새로운 운영자들은 지분 30%가까이를 그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보유하게 될 것이음.
중소기업과 공동 운영자들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모든 공립학교들은 인터넷 접속비용을 50% 할인해 줄. 사적인 네트워크도 공립학교 망크를 위해 설립되어야 할 것임.

남아공은 원격통신 개발에 있어서 세계의 23번째 국가이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17번째에 해당되는 국가임. 남아공에서는 대략 5백50만명의 인구가 전화를 보유하고 있음. 이 숫자는 아프리카대륙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임.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전송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 1백20만 킬로미터의 망을 연결하고 있음. 약 1억5천6백만 킬로미터를 커버하는 그 전송 네트워크는 모든 원격 통신 서비스의 동맥을 구성하고 있음.


이밖에 테일리 메일 엔 가디언(DailyMail&Guardian)지와 같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대한 방문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남아공 IT관련 환경변화의 특징은 제 3 이동통신 사업자 영업개시, 제2 유선통신 사업자 선정 등 통신분야의 자유화 및 민영화를 통한 본격적 경쟁체제의 돌입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음. 이러한 경쟁체제 구축은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 초래, 정부 및 일반 금융, 도 · 소매업자의 E-비즈니스 개발 확대 등의 IT산업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하지만 오랜 인종 차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에서 오는 IT User의 수준 격차 심화, 중소 IT기업의 부재 및 IT전문 인력의 부족은 남아공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3. 한국기업들의 아프리카 IT산업 진출

여태껏 베일속에 가려져 있던 아프리카 대륙이 ‘IT’에 서서히 눈을 뜨고있다. 이같은 점은 대륙의 IT화 바람에 따라 국내외업체들도 시장공략에 백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으로 유럽이 주도권을 잡아온 아프리카 대륙이 IT화 바람에 서서히 눈을 뜨고있다. 이같은 검은 대륙의 IT화 바람에 따라 국내업체들도 시장공략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 IT화에 가장 적극적인 일본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투자한 IT 관련 기업들과 현지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이르기가 빠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대륙은 IT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도처에 아프리카 IT화와 관련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업들은 아프리카 IT산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외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 IT업체들은 아프리카 IT화에 대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 중에도
장비나 시스템을 재활용해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주된 GSM(유럽형이동전화)방식에 이어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도 일부 보급되는 추세에 있어 업체들이 시장공략에 나설 만함.
CK텔레콤 기술담당 최돈홍 이사는 “아프리카 지역은 IT에 대한 정부의지와 국민
열망 등이 매우 강한 곳”이라며 “유선전화를 시작으로 인터넷, 모바일 시장 등
잠재성이 큰 만큼 국내업체들도 시장선점과 장기투자 차원에서 적극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음.

4. 사례 : 삼성 휴대폰의 남아공 진출

남아공의 휴대폰 통신업
-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조분야는 이미 성숙 단계.
- 관광자원의 풍부-> 서비스 분야의 발달-> 통신산업 분야 동반 상승 기대
- 외국인 금융 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
- 현재 통신 분야는 남아공 현지 기업 3개사 ( MTM, Vodacom, Cell C) 와 일본기
업의 진출 타분야와 비교하여 시장 진출의 옹호 예상 (Cell C 2002년 시작,
MTM, Vodacom는 1994년 시작, 남아공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 대륙적 사업원
을 갖음)
- 2002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 휴대전화 가입자수 3점 만을 넘어섰으며 이중 남아공이
40%이상의 산업 점유율을 보여줌.
- 1994년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 휴대전화 통신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기록, 유선 전
화와 비교하여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여줌.
- 통신업계의 중심인 남아공에서의 통신산업은 아프리카 전대륙의 시장을 대상으로
함.
- 진출시 데씨전과 인터넷을 통한 백인 중심의 마케팅후, 점차적으로 라디오와 간
행물을 이용한 흑인들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확대함.

4.1 남아공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 환경

□ 문화적 환경
- 흑인, 백인, 혼혈인, 아시아인 등 복잡한 인종이 섞여 인종간 언어, 관습, 소득수
운, 소비 성향 등이 상이하므로 복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
- 특히 총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백인의 구매력은 55%에 달하는 반면, 대다수
흑인들의 구매력은 32%에 불과해 고급품, 중급품, 저급품이 동시에 유동되는 복합
시장
- 아프리카의 고유의 미적 예술적 취향으로 제품의 디자인 중시 경향
-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 전반적 인식의 미비로, 통신 가입 후 후불제가 아닌 프리페이드 방식의 도입
- 소평가의 치안 불안으로 우편판매와 전자상거래가 성행

□ 정치적 환경
- 정치적으로는 민족간 흑백 분쟁, 흑백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부의 분배도 협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기에 폭발적인 갈등 소지가 있음.
- 96년 신헌법 제택과정의 흑백, 흑백간 화해에 주목 필요.
- 99년 4월 음베키 대통령이 선출되어 ANC의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정국 안정기반 강화
- 사회 전반적 합리성인식의 부족으로 정권과의 갑질한 관계 필요

□ 법률적 환경
- 남아공의 수입규제 제도는 자국산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한 수입품의 고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으로 반덤핑관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규제,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등 보건 및 안전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로 단순한 레벨에 의무 이상의 규제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남아공 규격청(SABS)의 규격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 이러한 남아공 수입규제속에서 중국, 인도, 동남아의 저가격 제품의 남아공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중국과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상대로 남아공의 무역협정 전략이 점차 인근 아프리카 국가의 불확실성과 주요 무역대상국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SWOT 분석

<table>
<thead>
<tr>
<th>Strength</th>
<th>Oppotunity</th>
<th>Weakness</th>
<th>Threat</th>
</tr>
</thead>
<tbody>
<tr>
<td>디자인 역량 축적</td>
<td>다양한 신제품 출시</td>
<td>흑인 참여 정책에 따른 대응 미비</td>
<td>내란, 폭동 등의 정치적 불안정</td>
</tr>
<tr>
<td>- 디자인 역량 축적</td>
<td>- 다样的 신제품 출시</td>
<td>- 흑인 참여 정책에 따른 대응 미비</td>
<td>- 내란, 폭동 등의 정치적 불안정</td>
</tr>
<tr>
<td>- 특허를 바탕으로 진화할 기술적 우위 확보</td>
<td>- 볼드, 가치 열매</td>
<td>- 유동망의 미비, 마케팅 부재</td>
<td>- 확대 전망되는 저가의 흑인 시장</td>
</tr>
<tr>
<td>- WTO가입으로 판세율 인하</td>
<td>-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대</td>
<td>- 중국 및 인도 중심의 저가품 시장확대로 가격 경쟁력 약화</td>
<td>-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td>
</tr>
</tbody>
</table>
4.2. 남아공 시장의 삼성 전자 진출 현황

경쟁 기업 분석

■ 남아공의 진출한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현황

현재 남아공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 진출한 업계는 핀란드의 세계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노키아와, 에릭슨, 삼성, 모토로라, LG 정도의 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키아의 경우 35.04%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1994년 MTN, 보다콤 통신회사와 함께 출발해 남아공 최고의 시장점유율과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삼성전자의 경우 2000년 남아공 시장에 본격 진출하여, 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7%를 상회하는 남아공 경쟁업체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부상하고 있음.

<2002년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시장 점유율>

■ 경쟁기업의 선정 및 분석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성에 상생의 작고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은 강점으로 작용했으며, 반부의 차이가 현저하고 흑인과 백인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고가제품의 제품 이미지는 삼성의 단기간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음. 그동안 저가 시장에 주력하여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한 노키아는 40화음, 고화질 카라등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현재 삼성의 성공한 제품을 갖고 있다. 다음에서는 남아공에서 상생에 대표되는 경쟁기업으로 노키아를 분석하고 강. 약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표1- 경쟁 업체 분석- 노키아

<table>
<thead>
<tr>
<th>기술</th>
<th>디자인</th>
<th>마케팅</th>
<th>유동</th>
</tr>
</thead>
<tbody>
<tr>
<td>아날로그 방식의 업계 최고의 기술 적반하우 측정</td>
<td>통화위주의 실용 적 단순 디자인</td>
<td>가격 - 노키아의 경우 약 600원, 인화로 약 10만원 (C.t-애니콜의 경우 1000원, 이상,현재 것으로 20만원대)</td>
<td>대리점을 통한 판매량, 전자상거래 상의 판매량 성장 확대 전망</td>
</tr>
<tr>
<td>생산공정 없이 본사제작 제품 수출 방식</td>
<td>다양한 콘텐츠의 부재</td>
<td>다양한 유의 광고 및 TV광고의 우위적 위치, 단수의 판매량 형성</td>
<td></td>
</tr>
</tbody>
</table>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아프리카의 문화적 특성에 상생의 작고 화려한 색상의 디자인은 강점으로 작용했으며, 반부의 차이가 현저하고 흑인과 백인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고가제품의 제품 이미지는 삼성의 단기간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음. 그동안 저가 시장에 주력하여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한 노키아는 40화음, 고화질 카라등의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현재 삼성의 성공한 제품을 갖고 있다. 다음에서는 남아공에서 상생에 대표되는 경쟁기업으로 노키아를 분석하고 강. 약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표2- 경쟁업체의 강약점 비교

<table>
<thead>
<tr>
<th>SAMSUNG</th>
<th>NOKIA</th>
</tr>
</thead>
<tbody>
<tr>
<td>강점</td>
<td>강점</td>
</tr>
<tr>
<td>디자인의 우위적 위치</td>
<td>강력한 브랜드 자산</td>
</tr>
<tr>
<td>고급화 이미지 구축</td>
<td>아날로그 방식의 현지화</td>
</tr>
<tr>
<td>디지털 기술 우위</td>
<td>광범위한 유동망</td>
</tr>
<tr>
<td>약점</td>
<td>약점</td>
</tr>
<tr>
<td>고급화 이미지로 대중적 이미지 구축 실패</td>
<td>디자이 역량 부족</td>
</tr>
<tr>
<td>유통망과 마케팅의 열위</td>
<td>저가 동심의 제중적 이미지</td>
</tr>
<tr>
<td>브랜드 인지도의 상대적 열위</td>
<td></td>
</tr>
</tbody>
</table>

- 253 -
4.3. 삼성전자의 진출전략

애니콜의 전략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현지화(아날로그 방식으로의 전환)를 중심으로 핵심 제품 요소와 유형제품 요소 중, 기능과 제품은 현지화를 하였고, 그 외 브랜드명이나 디자인 포장 등의 유형제품 요소와 서비스 등의 확장제품 요소는 표준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삼성이 고급화 이미지를 추구하는 만큼 디자인이나 브랜드명 포장 등은 글로벌화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세계적으로 동일한 표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현지국의 통신시장에 맞는 제품요소는 완전한 현지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광고의 경우 현지국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현지국에 맞게 옥외 광고를 한다거나, 현지 국에 친근한 이미지를 첨가하여 표준화 요소와 적응화 요소가 적절히 믹스 된 것으로 보아 진다.

〈표3-삼성의 표준화 정도〉

<table>
<thead>
<tr>
<th>Marketing Mix Elements</th>
<th>삼성 애니콜</th>
<th>Level of Standardization</th>
</tr>
</thead>
<tbody>
<tr>
<td>브랜드</td>
<td>Anycall</td>
<td>5</td>
</tr>
<tr>
<td>상품명</td>
<td>ex) Drama</td>
<td>5</td>
</tr>
<tr>
<td>상품</td>
<td>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td>
<td>1</td>
</tr>
<tr>
<td>디자인</td>
<td>동일</td>
<td>5</td>
</tr>
<tr>
<td>포지셔닝</td>
<td>고급화 이미지 구축</td>
<td>3</td>
</tr>
<tr>
<td>가격</td>
<td>약 20~30만원</td>
<td>4</td>
</tr>
<tr>
<td>광고</td>
<td>옥외광고 TV광고</td>
<td>3</td>
</tr>
<tr>
<td>서비스</td>
<td>서비스센터 운영</td>
<td>4</td>
</tr>
</tbody>
</table>
Ⅲ. 전자제품

1. 한국전자 제품의 아프리카 진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외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 이스트게이트.
이곳 1층 전자제품 코너에는 LG전자와 일본 파나소닉의 21인치 평면TV가 나란히 전시돼 있음. LG 제품의 값이 현지화폐로 3천5백만원(59만원)로 파나소닉의 3천3백만원(55만원)보다 비싸.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진열된 냉장고-
세탁기 코너에는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LG전자의 제품이다. 남아공에서 한국 가전
제품은 최고 품질의 고가품으로 통한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다.
아프리카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갖고 있는 게 자랑거리 중 하나일 정도로
인기임.
아프리카로 몰려가는 국내 기업들 마케팅 강화와 더불어 현지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올들어 아프리카 진출에 나선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10여곳으로 추산됨. 삼성전자는 올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연 10만대 규모의 에어컨 공장을 가
동하고 있음.
현재 아프리카에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히는 곳은 나이지리아, 남아공, 모로
코, 아제르 등 다국적 기업들조차 아직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그 동안 아프리카 시장에 공을 들이지 않은 미국 및 유럽 기
업들에 대해 정치적 거부감이 있음. 냉장고, 컬러TV 등 백색가전과 휴대폰 분야에
서는 이미 한국 제품들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음.

2. 진출 사례: LG전자

LG전자가 최근 실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브랜드 영향력 조사에서 소니 등 국내
외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음.
LG전자는 남아공의 브랜드 조사기관인 마르키노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파나소닉, 소
니, 필립스 등을 제치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했음.
LG전자의 남아공 마케팅 전략은 남아공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현지화의
전략에 있어 성공적인 예에 속함. LG전자는 그동안 남아공에서 월드컵 만큼이나 또
거운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 대회를 후원하거나 크리켓에 재능이 있는 빈곤층 자녀
를 후원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을 펼쳤음.
LG전자는 남아공의 가장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크리켓 세계대회 후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 LG전자는 지난 2월8일부터 3월23일까지 44
일동안 열린 ‘2003 남아공 크리켓 월드컵’ 대회 공식 후원업체로 경기장에 설치한 광고가 이 기간동안 방송과 언론의 관심으로 집중 노출되 큰 마케팅 효과를 봤음.

이번 대회는 ESPN, 스타TV 등 글로벌 위성방송과 각국의 지역방송을 통해 중계돼 총 100여개 국가에서 20억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우선 개최지인 남아공법인의 경우 PDP TV와 VCR 등의 판매호조와 함께 남아공을 대표하는 주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밝혔음. 특히 이번 크리켓 월드컵 기간에 남아공 GSM사업 자인 MTN과 공동협력을 실시해 단기간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음. 이밖에도 LG전자는 LG컵 축구대회, 크리켓 후원 등과 같은 차별화된 현지 밀착 마케팅 등에 협업하여 올해 LG가 명실상부한 남아공의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았음.

LG전자는 2004년에는 프리미엄 마케팅 활동에 주력, 올해 20%로 예상되는 프리미엄 제품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음.

3. LG전자 이집트현지법인 성공사례


현재 한국인 관리자 4명을 포함하여 이집트종업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DY 1,000,000개, FBT 1,500,000개, Tunner 1,200,000개 및 Plastic Parts 8,000,000개를 생산하여 내수판매와 함께 인근국으로도 다량 수출하고 있음.


<시사점>
성공요인으로서는 첫째, TV부품산업이 전무한 이집트시장 선점공략, 둘째, 능력있는 파트너선정 및 원활한 관계유지, 셋째, 경기적인 기술지도, 철저한 A/S 등으로 거래 선과의 신뢰구축등이 손꼽히고 있음. 현재 이집트 기술대학생들의 간학코스가 될 정도로 이집트 부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뿐 만 아니라,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 중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등 이집트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
투자진출 성공사례 (비닐장판 공장)

-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과 수요 예측, 그리고 과감한 현지 투자 -

엔제이: 태우장판 (주)
생산품목: 비닐 장판
진출년도: 1997년도

태우장판 (주)은 일찍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 비닐생산 설비를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폭우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침하,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다방면의 대체 진출시장을 물색하게 되었다.

비닐장판의 경우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진출을 과감히 추진하여 아프리카 여러 국가중에서도 시장규모가 가장크고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이 큰 나이지리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공급 부족, 적은 폭동 등 정치적 불안과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추변의 우려와 만류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도는 아프리카 지역 여러 국가의 보편적인 사항이며 이에 반해 나이지리아가 인구가 1억2천만명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동종의 비닐장판 공장이 없어 판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판단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 후 국민소득이 향상될 경우 비닐장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 설비를 포함, 약 500만불 규모의 대 나이지리아 투자를 과감히 단행하였다.

투자초기에는 당초 예상한 대로 노동자의 저열한 교육수준과 대인간의 의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열악한 사회 인프라 및 치안불안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용인들을 상대로한 구체적인 기술교육과 대인 친화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다.
또한 생산설비 완료후 초기 생산품목의 선정은 낮은 국민소득 고려, 저가제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마간의 시간이 흘러 후 동사의 판관은 정확히 맞아 떠어져 어느시점부터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지로에 이르게 되었다. 투자 후 4~5년이 경과한 현재 동사의 연간 매출액은 1백만불이 넘어서고 있으며 아예 구매자가 현금을 미리 지불해야 제품을 공급할 정도로 판매 수요가 희미하였다. 현재는 비단 나이지리아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들까지로 판로를 확장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요인은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과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한 과감한 현지 투자의 결과가 주효를 미친 것이다.
지사화업체 진출성공 사례

(주)국제산업전지 성공사례

자동차 박테리 전문업체인 (주)국제산업전지는 지난 2002년 4월 경상북도 창원시에 주판하여 파견한 남유럽시장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알제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자동차 박테리의 높은 수요만이지만 알제리 바이어로부터 상담 요청이 쇠도하였다. 상담 요청이 쇠도하여 일부 업체는 상담을 취소해야 했을 뿐 아니라 알제리를 출발하는 당일 날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동차 박테리의 알제리 시장 개척가능성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상담중 받난 알제리 바이어의 중심으로 F/U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무역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002년 7월 알제무역관의 지사화업체로 가입하게 되었다.

지사화업체 가입 이후 시장개척 활동이 본격 추진되었다. 우선 한국업체에 가격리스트를 요청하였다. 알제리는 소득이 낮은 관계로 가격이 가장 우선시되는 철저한 가격 위주의 시장이다. 무역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쉽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 4~5개사로 압축하여 가격을 송부하고 나서 가격경쟁력을 물어 보았다. 모든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알제리 바이어가 품질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국업체의 수출 국가와 지금까지 클레임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기술개발현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가면서 설득하였다. 알제리 바이어는 한국업체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전문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알제리 바이어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무역관으로 남겼다. 즉시 알제리 바이어에게 시사 المتحدة를 단속하기 위해 구입할 수량과 모델을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 바로 알제리 바이어부터 답신이 왔다. 한국으로 냅니다 전함과 아울러 P/I를 요청하였다. 한국시간이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무역관에 회신이 왔다.

라지막으로 알제리 바이어는 해당 제품의 사진을 급히 요청하였다. 사진을 보고 최종 주문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다. 사진에 꼼 작고 묘어 보니 제품 사진에 <MADE IN KOREA>라는 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알제리에는 <MADE IN TAIWAN, CHINA>라는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량으로는 한 컨테이너 금액으로는 $24천 달러이다. 금액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시험 주문이 성공하여 한 컨테이너 물량의 추가 주문을 받아 놓고 있다. 알제리 바이어는 지불 방법의 타결로 매달 2 컨테이너 이상 수입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성공의 비결은 한국업체의 완벽한 카타로그 구비, 높은 가격경쟁력 및 신속한 회신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카타로그는 핵심은 일로 보일 수 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모델별 현황을 파악하고 제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알제리 바이어는 카타로그를 통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싶어한다. 알제리 바이어는 제조업체와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 무역상을 키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필수적이다. 알제리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 시장 개척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업체의 신속한 회신이 중요하다. 신속한 회신은 바이어에게 높은 신뢰를 주
기 때문이다. 한편 알제리 바이어와의 거래 추진시에는 지불방법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알제리 바이어들은 외상 거래를 선호한다. 즉 물건을 먼저 받고 은행을 통해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외상거래하면 바로 돈을 펨게 된다고 생각되나 알제리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첫째로 알제리는 금융분야가 낙후되어 있어 L/C 개설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각종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연히 상품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인도 기일이 늦어져 실패에 물건을 못 파는 수가 발생한다. 알제리 바이어들은 인근 유럽산과 비교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럽 바이어들은 알제리 바이어와의 거래에 D/P 거래를 당연시한다.
목  차

1. 서 론

2. 아프리카 경제현황

3.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 (NEPAD)
   1. NEPAD 승인 경위
   2. NAI 또는 NEPAD의 구체적 내용
   3. NEPAD의 진전 상황
   4. G8 정상회의 NEPAD 지원 대책
   5.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의 자구노력 NEPAD 지원

4.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아프리카의 자유무역지대 (FTA)
   1. 아프리카 주요 경제 공동체
   2.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출범
   3. 로메협정과 코토누 협정

5.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1. 대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2. 대아프리카 경제진출방안

6. 결 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과 자유무역지대(FTA)

시상현*

1. 서론

아프리카대륙은 53개국의 독립국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대륙으로 가장 많은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구는 세계 인구 63억의 13%에 해당하는 약 8억의 주민이 아프리카대륙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외교적으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과 자원 보유 등 경제력이 있는 10여 개 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정과 빈곤 때문에 매우 어려운 난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정에 처해 있다.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쿠데타와 독재 정치 집권 그리고 부정부패가 반연하고 있으며 또한 곳곳에서 내전과 분쟁, 이로 인한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복합되어 많은 나라들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악화되는 경제적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대륙의 53개국 중 북아프리카지역과, 남아공화국, 보츠와나, 모리셔스, 가봉, 캐나 등 경제적 장기력이 있는 10여 개국을 제외하고는 빈곤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34개국이 UN에서 지정한 최빈국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으로서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연간 개인소득이 800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하루에 한 사람이 2달러 미만의 생계비라는 계산이다. 따라서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별 경제개발계획은 물론 지역별 각급 경제 협력기구와 AU, UN, OECD등 국제기관 그리고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륙 전체의 제1차 산품 수출부진에 직면하여 농산물 생산은 현저히 감소되고, 지하경제가 번창하는 등 민생용는 안습을 겪고 있다.

셋째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대두를 인하는 점이다. 빈곤, 기아, 질병(AIDS 포함), 그리고 무기와 마약의 밀매, 아동 강제노동, 애환, 소년여자 차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발미어 앞으로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허술한 주권행 사에 그칠 뿐 주민들의 생존은 계속 위협을 받을 것이며 당면한 현실적 과제의 해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문학연구센터 아프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결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지만 21세기를 맞이하여 아프리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뉴 밀리니엄을 맞이하여 ‘아프리카 단결기구’(OAU)가 ‘아프리카 연합’(AU)로 바뀌었고, 가장 시급한 경제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아프리카인들의 자존을 위한 방안으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과 역내의 자유무역지대(FTA) 설립을 통한 교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존의 강대국에 대한 막연한 의지에서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건설’을 주장하는 아프리카 시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2. 아프리카 경제현황

2001년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라틴 아메리카대륙의 경제적 시련과 대조적 2001년 아프리카 경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경제를 견인하는 남아공을 비롯하여 보츠와나, 모잠비크, 세네갈, 카메룬, 모리셔스, 탄자니아, 가나, 우간다 등이 모두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치 불안도 크게 해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점바브웨와 코트디부아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 추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국민총생산액(GDP)은 2001년 4.3%가 증가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0.5%가 늘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와 재정적지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2

| 표 1 GDP 성장 | 1998-2002 |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아프리카 | 3.1 | 3.2 | 3.5 | 4.3 | 3.1 |
| 하위지역 | | | | | |
| 북부아프리카 | 4.4 | 3.5 | 4.1 | 5.8 | 2.8 |
| 서부아프리카 | 3.6 | 3.2 | 2.7 | 3.3 | 3.1 |
| 중부아프리카 | 4.9 | 4.4 | 4.4 | 4.9 | 4.0 |
| 동부아프리카 | 2.5 | 4.1 | 3.1 | 5.0 | 3.5 |
| 남부아프리카 | 1.7 | 2.2 | 3.0 | 2.4 | 3.3 |

Data are weighted by country GDP relative to overall African GDP
자료: ECA

한편, 임차산품 의존형 국가들은 서로 엇갈린 성과를 거뒀다.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등 석유수출국들은 고유가의 혜택을 많이 입었으며, 남아공, 가나,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코코아 생산 국가들도 높은 국제가 덕택을 많이 봤다. 그러나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베냉 등과 같은 커피와 원면 생산 국가들은 가격하락 때문에 수출 감소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남아공이나의 경우 고유가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특히 석유산업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저수자 국가들 중에서는 나이지리아의 경우 고유가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02년도 아프리카 대륙의 GDP 증가율은 2001년 추정치보다 약 낮은 3.1%에 그쳤다. 국제 임차산품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2002년 국제교역량은 2001년보다 5.7~6.1% 정도 늘어나 아프리카는 7% 증가율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1년도 아프리카의 대E.U. 지역 수출액은 약 580억불로 대륙 총수출액 1,257억달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지역 수출액은 각각 223억달러와 170억달러를 차지하였고,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호주 등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규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022억달러, 라틴 아메리카의 853억달러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수출이 차지한 것은 알할 것도 없이 투자 인프라가 불비하고 내수시장이 수이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부패한 정부관리, 만연된 부패라는 인적요소도 복합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022억달러, 라틴 아메리카의 853억달러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가 차지한 것은 알할 것도 없이 투자 인프라가 불비하고 내수시장이 수이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부패한 정부관리, 만연된 부패라는 인적요소도 복합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022억달러, 라틴 아메리카의 853억달러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가 차지한 것은 알할 것도 없이 투자 인프라가 불비하고 내수시장이 수이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부패한 정부관리, 만연된 부패라는 인적요소도 복합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022억달러, 라틴 아메리카의 853억달러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경제적 전망은 전통적인 제약과 한계에 시달리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어 있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인 석유와 코코아의 국제가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균형성, 부패와 부패에 의한 해외투자 증감,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경제발전이 제한되어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적 전망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약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은 국제시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성공성을 위한 정책적 및 전략적 확립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호탄을 박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 및 천연가스 역시 세계 매장량의 각각 28%, 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able>
<thead>
<tr>
<th></th>
<th>경제규모(GDP)</th>
<th>수출</th>
<th>인구</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개도국내 비중</td>
<td>세계적 비중</td>
<td>개도국내 비중</td>
</tr>
<tr>
<td>개도국(125)</td>
<td>100.0</td>
<td>37.0</td>
<td>100.0</td>
</tr>
<tr>
<td>1. 아프리카(51)</td>
<td>8.6</td>
<td>3.2</td>
<td>10.3</td>
</tr>
<tr>
<td>. 사하라남아프리카(48)</td>
<td>6.6</td>
<td>2.4</td>
<td>7.6</td>
</tr>
<tr>
<td>2. 아시아개도국(25)</td>
<td>58.3</td>
<td>21.6</td>
<td>46.2</td>
</tr>
<tr>
<td>. 중국</td>
<td>31.2</td>
<td>11.6</td>
<td>18.4</td>
</tr>
<tr>
<td>. 인도</td>
<td>12.6</td>
<td>4.6</td>
<td>3.9</td>
</tr>
<tr>
<td>3. 중동(16)</td>
<td>10.5</td>
<td>3.9</td>
<td>20.0</td>
</tr>
<tr>
<td>4. 중남미(33)</td>
<td>22.6</td>
<td>8.4</td>
<td>22.7</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h>
<th>세계적 비중</th>
<th>주요 보유국</th>
</tr>
</thead>
<tbody>
<tr>
<td></td>
<td>세계 매장량</td>
<td>대비 비중(%)</td>
</tr>
<tr>
<td></td>
<td>대비 비중</td>
<td>(%)</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th>
<th>대비 비중(%)</th>
<th>주요 보유국</th>
</tr>
</thead>
<tbody>
<tr>
<td></td>
<td>대비 비중</td>
<td>(%)</td>
</tr>
</tbody>
</table>

아프리카 경제권이 오랜만의 정치적 안정을 배경으로 국제 상품시세 인상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근본적인 비즈니스 환경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세계은행은 올 4월 2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올 경제성장을 3%로 전망하였다. 이는 올 1월의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3.2%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나 지난해의 2.6%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2002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국가들 지도의 대외적 요소보다는 국내정치 혼란, 기상이변 등의 대내외적 요소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다. 특히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내전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악화되었으며 또한 인근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도 서부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으로 경제성장이 악화되었다. 또한 남부 및 중부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감소되어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기아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밖에에도 에이즈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대단하다. 에이즈는 주로 노동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 지역 국가들의 생산성을 멀어뜨리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은행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들어 2003년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이 지역의 2003-04년 기공조건이 지난해 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생산의 증가가 기대된다. 둘째, 이 지역 국가들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의 경기가 2004-05년 중에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수입수요 증가로 이 어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증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향후 2년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의 수출수요가 속하는 비무기적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서 점진적이지만 아프리카 경제의 부상을 기대해 볼만하다.

3.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NEPAD)

1) NEPAD 승인 경위


- 265 -

Omega Plan의 요지
Wade 세네갈 대통령이 제안한 Omega plan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아프리카 각국이 기울인 독립 이후 발전 노력은 서방세계 등 외국의 원조 의존 및 이에 따른 외제 증가, 외제 탕감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투자가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공항,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형성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또한 농업생산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 보건 체제의 확립도 아프리카 발전의 조건이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행에는 사회기반 시설 및 인적 자원 육성 등을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서방 세계의 장기 저리융자에 의한 투자가 건요한 바, 아프리카는 국가별, 지역별, 투자 소요를 파악하여 이를 UN 총회 등에서 승인하고 이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MAP의 요지
비슷한 시기에 남아공 음베키(Mbeki)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르트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및 오바산조(Obasanjo)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이 만성적 악순환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 (African Renaissance)를 위한 새천년 행동계획(Millenium Action Plan : MAP)을 제시하였다. OAU는 이들 국가원수들에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임무를 부여함에 따라, 양 계획이 일종의 경쟁 관계에 처하게 되었다.8) 아프리카의 발전은 세계경제에 아프리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좌우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개혁과 이에 따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MAP의 요지이다. 아프리카인에 의한 개혁조치는 평화 및 민주주의 체제 확립, 인권존중, 보건 및 교육수준 향상, 교역 신장, 질병 완치 및 신기술 증진 등이 포함된다.

7 http://www.nepadns.org/entry.html. about nepad 참조
2) NAI(또는 NEPAD)의 구체적 내용

NAI(또는 NEPAD)는 제1장 서문, 제2장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제3장 아프리카 지역자들의 공동 책임사항, 제4장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제5장 행동계획, 제6장 신클로벌 파트너십(10개항), 제7장 전체 계획의 실시 일정, 제8장 결론(향후 최초 6개월간의 스케줄)으로 된 상대한 분량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9)

제1장 서문
NAI(또는 NEPAD)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 지속적 성장과 개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지향하는 아프리카 지역자들의 서약, 세계화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프리카를 구출하고자 하는 아프리카인 자신들의 결의를 원동력으로 삼는다. 또한 아프리카는 외부 원조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는다. 공동 책임에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아프리카는 지구의 안정에 위협적 요인이 아프리카인의 운명은 아프리카인 스스로가 결정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아프리카인의 노력을 지원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의 주요한 조건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사회에서는 아프리카인이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인권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의 주요한 운명은 아프리카인 스스로가 결정한 다. 국제사회에서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지지 보완해 주기 바란다.

제2장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위치를 고려하면 ① 광산들 등 천연자원, ②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도가 큰 열대우림, ③ 고생물학적, 고고학적 유산, ④ 다양하고 풍부한 전통문화를 보유한다. 대륙의 빈곤을 초래한 주요인은 식민지주의, 냉전구도의 유산, 독립이후의 정책적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자들의 식민이 낡고 부패가 만연하여 더욱 빈곤화 현상은 악화되고 있다. NEPAD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개발에 았어 자구노력을 촉구한다. 즉 아프리카는 ‘선의의 지원국들의 보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입장’에 서어야 한다.

3장 아프리카 지역자들의 공동 책임 사항
민주주의 등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통합을 위해 약속한 바와 같이 새로운 아프리카 지도층이 등장하여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주민들을 대

---

9 http://www.nepadsn.org/entry.html 참조

- 267 -
리하여 NEPAD를 실시할 아프리카 지도층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① 아프리카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의 강화 ②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호 및 촉진 ③ 거시경제상의 안정(특히 재정과 통화정책) ④ 법의 집행과 법질서의 유지능력 강화 ⑤ 교육, 연구 및 보건(특히 AIDS 등 감염)에 대한 적극 대응 ⑥ 여성의 지위 향상 ⑦ 제조업의 진흥과 농산물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 증대

제4장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개발의 전제 조건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선정(good governance), 건전한 경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 인재 개발이 관건이며, 지역간 협력과 지역 통합을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다음 분야가 같다.
① 인프라스트럭처 :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한 기본적 대처 ② 기술정보(ICT) : 2005년까지 전화접속률 배증(100명당 2명) 목표 ③ 인재개발(특히 보건, 교육 분야) : 건강은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며 교육은 시설이 부족한 상태 ④ 문화 :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의 보호 육성 ⑤ 농업 : 생산성 증대, 관개 시설, 지방 기간시설 확충과 주민 구매력 향상 ⑥ 수출다변화 : 일자산업에 무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가공업 건강 ⑦ 시장 접근 : 아프리카 산품의 대선진국 시장 약세스를 개선

자원의 운용과 관련
① 지축 경력, 정부지출의 잡감, 효과적 정세, 자본 유출 없는 환경의 경비 ② 자금 유동의 강화,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ODA의 증액과 제무량감이 중요하다.

<수치상의 목표 설정>
① 15년간 평균 연간 경제 성장을 7% 달성하고, 따라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 목표를 달성한다.

제5장 행동계획
개발의 전제 조건
기존의 아프리카 기관, 지역기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 특히 분쟁 예방과 관리, 그 해결 매개인급 그리고 평화 유지, 평화 창조, 평화 강화, 분쟁 이후의 화해와 복구, 소형 무기 및 지뢰의 확산 금지 등을 중시.

민주주의와 통치
NEPAD 참가국은 민주주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 성실성, 민권존중, 준법 통치에 따른 모든 원칙에 의거, 정치적, 행정적 틀을 강화. 참가국은 선정(good governance)의 기본적인 기준을 약속하는 한편 정치개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중시.

경제정책과 조직 운영
NEPAD 참가국의 경제, 재정운영, 조직운영의 절을 향상시킴. 재무장관은 중앙은행과 테스크 포스(TaskForce)팀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각국과 각 지역의 경제정책 및 조직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경제운영과 조직 운영의 기준 등을 제언하고 있다.

제6장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아프리카 각국이 분리한다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선진국들은 아프리카를 발전시킴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의 잠재적 사회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

아프리카는 선진국들과 각 국제기구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하여 이들과 개발 파트너리본사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즉 각 국가별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원조국과 수혜국 쌍방이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선진국들간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트너십은 잘 유지되어야 하며 아프리카측에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제7장 NEPAD의 실시
시행의 우선순위별 프로그램으로서 전염병 대책, 재무구제, 시장 접근을 들 수 있으 며, 에너지, 농업, 민간경제 활성화, 인프라스트럭처와 지역 통합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의 실시를 위한 아프리카 정상평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상평의회는 NEPAD 실시에 따르는 적절한 매개인급을 AU에 권고하고 있다. 이 평의회의 역할은 대륙 전체의 전반적 연구조사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영역을 인정토록 하고 있 다.

제8장 결론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NEPAD를 통해 일반 시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평화와 안 정, 민주주의적 견인한 경제 운영, 인간중심의 개발 촉진, 개발에 공동 이익에 부합 되도록 한다는 데 대하여 서약하였다. 아프리카는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며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공동책임과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을 추구한다. 이
제학에 의거 아프리카의 쇠퇴한 아동들에게 ‘21세기는 진정한 아프리카 재생의 시기’라는 희망을 주고자 한다.

3) NEPAD의 진전 상황

2001년 10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NAI 정상회담은 NAI를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로 공식 명명하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을 AU 정상회의로 하였다. 그 밑에 15개 아프리카국가 정상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4회, 북서부, 중부, 동부, 남부아프리카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10)

운영위원회는 오바산조(Obasanjo)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부트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과 와데(Wade) 세네갈 대통령이 부위원장이 맡았다. 또한 그 하부 조직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구성은 NEPAD를 창안한 5개 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대표와 5개 분야의 working groups 으로 되어 있다. 5개 분야는 (1) 인프라스트럭처 (2) 평화와 안보 (3) 정치, 경제 행정 (4) 시장 접근 (5) 금융과 운행이다.11)

NEPAD의 상설 사무국은 프레토리아에 두고 납아공이 선정한 인사 5명이 행정, 조정, 통신, 홍보,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개발은 뒷보면서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소위 Digital Divide 현상으로 아프리카의 개도국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세계화 운동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저도자들은 자체 개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곧 NEPAD이다.

NEPAD에 의하면 대륙전체가 향후 15년간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빈곤을 퇴치하며 외국자본을 연간 640억불을 유치하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12) NEPAD의 실천을 위해 2002년 6월 15일에 도카르에서 아프리카 20개국 지도자들과 국제사회의 이해인사 및 UN 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갖고 빈곤 탈출을 위한 NEPAD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2002년 6월 26-27일 캐나다 G8 연례정상회의에 대해 NEPAD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아프리카 산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하였다.

한편 2002년 같은 시기에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13개국 정상(알제리, 콩고, 가봉, 에티오피아, 말리, 모리셔스 등)들이 모여 NEPAD 실천과 관련 “경제를 맞받침할 민주적 정치 체제 확립을 위해 비정부 간호 기구”를 설립하는데 합의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비한 상태이다.

12 http://www.nepadsn.org

참조
다. 이어들 정상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원칙과 규정 초안에도 서명하였다. 이밖에 말리, 나지르, 세네갈, 기니, 부르키나파소 5개국은 G8 정상회의와 함께 2002년 6월 25일 말리의 시골마을 시비(Siby)에서 4일간 “빈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G8정상회의가 실질적 아프리카 원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13)

4) G8 정상회의 NEPAD 지원 대책
   2002년 6월 26-27일 캐나다 카나니스키스에서 열린 선진 7개국과 러시아 등 8개국의 연례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 빈곤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회의 중 힘을 아프리카 빈곤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하였으며, 이 문제 퇴치에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세네갈 4개국 대통령과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을 참석토록 했다. 미국은 제도국지원개발원조조를 2003년도 세계안보대회 주의의 100억불을 150억불로 증액하여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처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과 서부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 1988년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이 일어난 탄자니아와 케냐 등도 포함하여 태러 대응책의 일환으로 삼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한 아프리카의 식수, 교육, 보건 개선을 위한 원조 계획을 제시하고 기타 G8 정상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지역 발전을 돕고 전쟁과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창설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14)
   또한 이번 G8정상회의는 2001년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투자유치,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과 NEPAD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15)

13 한겨레, 2002.06.24
14 중앙일보, 2002. 06. 28
15 “NEPAD 이행에 관한 선언문”
   NEPAD 이행과 관련한 G8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신정(good governance) 이행 감시 체제(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 APRM)의 기본원칙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 참여를 촉구하는 “NEPAD 이행에 관한 선언문”을 제작하였다.
   APRM은 이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국가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경제, 기업부문 선정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Democracy, Political, Economic and Corporate Governance)에 포함된 선언의 기준에 참여국이 향후 내용을 기반으로 조만큼씩 점검하는 4단계의 심사단(Panel)에 의해 검사하는 제도이다.
   APRM 참여국은 “민주주의, 정치, 경제, 기업부문 선정에 관한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작성한 후, 심사단이 정기적으로 4단계의 심사를 거친다.
   NEPAD “국가, 정부수반 이행위원회”(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Implementation Committee) 위원국 수호를 기존의 15개국에서 20개국(5개 지역별로 1국씩 증가)으로 증대한다.
<표 4>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액 (단위: 100만불)

<table>
<thead>
<tr>
<th>국가</th>
<th>2000년(GDP 대비율)</th>
<th>2001년(GDP 대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일본</td>
<td>13,508(0.28)</td>
<td>9,678(0.23)</td>
</tr>
<tr>
<td>미 국</td>
<td>9,855(0.10)</td>
<td>10,884(0.11)</td>
</tr>
<tr>
<td>독 일</td>
<td>5,030(0.27)</td>
<td>4,879(0.27)</td>
</tr>
<tr>
<td>영 국</td>
<td>4,501(0.32)</td>
<td>4,359(0.32)</td>
</tr>
<tr>
<td>프랑 스</td>
<td>4,105(0.32)</td>
<td>4,293(0.32)</td>
</tr>
</tbody>
</table>

자료: G8정상회의

<표 5> 주요 아프리카 국가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달러)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아프리카 전체</td>
<td>4,320</td>
<td>5,835</td>
<td>10,744</td>
<td>9,021</td>
<td>12,821</td>
<td>8,694</td>
<td>17,165</td>
</tr>
<tr>
<td>알제리</td>
<td>260</td>
<td>171</td>
<td>412</td>
<td>1,114</td>
<td>2,471</td>
<td>879</td>
<td>1,119</td>
</tr>
<tr>
<td>이집트</td>
<td>632</td>
<td>636</td>
<td>887</td>
<td>1,065</td>
<td>2,919</td>
<td>1,235</td>
<td>510</td>
</tr>
<tr>
<td>리비아</td>
<td>37</td>
<td>-136</td>
<td>-82</td>
<td>-150</td>
<td>-118</td>
<td>-142</td>
<td>-101</td>
</tr>
<tr>
<td>모로코</td>
<td>428</td>
<td>357</td>
<td>1,079</td>
<td>333</td>
<td>850</td>
<td>201</td>
<td>2,658</td>
</tr>
<tr>
<td>수단</td>
<td>13</td>
<td>0</td>
<td>98</td>
<td>371</td>
<td>371</td>
<td>392</td>
<td>574</td>
</tr>
<tr>
<td>뮌니지</td>
<td>408</td>
<td>351</td>
<td>365</td>
<td>668</td>
<td>368</td>
<td>779</td>
<td>486</td>
</tr>
<tr>
<td>안골라</td>
<td>260</td>
<td>181</td>
<td>412</td>
<td>1,114</td>
<td>2,471</td>
<td>879</td>
<td>1,119</td>
</tr>
<tr>
<td>베냉</td>
<td>47</td>
<td>25</td>
<td>26</td>
<td>35</td>
<td>61</td>
<td>97</td>
<td>131</td>
</tr>
<tr>
<td>보르와나</td>
<td>-24</td>
<td>70</td>
<td>100</td>
<td>96</td>
<td>37</td>
<td>57</td>
<td>57</td>
</tr>
<tr>
<td>코트디부르</td>
<td>116</td>
<td>302</td>
<td>450</td>
<td>416</td>
<td>381</td>
<td>255</td>
<td>258</td>
</tr>
<tr>
<td>에티오피아</td>
<td>9</td>
<td>22</td>
<td>288</td>
<td>261</td>
<td>70</td>
<td>165</td>
<td>20</td>
</tr>
<tr>
<td>케냐</td>
<td>20</td>
<td>13</td>
<td>40</td>
<td>42</td>
<td>42</td>
<td>127</td>
<td>50</td>
</tr>
<tr>
<td>레소토</td>
<td>213</td>
<td>286</td>
<td>269</td>
<td>262</td>
<td>163</td>
<td>119</td>
<td>118</td>
</tr>
<tr>
<td>마다가스카르</td>
<td>15</td>
<td>10</td>
<td>14</td>
<td>16</td>
<td>58</td>
<td>70</td>
<td>108</td>
</tr>
<tr>
<td>말라위</td>
<td>15</td>
<td>44</td>
<td>22</td>
<td>70</td>
<td>60</td>
<td>45</td>
<td>58</td>
</tr>
<tr>
<td>말리</td>
<td>22</td>
<td>47</td>
<td>77</td>
<td>43</td>
<td>51</td>
<td>106</td>
<td>103</td>
</tr>
<tr>
<td>모르셔스</td>
<td>21</td>
<td>37</td>
<td>55</td>
<td>12</td>
<td>49</td>
<td>277</td>
<td>12</td>
</tr>
<tr>
<td>모잠비크</td>
<td>28</td>
<td>73</td>
<td>64</td>
<td>235</td>
<td>382</td>
<td>139</td>
<td>255</td>
</tr>
<tr>
<td>나이지리아</td>
<td>96</td>
<td>129</td>
<td>84</td>
<td>77</td>
<td>111</td>
<td>153</td>
<td>99</td>
</tr>
<tr>
<td>나이지리아</td>
<td>1,097</td>
<td>1,593</td>
<td>1,539</td>
<td>1,051</td>
<td>1,005</td>
<td>930</td>
<td>1,104</td>
</tr>
<tr>
<td>세네갈</td>
<td>29</td>
<td>7</td>
<td>176</td>
<td>71</td>
<td>136</td>
<td>88</td>
<td>125</td>
</tr>
<tr>
<td>남아공</td>
<td>301</td>
<td>818</td>
<td>3817</td>
<td>561</td>
<td>1,502</td>
<td>888</td>
<td>6,653</td>
</tr>
<tr>
<td>우간다</td>
<td>44</td>
<td>121</td>
<td>175</td>
<td>210</td>
<td>222</td>
<td>254</td>
<td>229</td>
</tr>
<tr>
<td>탄자니아</td>
<td>39</td>
<td>149</td>
<td>158</td>
<td>172</td>
<td>183</td>
<td>193</td>
<td>224</td>
</tr>
<tr>
<td>잠비아</td>
<td>122</td>
<td>117</td>
<td>207</td>
<td>198</td>
<td>163</td>
<td>122</td>
<td>72</td>
</tr>
<tr>
<td>잠바브웨</td>
<td>34</td>
<td>81</td>
<td>135</td>
<td>444</td>
<td>59</td>
<td>23</td>
<td>5</td>
</tr>
</tbody>
</table>

* 자료원: UNCTAD

<표 6> 아프리카 10대 직접투자 국가 (단위: 백만달러)
5)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의 자구 노력 NEPAD 지원

이제는 우리나라로도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치에 적합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지원, 각종 인도적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 적극 더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개도국 개발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구사업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태평양은 현재 세계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의 GDP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5% 및 1.5%에 불과하다. 지구촌은 지금 조용한 위기(silent crisis)를 맞고 있다. 지구촌 문제는 방치해 두면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개발에 중점을 두는 개도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의 발전을 지지하는 소비자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프리카의 자구 노력인 NEPAD를 지원하는 국제 다자간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New Frontier로서 우리 상품의 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 차원의 양자간 경제협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아프리카의 자유무역지대(FTA)

1) 아프리카 주요 경제 공동체

(1) 서아프리카경제정상회의, 아프리카경제 공동체16)

---

16 EUROPA, 2000, “Africa South of the Sahara 2000”, London : Europa Publication Ltd. p.120.
(1) 배경
서아프리카개국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는 서부아프리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안정 유지 및 증진, 회원국들 간 관계 촉진, 아프리카내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5년 5월 28일 창설되었다.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아부자(Abuja)에 본부를 두고 있다.

(2) 주요활동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의 경제적 통합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국내정책 조정, 통합프로그램의 실시, 경제, 재정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공동정책의 채택을 통한 경제연합의 창설, 공동시장의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및 의의

(2) 중앙아프리카경제관세동맹

(1) 배경

(2) 주요활동
UDEAC은 회원국들간의 상이한 경제개발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통합시장을 창설하

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국들간에는 CFA Franc (Franc of the financial cooperation in Central Africa)이라는 단일통화가 통용되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통한 경제통합이 촉진되고 있다. UDEAC은 경제동맹으로서 회원국들의 개발계획과 관광 및 운송정책을 조정하고 산업 및 농업분야와 우편 및 통신서비스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관세동맹으로서 역외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단일조세제도를 수립하여 역내 산업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3)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

전형 및 의의
UDEAC의 단일조세제도 도입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가 신규투자가 다른 회원국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UDEAC 탈퇴의사를 표명하는 등 경제통합의 성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 의 균등한 배분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

① 배경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PTA)는 동남아프리카의 지역기구로서 무역, 산업, 통화, 운송, 통신, 농업 등 경제활동 제분야에서의 협력 및 개발촉진을 목표로 1981년 12월 21일 체결된 PTA 설립조약이 1982년 9월 발효됨으로써 창설되었다. PTA에는 동남아프리카 지역의 1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보츠와나 등 3개국은 아직 PTA 설립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② 주요활동
PTA 회원국들은 역내에서의 무역장벽을 감소, 철폐시키고 관세협력을 도모하며 회원국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PTA는 공동시장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 목표로 또한 동남아프리카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체의 설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4)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① 배경
남부아프리카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는 1992년 8월 17일 나미비아의 윈트혹(Windhoek)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SADC 설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설립되었다. SADC는 1980년 4월 1일 남아프리카의 경제자유화를 위한 루사카(Lusaka)선언의 채택으로 설립된 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SADCC)를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SADC는 현재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츠와나의 가보론(Gaborone)에 본부를 두고 있다.

② 주요활동
SADC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지판사를 수행하고 있다. SADC는 그 동안 외국원조금의 조정을 통해 1993년 7월말까지 총 480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43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평가 및 의의
SADC는 여러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상당히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SADC의 회원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외무부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EU 등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문제가 해소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SADC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SADC는 종래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1 배경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은 회원국으로 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레소토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9년에 창설되어 아프리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체이다.

2 주요활동

남아공이 주도하는 공동관세구역으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을 남아공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츠와나는 76%, 스와질랜드는 94%, 나미비아는 86% 그리고 레소토는 88%를 남아공에 의존하고 있다.

위 4개국 중 나미비아를 제외한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레소토는 내륙국으로 SACU 지역의 수입관세는 대부분 남아공 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관세 수입에 대한 일정분을 회원국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는 이타 회원국의 주요 재정수입이 되고 있다.21)

(6) 동남아프리카 공동체(COMESA)22)

① 배경
COMESA는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공동체 시장으로 93년 11월 5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처음으로 PTA국가간 협약체결로 태동하게 됐으며 94년 12월 8일 말라위의 릴롱게에서 정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었다.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 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회원국간 교역증진, 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투자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조성은 물론 동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타 경제블록 및 교역대상국과의 협상력 강화로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목표와 활동

보츠와나 : 13%, 스와질랜드 : 51%, 나미비아 : 29.4%, 레소토 : 51.6%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은 남아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며 무역에 관한 대외 협상에서 남아공이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Comesa 진행과정
- 1965년: UN아프리카경제기구(ECA) 아프리카 동남부지역에 경제통합체 구성 제안
- 1978년: PTA창설 위한 각국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실무접촉 진행
- 1981.12.21: OAU의 르고스행동강령과 라소소최종법안의 제정에 의해 PTA창설
- 1993.11.5: PTA에서 COMESA로 진행추진 약관 통과
- 1994.12.8: COMESA 발족 (현재, 20개 회원국)
- 2000.10.31: COMESA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현재, 9개국 가입)
- 2004. 2. 까지 공동역외 관세를 갖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설립
- 2025년까지 화폐동맹 및 주민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지위 달성
- 레소토(97.4), 탄자니아(2000. 9) 탈퇴
-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은 당초부터 불참

- 277 -
COMESA의 기본 목표는 통합된 지역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및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협의체내 모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COMESA 회원국들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해당 회원국간 무관세 수출, 수입을 보장하게 됐으며 계속해 COMESA 내의 관세연합은 비COMESA국가들로부터 COMESA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공동관세 적용, Comesa Clearing House 내에 Payment Union 설치, 단일통화 도입을 통한 통화통행결성 및 단일비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table>
<thead>
<tr>
<th>명</th>
<th>정</th>
<th>출범</th>
<th>회원</th>
<th>주요목표</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he Arab Maghreb Union (AMU)</td>
<td>1989</td>
<td>2</td>
<td>모로코, 리비아, 모리타니아</td>
<td>지역 안정 보장 및 정책 조율, 장기화</td>
<td>활동 중단</td>
</tr>
<tr>
<td>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td>
<td>1994</td>
<td>12</td>
<td>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 카자흐스탄, 저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지비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스와힐리,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td>
<td>지역 통합을 통한 경제 번영, 내부 무역허가 철폐, 영향력 증대</td>
<td>아프리카 최대 지역 공동체, PTA (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조약이 발효 10년 후 공동시장으로 전환</td>
</tr>
<tr>
<td>The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CAS)</td>
<td>1985</td>
<td>10</td>
<td>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카보에, 콩고민주공,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로간, 상토메프리ений</td>
<td>경제협력 증진, 공동시장 설립</td>
<td>1985년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1992년 이후 활동 중단</td>
</tr>
<tr>
<td>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td>
<td>1975</td>
<td>5</td>
<td>베냉, 부르키나파소, 갤바발라,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소,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니에리아, 우간다, 토고</td>
<td>경제통합통합 설립, 경제적, 문화적 협력 증진, 경제안정 유지를 위한 경제협력 확대 포괄 일정</td>
<td>1983년 조약개정을 통해 공동시장, 단일통화제도 달성 및 서아프리카의회, 경제사회, 사회정원 설립을 위한 정책, 경제협력 확대 목표 설정</td>
</tr>
<tr>
<td>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td>
<td>1992</td>
<td>8</td>
<td>앙골라, 보르나도, 콩고민주공,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레라, 남아공, 스와힐리안,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td>
<t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및 안보 안보와 안보 지속적, 건강 및 강화</td>
<td>1980년 4월 설립된 남아프리카개발조직(SADC) CC를 대체</td>
</tr>
<tr>
<td>The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td>
<td>1965</td>
<td>3</td>
<td>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기리비아, 케냐, 우간다, 수단, 소말리아</td>
<td>거지 관계전쟁, 관리 및 해결, 무역, 투자 조리</td>
<td>1986년 발족한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rought and Development (IGADD)를 확대</td>
</tr>
<tr>
<td>The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 (CEN-SAD)</td>
<td>1998</td>
<td>2</td>
<td>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 차드, 저비, 사하르아라, 에리트리아, 기니비소, 말라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레라, 소말리아, 수단, 토고, 티비아, 잠비아</td>
<td>회원국간 협력 강화</td>
<td>회원국간 협력 강화</td>
</tr>
<tr>
<td>The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UEMOA)</td>
<td>1994</td>
<td>1</td>
<td>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소, 말라비, 나제리아, 세레라, 토고</td>
<td>회원국간의 경제 및 금융협력 강화, 거지경제 정책 수렴</td>
<td>제2, 제3, 유럽, 대외관세 적용, 2001년 단일통화, 금융정책 시행</td>
</tr>
<tr>
<td>공동체명</td>
<td>설립년도</td>
<td>회원국</td>
<td>주요 활동</td>
<td>홈페이지</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he Mano River Union (MRU)</td>
<td>1973.10</td>
<td>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3)</td>
<td>관세연합 설립</td>
<td>ECOWAS 회원국으로 구성, <a href="HTTP://www.manoriver.com">HTTP://www.manoriver.com</a></td>
<td></td>
</tr>
<tr>
<td>The 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CEMAC)</td>
<td>1994.3</td>
<td>카메룬, 중앙아, 찬도, 중앙아, 적도기니, 가봉 (6)</td>
<td>경제-통화동맹의 통 내에서 회원국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td>
<td>1964년 발족한 Central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UDEAC)</td>
<td></td>
</tr>
<tr>
<td>The Economic Community of Great Lake Countries (CEPLAC)</td>
<td>1976.9</td>
<td>부룬디, 킹고민주공화, 르완다 (3)</td>
<td>지역 경제협력 및 통합</td>
<td>ECCAS 회원국으로 구성</td>
<td></td>
</tr>
<tr>
<td>The Indian Ocean Commission (IOC)</td>
<td>1982.12</td>
<td>모도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시우스, 세이셸, 프랑스 (5)</td>
<td>지역경제협력 증진</td>
<td>SADC 회원국으로 구성</td>
<td></td>
</tr>
<tr>
<td>The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td>
<td>1992.12</td>
<td>보츠와나, 레소토, 남아공, 스와질랜드 (5)</td>
<td>자유무역 협정, 관세분역</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 *는 각 공동체의 공식 웹사이트

2)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출범

지난 '93년부터 꾸준 논의되어온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내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FTA; Free Trade Area)가 우선 회원국 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0년 11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어 이 지역의 상호 교역 및 물류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23) COMESA 가입 회원국 21개국 중 9개국 정상은 2000년 10월 31일 잠비아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회동을 갖고, 먼저 9개 회원국내 교역 관세를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해 전체 철폐로 합의하였으며, 2000년말까지 상호 무역자 임국방침도 추진하기로 하였다.24)

23 http://www.comesa.int/about/treaty/TR006.htm/view
24 제5차 정상회의(2000.10.31 루사카) 결과
자유무역지대 출범에 합의한 9개국은 잠바브웨를 비롯하여, 지부타, 아질트, 캐나,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수단, 잡비아 등이며, 나머지 12개국(앙골라, 부룬디, 코모로, 콩고,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중 6개국은 2001년 중 자유무역지대에 참여할 예정이고, 나머지 국가도 곧 동참할 것이라고 COMESA측은 발표하였으나 추가 참여하게 되는 세부 국가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COMES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11월 1일부터 9개 회원국내 재화 및 용역의 교류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입허가제, 수입분배제, 유행 배분제 등)을 철폐하며, 자유무역 지대 바이아입 회원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방침에 의거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음.
- 2000년말까지, 점차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제한적으로 화폐교류 추진.
- 2025년까지 공동 중앙은행에 의한 공동화폐 사용 추진 등이다.
2000년 9월 남아공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아프리카 개발동맹"(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1개국(앙골라,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남아공,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잡비아, 잠바브웨)도 역내 교역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협의를 가진바 있으나, 동기구내에서는 2012년에 들어서야 완전 철폐키로 되어 있고, 지난해 장벽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재 COMESA의 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아프리카 역내 교역촉진의 시발점이 되면서 동 기구내 회원국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역내 자유무역협정 출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미국은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2003년 5월 이미 시작

※ COMESA 특허관세 적용대상
- COMESA 특혜관세율(0% 세율 포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됨.
-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조건은 ①해당 수출 상품이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회원국에서 100% 제조된 경우, ②해당품이 회원국에서 제조되고, 동 제품과 중재greg에서 사용된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의 C.I.F. 가격 기준으로 총 원자재 비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③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동등하거나 가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단, 이하로는 45%로 유의함) 등임.
- 상기 특혜관세 적용기준에서는 수출업자는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판. 이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2004년 말까지 합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남아공이 주 대상국이지만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협정국가와도 동시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2000년 타결된 남아공과 EU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 남아공 수출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남아공 입장에서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 추세이고 미국과의 교역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판단하에 협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5개국에 대미 무관세 수출제도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국의 일반적인 시혜제도로 미국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줄 수 있으며 2008년 9월에는 제도 자체가 종료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는 AGOA 종료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영속성이 있을 만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남아공의 대미 수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25) AGOA는 남아공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AGOA법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AGOA법을 통한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아공 주재 미 상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개국중 35개 국가에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아프리카의 대미 무관세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83%가 증가한 약 2억 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특혜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 6천만달러,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 6천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 AGOA는 세계 최빈국이 모여있는 남부아프리카 48가

25 http://www.agoa.gov 참조
는 석유, 귀금속류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2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남부 아프리카의 AGOA를 통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오히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AGOA의 최대 수혜품목인 의류의 경우도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아프리카산 의류를 미국시장에서 볼 수 있는 횟수가 점차 많아 점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8> 미국의 최근 AGOA 법에 의한 수입
(단위 : 미 천달러)
자료: Compiled by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from official statistics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대미 수입</th>
<th>대미 수출</th>
</tr>
</thead>
<tbody>
<tr>
<td>1998</td>
<td>6,694</td>
<td>13,139.6</td>
</tr>
<tr>
<td>1999</td>
<td>5,568.5</td>
<td>14,024.9</td>
</tr>
<tr>
<td>2000</td>
<td>5,925.8</td>
<td>23,480.4</td>
</tr>
<tr>
<td>2001</td>
<td>6,963.0</td>
<td>21,291.5</td>
</tr>
</tbody>
</table>

(자료원 : 미 상무부)

한편, AGOA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남부 아프리카 수혜국가중 AGOA를 자국의 경기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케냐의 경우 AGOA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현재 1,200만달러의 신규 투자를 통해 약 2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향후 15만명의 연간 산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말라위의 경우도 최소 4,35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나미비아의 경우 향후 5년간 8,00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GOA는 수혜국가산 및 미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완제품의 대미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미 부자재를 친살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 공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레소토의 경우 AGOA 혜택이 확정되고 난 후 11개의 공장이 들어섰고 기존 공장도 점차 증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AGOA의 수혜조건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첫째 미국산 원 부자재를 사용하여 수해 대상국가에서 생산한 의류는 방향면제와 쿼터제한이 없고, 둘째 수해대상국가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의류도 관세는 면제되나 제도시행 첫해에는 미국의 통 의류수입의 15%까지 수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점차 연차별로 증가하도록 하고 있고, 셋째 저개발국가로 지정된 경우 특별법규(Special Rule)가 적용되어 원 부자재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혜택을 2004년 9월30일까지 누릴 수 있으며 쿼터는 두 번째 설명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넷째 원부자재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의류무게의 7%이내에 사용되어 지면 무관세,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지리아</td>
<td>5,819,603</td>
<td>2,540,190</td>
<td>5,044,368</td>
<td>5,409,660</td>
<td>2,340,602</td>
<td>4,634,726</td>
</tr>
<tr>
<td>남아공</td>
<td>4,235,974</td>
<td>1,884,610</td>
<td>2,268,099</td>
<td>1,342,594</td>
<td>556,955</td>
<td>744,904</td>
</tr>
<tr>
<td>가봉</td>
<td>1,622,021</td>
<td>770,149</td>
<td>841,671</td>
<td>1,145,627</td>
<td>608,356</td>
<td>499,642</td>
</tr>
<tr>
<td>레소토</td>
<td>321,475</td>
<td>142,708</td>
<td>170,080</td>
<td>318,029</td>
<td>142,208</td>
<td>166,497</td>
</tr>
<tr>
<td>콩고(DRC)</td>
<td>223,824</td>
<td>106,153</td>
<td>197,821</td>
<td>106,633</td>
<td>45,430</td>
<td>163,090</td>
</tr>
<tr>
<td>케냐</td>
<td>189,156</td>
<td>80,464</td>
<td>120,364</td>
<td>129,210</td>
<td>48,875</td>
<td>89,661</td>
</tr>
<tr>
<td>오리서스</td>
<td>280,433</td>
<td>133,581</td>
<td>150,466</td>
<td>114,292</td>
<td>55,236</td>
<td>64,238</td>
</tr>
<tr>
<td>마다가스카르</td>
<td>215,923</td>
<td>171,005</td>
<td>174,523</td>
<td>79,728</td>
<td>61,070</td>
<td>60,870</td>
</tr>
<tr>
<td>소와질랜드</td>
<td>114,464</td>
<td>39,772</td>
<td>68,784</td>
<td>81,252</td>
<td>28,986</td>
<td>53,914</td>
</tr>
<tr>
<td>카메룬</td>
<td>172,057</td>
<td>53,925</td>
<td>53,680</td>
<td>115,804</td>
<td>22,799</td>
<td>33,862</td>
</tr>
<tr>
<td>가나</td>
<td>115,641</td>
<td>64,337</td>
<td>50,516</td>
<td>34,830</td>
<td>22,904</td>
<td>25,718</td>
</tr>
<tr>
<td>코트디부아르</td>
<td>381,860</td>
<td>187,949</td>
<td>271,364</td>
<td>49,733</td>
<td>15,729</td>
<td>25,585</td>
</tr>
<tr>
<td>말라위</td>
<td>68,109</td>
<td>35,256</td>
<td>32,590</td>
<td>46,904</td>
<td>21,757</td>
<td>19,232</td>
</tr>
<tr>
<td>나미비아</td>
<td>57,353</td>
<td>19,511</td>
<td>33,654</td>
<td>1,717</td>
<td>136</td>
<td>9,203</td>
</tr>
<tr>
<td>보츠와나</td>
<td>29,732</td>
<td>11,151</td>
<td>6,555</td>
<td>4,578</td>
<td>1,881</td>
<td>2,239</td>
</tr>
<tr>
<td>모잠비크</td>
<td>8,160</td>
<td>1,382</td>
<td>1,973</td>
<td>5,916</td>
<td>17</td>
<td>1,707</td>
</tr>
<tr>
<td>예티오피아</td>
<td>25,659</td>
<td>14,217</td>
<td>16,630</td>
<td>3,230</td>
<td>1,349</td>
<td>1,448</td>
</tr>
<tr>
<td>카보베르데</td>
<td>1,811</td>
<td>1,025</td>
<td>1,983</td>
<td>51</td>
<td>0</td>
<td>870</td>
</tr>
<tr>
<td>탄자니아</td>
<td>25,343</td>
<td>12,219</td>
<td>12,457</td>
<td>1,293</td>
<td>572</td>
<td>769</td>
</tr>
<tr>
<td>우간다</td>
<td>15,197</td>
<td>5,682</td>
<td>10,557</td>
<td>32</td>
<td>15</td>
<td>487</td>
</tr>
<tr>
<td>세네갈</td>
<td>3,799</td>
<td>1,930</td>
<td>1,763</td>
<td>499</td>
<td>222</td>
<td>472</td>
</tr>
<tr>
<td>말리</td>
<td>2,583</td>
<td>709</td>
<td>1,319</td>
<td>342</td>
<td>90</td>
<td>112</td>
</tr>
<tr>
<td>잠비아</td>
<td>7,790</td>
<td>5,763</td>
<td>3,666</td>
<td>83</td>
<td>42</td>
<td>104</td>
</tr>
<tr>
<td>기니아</td>
<td>71,600</td>
<td>44,615</td>
<td>33,482</td>
<td>68</td>
<td>28</td>
<td>99</td>
</tr>
<tr>
<td>니제르</td>
<td>897</td>
<td>466</td>
<td>3,153</td>
<td>22</td>
<td>6</td>
<td>60</td>
</tr>
<tr>
<td>차드</td>
<td>5,700</td>
<td>2,017</td>
<td>2,650</td>
<td>0</td>
<td>0</td>
<td>36</td>
</tr>
<tr>
<td>지부티</td>
<td>1,915</td>
<td>962</td>
<td>327</td>
<td>23</td>
<td>0</td>
<td>9</td>
</tr>
<tr>
<td>갤바야</td>
<td>563</td>
<td>407</td>
<td>62</td>
<td>24</td>
<td>3</td>
<td>7</td>
</tr>
<tr>
<td>셰이셀</td>
<td>26,291</td>
<td>12,068</td>
<td>13,092</td>
<td>0</td>
<td>0</td>
<td>3</td>
</tr>
<tr>
<td>베냉</td>
<td>680</td>
<td>404</td>
<td>23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사마라리온</td>
<td>3,833</td>
<td>1,699</td>
<td>3,205</td>
<td>217</td>
<td>43</td>
<td>0</td>
</tr>
<tr>
<td>폰롭포린시스페</td>
<td>391</td>
<td>96</td>
<td>80</td>
<td>0</td>
<td>0</td>
<td>0</td>
</tr>
<tr>
<td>르완다</td>
<td>3,066</td>
<td>1,506</td>
<td>1,276</td>
<td>10</td>
<td>10</td>
<td>0</td>
</tr>
<tr>
<td>모리타니아</td>
<td>929</td>
<td>140</td>
<td>664</td>
<td>35</td>
<td>15</td>
<td>0</td>
</tr>
<tr>
<td>에리트리아</td>
<td>369</td>
<td>179</td>
<td>169</td>
<td>11</td>
<td>0</td>
<td>0</td>
</tr>
<tr>
<td>가네비소</td>
<td>35</td>
<td>23</td>
<td>1,843</td>
<td>0</td>
<td>0</td>
<td>0</td>
</tr>
<tr>
<td>중앙아프리카</td>
<td>2,004</td>
<td>614</td>
<td>1,126</td>
<td>192</td>
<td>0</td>
<td>0</td>
</tr>
<tr>
<td>총</td>
<td>14,056,26</td>
<td>6,348,883</td>
<td>9,596,943</td>
<td>8,991,729</td>
<td>3,975,336</td>
<td>6,599,535</td>
</tr>
</tbody>
</table>
한편, AGOA는 섬유산업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와 위험의 두 가지 상반된 점이 공존한다. 무관세 수출된 아프리카산 의류는 미국시장에서 극동산보다 최소한 17%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아프리카 국가의 대미 무관세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국 등 아시아 저임금 국가에 투자한 한국 투자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위험의 요소이다. 반면, 봉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플랜드, 중고 유휴 섬유설비, 의류 생산용 원재료 등의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대비, 유럽의 우회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의류업체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프리카 봉 제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까지 계획된 수혜기간 동안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 아프리카 국가의 불안한 현지 환경 환율동향, 정치, 사회 환경 및 낮은 노동생산성, 선채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숙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표 10> AGOA 수혜국 (2002년 현재)

| 벤닝 | 보츠와나* | 카메룬* |
| 가브로베르데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차드 |
| 공고 | 지부티 | 에리트레아 |
| 이디오피아* | 가봉 | 가나* |
| 기니아 | 기네비소 | 케냐* |
| 레소토*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 말리 | 모리타니 | 모리셔스* |
| 모잠비크*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 나이지리아 | 셰이젤 | 르완다 |
| 세네갈*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스와질랜드* | 탈자니아* |
| 우간다* | 잠비아* |

<표 11> AGOA 국가의 섬유제품 대미수출 (2000-2001)

<p>| 수출액 (백만달러) | 비공공 | 기타 | 전체 |</p>
<table>
<thead>
<tr>
<th>스와질랜드</th>
<th>레소토</th>
<th>마다가스카르</th>
<th>케냐</th>
<th>모리셔스</th>
<th>남아공</th>
</tr>
</thead>
<tbody>
<tr>
<td>2000년</td>
<td>32</td>
<td>140</td>
<td>110</td>
<td>44</td>
<td>245</td>
</tr>
<tr>
<td>2001년</td>
<td>48</td>
<td>215</td>
<td>178</td>
<td>65</td>
<td>238</td>
</tr>
<tr>
<td>수해율 (백만달러)</td>
<td>50</td>
<td>53</td>
<td>62</td>
<td>47</td>
<td>-3</td>
</tr>
<tr>
<td>수해율 (%)</td>
<td>17</td>
<td>60</td>
<td>52</td>
<td>80</td>
<td>16</td>
</tr>
<tr>
<td>아프리카산 작물비중</td>
<td>0</td>
<td>0</td>
<td>0</td>
<td>0</td>
<td>85</td>
</tr>
<tr>
<td>미국산 작물비중</td>
<td>0</td>
<td>0</td>
<td>0</td>
<td>0</td>
<td>5</td>
</tr>
<tr>
<td>기타외국산 작물비중</td>
<td>100</td>
<td>84</td>
<td>79</td>
<td>100</td>
<td>0</td>
</tr>
</tbody>
</table>
남아공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의 Mercosur,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과도 협정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는 최근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뒤진다면 국제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EU와 7년간에 걸친 협상에서 충격한 경험을 토대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관세동맹을 위한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6월 셋째 주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동아프리카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역내 국가가 25% 관세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케냐의 키바키(Kibaki), 탄자니아 음파카(Mkapa) 그리고 우간다 무세베니(Museveni)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 3국 대통령이 참가한 브룬디와 르완다 정상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EAC 역내국가간 관세협력은 공동체 정상회의 결정이 있을 11월 까지 준비가 된다. 현공 공동체 회장은 우간다 무세베나 대통령이 선임됐는데, 케냐의 전 대통령 모이(Moi)의 뒤를 이어 2004년까지 동아프리카공동체를 대표한다. 또한 동아프리카공동체는 이미 2003년 5월 인도와 무역 및 무역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측은 의약분야, IT분야, 농업,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이 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에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업분야에 합작투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기후가 주목된다.

동아프리카에는 인도출신 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어 인도와 동아프리카간 교역이 여타지역보다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세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양측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 로메협정과 코도누 협정

로메협정
1975년 2월 28일 아프리카 서부 토고공화국 수도 로메(Lome)에서 유럽연합(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원조협정이다. 1976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당시 유럽공동체(EC)의 9개국과 구 식민지 국가간의 협력과 효과적인 발전 논문고에 기반한 협정으로, 가격과 관세를 개방하여 상품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참조
27 http://www.kotra.or.kr
28 http://www.eu.or.kr/Work11A/Work11-1-1.htm

- 286 -

EU 측에서는 낙후된 이들 지역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관계로 간주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개정 조약 (Amsterdam Treaty)의 177조 6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의 관할 주무처는 위원회 산하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 (DG Development)의 역외국과 영토 (OCTs: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담당 부서에서 행한다. 더불어 인권사무국 (ECHO: Humanitarian Aid Office)의 정책 협조를 행한다. 아울러 EU에서 는 역내 회원국과의 정책 협조 그리고 UN 과 IMF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内容은 통상협정, 1차산품의 수출소득의 보증, 공업협력, 경제원조 등이 골자로 되어 있으나, 주목적은 ACP 여러 나라의 주요 1차산품 12품목, 즉 커피·코코아·망고·바나나·목화·참유(油)·코코넛·칠면조·홍차·목재·피혁·사계절삼 수출에 의한 소득의 안정화였다. 즉, 대련 EC 수출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액을 7.5% 이상 하회하였을 때에는 차액분을 EC측이 무이자로 보상·융자한다. 보상·융자를 받은 국가는 수출이 기준액을 상회하였을 때 반채(返済)한다. 또한, 후발개발도상국은 반채가 면제된다. EC가 이때까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맺고 있던 원내협정, 아르사협정을 개정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무역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로메협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옛 식민지인 이들 나라에 자유로운 생산품 수출을 허용했고 농산물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90~95년의 5년 동안 원조로 약 1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의 유럽경제 공동체와 ACP 그룹에 로메협정이 체결된 이후 EU측의 중요한 무역상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ACP의 EU시장 점유율은 당시의 절반가량인 4%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토누 협정

2000년 6월 아프리카 서부 베냉의 항구도시 코토누에서 체결된 코토누 협정은 EU와 총인구 6억5천만명의 78개 ACP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로메협정을 대체한 것이다. 로메 협정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서명국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컸다. 물론 포괄적인 원조와 무역 협정으로서의 기본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즉, ACP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적 개발을 도모하고 사회연대와 협력적인 신념아래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관계를 공고화, 다각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인 파트너쉽은 서명국사이의 평등, 주권인정, 호혜와
독립성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코토누 협정은 2000년 6월 베냉의 수도에서 조인되었으며, 체결장소를 기념하여 코토누라고 불린다. 조인식에서는 기존 ACP국가들 외에도 태평양 지역의 6개 국가가 추가로 협정에 서명하여, 총 77개의 ACP국가가 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연합과 ACP국가의 파트너십이 지난 25년간 80년대와 90년대의 새로운 도전에 한 발 앞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발견을 이루었나를 보여주는 것이다.29)
코토누 협정은 개발, 빈곤취지, 무역에 대한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규정하여, 분쟁예방, 인권존중, 민주화와 대규모 이주 등 공동 관심사를 포함하는 정치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정전에 기초한 무역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이전하고, 태평양 파국들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프로세스로 발전을 꾀함으로써, 그 전신이었던 로메 협정으로부터 숭고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코토누 협약은 포괄적인 동시에 혁신적인 것이다. 민간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고, 지원금은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 이행 성과에 기초하여 할당된다.
유럽연합은 ACP 국가가 국제 경제와무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역 국가와 기업을 고무하여 이들이 ACP 국가와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투자,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여 ACP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ACP 회원국이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특혜의 가치는 무역 자유화와 관세 축소에 의해 정책적으로 강소할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모든 최빈국에 대해 무역특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수혜국 가운데 39개국이 코토누 협정 조안국이다. 2005년까지 이들 국가의 기업체는 거의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유럽연합 시장으로 수출하는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은 기존의 보상제도에 비교할 때, ACP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상쇄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정지원에 있어, ACP 프로그램을 위한 유럽개발기금(the European Development Fund)은 향후 7년 동안 135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받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전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은 95억 유로와 유럽투자은행(the European Investment Bank)으로부터 17억 유로의 대출금이 추가로 투자될 것이다.

5.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현황

1) 데아프리카와의 경제현황

29 http://www.delkor.cec.eu.int/kr / 참조

- 288 -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투자재원을 대부분 외국투자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제가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의 개도국 외채경감 노력(HIPC Initiative)에 힘입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선진국 기업들이 에너지, 통신, 농업 그리고 금융 등 4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 수출 1.6%, 수입 1.1%에 불과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기, 전기·전자제품, 각종 섬유 및 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수입품은 원유 등 지하자원 및 에너지 자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30)

투자와 경제적인 체제는 2002년 11월 누계 기준 137건 72.4억불로 우리 전체 투자액의 2%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의 투자는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투자 건수를 기록한 나라라는 남아공인데, 남아공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제조업과 무역업 중소규모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는 여타 대륙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향후 아프리카가 풍부한 자원,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신호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NEPAD 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보건, 수자원, 정보통신 시설 등에 대한 개발이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현황

2) 대아프리카 경제진출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비중은 1%내지 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수출은 이러한 규모의 영세성 이외에도 수출의 불안정성 및 연속성 결여, 일회성 수출, 소수의 수출품목 구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가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30 http://www.kotra.or.kr

참조.

- 289 -


<table>
<thead>
<tr>
<th>년도</th>
<th>수출</th>
<th>수입</th>
<th>수지</th>
<th>수출규모</th>
<th>수출</th>
<th>수입</th>
<th>수지</th>
</tr>
</thead>
<tbody>
<tr>
<td>2002</td>
<td>873,274</td>
<td>9,173</td>
<td>864,101</td>
<td>882,447</td>
<td>1,070,992</td>
<td>8,675</td>
<td>1,062,307</td>
</tr>
<tr>
<td>2003</td>
<td>693,940</td>
<td>159,689</td>
<td>534,251</td>
<td>853,629</td>
<td>16,637</td>
<td>654,330</td>
<td>-637,693</td>
</tr>
<tr>
<td>2004</td>
<td>385,944</td>
<td>40,391</td>
<td>345,553</td>
<td>426,335</td>
<td>248,199</td>
<td>87,060</td>
<td>161,139</td>
</tr>
<tr>
<td>2005</td>
<td>6,253</td>
<td>355,244</td>
<td>-348,991</td>
<td>228,377</td>
<td>180,483</td>
<td>65,089</td>
<td>114,596</td>
</tr>
<tr>
<td>2006</td>
<td>137,471</td>
<td>90,906</td>
<td>46,564</td>
<td>228,377</td>
<td>180,483</td>
<td>65,089</td>
<td>114,596</td>
</tr>
<tr>
<td>2007</td>
<td>159,690</td>
<td>4,483</td>
<td>155,207</td>
<td>164,173</td>
<td>151,823</td>
<td>765</td>
<td>151,058</td>
</tr>
<tr>
<td>2008</td>
<td>67,556</td>
<td>78,677</td>
<td>-11,121</td>
<td>146,233</td>
<td>61,453</td>
<td>139,359</td>
<td>-77,907</td>
</tr>
<tr>
<td>2009</td>
<td>3,450</td>
<td>135,222</td>
<td>-131,772</td>
<td>138,672</td>
<td>3,481</td>
<td>177,255</td>
<td>-173,774</td>
</tr>
<tr>
<td>2010</td>
<td>100,379</td>
<td>33,521</td>
<td>66,858</td>
<td>133,900</td>
<td>89,359</td>
<td>28,937</td>
<td>60,422</td>
</tr>
<tr>
<td>2011</td>
<td>86,063</td>
<td>4,123</td>
<td>81,939</td>
<td>90,186</td>
<td>53,901</td>
<td>3,726</td>
<td>50,175</td>
</tr>
<tr>
<td>2012</td>
<td>1,093</td>
<td>79,875</td>
<td>-78,782</td>
<td>80,968</td>
<td>6,112</td>
<td>260,713</td>
<td>-254,601</td>
</tr>
<tr>
<td>2013</td>
<td>58,591</td>
<td>3,196</td>
<td>55,395</td>
<td>61,787</td>
<td>77,615</td>
<td>4,902</td>
<td>72,713</td>
</tr>
<tr>
<td>2014</td>
<td>6,329</td>
<td>44,977</td>
<td>-38,649</td>
<td>50,406</td>
<td>4,136</td>
<td>58,913</td>
<td>-54,777</td>
</tr>
<tr>
<td>2015</td>
<td>25,181</td>
<td>21,493</td>
<td>3,688</td>
<td>46,674</td>
<td>12,411</td>
<td>34,988</td>
<td>-22,577</td>
</tr>
<tr>
<td>2016</td>
<td>41,451</td>
<td>781</td>
<td>40,670</td>
<td>42,232</td>
<td>47,060</td>
<td>1,975</td>
<td>45,105</td>
</tr>
<tr>
<td>2017</td>
<td>38,731</td>
<td>19</td>
<td>38,712</td>
<td>38,750</td>
<td>29,577</td>
<td>88</td>
<td>29,489</td>
</tr>
<tr>
<td>2018</td>
<td>20,918</td>
<td>2,065</td>
<td>18,852</td>
<td>22,933</td>
<td>30,526</td>
<td>1,499</td>
<td>29,026</td>
</tr>
</tbody>
</table>

이러한 관점을 염두해 볼 때, 수출규모의 확대는 물론 수출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전략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수입수요가 적고 품목의 구성이 심하게 변동하는 등 수출시장으로서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수출전략상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상품의 아프리카시장 침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질과 가격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업화 추진과 수입자유화 확대 등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부응하는 수출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견, 집중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아프리카 수입시장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소규모 주문과 극심한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의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한편 소량주문체제 확립 역시 아프리카의 다양한 품목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출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마케팅체제 구축 역시 수출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 사항이다. 아프리카지역에서 판매시장으로서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유통망의 강화, 상품의 체계적 홍보기능 강화, 사후 서비스체계 구축 등 권역 또는 중점국가별 종합적인 마케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기업공동의 상설전시장, 한국 상
품 전문판매장 등의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판매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그 효과 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시장 확보가 극히 미약한 아프리카시장에서 유통시설의 구비는 구매 이전단계로서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동 동을 유발하는 시장 개발형 마케팅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상품홍 보는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현실적인 인 지도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시장에서는 기능 및 품질홍보를 강화하고 반면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에서는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별적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시장에서도 상당수의 한국산 저 가제품들이 한국 상품의 대량 침투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경공업제품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함께 통신장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제품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시장 확대를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 동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협소하고 투자위험성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지역에서 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지역을 가진 나라에 우선 투자하여 진출기반을 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2차적인 진출지역을 찾아 투자하는 방책이 바람직하다.
투자진출 관문국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규모와 향후 성장성, 지역경제발달의 중심 여부, 자유무역지대 여부, 인접국으로의 우회선출 유의성, 노동력, 통신, 운송 등 인프라스트럭처 사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동남부아프리카 지역의 투자진출 국가로는 케냐와 아부티 가 적합하다. 케냐는 이 지역에서 정치, 경제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가 여타 지역보다 우수한 편이며, 타구나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의 중심 국가이라도 하다. 따라서 케냐에 우선 투자한 후 탄자니아, 소말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인접국으로의 진출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부티는 자유항공지역과 자유항을 가지고 있어 에티오피아와 중동 각국으로 우회 진출하는데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부티는 자체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협소한 단점이 있어, 제조업 직접투자보다는 우회수출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공과 보츠와나가 유망한 투자진출 중심지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진출의 관문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1/3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잘 발달된 인프라스트럭처와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정치와 권력주의의 등은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보츠와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 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화와 경제부자 무상제공 등의 제조업 직접투자 진출에 유리한 국가이다. 그리고 인근 남아공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어 남아공으 로의 우회진출 기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이다.
동남부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는 처음부터 대규모적인 투자로 하기보다는 소 규모투자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투자규모나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동남부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다음과 같이 4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현지판매법인의 설립
해외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진출 이전에 수출을 통하여 현지에서의 상품수요를 충분히 개척해 놓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판매법인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지판매법인은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소매상에 판매하는 도매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지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마케팅 정보화하여 본사에 피드백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현지판매법인은 수출이 확대된 후 그 일부를 현지생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사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판매법인은 수출시장의 확대 개척을 위한 상업투자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본격적인 제조업투자 등을 모색 준비하는 전출 전초 기지를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2. 수입대체 제조업투자
현지판매법인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현지수출품에 대한 시차육도가 적정수준에 달하면 현지생산을 통하여 생산원가를 격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로 들어간다. 아울러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원료 및 반제품의 수급을 확대한다. 이때 투자형태는 가공장의 설립이 아닌 현지생산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생필품의 경우 현지국가의 시장수요, 노동의 질, 원료조달비용, 마케팅전망, 품질 및 가격경쟁력, 동종 유사품에 대한 현지국 경제의 수입금지여부등을, 판단하여 소규모의 수입대체 제조업에 의 합작투자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역내수출제조업 투자
현지 내수시장을 거치는 수입대체제조업투자가 기초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를 토대로 또는 이와는 별도로 현지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투자분야 및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러한 투자확대진출은 앞에서 말한 자유무역지대나 자유공업지대를 설치 운영하는 국가나 인접국과의 교역이 용이한 나라가 이에 적합한 대상지이다. 또한 이 경우 현지 합작회사가 생산부문과 동시에 스스로의 유통기구를 가지는가 또는 타유통기구를 활용하는가 현지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되도록 유통부문에 대한 상업투자도 아울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 EC 우회수출산업 투자
역내수출용 제조업투자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또는 이와는 별도로 EC 우회수출을 거치는 부문에의 투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EC 우회수출작업의 투자확대는 EC의 대한수입허가 제한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수출합작회사의 역내수출제품
한편,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광업부문에의 투자는 앞에서 말한 무역업 및 제조업투자진출을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되고 진출경험이 상당히 축적된 후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업개발투자는 단독투자보다는 선진국의 대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개발투자의 경우 현지국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술능력이 있으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사업 전단계로 소규모의 시범농장을 경영하거나 농업이민 등을 통하여 현지 농사에 관한 재반정보를 습득한 후 점진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1: 섬유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

선진 경제국은 물론 중국 등 후발국들의 개도국 시장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섬유산업도 이에 따라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발 시장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단계에 있다. 그동안 국내 섬유기업의 해외진출은 저임금을 찾아 주로 인접지역인 아시아와 대미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중남미지역에 국한되어 온 반면에 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13참조>

<table>
<thead>
<tr>
<th></th>
<th>아시아</th>
<th>중동</th>
<th>중남미</th>
<th>유럽</th>
<th>북미</th>
<th>아프리카</th>
<th>대양주</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건수</td>
<td>1,387</td>
<td>3</td>
<td>125</td>
<td>27</td>
<td>110</td>
<td>7</td>
<td>24</td>
<td>1,683</td>
</tr>
<tr>
<td>금액</td>
<td>1,249</td>
<td>1</td>
<td>164</td>
<td>15</td>
<td>119</td>
<td>53</td>
<td>26</td>
<td>1,627</td>
</tr>
<tr>
<td>비중%</td>
<td>76.7</td>
<td>0.1</td>
<td>10.1</td>
<td>0.9</td>
<td>7.3</td>
<td>3.3</td>
<td>1.3</td>
<td>100.0</td>
</tr>
</tbody>
</table>

(단위 : 백만달러, 건)
아프리카에는 섬유제품을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국의 제품이나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기존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부터 값싼 제품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장악하고 있지만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다. 이는 섬유생산기지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도의 생산 요소(저임의 풍부한 노동력)를 확보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노동의 질은 낮을 수는 있지만 고기술 제품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숙련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인구규모 등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집중되어 있다.

아프리카가 섬유산업 진출의 유망시장으로 대두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이나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활용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AGOA를 활용하여 아프리카에서 봉제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여타 정쟁국 제품에 비해 17~20%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도 상반기 중 AGOA 조치로 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실적을 보면 나이지리아의 23억 3,400만 달러를 비롯하여 가봉, 남아공, 가나, 카메룬 등이 비교적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총 30억 달러 이상의 "AGOA 효과"가 나타났다.

사례 2: 한-남아공 자유무역협정 추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8년 양국간 교역이 30억달러에 달했으며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수출시장이다. 또한 교역 내용은 우리나라가 자동차, 전자제품, IT제품, 화학제품 등 고도기술제품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남아공으로부터는 알루미늄 등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제결될 경우 이해특실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남아공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31)

아프리카 대륙이 상기와 같이 신호시장으로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31 South Africa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Business Day.
진출에는 몇 가지 고유한 장애요인이 있다. 지리적 불안정, 정부의 부정부패와 행정의 비능률, 구식민중주국과의 특혜경제관계, 인프라 시설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 확대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계 기업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보다는 정부와 민간, 무역과 금융, 무역과 투자 등 복합적인 형태의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인들은 오랜 서구 식민 생활에서 비롯된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사기행위가 빈발하며 근대적 개념의 경제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노동인력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의 사전행위에서 신뢰는 아주 중요한 성공요소가 되며 적절한 합작투자를 찾기가 곤란할 때는 먼저 소규모 영업 또는 투자를 시작한 후 현지인과 신뢰관계를 쌓아 투자를 시작하거나 대규모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1) 정확한 시장 정보의 적기 습득, 2) 정부 기관의 적절한 활용, 3) 무역, 건설과 금융의 연계진출, 4) 관련 업체간 계휴의 확대, 5)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6) 인근 또는 선진국 시장 우회진출 기점으로의 활용, 7) 매각대상 현지기업의 인수를 통한 진출, 8)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프리카 진출 유망분야 발굴을 열두에 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결론

현재 아프리카는 많은 비관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자체의 자구노력과 외부의 원조 등이 지속되고 있어 미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변부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즉 아프리카의 발전은 다른 대륙에 비하여 느리기는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것이다.

바야흐로 21세기 세계화의 추세는 아프리카를 지구촌의 한 마을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10-2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도 배중될 것이며 아프리카 자체의 노력도 현저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쿠데타 발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단일 정당에서 복수정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에 의한 정확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지역별 국가별 분쟁과 내분도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난민 수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 국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할 때 기타 각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대륙 전체의 구매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대륙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4.5%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
전이 지속되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무기와 마약의 밀매, 아동 강제노동, 대출, 소년병, 난민문제 등이 점차 해소될 것이며 열대 전염병과 AIDS도 의약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언젠가는 퇴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 확대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보다는 정부와 민간, 무역과 금융, 무역과 투자 등 복합적인 형태의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인들은 오랜 서구 식민 생활에서 비롯된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사기행위가 빈발하며 근대적 개념의 경제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노동인력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에서의 사업행위에서 신뢰는 아주 중요한 성공요소가 되며 적절한 합작투자를 찾기가 곤란할 때는 먼저 소규모 영업 또는 투자 시작한 후 현지인과 신뢰관계를 쌓아 투자를 시작하거나 대규모 투자로 전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EPAD나 역내 무역자유화지대 설치 등은 아프리카 자체 내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프리카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한 유럽이나 미국의 시장진출 고두보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를 진출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교역 그리고 무상지원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ct and Its Rules of Origin: Generosity Undermined?”,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908
Mail & Guardin, June 7. 2001.
The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UNCTAD)
중앙일보, 2002. 06. 28
한겨레, 2002.06.24
http://reportweb.usitc.gov/africa/total_agoa_import_suppliers.jsp
http://www.comesa.int/about/treaty/TR006.htm/view
http://www.nepad.org/entry.html
http://www.nepad.org/entry.html
http://www.kotra.or.kr
목  차

I. 서 론

II. AU창설의 역사적 배경
   1.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의 태동과 발전
   2. 아프리카단결기구(OAU)
      1) OAU의 설립과 의의
      2) OAU의 목적과 조직 및 역할
      3) OAU의 한계

III. 아프리카 연합(AU)의 출범과 전망
   1. 시르테(Sirte)선언과 AU 출범
   2. AU 목적과 특성
      1) AU의 주요 목적과 특성
      2) AU의 주요 기구
   3. AU에 대한 전망과 과제
      1) AU에 대한 대내외적 전망
      2) AU의 협안과제

IV. AU채체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우리와 아프리카의 관계
   2. 우리의 대 아프리카 협력방안
   3.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중진

V. 결 론
1. 서 론
아프리카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13%인 약 8억의 인구와 육지 면적의 22%
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구
성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 회원국 189개 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분쟁과 절대적 빈곤
및 기아, 질병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오
늘날의 아프리카현황은 세네갈의 전 대통령 생고르(Senghor)가 지적했던 바
와 같이 정치적 차원에 있어서 식민지 분할의 결과에 따른 ‘발칸화’(Balkanisation)로 특징지를 수 있다. 즉 아프리카 대륙은 1885년 베를린
조약에 의해 유럽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할되어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종족 아프리카인들이 서로 다른 국경선 사
이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식민지 유산은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어졌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아프리카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통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OAU를 거쳐 아프리카연합(AU)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식민지배라는 공통된 경험이로 범아프리카주의의 기치아래 탈식민지배와
아프리카의 독립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은 식민시대부터 이미 섞혀져 시작하
였던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세력들의 통합 시도가
있었는데 벨기에가 루안다, 부룬디의 단일 정치와 경제체계 창설을 시도하였
으나 독립 이후 루안다와 부룬디로 각각 분리되었다. 영국은 로데시아-니아
살랜드 연방을 창설하였으나 이후에 잠바브웨, 잠비아, 말라위로 분리되었다.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연방과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연방 등의 통합노력을 있
었다. 3) 물론 이와 같은 예들은 식민세력 자체의 이익에 기반을 든 것이었든
반면에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리고 탄자니아 등은 연방형태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말리, 기네, 세네갈 등 한때 통합의 경험이 있던 국가들의 정치, 경
제적 통합을 위한 몇 차례의 시도도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는 통합이 무산되
어 독립 국가로 탄생되었지만,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연방(1952), 세네갈-잠

2 정영태, 박원탁, 위의 책, pp.5-6.
3 정영태, 박원탁, 위의 책, p.6.
비아통합(1960)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이러한 분열과 통합 노력의 복합적 특성을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리카내전과 같은 분리운동, 그리고 국경분쟁 등을 반복하게 야기시켜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은 이루었으나 국가간 이해관계나 입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어려웠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미·소 영향으로 아프리카대륙이 분열되었고 탈냉전 이후에도 급변하는 국제사회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의 근본적 분열은 취약성의 한 요소가 되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자본 부족으로 대단위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였다. 여기에 인구 증가율은 생산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생산의 취약성이 농업 생산 분야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는 대규모 기아와 직결되었다.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49개의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고 있어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한 이러한 현실은 더 이상 아프리카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하였다. 또한 21세기 매력산업시대에 세계화와 IT 혁명으로 인한 정보화라는 국제 조류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역 협력 및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그 새를 확대하고 발전하는 경제 글로벌화에서 아프리카 대륙만이 소외되고 있다는 낯설한 현실적 위기감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 발전에 있어 내정불간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지 못해 그 실효성이 부족했던 OAU체제를 설립 39년 만에 종말하고 새로운 발전의 대안으로 AU를 창설하였다.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하여 단일 의회와 은행, 법원, 통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2002년 7월 9일 AU가 공식 출범하였다. AU는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OAU에 비해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비롯한 NEPAD의 결성을 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이 OAU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재 아프리카가 처한 정치, 경제적 후진성을 탐색하고 아프리카 전세계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갖고 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해 아프리카의 통합노력을 분석하고 AU 출범 이후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AU 창설의 역사적 배경

1. 범 아프리카주의의 태동과 발전
아프리카 연합의 기원은 아프리카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의 근간이 되었던 범아프리카주의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아프리카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 범 아프리카주의운동은 19세기 말 미국, 서인도제도, 유럽 등지에서 두보아(Du Bois) 박사, 자메이카의 가베이(Marcus A. Garvey), 트리니다드의 윌리엄(Henry Sylvester William)과 패드모어(George Padmore) 등 아프리카계 흑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범 아프리카주의운동의 성격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한 인종차별 거부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흑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흑인 개성의 발화와 동시에 부족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형성하는데 있었다. 1900년 범 아프리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트리니타드 출신 헨리 실베스터 윌리엄스(Henry Sylvester Williams)에 의해 범 아프리카회의(Pan-African Congress)가 주도되면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 널리 연대의식이 샛터기 시작했다. 이후 범 아프리카주의는 전 세계의 흑인통합을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족적 개념보다는 부족적 개념이 훨씬 강하였기 때문에 반식민주의의 정황이 조치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조작과 탄압으로 거항의식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 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민족주의 형성과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조직적 저항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1918년 제1회 범 아프리카 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그 시야를 넓히 미국의 흑인노예 해방운동을 배경으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아프리카인의 권리보호와 식민 지의 토지, 경제문제에 관한 아프리카인의 우선권 등 ‘아프리카의 단계적 자치’를 요구하였다. 런던, 브뤼셀, 파리 등지에서 개최된 1921년 제2회 범 아프리카 회의에는 113명이 참석하여 인종이나 폐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문명인임을 주장한 두보아(Du Bois) 박사의 “세계에 대한 선언(Declaration to the World)”이 채택하였다. 제3차 범 아프리카회의는 1923년 런던과 런던에서 개최되어 아프리카 식민지에 있어 아프리카인의 역할과 토지 및 자원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24년 뉴욕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는 208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범 아프리카 회의는 계속 개최되었으나 사상적, 이론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4)

4 정영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의 기능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그러나 1920년대는 별아프리카주의가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두보아와는 입장을 달리했던 자마이카 출신 마커스 가베(Marcus Gabe)가 흑인계의 우월성, 아프리카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흑인의 출신의 성격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을 재건하기 위해 아프리카 귀환 운동을 제창하였다. 가베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아프리카 민족주의였으며 범아프리카주의의 주류 중에서도 아프리카 출신 지식인이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자각하며 가베의 민족주의에 동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4년 범 아프리카연맹이 결성되었고 1945년 영국의 밴체스터에서 열린 제5회 범 아프리카회의에서 범아프리카주의가 강조되었다. 특히 이 회의는 이전의 회의와는 달리 아프리카 민족주의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런 변화의 선두에 가나의 은크루마, 나이지리아 아지키웨, 케냐의 케냐타, 말라위의 반다, 이디오피아의 마코넨, 탄자니아의 나예레 등이 있었으며 급진적인 젊은 아프리카 정치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평등이나 인간 존중이 아닌 독립을 목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제도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의 자주적 압박과 단결을 강조한 선언문(Declaration to the Colonial People)을 채택하였다. 이는 흑인 지식인들의 운동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통일과 해방을 목표로 한 대중적인 정치운동으로 추진되었다.


학위 논문, 1963년 창조.
5 정영태, 위의 책.
2.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1) OAU의 설립과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주의가 종식되고 아프리카 대륙에 신생독립국이 대거 탄생하면서 아프리카는 또 한번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가나의 아크라(Accra)에서 열린 아프리카 독립국가들의 첫 번째 모임에서 가나의 크와메 응크루마(Kwame Nkrumah)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범아프리카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1) 자유와 독립 획득 2) 독립과 자유의 공고화 3) 아프리카 국가간 동일과 지역협력 형성 4) 아프리카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역설했다. 그러나 식민지 유산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설정된 국경선은 한 국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민족적 문화적 단일 경제성이나 자연적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단위로서의 조건을 결여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프리카 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동시에 대통령의 당위성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즉 통합의 장애로 작용하는 아프리카국가들의 격차는 인위적 국경선에 기인하여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국경을 허물고 민족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곧 범아프리카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이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압도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현저한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해 나이지리아의 수상이었던 알하지 아부바카 타파와 벨레와(Alhaji Abubakar Tafawa Belewa)는 아프리카 대륙의 분열을 해소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통합기구 창설을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의 통합은 범아프리카주의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연합의 결성과 아프리카의 정치적 통일이 요구되었다.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독립은 보호되, 다양한 기능적 영역, 주로 경제과학 교육 사회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중대하고 경제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조화시키는 대륙적 차원의 기구 창설을 열망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1963년 5월 25일 31개국이 참여하고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 본부를 둔 최초의 범아프리카 기구인 아프리카 대륙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 독립 국가 최초의 정부간 조직인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가 탄생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최초의 정치적 통합체였던 OAU는 아프리카를 민족적 고국으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아프리카인의 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범아프리카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에 의해서”라는 기치아래 형성된 민족주의 운동의 결정체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이루면서 범아프리카적 단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 OAU의 목적과 조직 및 역할

OAU는 모든 회원국들의 평등한 주권을 주요 원칙으로 정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배 종식과 독립,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법과 인종차별문제를 비롯해 비동맹주의, 경제개발문제, 군비축소와 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에 이루어지기까지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협의하는 OAU 헌장을 채택하였다. OAU 헌장은 전문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9조에 의거 가맹국의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개·조정·중재위’의 의정서(총33조, 1964년 7월 21일 조안)를 제정하였다.

OAU 헌장은 그 목적으로
① 아프리카제국의 통일과 단결의 증진.
② 아프리카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호협력과 노력의 조정 및 강화.
③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의 수호.
④ 아프리카로부터 모든 형태의 식민지 복식.
⑤ 유엔 헌장과 인권선언을 존중한 국제협력의 증진
⑥ 방위 및 안전보장을 위한 제협력 등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OAU는
① 국가원수 혹은 기타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정부 수뇌회의.
② 외무장관 혹은 각 정부가 임명하는 각료회의.
③ 수뇌회의에서 임명된 행정사무 국장과 사무차장 원외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
④ 수뇌회의에서 선출된 21인의 구성원을 가진 중재, 조정, 중재위원회 등 4개의 기관이 설치되며 각료회의 산하에 5개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6

상술한 세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분야로
① 정치적, 외교적 협력.
② 운수, 통신을 포함한 경제협력.
③ 교육, 문화협력.

6 http://www.oau-creation.com/OAU%20Charter.htm
보건, 위생, 식량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회의 및 조정위원회는 회원국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을 중재하고 협상과 협력을 통해 처리하며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민족해방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역 중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가능하게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처럼 OAU는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의 전반분야의 상호 협력을 수행하게끔 고안된 다기능적인 지역 국제기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기능적인 기구는 상대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등 단일기능을 가진 국제조직보다 조직 자체의 구성에서부터 통합적 노력을 진행시키는데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3) OAU의 한계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과 분열을 통합하고자 창설된 OAU는 그 헌장에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불식과 독립을 이루지 못한 국가에 대해 절대적 독립지원 등 을 규정하고 독립과 탈식민지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이런 문제에는 높은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에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 원조를 위한 OAU 특별기금 마련, 독립운동을 위한 협력과 아프리카 청년들의 교육이나 직업 기술 교육에 필요한 모든 원조 제공, 회원국의 원조 불속수송 이행 등 민주법칙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아프리카 청년과 남아공 및 백인정부와의 외교관계 단절, 무역 보이콧, 수입금지, 선박 및 공항 폐쇄, 아드 국가의 아프리카 영공 비행금지 등 인종차별에도 단호히 대처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의에도 불구하고 OAU의 미약한 능력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으로 인

8 http://www.oau-creation.com/OAU%20Charter.htm
9 http://www.oau-creation.com/OAU%20Charter.htm
한 제약 때문에 비동맹회의나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호의 국제연합회의 동 활발한 참석을 통해 국제적 지지를 얻기는 하였으나 강대국에 호소하는 이상의 효과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남아공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극복하지 못해 남아공의 인종차별 등에 지향하기 위한 연합전선 구축도 이루어지 못하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동태세도 분열된 현상을 보이는 등 오히려 OAU의 응집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OAU는 구조적 측면에서 몇몇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첫째, 회원국간의 임직적 상호협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결정이나 결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UN이 헌장 19조에 회원국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권 상실을 규정한 제재 규정과 같은 것이 OAU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비지불조차도 임의적이었다. 이러한 OAU의 제재규약 부재와 강제성 결여로 허물당한 결정은 이행되지 않거나 거부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처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국의 내부 분쟁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공통대처와 통일된 정책방향이 어려웠다. 둘째, 사무총장이나 중개조정·중재위원회에 분쟁국가와의 대화 제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 분쟁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OAU의 모든 권한이 수뇌회의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역내 분쟁해결의 유기적 기능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OAU는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간 다수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제도적으로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즉, 내정 불안정과 국경불가침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20여 차례 크고 작은 분쟁에도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하에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냉전 종결 후 민족, 종교 등 잠재적 대립 요인으로 80, 90년대에 빈발한 국내 분쟁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내전의 도미노 현상도 방지하지 못했다.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견을 결집하는데 OAU가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써 발전적인 해체와 아프리카 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III. 아프리카 연합의 출범(AU)과 그 전망

AU는 OAU가 정치적 결사체로 출발하여 경제·사회적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던 데 비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통해 정치적 연합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AU 출범과 함께 범아프리카 통합 노력은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성 증대로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

306---
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지역 블록화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시장 단일화에 따른 생산요소의 질적·양적 확대를 꾀하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형성함으로써 성장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또한 정치·사회적으로는 그 동안 국가전선을 저해해 온 내전, 국경분쟁, 부족간 갈등 등 각종 장애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오랜 정체로부터 탈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부 세계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AU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나가 경우, 아프리카 대륙에는 EU에 버금가는 새로운 정치·경제 블록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시르테(Sirte)선언과 AU 출범

AU 출범의 시발점이 된 시르테 정상회의는 OAU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장 개정을 목적으로 1999년 7월 알제리의 알제에서 개최된 OAU 제35차 정상회의에서 리비아의 국가원수인 카다피가 ‘아프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 창설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제의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당시 이같은 주장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집트와 남아공 등 주요 국가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1999년 9월 6~9일간 카다피의 혁명 30주년(9월 1일) 기념행사를 겸하여 고양인 리비아시르테(Sirte)에서 개최된 제4차 OAU 특별정상회의에서 2001년까지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위 시르테 선언이 채택되었다. OAU 53개 가맹국 중 46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2001년 7월 9~11일간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된 37차 OAU 연례 정상회의에서 AU로 전환하는 과도기간을 1년으로 정한 ‘아프리카 연합(AU)’ 창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시르테 선언의 요지는
1) 2001년 제5차 특별 정상회의를 시르테에서 다시 개최하여 AU 현장을 채택하는데 합의하였으며
2) 이를 위해 OAU 가맹국 외무장관들이 2000년 7월 토고의 로메에서 개최될

13 유종현, 위의 책.
제36차 OAU 정상회의에 현장 초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3) 헌법 정상회의에 헌장 초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4) 1991년 아부자(Abuja) 조약이 규정한 아프리카 중앙은행, 사법 재판소 등
의 조속한 설립으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2001년 4월 26일 나이지리아가 3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회원국 2/3
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2000년 제36차 OAU 정상회의
에서 채택된 AU헌법(Constitutive Act of the African Union)이 2001년 5월
26일 발효되었다. 이처럼 AU 구상이 불과 2년 만에 현실화될 수 있었던 이유
는 기존 OAU체제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더 이상 통합의 실현은 가려웠고 특히 국제사회와의
해결방안과 없고 최악의 정체문제, 빈곤과 기아 및 질병으
로 그 생존자치 위험받는 시대의 영양성 아프리카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아
프리카가 영원히 낙후될 수도 있다는 결박된 기술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허물 좋은 주권사례에 그칠 뿐인 아프리카
통합보다는 보다 강력하고 발전 지향적인 실제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그
열망으로 AU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주의 정착과 아프리카의
단결과 연대 및 협력을 목표로 설립되어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를 대
변해왔던 OAU는 2002년 7월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열린 제38차 정상회
의를 끝으로 AU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 연합체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평의회 의장, 최근 백인농장 몰수로 영국과 갈등을 빚
고 있는 부가와 침착하게 대통령 등 아프리카 53개 회원국 중 43개국 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2002년 7월 9일 AU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AU 초대의장
으로 리비아의 카다피와 치열한 불일rels 다음 끝에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 대통
령이 임명되었는데 그는 출범 연설에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도전적인 순간,
모두 기다리던 아프리카 시대의 도래(Africa’s time has come)”를 역실향
다.14)

2. AU의 목적과 특성
AU 출범은 아프리카를 세계사에서 소외시켰던 정치적 혼란과 내전, 내전으
로 인한 인적-물적 파괴로 인한 빈곤, 질병과 에이즈 등 아프리카인의 숙원
인 분쟁 종식과 역대 평화, 빈곤 추방과 안보달성 등 정치적 단합과 사회,
경제적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마련하였다. AU는 유럽연합(EU)을 모델로 한 각 국 수반으로 구성되는 아프리카 의회를 비롯해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평화안보위원회, 사법재판소 집행위원회, 중앙은행의 설치와 단일 통화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재정 관련조직으로 아프리카 은행(The African Bank), 아프리카 통화기금(The African Monetary Fund),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은행(African Investment Bank) 설립을 추진하였다. OAU가 정치적인 면을 중시하였던 데 비해 아프리카 연합은 향후 정치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을 우선 달성하여 아프리카대륙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각국의 민주화, 인권 상호 등을 상호 감사하는 유엔안보리를 모델로 한 평화안보위원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AU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OAU에 비해 AU가 지난 가장 큰 차별성은 대량 학살 등 전쟁 범죄와 비민주적 상황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힘이다. 1994년 르완다 후투족의 대학살과 같은 반인도 범죄에 대해 평화유지군을 소집할 수 있으며 AU는 각국의 지도자가 자국 국민은 물론 AU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동반 조사 메커니즘’(Peer Review Mechanism)을 채택, 회원국을 규제할 수 있다.

1) AU 주요 목표와 특성

AU는 OAU의 단순한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탈피하고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협력기구로서 새롭고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강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구로 출범하였다. 이를 위해 OAU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인 국가주권의 절대성파 국가 중심적 특성에서 벗어나며 대립을 두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강조, 대립 전제의 이익을 국가 이익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즉 OAU가 회원국간 국내문제 불간섭(헌장 3조 2항)을 절대화하고, 협상과 조정 및 중재에 의존한 접근 원칙(헌장 3조 4항)을 표방함으로써 실현이 어려웠던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 309 ---

15) AU는 가입 의향국이 사무총장(Chairman of the Commission)에 가입 의사를 밝히면 사무총장은 의향서 사본을 모든 회원국에 전달, 각 국으로부터 찬반 의사를 묻고, 단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입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29조).

16) 금융 기관의 조기 출범 가능성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능력을 고려할 때 그 다지 높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AEC 추진 계획에서는 ‘범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 (Pan-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아프리카중앙은행’ 등 기관의 경우 최장 40년에 걸친 5단계 계획 중 마지막 단계에서 설립하기로 되어 있음.

17) http://www.dfa.gov.za/events/ausummit.htm
효성 있는 분쟁 해결의 기회를 상실했던 것에 대해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AU의 개입 권한을 명시(헌법 4조 h항 및 j항), 분쟁 해결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대륙 내 분쟁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평화, 안보 및 안정이 대륙의 발전과 통합 이행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중진,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강화, 선정(good governance) 및 범죄 확보 등을 강조하였다. AU의 이러한 원칙들은 대외적인 지원은 물론 세계화의 조류와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의 참여가 범아프리카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인적,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계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 등 개발 과정에 있어 민간 부문의 투자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참여 촉진을 강조하였다. AU는 이와 함께 성의 평등(gender equality)과 경제의 균형발전 확보 측면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역할에 비해 그 동안 경제-사회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을 촉진하고 성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중 중심의 발전 (people-centered development)’을 추구하였다.19) 이상에서 살펴본 AU의 원칙은 AU체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주안점이 될 것이다.20)

2) AU의 주요 기구
제37차 OAU 정상회의에서 AU 관련 주요 사항 등이 채택되었는데 본부는 OAU와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두었으나 단일 의회나 중앙은행, 법원 등 다른 기관들의 소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OAU가 정상회의, 각료회의, 사무국 등 3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비해 AU의 주요 기구는 정상회의, 집행이사회, 사무국, 상주 대표위 등 4개의 주요 기관과 범아프리카의회, 사법재판소, 아프리카중앙은행, 경제 사회 문화이사회 등 EU와 유사한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 7월 개최된 제38차 OAU 정상회의의 결과 제1차 AU 정상회의에서 4개 주요 기관이 승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정상회의, 집행이사회, 사무국 등은 OAU의 기관들을 승계한 것이다. OAU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기관인 상주대표위원회는 AU에 가견된 상주대표 혹은 전권위원으로 구성되었다.21)

19 Ernest Harsch, op.cit., p.2.
20 양측간 입장 차이를 들려주는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될 경우 다수의 군소 국가들은 어느 임국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중심으로 결합을 시도할 것이고, 이는 역내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10-
정상회의는 AU의 일반 정책 결정, 조직 설립, 정책 및 결정 이행 감독, 예산안 채택 등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고, 집행이사회는 실무 차원에서 무역, 식량·농업, 운송·통신, 교육·문화·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을 포함한 회원국의 공동 이익 관련 분야 정책 조정 및 결정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정상회의는 총의(consensus)와 다수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며 그 결정은 주권 제한적 제재력을 갖는다.

한편, 집행이사회는 관련 전문기술위원회(the 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에 권한 및 기능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관련 부문 각료 내지 고위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한편 AU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들의 비용 외에 AU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 대해 10달러의 비자 발급비를 징수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AU는 기본적으로 OAU를 승계하고 있어 조직과 구성 면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구로 구성되었다. 23

## 표 1. AU의 구성

<table>
<thead>
<tr>
<th>최고의사결정기관</th>
<th>정상회의(The Assembly of the Union)</th>
</tr>
</thead>
<tbody>
<tr>
<td>집행기구</td>
<td>집행이사회(The Executive Council)</td>
</tr>
<tr>
<td>사무국</td>
<td>사무국(The Commission)</td>
</tr>
<tr>
<td>상주대표이사회</td>
<td>상주대표이사회(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td>
</tr>
<tr>
<td>사법기관</td>
<td>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td>
</tr>
<tr>
<td>임법기관</td>
<td>범아프리카의회(The Pan-African Parliament)</td>
</tr>
<tr>
<td>자문기관</td>
<td>경제·사회·문화이사회(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td>
</tr>
<tr>
<td>전문기관</td>
<td>전문기술위원회(The 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td>
</tr>
<tr>
<td>금융기관</td>
<td>아프리카중앙은행(The African Central Bank)</td>
</tr>
<tr>
<td></td>
<td>아프리카통화기금(The African Monetary Fund)</td>
</tr>
<tr>
<td></td>
<td>아프리카투자은행(The African Investment Bank)</td>
</tr>
</tbody>
</table>

22 설립상, 위의 책, p.8.

- 311 -
3. AU에 대한 대내외적 전망과 과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OAU가 식민지배로부터의 아프리카 해방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세계화의 가속화, 역내 무력분쟁, 정치적 불안, 부패, 빈곤, 질병, 저개발 등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문제 해결에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같이 아프리카 발전과 통합을 위해 AU를 창설하였다. 특히 서방의 지지를 받는 아프리카 역내 새로운 민주적 지도자들과 카다피, 무가베 등 독재자들간의 입장 차이를 포함한 내부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를 제외한 52개 아프리카 국가들 이 제 1차 A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기구로서 AU를 출범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간 대내외적 이해의 대립과 나아마다 경제 큰 경제발전 상황과 AU 실현을 위한 과도한 주권 양도에 대한 거부감 재정부담 그리고 NEPAD 이행에 관하여 역내 국가간에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1) AU에 대한 대내외적 전망

가. AU에 대한 입장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집단 대응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아프리카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치적 의지를 배경으로 AU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권을 양도하는 데 대한 거부감.

둘째, AU 주도국간 신뢰형성에 대한 우려로 특히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와 남아공 웅배기 대통령 간 주도권 다툼은 이번 제1차AU회의에서 표면화되었다.

셋째, 아프리카의 낙후된 경제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무역 구조는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넷째, EU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집행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주도국과 함께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기관인 집행위원회의 규모 및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AU에 대해 공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입장은 겸지한 국가 군으로 나뉘었다. AU 출범에 대해 공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세네갈, 말리, 베냉, 나제르, 기네, 부르키나파소 등 주로 북서부 아프리카로 리비아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과거 프랑스령 식민지 국가.
가 대부분이다. 또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까베르데, 감비아, 기네비소, 부룬디, 서아프리카 등 일부 소국들은 OAU 정상회의에서 투표권 부활을 위하여 이들 국가의 OAU 지연분담금(약 380만달러)을 리비아가 대납하여 AU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0 이들 중, 소국가스는 AU의 출범에 드는 각종 비용 지불 등 강한 정치, 경제력 행사라는 실질적인 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적다. 이에 비해 중립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국가는 앙골라, 기네, 기네비소, 스와질랜드,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알제리, 남아공 등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들이다. 21 특히 NAPAD22이행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 경제 기업부문 선정에 관한 선언”과 “선정(good governance) 감시체계(APRM)” 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선정 개념과 적용에 관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배경하는 리비아 등 구진영과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NEPAD 주도국들간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APRM의 적용은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가에 국한되었고 단시일내 광범위하고 강력한 APRM의 가동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나아가 양자간의 음베키 대통령과 카다가리 리비아 지도자간의 AU 주도권 다툼과정에서 음베키 대통령은 우선순위를 NEPAD “국가 정부수반 이행위원회” 위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타협함으로써 NEPAD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선정 개념의 적용을 둘러싼 역내 갈등요인은 NEPAD에 관한 G8 등 선진국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NEPAD의 이행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적으로 기후 영향과 대륙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지리적 동질성 외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만한 요인이 결여되어 있어 AU가 단시간 내에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구로 발전, 아프리카 대륙을 세계화 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편입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급진적인 현실인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정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범아프리카 공동체 달성이 원활한 꿈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나. 대외적 반응

AU의 성공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AU의 성공 여부에 관한 대외적으로 많은 음서버들이 낙관보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합의사항이행의 어려움이다. 대부분 소득세원이 한정된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공동체 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수입 이외에 부과한 재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세장벽 제거 등 공동체 정책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간 경제 규모 및 능력 차이가 심해 국가간 협약체결된 협정 역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1990년 2백80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백63억8천만 달러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와 같은 요인은 선진국들의 달방전 이후 상대적인 빠른성과 아프리카 국가들 90년대여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원조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미원조(USAID)기관을 통해 무상원조조리로 이루어졌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동력에 따라 선별적인 원조를 제공하였고 또한 무상제공에서 달비하여 무역관계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원조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약한 국가들이 경제 통합에 따른 비용의 배분이 균등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행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들째,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미약한 통치 구조로 통합 조치를 계획, 조직 및 이행할 만한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정된 인프라망은 기업 활동에 고비용을 요구하고, 이는 아프리카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개발 계획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외 투자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내 교류와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해 도로, 철도 등 운송체계를 비롯한 에너지, 통신망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양한 지역 경제통합 노력은 그동안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EU, NAFTA 등 여타 공동체들처럼 역내 무역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실패한 점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였다. 또한 유럽의 통합 모델을 벌여 왔으나 아프리카연합이 유럽과는 상이한 여건에서 출발하였고 또 월만에 끌어온 항의에 처해 있는 만큼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해도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AU에 대한 아프리카 역외 주요국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5월 하순 파월(Powell) 국무장관은 남아공, 케냐, 우간다, 마리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였고 6월 28일~29일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동부아프리카 3개국과 통상관련화담을 개최하고 2003년 7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시(Bush) 대통령의 순방 등 기존 아프리카 우호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펼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아직까지 AU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차제하고 있으나 OAU 정상회의에 국장급 수준의 참관단을 파견하여 회의통행에 갖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정상회의에 참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AU 관련 통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는데 특히 중국과 인도는 AU 출범에 총리명의 축하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2) AU의 현안 과제
아프리카 대륙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AU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외채문제이다. 이 외채문제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이 겪고 있는 관성적인 문제이며 오늘날 아프리카 경제의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데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외채 총액은 1998년 이미 3,000억 달러를 넘어
섰으며, 수출 수입 가운데 30~40%가 이자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27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2000년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470
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1인당 외채는 360여 달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아
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은 외채로 인하여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우려에서 국제사회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서방 채권국가들을 중심으
로 외채 지불 능력을 상실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하에 포
괄적인 채무 구제 틀로서 과중채무빈국 지원 계획(HIPC Initiative)이 수립되
어 추진 중에 있다. 세계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구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경
우 이들 국가의 채무 상환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지속불능
의 채무 상태로부터 벗어나 개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지역분쟁 문제이다.28 최근 AU의 출범에 따른 대륙 공동체 의식
의 확산과 함께 분쟁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한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선진국
들의 재정 지원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평화적 해
결을 모색하는 등 긴장 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1년 7월 30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반군을 지원해 온 르완다가 평화협
정에 서명하여 89년 이후 4년 동안 양 당사국과 우간다, 앙골라, 젤바브웨,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열려 대립함으로써 250만명의 사망자와 함께 아프리카
최대의 분쟁으로 기록된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종식의 조치가 마련하였다.
수단에서도 최근 정부측과 반군 수단인민해방군(SPLA)이 종전에 합의하고,
남부 기독교계 주민들이 향후 6년간 남부 지역에 대해 자치를 실시한 후 분
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29
그러나 이처럼 분쟁과 내분의 역사를 청산하고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회복
해 가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아직도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는 종종, 종교, 이

27 2002년 7월 현재 IMF와 세계은행이 규정한 과중채무빈국은 총 42개국이며, 이 중 34개
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임.
29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참조.
남차이로부터 국경,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에 의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U도 역내 분쟁의 해소가 범아프리카주의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인식, 분쟁 해결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리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분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이념\~종교적 갈등을 비롯하여 독재, 부패 등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상당 기간 AU의 미래를 속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에이즈 문제이다. 과중 채무, 정치 불안정 등 아프리카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AIDS 역시 거시경제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아남 아프리카 주민들의 1사 사망 요인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연장되고 있는 AIDS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저명한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대규모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전 세계 AIDS 감염자 수는 3,7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850만명이 사하라아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하라아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AIDS에 350만명이 새로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AIDS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20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사망자 규모는 같은 해 역내에서 일어난 전쟁 혹은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점박할 수 있다.

IV. AU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아프리카는 광활한 영토와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 및 인적 자원과 천혜의

30 미주, 유럽, 중동 등의 경우 1991~2000년 사이 군사비 지출이 10~20% 가량 감소한 데 비해 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20% 상승함. 물론 이것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 규모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하지만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악영향 제정 부담으로 작용함.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오랜 분쟁과 빈곤 기아 및 질병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비단 세계화라는 시대의 영향과 인류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프리카가 지난 오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아프리카 발전에 있어 무한한 잠재력이자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과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EU,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마지막 남은 경제 진출 대상지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관심을 증대시켜야할 대상이 되었다. 특히 AU 결성으로 아프리카 역내 시장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며 NEPAD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향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국가들에 대한 경제 협력을 비롯한 관계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냉전기간 중 사회주의 이념을 배경으로 친북정책을 고수하 였으나 탈냉전 시대를 맞이 이들 친북성향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협 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말리,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쌍바프웨, 탄 자니아, 토고 등의 국가들은 유엔안보리 및 경제사회 이사회 진출 지원 등 국제무대 에서 우리의 입장과 지원하는 친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당제 도입, 자유선거 실시 등 민주화 전환에 따른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투자진출 및 경제협력 제공을 적극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교류 및 경제협력 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도 아프리카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머물렀으나 민족적 강인함과 저력을 바탕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풍부한 인적 자원과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과도한 어려움이 극복 불가능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형성되는 국제 질서의 구도 하에서 아프리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으나 AU와 NEPAD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과 기울이는 과 정적 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가 약 50억불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교역 수준은 전체 교역 규모에 비해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협력관계의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2001년 316만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였으며, OECD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에 결합은 역할 수행을 위해 점진적으로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 사회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교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체적인 분쟁 해결 노력, 민주화 추진 및 경제 개발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아프리카 지역이 여전히 정치 불안, 외채 등 재정요인에 따른 투자 활동 및 생산활동 위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수출 규모도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프리카는 안정적인 수출 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시장 규모 역시 협소하여 대아프리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AU의 출범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다 의욕적인 개발 전략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공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대 아프리카 진출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인프라(도로, 에너지, 통신 등)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과거 중동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우리 경험이와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인프라 개발을 형성하기는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관련 지식을 교류하고, 우리의 기술 능력 을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아프리카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표-6> 최근 5년간 대아프리카 주요국 수출 현황

(단위: 백만 US$; %)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 증가율</td>
<td>금액 증가율</td>
<td>금액 증가율</td>
<td>금액 증가율</td>
<td>금액 증가율</td>
</tr>
<tr>
<td>라이베리아</td>
<td>1,558.0</td>
<td>78.0</td>
<td>1,463.3</td>
<td>-6.1</td>
<td>891.7</td>
</tr>
<tr>
<td>남 아 공</td>
<td>471.3</td>
<td>-13.9</td>
<td>597.3</td>
<td>26.7</td>
<td>469.4</td>
</tr>
<tr>
<td>나이지리아</td>
<td>105.3</td>
<td>22.9</td>
<td>153.6</td>
<td>45.9</td>
<td>167.5</td>
</tr>
<tr>
<td>가 나</td>
<td>52.9</td>
<td>-0.2</td>
<td>48.7</td>
<td>-7.7</td>
<td>56.2</td>
</tr>
<tr>
<td>양 골 라</td>
<td>238.4</td>
<td>505.2</td>
<td>18.5</td>
<td>-92.2</td>
<td>303.7</td>
</tr>
</tbody>
</table>

자료: KOTIS
2. 우리의 대 아프리카 현역 방안

AU 출범으로 아프리카가 주도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각급 지역통합을 통한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 시도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WTO 등 주요 기구들은 중심으로 저개발국가의 능력향상과 세계화 기반데어를 위한 국제적 지원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모범적 경제개발을 이룬 귀중한 경험을 가진 우리의 세계 주요 통상국가의 하나로서 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 민주세력으로서 아프리카의 개발 목표달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약 1~2% 정도로 미미하고, 그나마 라이베리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아직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발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저개발을 극복한 귀중한 개발경험과 50년대 한국의 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일부 국제사회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런 깊은 경험과 아울러 IMF 경제위기까지 효율적으로 극복한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 아프리카를 포괄한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AU 출범으로 성공적인 아프리카 발전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증진과 개발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여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아프리카를 주요 교역 대상지로서 개척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확보해어야 한다. 따라서 AU 출범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진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첫째,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는 국가 및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국가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와 개발협력을 제공의 기술원조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한 성장모델 국가를 육성해야한다. 또한 성장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현지 진출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사업 여건을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수원국과의 동반 발전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도입 차관을 선용하고 상황의지를 갖춘 국가에 대해 EDCF 등 차관제공, KOICA 봉사단 추가 파견 및 기술원조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또한 단계적인 KOICA 현지 사무소의 설치 운영을 통해 현지 국민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접국에 대한 진출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아프리카를 향한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야한다. 우리 기업들이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이집트의 카이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등 역내 주요 도시의 교통, 통신 요충으로서의 기능을 심층 활용, 기업 활동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아프리카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발전의 잠재력과 활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즉 미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는 국가나 EU와 FTA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 우리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각 자유 무역항에 대한 투자진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발전의 계기를 부여해야한다. 따라서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역내 전략적 진출의 가능성을 연구 분석한 자료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AU 출범 이후 상당한 규모의 도로, 항만, 가스사업 등 기반시설 건설과 유전자 부존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산업 정보들을 수집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개발 참여가 용이하도록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야한다. 우리가 전통적 우위를 점했던 리비아의 건설 시장과 다소 정세가 불안정하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2001년 아프리카에서 해외 수주가 184억 달러에 달했던 것은 인프라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다. 민주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및 정세가 비교적 안정된 자원부국의 인프라 부문 개발에 참여하여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인근 국가로의 진출을 고려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현명한 중장기적 사업 전략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대아프리카 원조(ODA)의 지속 및 원조,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역내 교역을 증진한다. 우리의 개도국 협력사업은 양자간 협력으로서 무상원조(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와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다자간 협력으로서 국제기구 앞 증자와 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상원조는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전담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유엔 예산의 1%를 분담하는 나라로서 개도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도국 개발원조(ODA)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22개국과 한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에는 DAC 회원국 평균 GNI 대비 ODA 제공 수준은 0.22%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0.047%(2억 1200만달러)에서 2002년에는 0.063%(2억 6,600만달러)로 약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DAC 평균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와 유엔체제의 coherence 증진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OECD/DAC와 UNDP 등 유엔체제 세계은행 IMF 등의 원조 정책협의에 참여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유엔차원에서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대한 대화를 촉진시키고 역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범국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 협력이나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밖에 정부와 학계 민간차원에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육성 지원노력을 높여가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유엔이나 제네바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우리의 발전경험과 중간적 위치를 바탕으로 선,후진국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생산적 논의에 기여해야 한다.

<표-5> 대아프리카 교역 추이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값</td>
<td>수출</td>
<td>178530</td>
<td>141910</td>
<td>2496929</td>
<td>2227678</td>
<td>2278809</td>
<td>3049698</td>
<td>2820516</td>
<td>2349555</td>
<td>2395561</td>
<td>2965917</td>
</tr>
<tr>
<td>값</td>
<td>수입</td>
<td>340465</td>
<td>787034</td>
<td>1156564</td>
<td>1061745</td>
<td>2520540</td>
<td>4441993</td>
<td>1976768</td>
<td>2943229</td>
<td>2814639</td>
<td>1679385</td>
</tr>
</tbody>
</table>

자료: KOTIS

<표-7> 국별 ODA 제공 실태(2001년)

<table>
<thead>
<tr>
<th>국 가</th>
<th>규모(백만$)</th>
<th>ODA/GNI(%)</th>
<th>국 가</th>
<th>규모(백만$)</th>
<th>ODA/GNI(%)</th>
</tr>
</thead>
<tbody>
<tr>
<td>호 주</td>
<td>852</td>
<td>0.25</td>
<td>노르웨이</td>
<td>3,155</td>
<td>0.82</td>
</tr>
<tr>
<td>오스트리아</td>
<td>457</td>
<td>0.25</td>
<td>뉴질랜드</td>
<td>111</td>
<td>0.25</td>
</tr>
<tr>
<td>폴란드</td>
<td>866</td>
<td>0.37</td>
<td>뉴질랜드</td>
<td>1,346</td>
<td>0.83</td>
</tr>
<tr>
<td>캐나다</td>
<td>1,572</td>
<td>0.23</td>
<td>마다가스카르</td>
<td>267</td>
<td>0.25</td>
</tr>
<tr>
<td>덴마크</td>
<td>1,599</td>
<td>1.01</td>
<td>스웨덴</td>
<td>1,748</td>
<td>0.30</td>
</tr>
<tr>
<td>덴마크</td>
<td>389</td>
<td>0.33</td>
<td>스웨덴</td>
<td>1,576</td>
<td>0.76</td>
</tr>
<tr>
<td>프랑스</td>
<td>4,293</td>
<td>0.34</td>
<td>스위스</td>
<td>908</td>
<td>0.34</td>
</tr>
<tr>
<td>독일</td>
<td>4,379</td>
<td>0.27</td>
<td>영국</td>
<td>4,659</td>
<td>0.32</td>
</tr>
<tr>
<td>뉴질랜드</td>
<td>194</td>
<td>0.19</td>
<td>미국</td>
<td>10,884</td>
<td>0.11</td>
</tr>
<tr>
<td>이탈리아</td>
<td>285</td>
<td>0.33</td>
<td>DAC 전체</td>
<td>51,354</td>
<td>0.22</td>
</tr>
<tr>
<td>일본</td>
<td>1,493</td>
<td>0.14</td>
<td>한 국</td>
<td>266</td>
<td>0.06</td>
</tr>
</tbody>
</table>

자료: OECD/DAC
3. 민간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오늘날 세계 각국과 유엔 등은 국제기관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이외에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기초에서 세계의 많은 NGO와 봉사자들이 아프리카의 개발과 빈곤 퇴치 그리고 질병퇴치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특히 NGO 봉사기관 등 국제적 민간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국가별 개발활동과 국제기구 차원의 대 개도국 지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진을 통해 이러한 NGO 및 민간차원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참여 협력이 더욱 확대, 육성되어야 한다. 물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이니셔티브 등으로 유엔과 세계적 민간기업 내지 기업인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현지 투자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참여 및 기여 증진 역시 아프리카와의 관계 증진에 바람직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신흥지배의 경험이 없는 신흥국가의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보다 친숙하고 우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생업을 위해 곳곳에 진출하여 노력을 경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NGO와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의식구조 개혁과 자조적 정신의 함양 및 자생적 여건의 발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 및 저개발 탈피를 돕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인적 자원양성, 활용능력이 있어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식 구조개혁 및 경제 사회적 여건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째, KOICA 봉사단의 추가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의 효율적인 제공과 단계적인 KOICA 현지 사무소의 설치 운영 등 현지 국민의 개발을 적극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접국에 대한 진출 및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아프리카를 향한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학계 및 민간차원에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육성에 대한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정부 고위 사절단 파견 및 학술적 교류,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 증진이 필요하다. 셋째, 각급 민간 이니셔티브의 육성과 장려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우리 민간 NGO, 봉사자들의 활동을 돕고 적절한 지원과 보호 육성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정부의 대한아프리카 건설 개발지원 전략과 가금적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재외공관의 현지 외교활동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재외공관의 현지 외교활동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의 국내적으로 빛이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지적으로 잘 훈련된 우수한 인력은 21세기 아프리카의 개발에 선용될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인의 발전과 빈곤 극복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간부분의 대의적 협력은 KOICA에서 주로 분담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기자재 공여 등 단순한 물질적 지원만 아니라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자조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상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대외시장을 꾸준히 육성해야하는데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대 아프리카 진출 전략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V. 결론

OAU 체제는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분쟁과 정치불안, 빈곤 및 질병 저개발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인식으로 아프리카 발전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기구인 AU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희망찬 출발에 비해 아프리카 국가간 대내외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격차가 큰 경제상황 등 모델로 했던 EU와 같은 효과적인 통합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선결조건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권양도에 대한 거부감과 경제상황의 차이에 의한 산업과 무역구조의 통합의 저해, 집행위원회와 사무국 등 의사결정이나 규모 및 권한의 미약함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분쟁과 정치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위체위기, AIDS와 같은 질병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AU와 NEPAD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의 노력과 아프리카 발전 및 통합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아프리카의 위상 제고라는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국제적 지원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 다. 이는 아프리카가 마지막 남은 경제개발 지역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인적자원,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중대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국제기구 내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이고 대아프리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참여와 개척은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시장 확보와 아프리카의 풍부한 부존자원 및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교류 증진은 빈곤 완화, 질병 퇴치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의 무상 율조와 함께 아프리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기구의 지원 요건을 수용하는 개혁 의지, 국가신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국가별 개발사업 계획 및 투자 진출 유망분야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국내 기업들의 대아프리카 진출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우 AU가 지식기반경제 형성을 위한 중점 전략으로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IT 강국으로서 우리의 하드웨어 구축사업 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이 대아프리카 교역에 있어 우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민간단체나 기업에 대한 과 금융 지원 체계 수립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라크전후 중동질서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김수남

1. 서론

2. 주요전쟁 이후의 중동질서의 변화

3. 2003년 이라크전의 의미

4. 이라크 전후의 중동질서

5. 한국의 정책적 대응

6. 결론

1. 서론

2001년 1월 20일 부시(George W. Bush)가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 때와는 현저하게 다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이후 1991년 아버지 부시(John Bush)가 걸프전에서 승리하였지만 뒤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라크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 부시(Bush senior)의 뒤를 이은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개입파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의 기치 아래 미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국 정체의 발전과 외교적인 면에서 발생문제의 해결, 난민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라크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뒤를 이은 부시(Bush junior) 행정부의 외교의 근간은 힘에 바탕으로 한 외교로 전환하였다.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법이나 그 외의 조약 및 국제적 관행도 무시하기로 하였다. 외교 면에서 상대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가 채택되었으며 그와 같은 태도는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했던 ABM 조약의 폐기,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방출의 감소를 위해 참여하고 합의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부터 탈퇴, 이라크, 이란 및 북한을 “악의 축(Axes of evil)”으로 묘사하는 공세적인 태도, 후진국의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 그리고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과도한 이스라엘로의 경사 등 일방주의적인
외교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을 끌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미국에 대한 아랍세계 및 이슬람권 내에서의 적대감은 미국의 편향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화생자에 대한 외면으로 더욱 증폭되었으며 결과적으로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를 초래하였다.

9.11 테러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됨에 따라 미국은 이제 어떠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새로이 깨닫게 된 것이다. 테러의 형태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알카이다(AI Qaeda) 테러집단을 보호하고 있던 탈레반(Taleban)정권을 전복시키고 종교적으로 새로운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이어서 많은 국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예상보다 단기간에 후세인(Saddam Husein)정권을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라크전의 종결로 중동에서의 미국의 위상은 증대되었으나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국은 이제 이라크에 민주정부의 수립과 테러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테러의 구속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중동질서의 수립이야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라크전쟁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동질서를 미국의 전략에 비추어가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전쟁 이후의 중동질서의 변화

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오도만 제국의 멸망

20세기에 들어들면서 중동지역은 주요 전쟁이 끝날 때마다 현저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중동 정치구조의 기반을 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였다. 14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오늘날 중동지역의 대부분은 오도만 제국(Ottoman Empire)의 통치하에 있었다. 거의 6세기동안 중동지역을 포함하여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서 강력한 군사력과 찬란한 문화를 누려왔던 오도만 제국은 19세기 후반부터 범동 사사처럼 무력하게 되면서 여러 서방국가들에 둘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 지역의 민족적 구성은 매우 복잡하여 거의 20개의 언어적 및 종교적 인종집단으로 구성되었지만 오도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민족이 분할되는 것이 없으며 민족적 통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1)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유럽세력의 개입은 오도만의 지하에 있었던 지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민족이 분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오늘날의 중동을 형성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1920년 4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이탈리아의 산 르모(San Remo)에서 개최된 전후처리를 위한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외무장관과 일본, 그리스, 벨기에의 대표가 회동하여 오도만 제국의 분할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 산 르모회의결과는 1920년 8월 10일 프랑스의 세부르(Sevres)에서 연합국과 오도만 제국의 대표간에 전후강화조약(Treaty of Sevres)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오도만 제국의 군부는 그 조약을 수용하지 않았고 오도만 제국의 별명과 터키공화국(Turkish Republic)을 선포한 다음에 연합국을 상대로 전투를 개개하게 되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병방에서의 전투에 지친 연합국은 1922년과 1923년 사이에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 오도만 제국을 대신한 터키공화국과 다시 협정을 체결하고 쿠르드족의 분할을 수반한 오늘날의 터키영토를 인정하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분할된 중동지역은 신탁통치 혹은 위임통치의 형태로 유럽국가들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영국은 오늘날의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 및 이집트 지역을 프랑스는 시리아, 레바논 및 알제리 지역을 그들의 영향권 하에 두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메카(Mecca)와 메디나(Medina)의 성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하셰마이트(Hashemite)가 새로운 등장한 사우드(Saud)의 공격에 패하여 아라비아 반도에서 물러남으로써 사우디 아라비아가 출현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영국을 도와 오토만 제국에 저항했던 후세인(Husayn ibn Ali)의 하셰마이트가 아라비아 반도를 상실하고 영토가 없는 왕실로 전락하게 되자 영국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의 영토에 후세인의 두 아들을 왕으로 하는 두 개의 하셰마이트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 기간중의 도움에 보답하였다. 사우드가 아라비아 반도의 전 지역을 석권하려 하였을 때 영국은 강력하게 개입하여 소규모 토후국들을 합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바레인, UAE, 카타르, 쿠웨이트와 같은 토후국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태풍의 해로 등장한 것이 영국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시오니즘(Zionism)이었다. 시오니즘은 19세기에 유럽에서 전개되었던 반유데인운동(Anti-Semitism)을 피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1897년 6월 스위스의 바젤(Basel)에서 최초의 시온주의자 회의가 개최된 이후 본격화된 운동으로서 개인단위의 소규모로 이주하던 유대인들의 이주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유대인들은 대규모 이주를 알리야(Aliyah)이라고 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주하였다. 

p.51.

던 1939년까지 다섯 차례의 얄리야가 실시되었다. 유대인의 이주는 이후 중동에서 계속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냉전체제의 등장


독일에 대한 전쟁의 승리도 잠시, 유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체제간의 대립양상으로 발전하였으며, 미·소간의 대결태세는 전 세계적인 방면으로 확대되었고 중동지역 역시 냉전체제의 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냉전 초기 중동지역은 소련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의 봉쇄정책에서 유럽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다음과 중동과 반반도에선 중동지역에서는 1955년 영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및 터키로 구성된 바그다드 조약기구(Baghdad pact)를 설립하였다. 바그다드조약기구는 터키를 경유하여 NATO와 연결되고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SEATO와 연결되므로써 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소련공산주의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봉쇄망의 일익을 구성하였다. 미국은 바그다드조약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회원국들에게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1958년 7월 이라크 내의 군사쿠데타로 영국이 수립한 하세마이트 왕가의 군주제가 전복되면서 이라크가 1959년 3월 24일 바그다드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게 되자 이라크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로서 중앙조약기구(Central Treaty Organization, CENTO)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반미 및 반영 정서가 증대하게 되어 1977년 파키스탄과 이란이 이 기구에서 탈퇴함으로써 CENTO도 붕괴되고 소련공산주의 팽창 저지를 위한 미국의 전세계적 봉쇄망의 중동지역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3)

종전 후 중동지역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1948년 5월 콜레스터인 지역 내에 이스라엘 국가의 출현이었다. 거의 2천년 전에 콜레스터인 땅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은 영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의 출현으로 지구상에서 유대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팔레스타인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중동지역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동시에 중동지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르게 되었다. 영국군이 철수하자마자 아랍측은 인구와 병력의 규모만 믿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렇게 시작된 1차 중동전쟁은 아랍측의 준비부족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후 4차례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간의 전쟁을 얻어 중동전쟁의 대립의식은 증대되었고 아랍측의 항공기 및 선박의 납치로 인한 인명피해의 규모는 전쟁전의 인명피해와 유사하였다. 끊임없는 대립과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져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대립의식은 증대되었다. 그 후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국들간의 전쟁으로 양측간의 대립의식은 증대되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이스라엘을 지지하였지만 냉전의 심화와 더불어 소련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반면에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의 농보와 병마와 미국 내에서의 유대인 로비의 중대로 미국에게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냉전기간 중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요 목표가 아랍 국가들간의 대립의식을 증대시키고,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억기수르(Yom Kippur)전쟁 등 4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거하려는 아랍세계의 의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4차례의 전쟁 후에 이집트의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 무

다. 4차례의 아랍·이스라엘전쟁 이후의 중동결사 변화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전쟁, 1956년의 수에즈전쟁, 1967년의 6일전쟁 및 1973년의 을키수르(Yom Kippur)전쟁 등 4차례의 전쟁을 통하여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거하려는 아랍세계의 의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4차례의 전쟁 후에 이집트의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 무
력으로 이스라엘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빠 amat 시나이반도를 되찾는 방법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먼저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미국임을 인식한 이집트는 당시까지 냉전 체제의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소련에 의존해 왔던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미국에게 접근하였다. 그 결과가 1978년 9월 17일 미국의 카터(Jimmy Carter) 대통령과 중재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Menahem Begin) 총리 사이에 체결된 캠프데이비드협정(Camp David Accord)이었다. 이 협정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단계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단계로 이스라엘과 기타 아랍국가들간의 관계정상화를 이룩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 협정에 입각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9년 3월 26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이 조약에 의거 이스라엘은 1982년에 정착하고 있던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였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 대가로 아랍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해야만 하였다. 이집트는 아랍연맹(Arab League)으로부터 축출 당하였으며 카이로에 위치하고 있던 아랍연맹의 본부는 튀니지로 이동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응하기 위한 아랍세계의 단결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중동지역내의 중대한 결과변화였다. 아랍세계의 최대강국인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되자 이집트보다 약한 국가들의 황이스라엘 투쟁의지 역시 약화되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국교정상화는 아랍세계의 분열과 아랍세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이 아랍의 이익과 이슬람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무력투쟁에서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감이 증폭되면서 팔레스타인 정치집단들은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불안정은 계속되었다. 팔레스타인 집단들은 중동의 인권사태를 나타내는 무자비한 살상을 서슴지 않았고 다른 아랍국가들이 이들의 테러행위를 지원하였다. 주요 테러행위로서는 항공기의 공중납치(1976년 에어 프랑스1397), 항공기의 공중폭파(1988년 미국의 PA103기, 1989년 프랑스의 UTA772기), 선박납치(1985년 이탈리아의 선박 Achiie Lauro)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항공기 공중납치 사건 등이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테러단체는 점은 9월단(Black September), 하마스(Hamas), 이슬람 저하드(Islamic Jihad), 기타 소규모의 많은 테러집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테러를 자행하였고 최근에는 자살테러가 급증하였다. 이집트는 1989년 다시 아랍연맹에 복귀하였으나 이전의 리더십은 발휘할 수가 없었고 아랍연맹은 수 개국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태로 변모하였 다.

라. 1980년대의 억제전쟁과 友敵관계의 전환

-331-
이 기간의 주요 변화는 1979년 1월 이란에서의 이슬람 혁명과 그해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들 수 있다. 혁명 이전의 이란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방해하기 위한 중요한 보루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은 이란에게 최대의 무기공급국이면서 지원 국가였다. 이란의 팔라비(Pahlavi)왕조의 레자 샤(Reza Shah Pahlavi)와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모하마드 레자(Mohammad Reza Pahlavi)는 이란을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성직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성직자들과의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팔라비 왕이 이란을 떠나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망명하게 되자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가 이끄는 이슬람성직자혁명회의는 이란을 이슬람공화국으로 선포했으며 미국에게 팔라비를 돌려보내도록 요구하였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1979년 11월 이란의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대사관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함으로써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는 우호관계에서 적대관계로 변하였다.

이어서 1980년 9월에는 혁명 이후 혼란기에 있는 이란의 국내상황을 이용하여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1988년 8월까지 8년간 양국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중동에서 관련 국가들간의 우호관계에 중대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라크와 소련은 양국간 중 요코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소련이 이란을 공격해어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것이라는 서방측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미국은 인도양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방해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에 대하여 개입하던 탈레반(Taleban)을 지원하였다. 미국과 이란관계의 관계가 적대관계로 변함에 따라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라크와 미국간의 관계는 우호관계로 변하였으며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 중 이라크를 지원하였고, 반면 소련은 이란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마. 냉전의 종결과 신질서

198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상의 가장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동구공산국가들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동구공산국가들의 붕괴와 소련연방의 해체 및 세계의 변화는 냉전을 서방의 승리로 종식시켰고 미·소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세계질서는 미국 주도의 전세계의 질서로 정착되어가고 있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파급효과는 바로 중동에 영향을 미쳐게 되었는데 당시까지 소련을 후견국으로 삼고 있었던 중동국가들이 그들의 의지할 곳이 사라짐에 따라 재각기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혹은 홀로 서기를 추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립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소련이 중동에서 철수함에 따라 중동에서 미국의 위치는 확고해졌으며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상에 있어서 미국의 시선을 위시하게 되었고 미국에 도전하고자 하는 세력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때 발생한 것이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었다.
이라크는 8년간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인적 물적 손실, 전문학적인 대외부 체로 말미암아 국내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800-900억 달러의 외채지불과 전후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1조 달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석유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의 제한된 석유생산과 낮은 유가로서는 전쟁의 상황으로 복구하는데도 20년이 소요될 형편이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제시한 끝에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14개 사단과 350 대의 탱크를 동원하여 8월 2일 새벽 2시에 침공을 개시하여 5시간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를 합병하였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합병은 잠시동안 이라크 국민들을 열광케 하였으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아랍세계 자체 내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물론이지만 이집트 및 시리아까지 미국 주도의 타협적군에 참여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축출하는데 동참하였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1991년 1월 16일 시작한 걸프전쟁은 공중공격이 개시된 지 1개월 반만에 그리고 지상전이 개시된 지 2주 만 3월 2일 이라크의 항복으로 휴전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구, 개발, 보유가 금지되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걸프전쟁의 승리로 인해 혜택을 받게되는 모든 국가에게 전쟁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한재정적인 부담을 겨우 지지 않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뒤를 이었고 1995년 9월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추가적인 6개의 도시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0년 8월 제2의 캠프 태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고자 중분히 나섰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이 실패로 끝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은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봉기)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충에 대한 무관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아랍세계의 반미정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결국 아랍인들에 의한 9.11 테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3. 2003년 이라크전의 의미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많은 국가들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적인 외교로 인하여 초래된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로 인해 미국이 입은 피해의 규모는 세계인들의 동정을 얻기로 흔분하였으며 테러에 대한 보복을 위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하여 유엔에서도 2001년 9월 안보리 결의안 제1368호 및 1373호로 맺어지게 되었다.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남부의 파키스탄과 북부의 러시아에서 영공의 사용을 허가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인접한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등지에서 영토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기반 많은 국가들에서 태러집단인 알 카이다(al-Qaeda)의 망을 소탕하는데 협력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함에 있어서는 9.11 테러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아 미국의 피해에 대한 동정심이 그러대로 남아 있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 태러집단을 보호하고 있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지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예상 이상으로 빨리 끝나고 미국의 피해에 대한 여론의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본 세계인들의 미국에 대한 동정은 점차 식게 되었고 또 다시 관심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에 대한 경계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미국이 2002년의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es of evil)”으로 표현하였을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발언에 부정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의 유엔무기사찰 활동에 대한 비협조를 비난하면서 대량살인무기의 은락을 강조하였을 때 다른 강대국들은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 무기사찰활동 결과보고서에서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고 이라크 공격을 위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어려움을 느낀 미국은 영국과 평등상의 참여를 한 일부 국가들과 더불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함으로서 명분이 약한 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 개시를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반전 시위의 규모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였으며 이라크가 미국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굽히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
은 세계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였다.

전쟁 초기 미·영 연합군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이라크군은 예상 이하로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3년 3월 20일 폭격을 시작한 연합군은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어서 이라크의 전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됨에 따라 개전 6주만인 5월 1일 주요전투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전투는 이미 비정규전적인 성격을 되고 있으며 7월 14일 발족한 임시정부(Iraqi Governing Council)와 이라크의 새로운 정권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서 상황은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라크 전에서 미국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유추해 본다.

g. 국제정치에서 물리적 힘에 비당을 둔 외교의 승리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연합국을 주도하는 미국의 제2의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유엔의 회원국이 거의 200개국에 육박하면서 유엔총회는 성가 지배하는 데로 환하여 미국이 참여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실득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외교는 빨리 관철할 수 없는 기구가 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공동이익과는 상관없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모하였기에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전쟁은 유엔이 세계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미국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자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익을 힘으로 추구함으로써 유엔의 무기력을 드러내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는 유엔의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유엔의 역할을 의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적 의무연방은 유엔의 기능에서 백색하고 인도주의적인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여 국제적인 의무연방은 미국이 중심이 된 다른 다국적 기구 혹은 모임을 통해서 다루어 나가자는 주장이 상당히 퍼져 있다.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의 안보협약이사회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었으며 유엔으로서는 어떠한 대응조치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공동의 가치가 세계정부로서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는 것이며 자체의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와 가치관이 가장 가까
운 강대국을 우방으로 갖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라는 우리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우호관계의 유지는 우리 앵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규모 집단의 테러에 의해서 속절없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서 서부개척시대부터 정상화당한 폐토를 미화해왔던 미국은 테러집단의 유럽의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감을 갖게 되었다.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반면 테러의 영토는 미국의 안보상 최대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테러행위가 무고한 민간인의 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행위에 대한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미국인의 거의 대부분이 그를 지지하였으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가기구의 개편과 자원의 사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 최초의 목표가 된 것이 9.11 테러를 자행한 바인라덴(Osama bin-Laden)과 알카이다(AI-Qaeda) 집단을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알카이다 집단을 보호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였고 성공적으로 임시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최초의 목표는 쉽게 달성되었다. 최초의 목표를 달성한 미국은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다음 목표로 등장한 것이 이라크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추구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이라크는 미국의 이해가 많이 들리는 국가였다.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 내에 가지고 있던 석유에 관한 이권을 회수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석유이권을 되찾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였으며 후세인과 알카이다와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이 이처럼 테러와 관련된 국가에 대한 공격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안 과거 테러집단을 지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다른 국가들은 매우 긴장하게 되었다. 이 범주에 속한 국가들은 이라크 외에도 이란, 수단, 소말리아, 시리아 및 리비아 등이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연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테러지원국가의 명단에 거의 항상 등장하였다. 이라크 전을 계기로 테러를 근절하겠다는 미국의 자세가 분명해 점에 따라 소규모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는 수행 가능한 지 모르나 이제 어느 국가도 공공연하게 미국에 도전하여 국가수준에서 테러집단을 억제하거나 지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테러리즘은 침묵하게 되었다. 중동지역에서 테러지원 의심은 받
고 있는 모든 국가마다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테러지원 혐의를 열심히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에서 이는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 지원활동 혹은 WMD의 제조의 경우 선제공격(예방공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9.11 이후에 미국의 안보전략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 전략의 최우선순위를 테러척단에 두고 테러집단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군사력의 유지, 동맹의 강화, 국가안보기구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내타리즘을 위하여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테러조직의 분쇄,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의 차단, 테러지원 단체나 국가에 대한 보복, 국제적인 연대의 강화 등이다. 이리카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소멸된 후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테러지원 국가들이 모두 중동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평화정착 이후에도 중동에 일정수준의 군사력 유지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에서 이슬람 과격파들에 의한 테러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2002년 10월 발리(Bali)에서의 테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호주는 대 테러전에 있어서 미국과 매우 적극적인 연대를 하고 있다. 이국 역시 호주와의 동맹강화를 통한 지역안정을 강조함으로써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생무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들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다.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응징

9.11 테러 이전에는 항공기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항공기 자체가 테러 수단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구상의 어떠한 것도 테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을 크게 염려시켰다. 수만 갤런의 연료를 잔재한 공기(공기가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수천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면 보다 큰 규모의 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량파괴무기(WMD)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탄저균에 대한 공포가 이를 보여주었으며 대량파괴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수증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엄연한 과제가 되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나리오는 WMD를 은밀하게 미국 내에 반입하여 실시하는 테러와 미국 내의 핵발전 시설에 대한 자폭테러를 연상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의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1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의한 WMD의 생산을 차단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이와 같은 무기들이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리스트들이 전부 중동출신이라는 점과 그들이 무슬림들이고 그들은 알라신과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사우다 사우드를 순교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중동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 관심의

4)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 337 -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부각된 것이 걸프전쟁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해 온 이라크에 대한 응징의 필요성이었다. 이라크와 알-카이다와의 연계성을 찾지 못한 미국은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제재를 받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서 공격의 명분을 찾고자 하였다. 이라크는 걸프전쟁 이후 유엔결의에 의하여 줄곧 유엔무기사찰단의 사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무기사찰단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걸프전쟁 직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무기사찰단(UN Special Commission on Iraqi Disarmament, UNSCOM)을 편성하여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UNSCOM이 미국의 첩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라크는 1998년 10월부터 UNSCOM의 사찰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 1년간 UNSCOM은 이라크 영토에 들어갈 수 없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UNSCOM을 해체하고 이라크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된 새로운 사찰단(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을 편성하여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거부로 UNMOVIC는 편성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라크 왕복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걸프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압력을 가하자 이라크는 2002년 8월 UNMOVIC의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유엔안보리에서 2002년 12월 결의안 제1441호를 채택하고 대량살상무기 발견 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합리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이라크는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엔무기사찰단은 이라크를 공격할만한 대량살상무기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사찰단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라크의 기후상의 조건 때문에 3월 20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이전에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불확실한 정보를 공격에 유리하도록 해석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증거로 보아서는 미국이 확실한 정보에 입각해서 행동했는지에 대한 공격의 명분을 위하여 정보를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미국은 제3세계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국의 관심은 대량살상무기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이란이 주목되고 있다.

라. 이라크의 독재체제의 붕괴와 민주정부 수립

이라크 국민들은 1968년 바트당(Baath Party, Arab Socialist Renaissance Party)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후세인의 독재통치에 시달려왔다. 후세인과 그 아들들 그리고 바트당의 전략행위는 미군이 전선에 승리하면서 점차 밝혀지고 있다. 후세인은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하여 화학탄을 사용할 정도로 무자비하였으며 1980년 9월에는 이란을 침공하여 8년간 이라크 국민들을 전쟁에 시달리게 하였고 1990년 8월에는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한반도로써 갑론전쟁을 초래하였다. 그 외에도 후세인이 그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란없이 처형하는 잔학한 행위가 수없이 많이 보도된 바 있었다. 최근 이라크 내에서 집단학살 당한 시체들이 20여 곳에서 발견되면서 후세인 정권의 잔학성이 드러나며 미군의 전쟁명분은 약했으나 이라크전쟁과 후세인 정권의 총출이 이라크 국민들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7월 14일 구성된 임시정부는 비록 최종적인 권한이 미국의 행정권에 있긴 하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에 의하여 이라크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의 두 분파인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 북부의 쿠르드족의 자치문제, 이라크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지금까지 소수인 수니파의 지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아파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치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란은 신정체제(Theocracy)가 되어 민주적인 체제인 것 같으면서도 국민의 주권이 종교인들에 의하여 무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 때 그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특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파에 대하여 가장 무자비하게 되기 쉽다. 따라서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세속국가(Secular state)를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임시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어 있다.

마. 미국적 가치의 확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신교수주의적 사고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없더라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 내정치 목적상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월 20일 시작한 이라크 공격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4월 9일 바그다드를 점령하였고 5월 1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의 주요전투 종결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주요전투의 종결선언 이후 미군 사망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로 인하여 이라크전을 실제로 간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의 승리를 계기로 미국적 가치의 확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적 가치는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NSS)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주요 내용은 범죄주의, 권력분산, 언론 및 종교의 자유, 평등권, 여성권, 종교적 및 종족적 관용,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과 같은 사항들이다. 미국적 가치의 확산은 이라크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최초로 시험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인종적, 종교적 인구분포에 따른 일시통치기구를 출범시켰으며 비록 최종적인 발언권은 미국의 점령군이 가지게 될 것이나 이 통치기구가 점차 안정되어갈 때 따라 미국적 가치의 확산 성공여부는 판단될 것이다.

4. 이라크 전후의 중동질서

가. 세계질서의 구도


작전이 진행되면서 전쟁 이전에 전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었던 반전시위도 줄어들었으며, 전쟁이 끝나자 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과 새로운 이라크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쌍방이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 및 러시아까지도 전후에 미국의 그회 제스처를 보냈으며 유엔 초강대국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라크전쟁 종결 후 거의 범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 승리하였다고 하는 자신감 미국정부와 국민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1) 미국의 신보수주의적 정책의 실현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이끌고 가는 지배적인 이념이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뿌리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시카고대학의 스트라우스(Leo Strauss)교수로서 그는 평등보다는 도덕적 가

5) Leo Strauss는 1899년 독일에서 태어나 철학, 자연과학 및 수학을 공부하였으며 Husserl 및 Heidegger로부터 수학하였다. 베를린에서 Jewish studies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1932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School for Social Research(1938-1949), University
치, 절대적 선,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였다. 스타라우스 교수는 홉스(Thomas Hobbes)와 로크(John Locke)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의 저서 On Tyranny(1948) 및 Natural Right and History(1950)에서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쿠키다데스에 관한 그의 해석론인 The City and Man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서구국가들을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비서구적인 독재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방국가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독재자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보수주의적 의제에 관한 가장 간결한 표현은 미국의 우익 싱크탱크(think tank)인 "새로운 아메리칸 세계를 위한 계획(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미국과 지구 전체의 미래는 영속적으로 평정되는 미국의 "안보경선(security perimeter)"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을 것이며 미국은 "새로운 미국의 전선"에서 선봉대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7) 신보수주의의 비판하는 측에서는 신보수주의의 목표가 세계지배이며 "예방전쟁 교리(preemption doctrine)"와 전쟁의 요구, 럼스필드(Donald Rumsfeld)국방장관이 작성한 다양한 전쟁시나리오, 별들의 전쟁(star wars)의 준비 및 우주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space)는 모두 이와 같은 세계지배 야유에서 연유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8)

보수주의는 원래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치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귀족제도와 신분제도의 경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서유럽과는 다르게 자연주의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수의 의미는 바로 자유주의의 보존을 의미하였으며 뉴딜(New Deal)이나 중앙정부의 비대화에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움직였다. 1970년대에 등장한 신보수주의는 자유방임으로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미국제임주의, 평등화의 거부 및 기독교경신의 부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의 행사 등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도덕적 가치의 침해 및 범죄적 행위,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경제,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과 의무의 중시를, 그리고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

6)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이라크전 후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 국방대학교·고려대학교 공동 학술세미나 페이퍼, p.85.

- 341 -
자유재량권의 강화로 나타난다.

미국제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 세계 어디서든지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필요시에는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 및 예방공격도 배제하지 않는다. 군사기술면에서 미국의 군대는 다른 국가의 군대에 비하여 항상 1-2개세 앞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를 중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 민족 지위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외교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인권향상도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적 신앙에 바탕을 두고 평등화로 인해 혼란스럽게 된 사회의 도덕적 결여를 바로잡고자 한다.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조치의 구체적 표현이 인공중절, 강제버스통학, 공립학교 예배금지 및 동성애에 대한 반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이익과 미국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는 유엔의 규제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 미국의 즉응태세 중진을 위한 군사력의 재배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 및 초호위, 제일의 세계적 세력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미국의 국경이나 주권이 침해를 받게 되는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는 미국으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였다. 미국에 대한 위협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권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드러나지 않는 밖길 없는 실제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장차 위협이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군사력 운용의 융통성을 보유하고자 한다.

미국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든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재배치를 연구해 왔으며 이는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방차관 윌포위츠(Paul Wolfowitz)는 2003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ISS Shangri-La Dialogue에서 미국의 재배치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미임에 의한 논의와 관련 동맹국들과의 협의 후에 결정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미국방성의 정책차관보(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인 페이스(Douglas J. Feith)는 2003년 5월 29일 Los Angeles Times의 회견에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재배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재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일방주의와 기타 강대국의 견제

냉전종식 이후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도 미국이 중심이 되는 -超多極 체제를 수용하는 태세이다. 왜냐하면 이번 이라크 전쟁 전후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대국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격렬히 반대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미국의 승리 후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6월 1-3일 프랑스 에비앙(Evian)에서의 G-8회의 문위기도 이라크전으로 인해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강대국들은 미국의 우월적인 위치는 인정하나 미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그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의 역할을 계속 강조할 것이다. 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유엔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유엔의 권위와 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도 거부권을 보유한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유엔을 통하지 않고 유엔 밖에서 유방국과 제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 미·러 관계

냉전기간 중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하여 지극히 불만스런 입장이며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1:1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이동시켜 노력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안보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주에 불만을 가진 중국 및 인도 등과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며 미국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수용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 NATO의 확장에 대해서는 종래의 반대 입장에서 2002년 5월 28일 나토·러시아위원회(NATO-Russia Council)를 창설하고 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나토에 대한 내용, 위기관리, 평화유지업무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등 공동된 이익의 영역에서 NATO회원국들과 함께 토의하기로 하였으며 NATO 사령부 내에 상실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MD구축에 대한 반대에서 미·러 양국간 미사일방어체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영공사용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Kyrgyzstan)과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발판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5월 24일의 미·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핵무기 중 현재의 6,000-7,000기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700-2,200기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략공격감축조약(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SORT) 혹은 모스크바조약(Treaty of Moscow)으로 명명하였고 2003년 4월 비준함으로써 미국과 전략

- 343 -
적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 한다.  
양국은 이라크전쟁 개시 이전 러시아의 반대로 소원해졌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장관급 지도자들이 상호방문을 통해 마찰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유권 및 친영가스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하에서 러시아 내에 상당한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제를 개선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상력한 실용주의적 의지로 보인다.

* 미·중 관계

중국은 매년 7-8%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험돌을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시구국가나 러시아처럼 소리내어 미국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는 하지 않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표시는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장차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내의 중국위협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나 정책을 시승치 않는다는: 대만문제나 중국의 인권문제 등. 부시정부는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하여 40억불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였으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군사력 사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2002년 9월에 발표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의 반테러 연합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일정한 거리를 두어선 없다고 하면서 잠재적 경쟁자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나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의 자세는 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들의 군사적 역량이 미칠 수 없는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의 경우에도 미국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않는 반면, 중국의 주변지역에서는 자국들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경우에 따라 미국에 반하는 자세를 취하나 지극히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미·일 관계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은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분담해주기를 원하며 이는 전후 평화헌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좋은 계기를 제공한 다. 일본은 전후지역으로부터 동북아에 이르는 해상수송로의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자국의 해군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9) 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vol.48, no.5, pp.44818-44820; vol.49, no.4, p.45443.
9.11 테러는 미국과 일본이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위대를 파견한 것으로써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과 일본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국방성으로 방위청,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향후 3-5년 내에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국가들의 반일정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일본은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경쟁하여 자국의 국제적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미 - EU 관계

유럽연합은 1952년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한 이래 그 구준한 통합의 과정을 진행하여 오늘날에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의 발언권이 더욱 증대될 것이며, 미국는 이에 대응하여 전략적, 경제적인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이어 낙서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주도를 거부하고 있다. 공격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도움으로 참여했던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대립하였으나, 전후에 마찰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통합이 진척되어도 미국과 같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영국이 유럽연합 내에서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럽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영국과 투표 여론은 미국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경쟁관계이면서도 문화적, 풍속적인 갈등에 있어서도 적극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보 수 있으며 경쟁과 협조가 병행하는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나. 세계질서구도 안에서의 중동의 결어

부시대통령은 2003년 6월 1-3일 프랑스 에비앙(Evian)에서의 G-8정상회담이 종료되며, 다음 시기에는 미 - EU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됨을 고려하여...
기 1일전에 중동으로 비행하여 관련국가 원수들을 만남으로써 미국 정부가 중동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중동 지역이 세계 최대의 석유공급원이라는 점과 미국을 상대로 한 테러의 근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곳의 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양극체계에 부속되었던 중동질서는 대량적인 친미, 친소의 관계가 사라졌으며, 따라서 아랍민족주의와 이슬람의 비중이 증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지역국가들간의 폐권경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지역 내에서의 역학관계는 외부에서 중동에 가해지는 역학관계와 병합되어 복잡한 관계를 이루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1) 중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외부 세력

냉전시대에는 세계가 분명하게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동국가들의 외교적 선택은 간단하였다. 국내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미국과 소련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속하면 되었던 것이다. 중동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소련에 접근하여야 했던 것이다. 상당수의 아랍국가들이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의 특성으로 인하여 무산론적인 공산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체계하에서는 소련에 접근함으로써 그들이 협조하는 미국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질서가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이 설립하고 하여 아랍국가들이 미국을 등지고 접근할 대상이 없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또 다른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을 미국은 등지고 접근할 대상이 없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또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아랍 국가들에 이를 수 없어 중동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의 관계설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과 대결할 수 없는 입장인 아랍국가들은 심도 깊은 미국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이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중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있다. 미국은 아랍인들로부터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하여 2가지 다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것이 아랍인들의 반미경기를 악화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은 아랍인들의 기각은 미국이 중동에서 이루어지지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욱 이해해져 있다. 물론 미국정부는 국내의 강렬한 유대인 로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수 없음에 아랍인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존재로 인하여 아랍인들이 익히 있는 피해를 미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라크 내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이 없는 중동은 안정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동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며, 미국은 아랍인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랍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에 파편 전구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차후의 중동질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은 파거 중동을 지배했던 식민 통치국로서의 책임이 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럽국가들은 중동의 지리적 근접성 및 파견 역사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무역과 산업교류 면에서 중동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동국가들은 유럽으로부터 경제적인 원조와 더불어 기술적인 원조를 통해서 근대화가 가능할 것이며 그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라크의 평화회복과 민주화의 정착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명분은 세계의 곳곳에서 반대의 기름을 이어질 정도로 설득력이 부족하였다. 미국이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개전 명분에 대한 비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라크 내에서 비정규군으로 인한 미군의 인명피해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아랍인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하여 반발의 심한데,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조속히 이라크인들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정부를 강화시키고 평화의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

비록 전쟁의 명분은 충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거 후세인 정권의 독재와 비인도적 인 집단살상 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세인 정권의 전복에 대해서는 잘랐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세인 지지자 들의 세력이 근절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후세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투쟁의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후세인의 두 아들이 7월 22일 피 살림으로써 상황이 반전될 경우 보복의 두려움에 싸이있던 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지만,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세인을 찾아내고 그를 지원하는 세력을 소탕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비록 전쟁이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라크 내에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이라크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라크 내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기타 종교적,언어적 소수민들을 망라한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므로 그들의 참여와 권위를 부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적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극단주의가 지배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종교와 정치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라크는 이민
세속화된 정부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다수인 시아파
에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선폰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라크에
시아파가 다수이고 인접한 이란에서는 시아파가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이란은 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이라크에 종교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따
라서 이란의 신통치체제가 이라크의 시아파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 이라
크에 현대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긴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역으로
이란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국적 가치의 확산
에 큰 기여를 하게될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후세인 치하에서 폐쇄된 이라크
경제를 회복시키는 문제인데 정책의 회복을 위해 이라크의 자원이 서구인들에 의하여
착취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테러리즘과 황태러리즘간의 충돌의 계속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는 미국 정부를 구보수주의적 성향에서 신보수주의로 전환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테러도 용인하지 않겠다
는 것이 정책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다. 9.11 테러의 범인들 대부분이 미국과 우호관
계했던 사우디 아라비아인들이며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모두 당혹해 하고 있다. 사
우디 아라비아에서 출현한 알카이다(Al-Qaeda)의 대미투쟁 이유는 종교적인 것과 이
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알카이다는 결포전쟁 이후 미군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주둔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문화”를 그들에게 전파시키는
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슬람의 교리에 입각하여 미국을 사탄
(Satan)의 우두머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에 대한 공격은 신으로부터 보상받
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슬람은 종교적 불만이 그들로 하여금 자살테러를
시작함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테러집단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불만을 제공했던 사우디 아라비아 주둔 미군들을 인접 아랍국가
들로 이동시켰다.

중동에서 테러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이다. 이스라엘이 아
직도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계속 점령하고 있으며 폴레스타인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과 접목되
어 자살테러로 이어진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미국인이나 미국의 시설이 테러의 대
상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이스라엘
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정책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로비가 매우 강
력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하는 반면 미국의
의회 의원들은 미국 내의 유태인 로비에 대하여 영향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논의를 한다거나 텔아비브(Tel Aviv)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의 로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타격을 입은 알카이다는 세력이 실패로 약화되었으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도자인 벤라단(محمد بن راشد)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러단체들의 행동과 이를 추적하는 세움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은 9/11 기념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대규모 태러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의한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에 불만을 가진 아랍 민족주의자들 혹은 이슬람광신자들에 의한 새로운 태러단체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제한다.

국제적인 태러와는 별도로 국내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태러가 빼빼하는 곳은 알제리이다. 알제리에서는 1991년 12월 총선의 1차 투표결과 과격교정당인 이슬람구국전선(Islamic Salvation Front)의 집권이 확실시되자 이듬해 1월에 총선결과를 수용하고 국립통치를 실시함으로써 비롯되었는데, 태러로 인해 국내적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수천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그 정도는 감소했으나 종교적 광신자들에 의한 태러의 뿌리는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다.

(4)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의 문제

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소련 공산주의의 봉쇄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중동문제의 해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격퇴가 확정된 경우 미국은 중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며 1978년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중재에 의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가 대립기간 중이었기 때문이다. 카터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의거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평화가 회복된 후 이어서 이스라엘과 기타 아랍국가들간의 평화협상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9년 11월 이란의 무슬림학생들에 의한 미대사관 점거와 그해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없도록 하였다. 중동에서의 사태가 긴장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아랍·이스라엘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캠프 데이비드협정에서 합의했던 제2단계의 평화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뒤로 일단했다.

1989년 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독립정부가 들어선

에 따라 미국도 이 지역에서 다시 아랍·이스라엘분쟁으로 관심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 빈점이 종식되면서 미·소 관계가 호전되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을 허용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내에 유대인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샤미르(Itzhak Shamir)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관계는 긴장상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때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의 관심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걸프로 전환되었으며 걸프전 기간 중 이스라엘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걸프전 종료 후 미국은 다시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충돌을 놓치며 베이커(James Baker) 미 국무장관이 8차례에 걸쳐 중동을 순방하면서 노력한 결과 1991년 10월 마드리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크가 미국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라크 문제 외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끊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양측간의 폭력의 억제와의 고리를 끊는 문제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아랍인들의 불만이 증대된 상태인데 이들아랍인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양보를 이끌어 냄으로써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러시아, EU 및 UN(국무장관, 정상 Quartet이라고 부름)은 2003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2003년 4월 30일 팔레스타인의 “평화 이정표(road map)”에 합의하였다. 평화 이정표에는 팔레스타인공화국, 이스라엘과의 공존, 팔레스타인의 테러단체와 테러행위 단속, 이스라엘의 정착활동 중지, 피난민 문제 해결, 아랍국가와 이스라엘간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항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공화국 양측이 모두 평화이정표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기대를 갖게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정표가 제대로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5)

(5) 이스라엘과 기타 아랍국간의 관계

만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및 레바논간의 관계정상화이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Golan Heights)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을 자세인 반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Lake Tiberias)의 수자원과 국경의 방어를 위하여 골란고원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에는 충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간의 관계는 같은 바트당에 의하여 통치되면서도 경쟁관계였으나 이라크의 바트당이 사라짐으로써 시리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라크에 민주적인 정부가 자리잡게 되는 경우 대를 이어 독재통치를 해오고 있는 시리아는 민
주화를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리아는 미국정부로부터 테러집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레바논의 해즈봉라에 대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테러지원국가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시리아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중단 압력을 계속 받게 될 것이며, 시리아가 자제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로부터 희법고원을 되찾는데도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레바논은 시리아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독단적으로 판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따라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의 관계 발전여부에 따라 중독변수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6) 아람권 상호간의 주도권 다툼

중동의 국가들 중에 어느 국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아랍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응집요소를 둔다면 종교(Islam)와 언어(아랍어) 및 지리적 인접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랍인들 사이에는 응집요소의 강도에 비하여 그들을 분리시키려는 요소들이 더욱 강력하다. 산유국의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데 비하여 비산유국의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산유국에서 노동자로 취업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무슬림들에게서 산유국 주민과 비산유국 주민들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왕조체제와 토호국들이 있는가 하면 공화국체를 취하면서도 사실은 왕조와 같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내부에서의 민주화의 결여로 통치집단들과 피쳐 자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으며 거의 모든 나라들에 인종적, 언어적 혹은 종교적 소수파들이 존재하는데 민주화의 결여로 소수집단의 불만이 대체로 높지만 별의 배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아랍권 국가들과 비아랍권인 이란, 터키, 이스라엘은 항상 경쟁관계이며 중동지역은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이스라엘)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이슬람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또 정치체제 면에서는 이슬람공존주의에 입각한 신조체제가 있는가 하면 세속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취한 국가로 구분되며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이처럼 중동 국가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보다는 그들을 분리시키려는 요소들이 더 많고 강력하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고대의 거대 통일 아랍제국이었던 우마야드(Ummayyad)제국과 아바시드( Abbasid)제국의 영광을 지중하는 도 아랍주의자들은 아랍국가들의 통일을 추구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국가 이기주의와 충돌하여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집트가 아랍연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이집트의 리더십은 사
라졌다. 1958년 2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하여 동일아랍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을 구성함으로써 아랍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1961년 9월 다시 분리되었다. 이는 아랍계 내의 각 국가간의 이익의 차이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가를 명확히 보여준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가 아랍권에서 주도권추구경쟁을 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압도적인 우위를 장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아랍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바트당과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에 분열된 상태에서 아라크의 바트당이 소멸함으로써 시리아의 바트당도 새로운 출범하게 될 이라크의 신 정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라크가 중동 지역 사회의 거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이슬람 출현 당시의 선정통치체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세속적인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등 이슬람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왕실이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전근대적인 선정통치체제로서 왕실과 정권계층의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으며, 이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있어도 성직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부의 세력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간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와 영(靈)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육(肉)의 세계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려는 성직자들과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가들의 욕망, 그리고 세속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원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대한 단결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아랍인들의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요구와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Qatar와 같은 아랍국가는 미국의 CNN과 유사한 알자지라(Al Jazeera)와 같은 위성 TV 방송망을 통해 진실을 방송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추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지역국가들의 갈등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요르단강 등 수자원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라크의 평화와 안목의 차이로 인하여, 자원과 병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치적 외교경쟁으로 인하여,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그리고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아랍세계 내에서 응집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단결된 행동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7) 중동의 대량파괴무기 문제

미국이 테러리즘의 근본을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제3세계 국가들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으로 이라크에서의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우려는 제거되었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미국이 다음 단계로 해결해야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제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국은 또한 이란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중동평화협상에 반대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중동 내의 무방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펼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란이 대량파괴무기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거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란은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에 관하여 북한과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 국가로 분류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이라크 전 이후 이라크의 전후복구와 긴장 유지를 위해 노력할 집중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전면에 그치고 있으며 물리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점차 유지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이란 내에서 종교적 지도자들의 독재에 반대하고 개혁을 선호하는 다수가 현 지도자들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가 빈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란의 반체제운동을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체제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중동국가들 중에서 대량파괴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유를 추구하고 있는 잠재국가들로서 시리아와 리비아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랍국가들간의 우주국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들 국가들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의 보유는 미국의 관심에 앞서 바로 인접 아랍국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이다.

(8) 중동국가들의 정치발전의 문제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적 세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민들이 서방국가에서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은 AD 622년 출발할 때부터 신정통치체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강요되었다. 신이 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지도자들은 신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신과 정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요구되었다.

중동국가들에서 이슬람이 법적으로 국교와 되어 있거나 국교가 아니라면 이슬람교와 사회규범을 지배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연히 복종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또한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이슬람이 백성들에게 좌절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슬람 교의 종교적 윤리를 따라 유아인들과 서방국가들의 유일신 사상인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이슬람들을 단결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슬람의 특성 때문에 중동지역 국가들을 민주화하는데는 정치체제의 탈 이슬람화가 가장 중요하다. 신의 명령을 복종한 종교인들의 독재통치로부터의 자유는
5. 한국의 정책적 대응

가.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국내소비용 원유 수입을 위해 소요되는 원유는 연간 총 200억불 내외로서 전체수입액의 약 20%에 달한다. 이 중에서 겔프지역에서 수입되는 것이 총 수입액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석유의 안정적 공급은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정은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이 중동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음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대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석유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겔프지역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석유 매장량의 2/3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동 외에도 베네수엘라, 러시아, 캐나다 등에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최근 카스피해를 연안 지역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도 계속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유국들과의 관계발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베리아로부터의 석유수입은 근거리로 인하여 수송비의 절약 등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천연가스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를 이용한 확대이 경제성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민주화와 정치적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겔프지역으로부터 세계

11) http://www.mocie.go.kr/korean/pds/statistics/download/2003060102313_energy_1-4-2.xlsx
각 지역으로의 석유공급은 당분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대중동 건설산업 진출

한국의 경제적 도약은 1960년대 후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으로부터 인수한 석유대란의 배상금과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계기로 월남에 진출했던 한국의 기업체의 활동으로 인한 외화수입이 크게 기여하였다. 1973년 월남전의 종식과 더불어 월남에 진출했던 건설 및 수송업체들이 경제적으로 국해야 인내한 국내경제가 첨단산업에 빠졌을 때 1974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고 그후 아랍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 함으로써 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랍의 산유국들이 증가된 석유달러를 이용하여 그들의 국토개발을 시작하였을 때 월남에서 경제적 파국을 겪었던 한국의 건설 및 수송업체들이 중동에 진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촉발하게 되었다. 그후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수많은 해외공사의 수주를 통해 해외공사에 관한 기술(know-how)을 촉각하였으며 기회만 부여되면 거의 어디서나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80년대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 1990년대 초의 걸프전쟁, 그리고 2000년대 초의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에서는 많은 건설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석유시설이 저정으로 가동될 경우 건설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자원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부차원 혹은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중대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통제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재건계획 역시 이라크를 독자적 극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재건계획 역시 이라크를 독자적 극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의 재건계획 역시 이라크를 독자적 극복을 하게 될 것이다.

다. 대중동투자전략

교통, 통신 및 금융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불황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현상이 그리고 ASEAN이나 NAFTA 등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중동국가들은 석유가 고갈됨으로써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희생한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유가 고갈된다면 사막과 뜨겁고 건조한 기후와 수자원의 부족은 중동지역의 많은 부분을 인간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해 중동국가들은 석유고갈 이후에 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하수의 개발을 통해
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일반제조업 보다는 정보통신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외에도 중동의 산유국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미래산업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이면서 접근한다면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대한 반발 때문에 동일 기술수준이라도 가능한 한 미국이나 유럽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랍층에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랍 세계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어떠한 기술주요자를 제공받을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분열된 중동을 만들었으며 아랍인들은 기독교를 적대적인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구국가들에 대하여도 비우호적이다. 반면에 한국은 서구국가나 이스라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랍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석유교량 이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중동지역의 산업에 투자하기에는 좋은 입장인 것이다.

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의 입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관계정상화는 밀고도 현란한 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유대인문제가 있었다면 1948년 5월 이후에는 이스라엘만의 출현과 더불어 유대인문제가 해결되면서 팔레스타인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팔레스타인문제 외에도 많은 소수민족문제가 지구상에 남아있긴 하지 만 세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문제이다. 이 분쟁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한된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 데 여기에 민족의식이 급증하고 종교의식을 가미함으로써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제한된 영토에 대한 공유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제로섬(zerosum)적인 의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성을 건 투쟁을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1974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모르기야만 했으며 상주공관을 폐쇄하고 한동안 다른 지역의 외교관이 이스라엘과의 외교업무를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9년 당시까지 아랍 국가들 의 리더적이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외교관계수립 이후 아랍세계의 응집력은 약화되었으나 석유 무기화는 참차 효력은 상실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랍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 경우 석유를 무기화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만점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OECD의 회원국임과 동시에 세계의 경제규모 면에서 10위권내에 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아랍의 산유국들이 한국을 상대로 석유를 간단히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정상직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아랍층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외교가 되어서도 안 되며 이스라엘에 편향되어서도 안 된다. 아랍의 산유국들은 석유를 무기화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분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중동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모든 분쟁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양측에 적극적인 개입자세를 취하고 필요시에는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에 대한 구호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입장이 꼭히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비정부기구로 하여금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사태에 대한 반대여론이 복잡한 가운데 정부의 자원에서는 국가이익을 위해 이라크전에 참여하면서도 비정부기구들의 변전활동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국제기구에서의 중동국가들의 지지확득

중동의 석유자원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국제기구에서의 중동국가들의 외교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중동의 주민들은 아랍인 및 비아랍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는 그들의 역사에agina 하여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발생지로서 모든 무슬림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고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은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며 이로 인하여 진 이스라엘적이며 예루살렘 및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신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적으 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하여 아랍국가들과 인적교류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교류와 기업체들의 기업활동을 통한 교류에 추가하여 학문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면 중동국가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학문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동학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중동지역의 학자들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중동국가들에게서의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인 교류에 추가하여 군사적인 교류를 통해서도 양쪽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군사적인 교류에는 군사시험단의 방문과 군사교육기관의 교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군사교육기관에는 시찰단의 교환방문 및 학생의 교환을 들 수 있다.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터키 육군사관학교간의 생도의 교환교육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생도의 교환교육에 추가하여 국방대학교의 고급장교들의 교환교육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현재 한국국방대학교에는 베네수엘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각각 1명의 대령급 장교들이 1년간 한국
의 대령급 장교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 두뇌들간의 교류와 친교는 결국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에 대한 지원세력이 될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시리아이다. 시리아는 북한과의 관계, 제제의 정착성, 및 한국과 이스라엘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시리아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시리아가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정치적으로 한국과 시리아간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재가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조성하키위해 한국과 시리아간의 정치적인 교류는 어렵더라도 문화적인 교류는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학자들간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여 한국의 대학교들에서 시리아의 학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바. 중동 전문가의 양성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대륙의 중간에 위치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문물을 전달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해왔다. 실크, 도자기, 조미료 등의 무역을 했던 실크로드에 관한 이야기와 유럽인들로 하여금 동방을 찾아 탐험을 떠나도록 했던 것은 중동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양극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치하는 냉전체제가 계속되면서 중동지역은 석유공급지역으로서만 인식되었고 사실 그곳의 인간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미국과 유럽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 중동에 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동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들은 고작 아랍어, 이란어, 터키어 및 히브리어를 전공으로 밝한 학생들과 학자들, 이슬람 혹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자들, 그리고 이 지역의 기업들과 무역을 하는 기업인들뿐이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광 소요가 증대함에 따라 인적 접촉이 증대하는데 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는 매우 낮은 형편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이고, 국가간의 전쟁이 가장 빈번했던 지역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위해 또한 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동지역에서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뿐만 외에도 다른 분야의 학문을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 분야의 업무의 증진을 위해서도 기존의 학자들의 모임인 중동학회를 잘 활용하
 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동학회에서는 중동에 관한 언어뿐만 아니라 중동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며 현지학자들을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학술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중동에 대하여 어느 기관보다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외교동상부의 중동담당 부서와 중동학회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잘 협조된 활동을 한다면 중동학회는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비길가능한 도움을 국가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동학회에서 한국주재 중동국가들의 외교관을 초청하는 행사나 중동국가의 학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면 한국과 그들 국가들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1948년 5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중동에서의 분쟁에는 아랍·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하나의 상수적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랍·이스라엘 간의 갈등 외에 이 지역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이데올로기의 변화, 인류의 필수 자원으로서의 석유를 둘러싼 갈등, 지리적 위치로 인한 전략적 수로(수메르하나, 호르 무즈해협 등)를 둘러싼 갈등,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 테러, 정치적 민주화 등 변수적 요인들이 있다. 중동지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이 끝날 때마다 상당한 역내적사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의 전면전쟁이 가장 빈번했던 지역이었으나 미·소간의 냉전이 계속될 동안에는 비록 전쟁 이후라도 역내질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제4차 중동전쟁이 종결된 이후 이집트의 태도 변화로 중동질서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미·소간의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초 걸프전쟁 시에는 비록 미국이 유엔의 후원 하에 다국적군을 이끌고 참여하였고 빠른 승리를 하였지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세제를 허용한 후 미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로 지역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이라크전후의 질서재편은 걸프전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9.11테러를 통해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태도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테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중동지역이고 또 테러 행위자들이 모두 중동출신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테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주의의 불가침성을 무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테러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모두 비민주적이고, 이슬람적이며, 반미적인 요소들이 이들에 대하여 미국이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비민주적 체제를 민주화시키고, 중동의 정치에서 이슬람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반미적인 요소들은 친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가 팔레스타인 문제
을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라크 내에 임시정부(governing council)를 수립함으로써 후자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이정표(road map)"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천에 올겨지고 있다.

위의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중동지역은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적절한 가격에 의한 석유의 공급으로 세계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한국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역국가들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와 접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수 없는 압력을 가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른 우연이든 간에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관성을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지구의 어디에선가 발생하곤 했는데 다음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외교통상부 중동과

대중동 경제진출 및 자원확보
강화 방안

2003. 7. 31

주 동 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I. 중동경제의 특징과 최근 동향

1. 중동경제의 구조와 특징
   (1) 높은 석유산업의존도
   (2) 낮은 산업화수준
   (3) 국가간 계층간 높은 소득격차

2. 중동경제와 에너지자원
   (1) 석유
   (2) 천연가스

3. 주요국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1) 개관
   (2) 이라크
   (3) 사우디 아라비아
   (4) 쿠웨이트
   (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6) 이란

II. 중동경제의 주요 현안과 추진 전망

1. 이라크 복구
2. 미국·EU와의 자유무역지대
3. 역내 경제통합과 GCC
4. 구조조정과 개방화
5. 산업구조 다변화
6. 중동평화로드맵과 팔레스타인 독립
Ⅲ. 한국의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

1.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과 특정

2. 부문별 진출현황
   (1) 상품수출
   (2) 건설수주
   (3) 직접투자

Ⅳ. 대중동 경제진출 강화방안

1. 대중동 경제진출의 기본전략
   (1) 중동에 대한 기본인식 재정립
   (2) 문화·인적교류 확대 필요
   (3) 현지투자를 통한 장기적 진출거점 확보
   (4) 이라크 복구 적극 참여

2. 분야별 진출전략
   (1) 상품수출
   (2) 건설수주
   (3) 직접투자

Ⅴ. 자원도입 현황과 전략

1. 대중동 자원도입 현황
   (1) 개관
   (2) 원유도입 현황
   (3) 천연가스 도입현황

2. 대중동 자원확보 강화방안
   (1) 대중동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한계
   (2) 아시안 프레미엄 개선
   (3) 자원개발수입의 확대
Ⅰ. 중동경제의 특징과 최근 동향

1. 중동경제의 구조와 특징

(1)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

중동지역은 세계의 주요 석유국이 밀집해 있어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제유가의 추이에 따라 경기가 좌우되는 특징을 보인다.

석유국들의 총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90% 내외이며, 이밖에 재정수입·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내외로 매우 높다.

또한 비석유국들의 경우도 석유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석유으로부터의 원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동지역 전체로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2) 낮은 산업화 수준

중동지역 21개국 가운데 1999년 현재 제조업이 GDP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튀니지, 터키, 이스라엘 등 3개국뿐이다.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10% 내외로 중동지역 전체의 공업화 수준이 매우 낮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조업은 섬유, 의류공예, 석품공업, 광물공업 등을 중심으로 영세한 규모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칠보석유국들은 1980년대 이후 석유화학산업과 철강, 알루미늄 등 건설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터키 등도 섬유, 전자, 자동차 조립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공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표-1> 중동경제의 구조 (1999년 기준)

<table>
<thead>
<tr>
<th>국가</th>
<th>인구 (만명)</th>
<th>1인당 GNP (달러)</th>
<th>제조업비중 (%)</th>
<th>광물수출비중 (%)</th>
</tr>
</thead>
<tbody>
<tr>
<td>산유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audi A</td>
<td>2,100</td>
<td>8,101</td>
<td>5</td>
<td>95</td>
</tr>
<tr>
<td>UAE</td>
<td>290</td>
<td>18,931</td>
<td>8</td>
<td></td>
</tr>
<tr>
<td>Kuwait</td>
<td>200</td>
<td>12,696</td>
<td>11</td>
<td></td>
</tr>
<tr>
<td>Iran</td>
<td>6,300</td>
<td>1,760</td>
<td>14</td>
<td>90</td>
</tr>
<tr>
<td>Algeria</td>
<td>3,000</td>
<td>1,550</td>
<td>11</td>
<td>97</td>
</tr>
<tr>
<td>Oman</td>
<td>213</td>
<td>5,200</td>
<td>4</td>
<td></td>
</tr>
<tr>
<td>Egypt</td>
<td>6,200</td>
<td>1,400</td>
<td>15</td>
<td>40</td>
</tr>
<tr>
<td>이슬람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Morocco</td>
<td>2,800</td>
<td>1,290</td>
<td>17</td>
<td></td>
</tr>
<tr>
<td>Jordan</td>
<td>500</td>
<td>1,500</td>
<td>14</td>
<td>38</td>
</tr>
<tr>
<td>Tunisia</td>
<td>900</td>
<td>2,100</td>
<td>20</td>
<td></td>
</tr>
<tr>
<td>Turkey</td>
<td>6,400</td>
<td>2,900</td>
<td>20</td>
<td>8</td>
</tr>
<tr>
<td>Israel</td>
<td>600</td>
<td>16,902</td>
<td>27</td>
<td></td>
</tr>
<tr>
<td>중동 전체</td>
<td>29,100</td>
<td>2,060</td>
<td>10</td>
<td>81</td>
</tr>
</tbody>
</table>

자료: World Bank, EIU 등 자료 종합

(3) 국가간 계층간 높은 소득격차

중동은 지역 평균 1인당 GNP 2,060 달러 (1999년, World Bank)로 세계평균 4,890 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중저소득국가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지역의 산유국들과 이스라엘은 1만 달러 이상으로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산유국과 알제리, 이란, 이집트 등의 산유국들은 1인당 GNP 1,000~2,000달러 수준의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단, 예멘, 팔레스타인 등은 세계 최빈국의 범주에 들어간다.

각국 내부적으로도 부부격차가 매우 심해 최고급품을 선호하는 부유층과 저가품을 찾는 빈곤층으로 시장이 극단적인 양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중동경제와 에너지자원

(1) 석유

중동지역의 석유는 2001년 기준 세계 전체 확인매장량의 69.5%, 생산량의 36.0%, 수출량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비중으로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11개 회원국 중 중동국가가 8개국에 달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일국가로 매장량(24.4%), 생산량(12.0%), 수출량 (16.2%)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향후 2020년경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여타지역의 원유 매장량이 고갈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석유 공급원으로서 중동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표-2> 중동 석유산업의 현황 (2001년)

<table>
<thead>
<tr>
<th></th>
<th>매장량 (백만 배럴)</th>
<th>생산량 (천배럴/일)</th>
<th>수출량 (천배럴/일)</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구성비(%)</td>
<td>구성비(%)</td>
<td>구성비(%)</td>
</tr>
<tr>
<td>Saudi</td>
<td>262,697 (24.4)</td>
<td>7,889 (12.0)</td>
<td>6,036 (16.2)</td>
</tr>
<tr>
<td>Iraq</td>
<td>112,500 (10.5)</td>
<td>2,594 (4.0)</td>
<td>1,710 (4.6)</td>
</tr>
<tr>
<td>Iran</td>
<td>99,080 (9.2)</td>
<td>3,572 (5.5)</td>
<td>2,446 (6.6)</td>
</tr>
<tr>
<td>UAE</td>
<td>97,800 (9.1)</td>
<td>2,114 (3.2)</td>
<td>1,787 (4.8)</td>
</tr>
<tr>
<td>Kuwait</td>
<td>96,500 (9.0)</td>
<td>1,947 (3.0)</td>
<td>1,214 (3.3)</td>
</tr>
<tr>
<td>Libya</td>
<td>36,000 (3.3)</td>
<td>1,324 (2.0)</td>
<td>968 (2.6)</td>
</tr>
<tr>
<td>Qatar</td>
<td>15,207 (1.4)</td>
<td>633 (1.0)</td>
<td>606 (1.6)</td>
</tr>
<tr>
<td>Algeria</td>
<td>11,314 (1.1)</td>
<td>777 (1.2)</td>
<td>442 (1.2)</td>
</tr>
<tr>
<td>Oman</td>
<td>5,848 (0.5)</td>
<td>872 (1.3)</td>
<td>917 (2.5)</td>
</tr>
<tr>
<td>Egypt</td>
<td>2,948 (0.3)</td>
<td>639 (1.0)</td>
<td>54 (0.1)</td>
</tr>
<tr>
<td>Syria</td>
<td>2,500 (0.2)</td>
<td>519 (0.8)</td>
<td>346 (0.9)</td>
</tr>
<tr>
<td>Others</td>
<td>4,129 (0.4)</td>
<td>701 (1.1)</td>
<td>329 (0.9)</td>
</tr>
<tr>
<td>Middle East</td>
<td>746,523 (69.5)</td>
<td>23,581 (36.0)</td>
<td>16,201 (43.4)</td>
</tr>
<tr>
<td>World</td>
<td>1,074,350 (100.0)</td>
<td>65,499 (100.0)</td>
<td>37,333 (100.0)</td>
</tr>
</tbody>
</table>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1
2000년 기준 세계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는 34.8%의 비중을 차지하여 최대의 에너지원이며, 경제성과 편리성면에서 당분간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힘든 실정을 고려할 때 향후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이 지니는 정치, 경제적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연료별 에너지원 비중 (2000년)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 천연가스

중동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01년 현재 세계 전체의 44.2%를 차지하나 생산은 아직 초기단계로 13.8%, 수출은 16.1%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중동의 비중은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세계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비 2.7% 증가했으나 중동지역은 13.1% 증가했으며, 수출도 32.5% 증가하여 세계 전체 증가율 4.7%를 압도적으로 상회했다.
확언매장량도 세계 전체로 8.0%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중동(19.3%)과 아프리카(9.5%)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동유럽(-0.3%)과 서유럽(-0.7%)은 감소, 다른 지역은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천연가스는 최근 발전, 난방, 취사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너지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전체 세계 에너지원의 23%에서 2020년에는 28%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천연가스 공급원으로서 다른 지역의 상대적 뢨조와 더불어 중동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현재 세계 최대의 생산지인 동유럽지역은 매장 및 생산량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중동이 최대의 공급지로 부상될 전망이다.

<표-3> 중동의 천연가스 매장 및 생산·수출량 (2001년)

<table>
<thead>
<tr>
<th></th>
<th>매장량  (십억м3)</th>
<th>생산량  (백만 m3)</th>
<th>수출량  (백만m3)</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구성비</td>
<td></td>
<td>구성비</td>
</tr>
<tr>
<td>Iran</td>
<td>26,600</td>
<td>14.9</td>
<td>69,145</td>
</tr>
<tr>
<td>Qatar</td>
<td>25,768</td>
<td>14.5</td>
<td>32,400</td>
</tr>
<tr>
<td>Saudi</td>
<td>6,456</td>
<td>3.6</td>
<td>53,690</td>
</tr>
<tr>
<td>UAE</td>
<td>6,060</td>
<td>3.4</td>
<td>44,940</td>
</tr>
<tr>
<td>Algeria</td>
<td>4,523</td>
<td>2.5</td>
<td>84,136</td>
</tr>
<tr>
<td>Iraq</td>
<td>3,109</td>
<td>1.7</td>
<td>2,760</td>
</tr>
<tr>
<td>Egypt</td>
<td>1,557</td>
<td>0.9</td>
<td>21,200</td>
</tr>
<tr>
<td>Kuwait</td>
<td>1,557</td>
<td>0.9</td>
<td>9,500</td>
</tr>
<tr>
<td>Libya</td>
<td>1,314</td>
<td>0.7</td>
<td>6,180</td>
</tr>
<tr>
<td>Oman</td>
<td>..</td>
<td>..</td>
<td>13,770</td>
</tr>
<tr>
<td>Syria</td>
<td>..</td>
<td>..</td>
<td>5,840</td>
</tr>
<tr>
<td>Bahrain</td>
<td>..</td>
<td>..</td>
<td>8,900</td>
</tr>
<tr>
<td>Middle East</td>
<td>78,750</td>
<td>44.2</td>
<td>352,761</td>
</tr>
<tr>
<td>World</td>
<td>178,216</td>
<td>100.0</td>
<td>2,564,235</td>
</tr>
</tbody>
</table>

자료: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1
2. 주요국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1) 개관

중동경제는 최근 수년 동안 주로 대내외 정치불안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다. 2000년 9월 이후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 채발, 2001년 9월 미국 WTC 태러 사건과 잇따른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3-4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등 대형 사건이 이어지면서 역내 경제환경을 크게 위축시켰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걸프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은 지난 2년 동안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에 따른 투자 및 수요 위축 등으로 1-2%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역내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이란, 리비아 등은 유가상승의 혜택으로 4-5%대의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지중해 연안의 비산유국들은 경제불안에 따른 관광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 등으로 모두 부정적 영향을 입었다.

2003-4년중 중동경제는 이라크전 종료에 따라 역내 불안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복수 특수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등도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 복구의 지연 가능성, 이란의 핵사찰문제와 국내 정정불안, 팔레스타인 독립을 전제로 한 중동평화 로드맵 이행의 불확실성 등 낙관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계획의 실행여부는 낙관하기 어려우나, 중동각국은 EU 주도하의 무역협정 및 WTO 가입, IMF 주도하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중동경제의 세계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표-4> 중동주요국 경제성장율 (실질GDP) 추이와 전망

<table>
<thead>
<tr>
<th></th>
<th>2000</th>
<th>2001</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사우디아라비아</td>
<td>4.9</td>
<td>1.2</td>
<td>0.7</td>
<td>2.9</td>
<td>3.0</td>
</tr>
<tr>
<td>쿠웨이트</td>
<td>3.9</td>
<td>-1.0</td>
<td>-2.0</td>
<td>2.7</td>
<td>1.7</td>
</tr>
<tr>
<td>UAE</td>
<td>1.3</td>
<td>2.7</td>
<td>2.9</td>
<td>4.2</td>
<td>4.8</td>
</tr>
<tr>
<td>이란</td>
<td>5.2</td>
<td>5.0</td>
<td>5.7</td>
<td>5.7</td>
<td>4.3</td>
</tr>
<tr>
<td>이라크</td>
<td>4.0</td>
<td>-6.0</td>
<td>-6.5</td>
<td>-7.5</td>
<td>20.0</td>
</tr>
<tr>
<td>이집트</td>
<td>5.1</td>
<td>3.5</td>
<td>3.0</td>
<td>1.6</td>
<td>3.2</td>
</tr>
</tbody>
</table>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국 최근호
주: 각 통계는 EIU의 추정 및 전망치로 단순 참고자료임

<표-5>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추이 (현물가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WTI</td>
<td>14.40</td>
<td>19.27</td>
<td>30.30</td>
<td>25.97</td>
<td>29.47</td>
<td>35.79</td>
<td>30.68</td>
<td></td>
</tr>
<tr>
<td>Brent</td>
<td>13.24</td>
<td>18.09</td>
<td>28.73</td>
<td>24.83</td>
<td>28.25</td>
<td>32.66</td>
<td>27.55</td>
<td></td>
</tr>
<tr>
<td>Dubai</td>
<td>12.19</td>
<td>17.24</td>
<td>26.12</td>
<td>22.84</td>
<td>25.79</td>
<td>30.03</td>
<td>25.56</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 이라크

2003년 4월 미영동맹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이래 동맹군 임시정부(CPA: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다. 점령 직후 미국 방부 주도의 재건인도지원처(ORHA)가 5월 초 국무부 주도의 CPA로 바뀌었으며, 국무부 관료 출신인 Paul Bremer가 최고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2003. 5. 22. UN은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영 동맹군의 이라크 지배권을 인정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 개발기금(Development Fund for Iraq)이 설립되었으며, 향후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은 이 기금에 편입되고 UN 감독하에 동맹국의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맹국은 1~2년내 헌법을 재정하고 총선을 거쳐 이라크인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7월 중순 이라크내 각정과를 대표하는 25인으로 과도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CPA의 보조기관으로 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다.

그러나 정권 이양에는 장애요인 많아 계획 이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담 후세인을 추종하는 기존 집권 Baath 당 잔존 세력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쉬아파의 반미 정서가 매우 강하다.

또한 신뢰할 만한 친미 성향의 강력한 국내 지도자가 없으며, 전후 미국이 부각시킨 Ahmed Chalabi는 급조한 스타로 국민 인지도와 신망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경찰과 군대의 해체, 행정조직의 와해로 정상적인 국가조직을 갖추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UN의 해금으로 경제는 일단 호전될 전망이다. 기존의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종료하고 이후로는 석유 생산과 수출에 어떠한 제한도 없게 된다. 기존 경찰과 군대의 해체, 행정조직의 와해로 정상적인 국가조직을 갖추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석유생산은 1년 이내 하루 250만 배럴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향후 3년 이내에는 최대 400~500만 배럴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석유 수출액은 140~1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3) 사우디 아라비아

와병 중인 Fahd 국왕을 대신해 Abdullah 황태자가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항후 왕위를 승계할 전망이다. 왕위 승계후에는 정치·경제 개혁을 확대하고 GCC 경제통합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전 종료 이후 유가의 약세 반전으로 2003년 하반기 석유수출은 줄어들 전망이나, 상반기 중의 고유가에 따른 혜택과 안보 불안 요인 해소 등으로 경제 전반은 호전될 전망이다.

영국 EIU의 전망치에 따르면 2003년 석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나 840만 배럴수준에 달하고, 석유수출액은 2002년 482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5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후 당분간은 석유부문의 활황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가스, 전력, 통신부문 등에서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4)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로 최대의 안보 불안요인이 해소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후 국민동원령을 해체했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중시지수가 치솟았다.

2003~4년중에는 그 동안 정세불안으로 개발을 미루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70억 달러가 투자될 Northern Oil Fileds 프로젝트와 전력, 석유화학 등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의 항공물류 시설 마비로 쿠웨이트, 요르단 등이 중간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라크의 전후복구에 따른 특수효과도 누릴 전망이다.

2003년 석유생산은 하루 200만 베릴, 경상수지 약 80억 달러 흑자, 경제성장 5%대 등이 전망된다.

(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동의 중개무역 및 금융, 서비스센터로 임지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 UAE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전 등 지역정세 불안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 전쟁이 빠르게 종료될때따라 항후로는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역내 경제안정과 이라크 복구 특수에 따라 항공, 해운, 금융, 관광 등 서비스센터로서 UAE의 기능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3-4년중에는 4~5%대의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연방내 최대국가인 아부다비는 석유산업의 활황에 기대하고 있으며, 전력, 담수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외자를 유치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
(6) 이란

이란은 국토면적과 인구,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중동에서 가장 개발잠재력이 큰 나라이나, 1979년 호메이니혁명 이후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장기간 경제가 위축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2년 동안에는 중동의 정세불안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반면 유가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라크전이 종료되면서 미국의 관심이 이란으로 전환되어 항후로는 미·이란 갈등이 중동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동정책은 걸프지역의 양대 강국인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균형(Check and Balance) 전략이었으나, 1990년 이후로는 양국에 대한 동시억제(Double Containment) 전략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라크의 외미경관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억제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항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한편, 1996년 이후 발효중인 이란제재(일명 D’Amato법)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직자들의 장기 독재에 염증을 느낀 이란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항후로는 내외의 정치문제가 이란 경제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아왔던 하타미대통령은 보수세력의 견제와 국민들의 실망이라는 양쪽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실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Ⅱ. 중동경제의 주요 현안과 추진 전망

1. 이라크 복구

최근 중동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들은 미영동맹군이 지배하고 있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이다. 이라크는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 보유국가로서 1980년대 초반까지 연간 400억 달러의 교역규모와 4,000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기록하던 나라였으나, 이후 8년간 걸친 대이란 전쟁, 1991년의 걸프전쟁과 2003년의 제2차 걸프전쟁, 10여년간 걸친 UN의 경제제재 등으로 경제력이 거의 뒤흔들려왔다.

그러나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석유생산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에 달하고 100억 달러 내외의 상품수입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미영동맹군에 대한 사담 후세인 추종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이라크 국민들의 반감 등으로 정부 이양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전후 복구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후 복구의 기본원칙은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UN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표-6> 이라크의 경제력 추이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GDP</td>
<td>달러</td>
<td>446</td>
<td>536</td>
<td>498</td>
<td>749</td>
<td>168</td>
<td>..</td>
<td>..</td>
</tr>
<tr>
<td>1인당GDP</td>
<td>달러</td>
<td>3,476</td>
<td>4,048</td>
<td>3,197</td>
<td>4,145</td>
<td>835</td>
<td>..</td>
<td>..</td>
</tr>
<tr>
<td>수출</td>
<td>달러</td>
<td>216</td>
<td>263</td>
<td>122</td>
<td>104</td>
<td>5</td>
<td>101</td>
<td>134</td>
</tr>
<tr>
<td>수입</td>
<td>달러</td>
<td>72</td>
<td>139</td>
<td>106</td>
<td>65</td>
<td>7</td>
<td>92</td>
<td>123</td>
</tr>
<tr>
<td>원유생산량</td>
<td>밸B/D</td>
<td>348</td>
<td>265</td>
<td>140</td>
<td>211</td>
<td>74</td>
<td>158</td>
<td>272</td>
</tr>
</tbody>
</table>

자료: EIU, OPEC, IMF
주: 1) 2003, 2004년은 EIU의 전망치
2) 1980~88년 쿠웨이트 전쟁, 1990년 쿠웨이트 침공, 1991년 걸프전
2. 미국·EU와의 자유무역지대

이러크전 종전 직후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 로드맵과 함께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창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동에 미국 주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중동을 미국의 우선 아래 놓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석유가 지배적인 중동국가들의 수출구조상 미국과의 자유무역에서 추가로 얻을 혜택이 없는 반면 미국상품이 중동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중동에 광범위한 반미감정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나설지도 모름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의 경우 자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시 이스라엘산 원자재를 7% 이상 투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아랍국가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현재 미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모로코 밖에 없는 설정이다.

이와 달리 중동국가들은 전통적 주 교역상대인 EU와의 자유무역 실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EU는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을 통해 2010년까지 중동의 12개 국가와 EU-지중해자유무역지대(EMFTA)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다.

※ 바르셀로나 선언 실천 대상 12개국: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터키, 키프로스, 말타; 리비아는 옵저버 자격

상당수 중동국가들은 EU와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및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 등을 체결하고 각종 무역특혜를 받아오고 있다.
3. 역내 경제통합과 GCC

중동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EU 모델을 본뜬 경제통합을 줄곧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 이는 60년대 아랍공동시장(ACM), 80년대 걸프협력위원회(GCC), 아랍협력위원회(ACC), 아랍마그레브연합(ACM) 등 경제통합을 내건 여러 단체의 부진한 활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BOX-1 참조).

중앙지역의 경제통합이 부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내 국가의 산업발전 수준이 낮고 수출상품이 경쟁적인 소수 품목에 특화되어 역내국가간 교역유인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1950년대 중동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은 7% 수준으로 EU의 60%, 아시아의 30%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고 아프리카의 9% 보다도 낮았다 (세계평균 53%).

최근에는 1998년 1월 아랍연맹 주도로 18개 아랍국가가 아랍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에 합의하고 10년 이내에 역내 관세를 철폐키로 결의했으나, 과거 경험이나 무역구조, 정치·경제환경에 비추어 이행여부는 회의적이다.

다만 GCC는 중동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의 주도하에 그 동안 부진했던 경제통합의 가속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1년 Muscat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의 Abdullah 황태자가 GCC의 부진한 활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1982년 체결된 통일경제협정에 의해 품목별로 4~20%의 공동대외관세를 체택해왔으나, 최근 이를 완전히 단일화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는 5%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는 공동화폐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환율의 달리 연동 등 단계적인 준비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아랍권의 경제통합 추진기구

- 아랍연맹 (Arab League): 1945년 창설. 아랍권의 UN으로 불리는 가장 포괄적인 협력기구로 현재 가맹국 22개국. 1953년 무역협정 체결하고 가맹국간 무역자유화 표방했으나, 효력 상실한 상태.
- 아랍경제통합이사회 (Council of Arab Economic Unity: CAEU): 1964년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 5개국에 의해 창설. 역내 경제통합 목표로 아랍공동시장 (ACM) 결성을 주도했으나 현재 유명무실.
- 아랍자유무역지대 (Arab Free Trade Area: AFTA): 1998년 아랍연맹 가맹국중 18개국이 합의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역내관세 완전 철폐키로 함

GCC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이유는 회원국이 모두 산유부국이고 주도 국가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화폐 도입에 이어 연방제 도입 등 일정 수준의 경제적 통합까지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사우디 주도에 대한 약소국들의 불안이 장애요인이다.
4. 구조조정과 자유화

중동의 상당수 국가들은 과거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90년대 이후 구조조정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보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주의적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해 오고 있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로는 상당수 국가들이 IMF와 World Bank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복수 환율 단일화, 시장개방 등의 광범위한 개혁조치들을 추진해 왔다.

90년대 후반기 이후에만 해도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예멘, 터키 등이 IMF 자금 융자 조건으로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 SAP)을 추진했다(표-7 참조).

이와 동시에 WTO 가입을 통해서도 무역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중동에서는 쿠웨이트, 바레인, 모로코 등 3개국이 WTO 창설멤버로 가입했으나 2003년 7월 현재는 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사우디 등 5개국은 읍저버로 가입협상을 하고 있다.


※ WTO 읍저버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레바논, 예멘, 수단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사회주의권과의 연계 및 이슬람교에 기초한 사회·문화체계의 차이 등으로 서방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일정 부분 단절되었던 중동 경제를 세계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패권이 확연히 입증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의 세계화 노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을 축으로 한 이슬람신경체제와 서방국가들의 분쟁 충돌이 확대될 경우에는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7> 최근 중동국가들의 IMF 구조조정자금 도입계약

<table>
<thead>
<tr>
<th></th>
<th>자금계정</th>
<th>합의일시</th>
<th>종료일시</th>
<th>합의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알제리</td>
<td>EA</td>
<td>1995. 5. 22</td>
<td>1998. 5. 21</td>
<td>1,169.28</td>
</tr>
<tr>
<td>요르단</td>
<td>EA</td>
<td>1996. 2. 9</td>
<td>1999. 2. 8</td>
<td>238.04</td>
</tr>
<tr>
<td>이집트</td>
<td>SA</td>
<td>1996. 10.11</td>
<td>1998. 9. 30</td>
<td>271.40</td>
</tr>
<tr>
<td>에멘</td>
<td>EA</td>
<td>1997. 10.29</td>
<td>2000. 10.28</td>
<td>105.90</td>
</tr>
<tr>
<td>에멘</td>
<td>ESAF</td>
<td>1997. 10.29</td>
<td>2000. 10.28</td>
<td>265.75</td>
</tr>
<tr>
<td>요르단</td>
<td>EA</td>
<td>1999. 4. 15</td>
<td>2002. 4. 14</td>
<td>127.88</td>
</tr>
<tr>
<td>터키</td>
<td>SBA</td>
<td>2002. 2. 4</td>
<td>2004. 12.31</td>
<td>12,821.20</td>
</tr>
<tr>
<td>요르단</td>
<td>SBA</td>
<td>2002. 7. 3</td>
<td>2004. 7. 2</td>
<td>85.28</td>
</tr>
</tbody>
</table>

자료: IMF

5. 산업구조 다변화

중동국가들은 산유국, 비산유국 공동으로 특정 소수 품목의 생산과 수출에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지녀 이의 개선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오고 있다.

석유산업에 의존하는 산유국들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등 석유하류부문 진출을 통한 공업화 노력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분야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중동국가들의 세계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7.3% -> 2006년 11.3% 예상: 에틸렌유도품 기준).

사우디, 리비아 등은 농업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쿠웨이트, 바레인, UAE 등 걸프 지역의 군소 산유국들은 금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UAE의 두바이, 아부다비 등은 중개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집트, 터키,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등 비산유국들은 석유·의류산업의 대 EU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폭의 유입으로 고전하고 있다.
산유국들의 경우 인력부족과 국내시장규모의 협소, 기후조건의 열악 등으로 공업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향후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의 개발과 육성이 관건이 될 것이며, 자본과 기술의 부족을 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서비스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걸프산유국들의 경우 이슬람교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 문화체제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개혁하고 개방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는 술과 오락 금지, 여성의 사회활동 억제, 이슬람법의 준수 등 서비스업종의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6. 중동평화 로드맵과 팔레스타인 독립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아랍·이스라엘분쟁의 향후적 해결을 위한 중동 평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3단계 과정을 거쳐 2005년 말까지 팔레스타인에 아랍인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과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랍·이스라엘간의 갈등은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다국간 전면전과 끊임없는 국정전 및 테러 등으로 중동정세를 불안하게 해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었으며,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관련국들의 경제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왔다.

반면 이번의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관련국들은 안보불안요인 해소, 국방비 절감, 관광산업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역내 경제협력 확대 등 매우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도 5년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좌절된 경험에 비추어 로드맵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경문제, 난민문제, 예루살렘 귀속문제, 정착촌 철수문제 등 갈등의 요인이 매우 복잡하고 뿌리 깊기 때문이다.
Ⅲ. 한국의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

1.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과 특징

중동지역은 1970-80년대 유가인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해외건설 및 수출시장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유가하락 및 역내 정치불안에 따른 산유국 경제 위축,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확대에 따라 경협대상으로서 위상이 현저히 뒤지고 있다.

우리의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14.5%를 정점으로 하락, 90년대 이후로는 매년 4-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 역시 1981년 127억 달러로 총수주액의 93%를 차지한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투자, 인력진출 등 여타 경제협력도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2003년 6월말 현재 대중동 직접투자액은 96건 8억 100만 달러 (북아프리카 제외, 청산 등 사후 처리분 포함한 총투자)에 불과,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전체 투자액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중동은 기후 및 생활여건의 불리, 이슬람교에 기반한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우리로서는 유학, 이민, 취업 등 인력진출과 문화교류도 미미한 상황이다.

<표-8> 한국의 교역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수출</td>
<td>1.0</td>
<td>6.7</td>
<td>14.5</td>
<td>9.5</td>
<td>4.0</td>
<td>3.9</td>
<td>4.4</td>
<td>4.6</td>
</tr>
<tr>
<td>수입</td>
<td>6.4</td>
<td>17.8</td>
<td>26.0</td>
<td>12.7</td>
<td>8.9</td>
<td>8.8</td>
<td>16.1</td>
<td>13.7</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무역협회

-381-
그러나 우리의 주애너지원인 석유도입선으로서 중동은 여전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중동산 원유수입액은 136억 달러로 전체 원유수입액의 74%에 달하며, 천연가스(LNG) 도입액은 21억 달러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동 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적자규모 만 134억 달러에 달하였다 (전체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흑자).

2. 부문별 진출 현황

(1) 상품수출

2002년 말 기준 우리의 대중동 수출은 75억 달러로 총수출의 4.6%를 차지했으며, 2003년 1-5월 현재는 약 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비 9.8%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등 3대국에 대한 진출의존도가 현저히 높아 이 3개국이 2002년 대중동 수출의 6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란에 대한 수출은 2002년 40.3%, 2003년 1-5월 중 36.6% 증가하여 빠르게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UAE는 사우디를 제치고 중동지역내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으로 따올랐으나, UAE 전체수입의 40% 정도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재수출용이다. 그 중 상당부분이 이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이란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 할 수 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복, 철강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고급 가전제품, 담배 등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중동 주요국별 수출추이

<table>
<thead>
<tr>
<th></th>
<th>2001</th>
<th>2002</th>
<th>2003.1-5</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td>
<td>증가율</td>
<td>금액</td>
</tr>
<tr>
<td>UAE</td>
<td>2,169,086</td>
<td>8.9</td>
<td>2,268,781</td>
</tr>
<tr>
<td>이란</td>
<td>874,876</td>
<td>-36.4</td>
<td>1,227,232</td>
</tr>
<tr>
<td>사우디</td>
<td>1,274,461</td>
<td>1.0</td>
<td>1,258,673</td>
</tr>
<tr>
<td>카타르</td>
<td>221,428</td>
<td>10.6</td>
<td>148,383</td>
</tr>
<tr>
<td>이스라엘</td>
<td>450,250</td>
<td>-30.4</td>
<td>501,232</td>
</tr>
<tr>
<td>이집트</td>
<td>451,359</td>
<td>-16.4</td>
<td>321,032</td>
</tr>
<tr>
<td>쿠웨이트</td>
<td>178,428</td>
<td>-27.5</td>
<td>183,805</td>
</tr>
<tr>
<td>중동총계</td>
<td>7,138,183</td>
<td>-5.9</td>
<td>7,498,646</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무역협회

(2) 건설수주

80년대 중반 이후 대중동 건설수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최근 수년 동안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2001년 대중동 건설수주액은 22.6억 달러로 전년비 41.0% 증가한데 이어 2002년에는 31.1억 달러로 다시 37.6% 증가하였다.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 총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51.9%, 2002년 50.8%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 1-7월 중에는 80.0%를 기록하였다.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9.5%, 2002년 17.9%, 2003년 1-7월 20.8%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중동에서 수주하는 공중이 과거의 도목, 건축 등 지가 공사에서 플랜트 위주의 고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가별로는 이란, 리비아, 쿠웨이트, UAE 등이 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후로는 전후복구와 관련해 이라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10> 중동 주요국별 건설수주 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table>
<thead>
<tr>
<th></th>
<th>2001</th>
<th></th>
<th>2002</th>
<th></th>
<th>2003. 1-7</th>
</tr>
</thead>
<tbody>
<tr>
<td></td>
<td>건수</td>
<td>금액</td>
<td>건수</td>
<td>금액</td>
<td>건수</td>
</tr>
<tr>
<td>이란</td>
<td>1</td>
<td>495</td>
<td>2</td>
<td>1,874</td>
<td>4</td>
</tr>
<tr>
<td>리비아</td>
<td>3</td>
<td>232</td>
<td>6</td>
<td>748</td>
<td>2</td>
</tr>
<tr>
<td>쿠웨이트</td>
<td>4</td>
<td>321</td>
<td>4</td>
<td>185</td>
<td>5</td>
</tr>
<tr>
<td>UAE</td>
<td>3</td>
<td>818</td>
<td>1</td>
<td>49</td>
<td>2</td>
</tr>
<tr>
<td>사우디</td>
<td>4</td>
<td>344</td>
<td>10</td>
<td>98</td>
<td>5</td>
</tr>
<tr>
<td>이라크</td>
<td>0</td>
<td>0</td>
<td>0</td>
<td>0</td>
<td>1</td>
</tr>
<tr>
<td>중동전체</td>
<td>15</td>
<td>2,260</td>
<td>25</td>
<td>3,110</td>
<td>21</td>
</tr>
</tbody>
</table>

자료: 해외건설협회(http://icak.or.kr)

(3) 직접투자

2003년 6월말 현재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우리의 대중동 직접투자는 88건 6억 4,92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청산 등을 제외한 순투자 기준).

국별로는 유전개발 투자가 관련하여 예멘에 1억 4,08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수단, 이집트, 알제리 등에 각각 1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다. 건수면에서는 사우디 (28), UAE (10), 이집트 (9), 모로코 (8)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업체가 나가 있다.

과거의 대중동투자는 건설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무역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의 LG전자, 이란의 기아자동차 등을 현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11> 대중동 직접투자 현황 (2003년 6월말 현재 누계)
단위: 건, 천달러

<table>
<thead>
<tr>
<th>국가</th>
<th>신고건수</th>
<th>신고금액(천달러)</th>
<th>투자건수</th>
<th>투자금액(천달러)</th>
</tr>
</thead>
<tbody>
<tr>
<td>예멘</td>
<td>1</td>
<td>143,201</td>
<td>1</td>
<td>140,798</td>
</tr>
<tr>
<td>수단</td>
<td>6</td>
<td>104,456</td>
<td>6</td>
<td>104,457</td>
</tr>
<tr>
<td>이집트</td>
<td>11</td>
<td>152,692</td>
<td>9</td>
<td>104,024</td>
</tr>
<tr>
<td>알제리</td>
<td>1</td>
<td>176,248</td>
<td>2</td>
<td>102,994</td>
</tr>
<tr>
<td>오만</td>
<td>3</td>
<td>80,000</td>
<td>3</td>
<td>58,550</td>
</tr>
<tr>
<td>모로코</td>
<td>9</td>
<td>102,730</td>
<td>8</td>
<td>39,303</td>
</tr>
<tr>
<td>사우디</td>
<td>32</td>
<td>52,045</td>
<td>28</td>
<td>34,330</td>
</tr>
<tr>
<td>이스라엘</td>
<td>4</td>
<td>17,881</td>
<td>4</td>
<td>17,881</td>
</tr>
<tr>
<td>리비아</td>
<td>1</td>
<td>82,500</td>
<td>1</td>
<td>15,844</td>
</tr>
<tr>
<td>이란</td>
<td>6</td>
<td>14,667</td>
<td>4</td>
<td>12,849</td>
</tr>
<tr>
<td>UAE</td>
<td>11</td>
<td>11,815</td>
<td>10</td>
<td>8,162</td>
</tr>
<tr>
<td>요르단</td>
<td>4</td>
<td>14,728</td>
<td>2</td>
<td>5,972</td>
</tr>
<tr>
<td>시리아</td>
<td>2</td>
<td>2,869</td>
<td>2</td>
<td>2,669</td>
</tr>
<tr>
<td>튀니지</td>
<td>3</td>
<td>200</td>
<td>2</td>
<td>83</td>
</tr>
<tr>
<td>중동전체</td>
<td>102</td>
<td>960,637</td>
<td>88</td>
<td>649,287</td>
</tr>
<tr>
<td>(북아6개국)</td>
<td>(31)</td>
<td>(618,826)</td>
<td>(28)</td>
<td>(366,705)</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1) 신고는 실효 등을 제외한 순신고, 투자는 청산 등을 제외한 순투자기준임
2) 수출입은행 통계는 북아6개국을 아프리카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중동에 포함시켰음.
Ⅳ. 대중동 경제진출 강화방안

1. 대중동 경제진출의 기본전략

(1) 중동에 대한 기본인식 재정립

1980년대 이후 중동건설붐이 식으면서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진출열기도 급속히 사라졌다. 이는 유가약세와 경제불안으로 인한 중동경제 위축과 함께 중동을 일회성의 특수(特需) 시장으로 인식해 온 우리측 요인도 작용한 것이 다. 우리 업체들은 문화·언어·기후조건 등에 대한 거리감으로 중동 진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중동은 20여개 국가, 3억 인구가 몰려 있고, 세계 석유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한 중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지역은 세계3대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의 본산이고, 이집트, 이란(페르시아), 터키 등 대제국을 건설했던 자긍심 강한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다.

우리는 중동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중동을 일회성의 특수시장이 아닌 상시적 중요성을 지닌 시장으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인적교류 확대 필요

중동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교와 아랍문화, 아랍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 학술 및 문화행사 지원, 유학생 파견 및 초청, 기업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동지역에서의 상거래는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 현지의 유력인사 초빙, 우리 측 고위인사들의 현지 방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현지투자를 통한 장기적 진출거점 확보

현재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직접투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중동시장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측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중동국가들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정 추세 속에서 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거점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중동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을 거냥한 것일뿐만 아니라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EU·미국 등지로의 진출 확대에도 유리하며,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

(4) 이라크 복구 적극 참여

이라크복구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연간 150~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중동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라크 현지의 교통, 치안, 행정조직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이라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쿠웨이트, 요르단, UAE 등 주변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이라크 현지여건과 미군정의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분야별 진출전략

(1) 상품수출

대중동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케팅의 기본 전략상 목표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판매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중동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특성은 (1) 이슬람교에 기초한 독특한 상관행과 시장 수요 변화 (2) 2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높으로 크게 높은 인구구조의 특성 등

중동 각국에서는 라마단, 하지, 이드 알 피트르 등 세시풍속과 명절이 이슬람교의 교육에 따라 진행되며, 이슬람성(음력)을 따르므로 양력과는 다르다. 이 시기에 관련 상품의 수요가 폭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금요일이 주말이며, 흔히 각종 행사가 주로 저녁 시간에 치러진다.

중동지역은 이슬람교의 관습상 산아제한을 안해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고, 특히 70-80년대의 오일붐 시기에도 여전히 세대가 많아 3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대부분 국가에서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각국에서 완구류, 유아의류 등 아동용품과 문구류, 스포츠용품, 게임기 등 청소년용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또한 결혼 적령기 인구중이 높아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수요도 큰 편이다.

또한 각국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상품수요에 맞추어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요 산업군들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석유 대체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시장조사와 대처가 필요하다.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에서는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대규모 설비제조 및 기자재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GCC 각국은 정보화 추진에 따라 각종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라크는 전후복구 관련해 각종 건설기자재 및 생필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필요 물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를 활용한 유통기지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2) 건설수주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의 수주 수단은 한국과 독일의 건축 업체들 발주로 이미 비교우위를 얻은 실정이다. 우리는 플랜트, 인근의 설계, 감리 등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분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의 수주 수단분야는 한국의 저렴한 인건비 상승과 제3국 업체들의 건축로 이미 비교우위를 얻은 실정이다. 우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분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건축 등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자국인들을 활용해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현지업체와 인력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자금이 많이 수요되는 플랜트 분야는 대부분 공급자 신용을 요구하므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의 적절한 정책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3) 직접투자

대중동 직접투자는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인건비, 거리, 문화, 현지시장 전망 등 여러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교우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유국들의 자국화정책에 부합하면서 현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EU에 대한 전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점도 있다.

결론 선유국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소 제조업 분야, 이집트, 모로코, 러시아 등과 유럽시장 우회수출을 거점으로 한 수출산업 분야 등이 유망투자 분야이다.

이밖에 팔레스타인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등이 현지시장과 유럽, 미국을 거점으로 유망투자지로 등장할 수 있다.
V. 내중동 자원도입 현황과 전략

1. 내중동 자원도입 현황

(1) 개관

우리의 내중동 자원도입은 에너지자원인 원유와 천연가스(LNG) 도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 49.2%, 유연탄 21.3%, LNG 11.3%, 원자력 14.3%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 가운데 원유와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는 전체 도입량의 74%, LNG는 5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2) 원유도입 현황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 7억 42만 배럴, 금액으로 184억 5,073만 달러 상당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중동이 전체 금액의 73%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란, 오만, 카타르 등이다.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후 80년대부터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콩고), 중남미 (에콰도르) 등 세계 각지로 수입선이 다변화되었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금액 기준 10위). 그러나 중동의존도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대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전통적 의존관계, 지리적 근접성, 중동 석유의 장재력을 감안한 정치적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높은 중동석유의존도는 중동산유국들의 공급 경제성을 야기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여타지역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른바 “아시아 프레미엄”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table>
<thead>
<tr>
<th></th>
<th>2001</th>
<th>2002</th>
</tr>
</thead>
<tbody>
<tr>
<td></td>
<td>도입량(만배럴)</td>
<td>금액(만달러)</td>
</tr>
<tr>
<td>사우디</td>
<td>25,500</td>
<td>605,600</td>
</tr>
<tr>
<td>UAE</td>
<td>12,800</td>
<td>309,800</td>
</tr>
<tr>
<td>쿠웨이트</td>
<td>6,400</td>
<td>146,000</td>
</tr>
<tr>
<td>이란</td>
<td>8,041</td>
<td>184,500</td>
</tr>
<tr>
<td>오만</td>
<td>5,400</td>
<td>125,400</td>
</tr>
<tr>
<td>카타르</td>
<td>4,200</td>
<td>101,900</td>
</tr>
<tr>
<td>중립지대</td>
<td>1,900</td>
<td>41,700</td>
</tr>
<tr>
<td>예멘</td>
<td>1,500</td>
<td>38,600</td>
</tr>
<tr>
<td>이라크</td>
<td>320</td>
<td>7,700</td>
</tr>
<tr>
<td>수단</td>
<td>426</td>
<td>8,300</td>
</tr>
<tr>
<td>이집트</td>
<td>0</td>
<td>0</td>
</tr>
<tr>
<td>중동전체</td>
<td>66,487</td>
<td>1,569,500</td>
</tr>
<tr>
<td>세계전체</td>
<td>85,900</td>
<td>2,030,000</td>
</tr>
</tbody>
</table>

자료: 외교통상부

현재 중동에서는 예멘의 마리브유전에 유공과 국내 3개업체가 미국의 Exxon, Hunt 등과 합작으로 유전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지분 24.5%).

(3) 천연가스 도입현황

국내의 천연가스 이용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시작했으나 (1986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도입) 그 비중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원에서 LNG의 비중은 99년 9.3%에서 2002년 11.3%로 증가하였다.

2002년 기준 중동지역에서는 카타르, 오만, UAE 등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했으며, 전체 도입금액의 52.2%가 중동에서 수입되었다. 또한 카타르, 오만의 가스전에 지분참여하고 있으며,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개발사업에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하는 글을 아래에 복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대중동 자원확보 강화방안

(1) 대중동 자원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민소비생활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절대량을 공급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교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공급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아시아 프레미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오일쇼크와 같이 유사시 국민생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외교의 다양화는 자원외교의 중요한 한 목표가 되어왔으며, 우리의 원유자원은 실제로 1970년대 100% 중동에 의존하였으나 이후 세계 각국으로 다양화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세계원유 공급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유국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히 향후 20년 이내에 중동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산유국들의 매장량이 고갈 사태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동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동 자원외교는 에너지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확보와 한편으로 공급의 경직성 시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정선에서 결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아시아 프레미엄 개선

현재 아시아지역에 대한 증동산유국의 원유판매가격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빌립당 1 - 1.5 달러가 더 비싼 이른 바 아시아 프레미엄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국가들의 대중동 원유도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대부분 현물 시장이 아닌 장기도입계약에 의해 들여와 공급의 탄력성이 약하다는데 기본 원인이 있다(미국, 유럽의 대중동의존도는 30% 이하, 아시아지역은 70% 수준).

또한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두바이유가 생산량과 거래량 감소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영성이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연간 8억 달러의 경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스와 석탄 등 다른 에너지가격도 원유가격을 참조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의 고비용화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사우디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 언급을 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 향후로는 일본, 중국 등과 연계하여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공식 협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자원개발수입의 확대

에너지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 수입뿐만 아니라 현지의 자원개발에 직접투자로 참여하여 도입하는 자원개발수입을 적극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 (1982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개정)을 제정하여 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원유도입량의 10%, 유연탄의 30% 등을 자원개발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석유의 경우 2002년말 현재 예멘,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이미 생산사업을 하고 있으며, 리비아 등 4개국에서 개발사업, 알제리 등 7개국에서 8군데의 탐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회임기간이 길며, 개발성공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존재해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로는 투자대상 지역 및 광종을 다변화하고,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 세제, 보험지원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점검해 필요시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부록 1. 한국의 대중동 교역 추이

단위: 천달러, %

<table>
<thead>
<tr>
<th>년도</th>
<th>수출</th>
<th>수입</th>
<th>수지</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td>
<td>증가율</td>
<td>금액</td>
</tr>
<tr>
<td>1971</td>
<td>10,455</td>
<td>-</td>
<td>154,374</td>
</tr>
<tr>
<td>1972</td>
<td>21,615</td>
<td>106.7</td>
<td>194,276</td>
</tr>
<tr>
<td>1973</td>
<td>51,308</td>
<td>137.4</td>
<td>269,722</td>
</tr>
<tr>
<td>1974</td>
<td>140,627</td>
<td>174.1</td>
<td>985,772</td>
</tr>
<tr>
<td>1975</td>
<td>338,432</td>
<td>140.7</td>
<td>1,297,864</td>
</tr>
<tr>
<td>1976</td>
<td>749,501</td>
<td>121.5</td>
<td>1,623,333</td>
</tr>
<tr>
<td>1977</td>
<td>1,310,522</td>
<td>74.9</td>
<td>1,975,605</td>
</tr>
<tr>
<td>1978</td>
<td>1,445,486</td>
<td>10.3</td>
<td>2,224,611</td>
</tr>
<tr>
<td>1979</td>
<td>1,584,148</td>
<td>9.6</td>
<td>3,235,115</td>
</tr>
<tr>
<td>1980</td>
<td>2,546,554</td>
<td>60.8</td>
<td>5,806,010</td>
</tr>
<tr>
<td>1981</td>
<td>3,214,979</td>
<td>26.2</td>
<td>5,910,058</td>
</tr>
<tr>
<td>1982</td>
<td>2,959,483</td>
<td>7.9</td>
<td>4,989,993</td>
</tr>
<tr>
<td>1983</td>
<td>3,539,014</td>
<td>19.6</td>
<td>4,846,058</td>
</tr>
<tr>
<td>1984</td>
<td>2,818,587</td>
<td>-20.4</td>
<td>4,723,520</td>
</tr>
<tr>
<td>1985</td>
<td>2,888,415</td>
<td>2.5</td>
<td>3,961,832</td>
</tr>
<tr>
<td>1986</td>
<td>2,243,635</td>
<td>-22.3</td>
<td>2,502,778</td>
</tr>
<tr>
<td>1987</td>
<td>2,347,688</td>
<td>4.6</td>
<td>3,287,203</td>
</tr>
<tr>
<td>1988</td>
<td>2,794,116</td>
<td>19.0</td>
<td>3,554,527</td>
</tr>
<tr>
<td>1989</td>
<td>2,311,695</td>
<td>-17.3</td>
<td>4,612,433</td>
</tr>
<tr>
<td>1990</td>
<td>2,619,020</td>
<td>13.3</td>
<td>6,187,777</td>
</tr>
<tr>
<td>1991</td>
<td>3,310,052</td>
<td>26.4</td>
<td>7,122,521</td>
</tr>
<tr>
<td>1992</td>
<td>3,499,896</td>
<td>5.7</td>
<td>8,650,972</td>
</tr>
<tr>
<td>1993</td>
<td>3,704,229</td>
<td>5.8</td>
<td>8,786,653</td>
</tr>
<tr>
<td>1994</td>
<td>3,868,870</td>
<td>4.4</td>
<td>9,264,449</td>
</tr>
<tr>
<td>1995</td>
<td>4,880,488</td>
<td>26.1</td>
<td>11,837,126</td>
</tr>
<tr>
<td>1996</td>
<td>5,718,465</td>
<td>17.2</td>
<td>15,079,883</td>
</tr>
<tr>
<td>1997</td>
<td>5,104,386</td>
<td>-10.7</td>
<td>17,278,798</td>
</tr>
<tr>
<td>1998</td>
<td>6,585,566</td>
<td>29.0</td>
<td>11,417,299</td>
</tr>
<tr>
<td>1999</td>
<td>6,398,154</td>
<td>-2.8</td>
<td>14,695,660</td>
</tr>
<tr>
<td>2000</td>
<td>7,586,472</td>
<td>18.6</td>
<td>25,792,837</td>
</tr>
<tr>
<td>2001</td>
<td>7,138,183</td>
<td>-5.9</td>
<td>23,386,875</td>
</tr>
<tr>
<td>2002</td>
<td>7,498,646</td>
<td>5.0</td>
<td>20,881,230</td>
</tr>
<tr>
<td>2003.1-5</td>
<td>3,285,669</td>
<td>9.8</td>
<td>11,555,700</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중동 건설수주 추이

단위: 백만달러, 건,%

<table>
<thead>
<tr>
<th></th>
<th>세계 (A)</th>
<th>중동 (B)</th>
<th>B/A</th>
</tr>
</thead>
<tbody>
<tr>
<td></td>
<td>금액  건수</td>
<td>금액  건수</td>
<td></td>
</tr>
<tr>
<td>총계</td>
<td>175,557  4,474</td>
<td>103,943  2,222</td>
<td>59.2  49.7</td>
</tr>
<tr>
<td>1973</td>
<td>174      45</td>
<td>24      1</td>
<td>13.8  2.2</td>
</tr>
<tr>
<td>1974</td>
<td>261      49</td>
<td>89      12</td>
<td>34.1  24.5</td>
</tr>
<tr>
<td>1975</td>
<td>815      47</td>
<td>751      30</td>
<td>92.2  63.8</td>
</tr>
<tr>
<td>1976</td>
<td>2,502    93</td>
<td>2,429    71</td>
<td>97.1  76.3</td>
</tr>
<tr>
<td>1977</td>
<td>3,516    176</td>
<td>3,367    153</td>
<td>96.3  86.9</td>
</tr>
<tr>
<td>1978</td>
<td>8,145    237</td>
<td>7,982    216</td>
<td>98.0  91.1</td>
</tr>
<tr>
<td>1979</td>
<td>6,351    202</td>
<td>5,958    182</td>
<td>93.8  90.1</td>
</tr>
<tr>
<td>1980</td>
<td>8,259    241</td>
<td>7,831    209</td>
<td>94.8  86.7</td>
</tr>
<tr>
<td>1981</td>
<td>13,681   275</td>
<td>12,674   234</td>
<td>92.6  85.1</td>
</tr>
<tr>
<td>1982</td>
<td>13,321   270</td>
<td>11,392   226</td>
<td>85.5  83.7</td>
</tr>
<tr>
<td>1983</td>
<td>10,144   233</td>
<td>9,023    180</td>
<td>89.0  77.3</td>
</tr>
<tr>
<td>1984</td>
<td>6,502    241</td>
<td>5,911    182</td>
<td>90.9  75.5</td>
</tr>
<tr>
<td>1985</td>
<td>4,691    172</td>
<td>4,285    133</td>
<td>91.4  77.3</td>
</tr>
<tr>
<td>1986</td>
<td>2,239    109</td>
<td>1,242    54</td>
<td>55.5  49.5</td>
</tr>
<tr>
<td>1987</td>
<td>1,711    93</td>
<td>1,314    45</td>
<td>76.8  48.4</td>
</tr>
<tr>
<td>1988</td>
<td>1,602    70</td>
<td>1,251    29</td>
<td>78.1  41.4</td>
</tr>
<tr>
<td>1989</td>
<td>2,412    76</td>
<td>1,442    29</td>
<td>59.8  38.2</td>
</tr>
<tr>
<td>1990</td>
<td>6,770    67</td>
<td>5,812    20</td>
<td>85.9  29.9</td>
</tr>
<tr>
<td>1991</td>
<td>3,038    84</td>
<td>868      15</td>
<td>28.6  17.9</td>
</tr>
<tr>
<td>1992</td>
<td>2,783    74</td>
<td>568      12</td>
<td>20.4  16.2</td>
</tr>
<tr>
<td>1993</td>
<td>5,116    95</td>
<td>1,810    8</td>
<td>35.4  8.4</td>
</tr>
<tr>
<td>1994</td>
<td>7,441    146</td>
<td>4,452    100</td>
<td>31.0  19.2</td>
</tr>
<tr>
<td>1995</td>
<td>8,508    184</td>
<td>818      16</td>
<td>9.6   8.7</td>
</tr>
<tr>
<td>1996</td>
<td>10,779   186</td>
<td>948      10</td>
<td>8.8   5.4</td>
</tr>
<tr>
<td>1997</td>
<td>14,032   176</td>
<td>914      10</td>
<td>6.5   5.7</td>
</tr>
<tr>
<td>1998</td>
<td>4,055    114</td>
<td>1,505    21</td>
<td>37.1  18.4</td>
</tr>
<tr>
<td>1999</td>
<td>9,189    134</td>
<td>3,423    32</td>
<td>37.3  23.9</td>
</tr>
<tr>
<td>2000</td>
<td>5,433    124</td>
<td>1,603    26</td>
<td>29.5  21.0</td>
</tr>
<tr>
<td>2001</td>
<td>4,355    77</td>
<td>2,260    15</td>
<td>51.9  19.5</td>
</tr>
<tr>
<td>2002</td>
<td>6,126    140</td>
<td>3,110    25</td>
<td>50.8  17.9</td>
</tr>
<tr>
<td>2003.1-5</td>
<td>1,357   80</td>
<td>1,013    16</td>
<td>74.6  20.0</td>
</tr>
</tbody>
</table>

자료: 해외건설협회
## 한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누계 (2003년 4월 현재)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건수</th>
<th>구성비</th>
<th>금액</th>
<th>구성비</th>
<th>전당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아시아</td>
<td>11,953</td>
<td>67.2</td>
<td>16,615</td>
<td>67.2</td>
<td>1.39</td>
</tr>
<tr>
<td>북미</td>
<td>3,681</td>
<td>20.7</td>
<td>12,052</td>
<td>20.7</td>
<td>3.27</td>
</tr>
<tr>
<td>유럽</td>
<td>799</td>
<td>4.5</td>
<td>7,130</td>
<td>4.5</td>
<td>8.92</td>
</tr>
<tr>
<td>중남미</td>
<td>514</td>
<td>2.9</td>
<td>3,309</td>
<td>2.9</td>
<td>6.44</td>
</tr>
<tr>
<td>대양주</td>
<td>600</td>
<td>3.4</td>
<td>936</td>
<td>3.4</td>
<td>1.56</td>
</tr>
<tr>
<td>중동</td>
<td>96</td>
<td>0.5</td>
<td>801</td>
<td>0.5</td>
<td>8.34</td>
</tr>
<tr>
<td>아프리카</td>
<td>141</td>
<td>0.8</td>
<td>728</td>
<td>0.8</td>
<td>5.16</td>
</tr>
<tr>
<td>총계</td>
<td>17,784</td>
<td>100.0</td>
<td>41,571</td>
<td>100.0</td>
<td>2.34</td>
</tr>
</tbody>
</tabl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이집트, 마그레브3국 등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 포함된 자료임.

---

- 397 -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참여 방안
- NEPAD, FTA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아프리카 경제현황
3. NEPAD
   (1) NEPAD 승인 경위와 내용
   (2) NEPAD에 대한 지원현황
4.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FTA
   (1) 아프리카 주요 공동체
   (2)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5.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의 경제현황
6. 결론
아프리카 개관: 53개국의 독립국 ▶ 단일대륙으로 가장 많은 유엔 회원국을 보유, 인구는 세계 인구 63억의 13%에 해당하는 약 8억

아프리카대륙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빈곤발생. 이와 같은 요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
둘째, 악화되는 경제적 문제
셋째,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 대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지만 21세기를 맞이하여 아프리카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 ▶ 아프리카 연합 (AU)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 (NEPAD)
자유무역지대 (FTA) 설립을 통한 교역의 확대를 도모
⇒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건설’을 주장
아프리카 경제현황

- IMF 추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국민총생산액(GDP)은 2001년 3.1%가 증가, 1인당 국민소득은 0.5%증가.
- 2002년도 아프리카 대륙의 GDP 증가율은 2001년 추정치보다 약 1.1%가 높은 4.2%.
- 2002년 국제교역량은 2001년 보다 5.7~6.1% 정도 증가.
  - 아프리카는 7% 증가율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 2001년도 아프리카의 대E.U.지역 수출액은 약 580억불로 대륙 총수출액 1,257억달러의 46%나 차지.
- 미국과 아시아지역 수출액은 각각 223억달러와 170억달러.
- UN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아프리카대륙에 대한 외국인 집적투자액(FDI)은 약 171억달러.
- 주요 수혜대상국가들은 남아공(66억5천만달러), 모로코(26억5천만달러), 알제리(11억9천만달러), 앙골라(11억2천만달러), 나이지리아(11억달러) 등.

투자가 저조한 이유
- 투자 인프라 불비와 내수시장의 협소
- 무능한 정부관리, 만연된 부패라는 인적요소
<table>
<thead>
<tr>
<th></th>
<th>경제규모(GDP)</th>
<th>수 출</th>
<th>인 구</th>
</tr>
</thead>
<tbody>
<tr>
<td>개도국(125)</td>
<td>100.0</td>
<td>37.0</td>
<td>100.0</td>
</tr>
<tr>
<td>1.아프리카(51) 사하라이남아프리카(48)</td>
<td>8.6</td>
<td>3.2</td>
<td>10.3</td>
</tr>
<tr>
<td>2.아시아개도국(25)</td>
<td>58.3</td>
<td>21.6</td>
<td>46.2</td>
</tr>
<tr>
<td>.중국</td>
<td>31.2</td>
<td>11.6</td>
<td>18.4</td>
</tr>
<tr>
<td>.인도</td>
<td>12.6</td>
<td>4.6</td>
<td>3.9</td>
</tr>
<tr>
<td>3.중동(16)</td>
<td>10.5</td>
<td>3.9</td>
<td>20.0</td>
</tr>
<tr>
<td>4.중남미(33)</td>
<td>22.6</td>
<td>8.4</td>
<td>22.7</td>
</tr>
</tbody>
</table>
-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 ▶ 자원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

- 아프리카의 광물자원 중 특히 코발트, 다이아몬드, 백금은 세계매장량의 각각 75%, 47%, 45%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및 천연가스 세계 매장량의 각각 28%, 8% ▶ 향후 자원개발 본격화할 경우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예상.

- 세계은행은 세 가지 요소를 들어 2003년도 사하라아랍 아프리카경제 낙관.

첫째, 2003-04년 기상조건 호전 예상 ▶ 농업생산의 증가 기대.

둘째, 최대 수출시장인 EU 경기가 2004-05년 회복세 예상 ▶ EU의 수입수요 증가 ▶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증대기대.

셋째, 향후 2년간 세계경제 회복세 예상 ▶ 이 지역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에 속하는 비귀금속 광물의 국제가격이 상승 기대.

- 이밖에 AGOA, NEPAD 등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 점진적이나마 아프리카 경제의 부상을 거대.
NEPAD 승인 경위와 내용

- 2001년 7월 9-11일 제37차 OAU 정상회의
  - '아프리카 부흥 프로그램'
  - 'Omega Plan' ➞ '신 아프리카 의제' (NAI)를 승인

이 계획은 AU출범과 더불어 시행코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야심찬 청사진.

NAI는 다시 2001년 10월 23일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AU 정상 평의회 발족 준비회의에서 그 명칭을 NEPAD (New Partnership for the Africa's Development)로 변경.
Omega plan의 요지

- Wade 세네갈 대통령이 제안한 Omega plan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프리카 각국이 기울인 독립 이후 발전 노력은 서방세계 등 외국의 원조 의존 및 이에 따른 외채 증가, 외채 탕감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였음.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투자가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공항,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형성되는 것이 전제조건.

- 또한 농업생산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 보건 체제의 확립도 아프리카 발전의 조건이다.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행에는 사회기반 시설 및 인적 자원 육성 등을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서방 세계의 장기 저리융자에 의한 투자가 긴요한 바, 아프리카는 국가별, 지역별, 투자 소요를 파악하여 이를 UN 총회 등에서 승인하고 이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비슷한 시기에 남아공 음베키(Mbeki)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트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및 오바산조(Obasanjo)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이 만성적 악순환이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n Renaissance)를 위한 새천년 행동계획(Millenium Action Plan: MAP)을 제시하였다음.

OAU는 이들 국가원수들에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임무를 부여함에 따라, Omega계획과 일종의 경쟁 관계에 처하게 되었음.

아프리카의 발전은 세계경제에 아프리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좌우되며,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개혁과 이에 따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MAP의 요지.

아프리카인에 의한 개혁조치는 평화 및 민주주의 체제 확립, 인권존중, 보건 및 교육수준 향상, 교역 신장, 질병 뇌치 및 신기술 증진 등이 포함.
NEPAD 내용

1. NEPAD는
2. 제1장 서문,
3. 제2장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4. 제3장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공동 책임사항,
5. 제4장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6. 제5장 행동계획,
7. 제6장 신글로벌 파트너십(10개항),
8. 제7장 전체 계획의 실시 일정,
9. 제8장 결론

으로 구성
2001년 10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NAI 정상회담은 NAI를 NEPAD로 공식 명명 ▶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을 AU 정상회의로 하였음.

운영위원회 ▶ 15개 아프리카국가 정상 또는 정부수반 ▶ 매년 4회, 북서부, 중부, 동부, 남부 아프리카에서 번갈아 회의 개최.

집행위원회 구성 ▶ NEPAD를 창단한 5개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대표.

Working groups(5개 분야) ▶ ① 인프라스트럭처 ② 평화와 안보 ③ 정치, 경제 행정 ④ 시장접근 ⑤ 금융과 은행.

NEPAD의 상설 사무국 ▶ 프레토리아

NEPAD ▶ 15년간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 목표 ▶ 빈곤 퇴치, 외국자본 연간 640억불 유치 목표.

한편 2002년 6월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13개국 정상(알제리, 콩고, 가봉, 에티오피아, 말리, 모리셔스 등)들이 모여 NEPAD 설립과 관련 경제를 뒷받침할 민주적 정치 체제 확립을 위해 비정부 감시 기구 설립 함의.
NEPAD 지원 현황

- 2002년 6월 26-27일 캐나다 캐나니스키스 G8 연례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 빈곤문제에 초점.

- 아프리카 빈곤 지원을 위한 방안을 토의.

-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나이지리아, 남아공, 세네갈 4개국 대통령과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을 참석.

- 미국은 개도국지원개발원조액을 2003년도 회계연도부터 총액의 100억달러를 150억달러로 증액 ➤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할 계획.

- 미국은 아프리카의 식수, 교육, 보건 개선을 위한 원조 계획 제시. 기타 G8 정상들의 적극적인 동참 촉구한 결과 약 60억달러아프리카 원조액 책정키로.

- 아프리카 지역 발전을 돕고 전쟁과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창설한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

- NEPAD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논의.
G8 NEPAD 이행에 관한 선언문

- NEPAD 이행과 관련한 G8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정 (good governance)’ 이행 감시체제 (APRM)의 기본원칙 승인. 이에 대한 회원국 참여 촉구하는 ‘NEPAD 시험에 관한 선언문’ 채택.

- APRM는 이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국가에 대해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기업부문 선정에 관한 선언’에 포함된 good governance 기준에 참여 국이 합치하는지 여부를 독립된 5내지 7인의 심사단에 의해 감사하는 제도.

- APRM 참여국은 ‘민주주의, 정치, 경제, 기업부문 good governance에 관한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한 후, 심사단이 정기적으로 4단계의 심사를 거친다.

- NEPAD "국가, 정부 수반 이행위원회"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Implementation Committee) 위원국 수효를 기존의 15개국에서 20개국(5개 지역별로 1국씩 증가)으로 증대.
우리나라와 NEPAD

- 우리나라도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
- 국제사회와 공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치에 적합한 역할을 담당.
- 개도국 개발을 위한 지원, 각종 인도적 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 인식하지 말아야 함.
- 개발 문제는 방치해 두면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험.
- 개발을 통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빈곤층이 최소한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소위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
- 우리나라라는 앞으로 아프리카의 자구 노력인 NEPAD를 지원하는 국제 다자간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New Frontier로서 우리 상품의 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 차원의 양자간 경제협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 FTA

아프리카 주요 경제 공동체

© ECOWAS ▶ 1975년 5월 28일 창설.

- ECOWAS는 서부아프리카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안정 유지 및 증진, 회원국들간 관계 촉진,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에 기여.
-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의 16개 회원국으로 구성, 나이지리아 Abuja에 본부.

-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의 경제적 통합 및 협력을 촉진.
- 회원국들의 국내정책 조정, 통합프로그램의 실시, 경제, 재정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공동정책의 채택을 통한 경제연합의 창설, 공동시장의 건설.

- 회원국 간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이해대립과 대부분의 국가가 1차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수출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역내교역이 활발하지 못해 본래 의도한 목적달성 하지 못함.


- 1992년 역내 비관세장벽 폐지와 통관 및 수송절차 간소화 등 역내교역 활성화 위한 계획 수립.
- 1993년 7월 정상회의에서 공동시장 창설과 단일통화 제정, ECOWAS 압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협정 서명 등 ECOWAS 기능확장에 적극적 도모.
중부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UDEAC)

- 1964년 12월 창설 ▶ 1966년 1월 1일 공식 출범
- 1983년 적도기니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국은 카메룬,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차드 등 6개국.
- 회원국들 간에는 CFA Franc 단일통화 통용 ▶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통한 경제통합 촉진.
- UDEAC은 경제동맹으로서 회원국들의 개발계획과 관광 및 운송정책을 조정.
- 산업 및 농업분야와 우편 및 통신서비스에서의 협력을 촉진.
- 관세동맹으로서 역외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공동관세율을 적용, 단일조세제도 ▶ 역내 산업체에 대한 관세를 면제.
- UDEAC의 단일조세제도 도입은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 (PTA)

- 동남아프리카의 지역기구로서 무역, 산업, 통화, 운송, 통신, 농업 등 경제활동 제 분야에서의 협력 및 개발촉진을 목표
- PTA에는 동남아프리카 지역의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PTA 회원국들은 역내에서의 무역장벽 감소, 철폐 ▶ 관세협력을 도모, 회원국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 SADC는 1992년 8월 17일 설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설립.
- SADC는 1980년 4월 1일 SADCC를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킨 것.
- SADC는 현재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 보츠와나의 가보론 본부.

- SADC는 총 480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43억 달러를 투자, 공동개발사업 추진.
- SADC는 남아공을 포함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가장 큰 공동체를 형성.
- 남아공이 SADC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SACU)

- 1969년에 창설, 관세동맹체
- SACU 회원국 → 남아공,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레소토 등 5개국이다.

남아공이 주도하는 공동관세구역으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을 남아공이 거의 독점.
- 보츠와나 76%, 스와질랜드 94%, 나미비아 86%, 레소토 88% 남아공에 의존.
- 남아공 정부는 관세 수입에 대한 일정분을 회원국에 분배.

* 2001/2002 회계연도 중 관세수입 비중
  보츠와나: 13%, 스와질랜드: 51%, 나미비아: 29.4%, 레소토: 51.6%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체(COMESA)

- 93년 11월 5일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PTA국가간 협약체결로 태동 ▶ 94년 12월 8일 말라위의 릴롱게에서 정식 협정 체결.
- COMESA는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공동체 시장.

목적 ▶ 회원국간 교역증진, 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투자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 조성,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

목표 ▶ 통합된 지역경제협의체를 구성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및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협의체내 모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2000년 11월 1일부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 해당 회원국간 무관세 수출, 수입을 보장.

- 1994.12.8: COMESA 발족 (현재, 20개 회원국)
- 2000.10.31: COMESA내 자유무역지대 창설 (현재, 9개국 가입)
- 레소토(97.4), 탄자니아(2000. 9) 탈퇴
-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민 남아공은 당초부터 불참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출범

COMESA 회원국 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000년 11월 1일부터 출범
- 짐바브웨, 지부티, 이집트, 케냐, 마디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수단, 잠비아

- COMES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주요 핵심내용.
  - 2000년 11월 1일부터 9개 회원국내 제화 및 융역 교류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외환 배분제 등)을 철폐, 자유무역 지대 비가임 회원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방침에 의거 관세 부여.
  - 2000년말까지, 점차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 제한적 화폐교류 추진.
  - 2025년까지 공동 중앙은행에 의한 공통화폐 사용 추진 등.

- 2000년 9월 SADC 11개국 역내 교역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협의
- 동기구내에서는 2012년 완전 철폐, 비관세 장벽 문제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
- COMESA의 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아프리카 역내 교역촉진의 시발점.
- 회원국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에는 역내 자유무역지대 출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음.

• 남아공과 미국은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2003년 5월 이내 시작.

• 이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2004년 말까지 합의할 것을 목표.

• 이번의 자유무역협정은 남아공이 주 대상국이지만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협정국가와 동시에 협정을 추진.

• 남아공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2000년 타결된 남아공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의 대 남아공 수출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

• 남아공 입장에서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세계적 추세이고 미국과의 교역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판단하에 협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 AGOA: 흑아프리카 48개국가 중 35개 국가에 일반과 특별관세시 부여되었던 4,650개 품목에 1,837개 품목을 추가해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 제조업의 발달을 미약한 아프리카 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시행: 2000년 10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해 2008년 9월 30일까지 8년 동안 유효
- 미국 및 수해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pecial Rule은 2004년까지이다.
- 올 1분기 아프리카 국가들 AGOA법 통한 아프리카 대미 무관세 수출 급격한 증가.
- 올 1분기 아프리카 대미 무관세 수출 총액 동기대비 83% 증가한 약 2억7천만달러.
- 이중 일반 특별관세 시스템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은 4,000여개 품목에 걸쳐 약 1억600만달러.
- AGOA에 의한 대미 무관세 수출이 1,834개 품목에 걸쳐 1억6,400만달러를 기록.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대미 수입(백만달러)</th>
<th>대미 수출(백만달러)</th>
</tr>
</thead>
<tbody>
<tr>
<td>1998</td>
<td>6,694</td>
<td>13,139.6</td>
</tr>
<tr>
<td>1999</td>
<td>5,568.5</td>
<td>14,024.9</td>
</tr>
<tr>
<td>2000</td>
<td>5,925.8</td>
<td>23,480.4</td>
</tr>
<tr>
<td>2001</td>
<td>6,963.0</td>
<td>21,291.5</td>
</tr>
</tbody>
</table>

(자료원: 미 상무부)
• AGOA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와 위험의 두 가지 상반된 점이 공존.

• 무관세 수출된 아프리카산 의류 ▶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약화 반면, 복제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중고 유류 섬유설비, 의류 생산용 원자재 등의 공급 기회를 제공.

• 대마, 유럽의 우회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의류업체에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

•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2008년까지 계획된 수해기간 동안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 아프리카 국가의 불안한 현지 환경 환율동향, 정치, 사회 환경 및 낮은 노동생산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
로메협정

- 유럽공동체(EC)의 9개국과 구 식민지 국가간의 협력과 효과적인 발전 논의를 위한 것 ▶ 1976년 4월 1일 발효
- 1975년 2월 28일 토고의 로메(Lome) ▶ 유럽연합(EU)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회원국간의 경제발전 원조협정 ▶ 양 진영간의쌍무협정.


- 내용 ▶ 통상협정, 1차산품의 수출소득의 보증, 공업협력, 경제원조 등
- 주목적 ▶ ACP 여러 나라의 주요 1차산품 12품목, 즉 커피·코코아·땅콩·바나나·목화·팜유(油)·코코넛·철광석·홍차·목재·피혁·사이클잡삼수출에 의한 소득의 안정화.
- 즉, 대(對) EC 수출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액을 7.5% 이상 하회하였을 때에는 차액분을 EC측이 무이자로 보상·융자.

- 당시의 유럽경제공동체와 ACP 그룹에 로메협정이 체결된 이후 EU측의 중요한 무역상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ACP의 EU시장 점유율은 당시의 절반 가량인 4% 미만.
코토누 협정

- 2000년 6월 베냉의 항구도시 코토누에서 체결된 코토누 협정
- EU와 총인구 6억5천만명의 78개 ACP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협정으로 로메협정을 대체한 것.

- 개발, 빈곤퇴치, 무역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인 접근방식 규정 ▶ 본쟁예방, 인권존중, 민주화와 대규모 이주 등 공동 관심사를 포함하는 정치적대화를 제시.

코토누 협약은 포괄적인 동시에 혁신적.
- 유럽연합은 모든 최빈국에 대해 무역특혜를 부여.
- 수해국 가운데 39개국이 코토누 협정 조인국.
- 2005년까지 이들 국가 기업체는 거의 모든 제품 자유롭게 EU 시장 수출하는 특혜.

- 이 협정은 기존의 보상제도에 비교할 때, ACP 국가의 수출 증감으로 인한 충격을 상쇄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 ACP 프로그램을 위한 유럽개발기금(the European Development Fund)은 향후 7년 동안 135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받게 될 것.
대아프리카 경제현황

-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2년 기준: 수출 28억 6천만 달러
  수입 16억 8천만 달러에 불과
- 주요 수출품목: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기, 전기.전자제품, 각종 섬유 및 화학제품
  수입품목: 원유 등 지하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주종.
- 대아프리카 투자 실적: 2002년 11월 누계 기준 137건 72.4억달러(전체 투자액의 2%에 불과) ▶ 우리 기업의 투자는 석유탐사 및 개발 사업에 집중.

- 가장 많은 투자건수를 기록한 나라 남아공(제조업, 무역업 등 중소규모 투자형태)
대아프리카 진출방안

· 현재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는 여타 대륙에 비해 미미한 편. 향후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신호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NEPAD 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보건, 수자원, 정보통신 시설 등에 대한 개발이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

· 해외플랜트 시장의 경우 아프리카는 급부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호시장으로 2002년 상반기에만 10억달러가 넘는 플랜트를 수주하였음.

· 특히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의 원유 및 가스 개발 플랜트(10.2억불) 수주가 호조를 보여 주요 시장으로 부상(비중 22.1%)
· 섬유산업 ▶ 아프리카와 같은 미개척 시장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단계.
· 그동안 국내 섬유기업의 해외진출 저임금 아시아와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남미지역.
· 아프리카에는 섬유제품,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국의 제품이나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형성되어 있음.
· 섬유생산기지 구축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저렴한 생산요소.
· 비록 노동의 질은 낮은 수준이지만 비교적 숙련된 노동시장을 형성.
· 또한 인구규모 등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소비제품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가 집중되어 있음.
· 아프리카가 섬유산업 진출의 유망시장으로 대두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 미국이나 유럽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활용.
바야흐로 21세기 세계화의 추세는 아프리카를 지구촌의 한 마을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10-2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도 배증될 것이며 아프리카 자체의 노력도 현저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측면 ▶ 민주화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쿠데타 발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단일 정당 ▶ 복수정당제도가 도입.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 지역별 국가별 분쟁과 내분도 감소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난민 수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측면 ▶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 국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을 주도할 때 기타 각국에도 파급효과를 미쳐 대륙 전체의 구매력 향상이 기대된다.

낙관적 전망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대륙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4.5%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AU출범 이후 아프리카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 조부연
서 론

II. AU 창설의 역사적 배경
  1. 범아프리카주의의 태동과 발전
  2.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

III. 아프리카 연합 (AU) 출범과 그 전망
  1. 시르테 (Sirte) 선언과 AU 출범
  2. AU의 목적과 구성
     • 1) AU의 주요 목표와 특성
     • 2) AU의 주요 기구
  3. AU에 대한 전망과 과제
     • 1) AU에 대한 대내외적 전망
     • 2) AU의 현안 과제

IV. AU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
  2. 우리의 대 아프리카 협력 방안
  3.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증진

V. 결론
전대적 인딩과 기아, 질병, 분쟁 등 정치,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

UN이 집계한 전 세계 최빈국 49개 국가 중 34개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위기상황 극복 이 어려우므로 아프리카의 단결과 발전 을 위한 국가적 통합요구.
• 범아프리카주의를 근간으로 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창설.
• 세계화와 지역 블럭화의 흐름에 따른 아프리카 대륙의 위기감증대.
• 경제통합과 사회적 발전을 통한 정치적 연합을 지향하는 아프리카 연합(AU) 출범.
1. 범아프리카주의의 태동과 발전

아프리카 연합의 뿌리는 아프리카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의 근간이 되었던 범아프리카주의에서 비롯.

19세기 말 미국, 서인도제도, 유럽 등지에서 아프리카계 흑인 지식인 두보아(Du Bois) 박사, 자메이카의 가베이(Marcus A. Garvey), 트리니다드의 윌리엄(Henry Sylvester William)과 패드모아(George Padmore) 등에 의해 시작.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한 인종차별 거부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흑인들의 각성을 촉구.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민족주의 형성과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조직적 저항운동의 계기형성.

제1회 범아프리카 회의는 1918년 파리에서 개최되어 아프리카의 단계적 자치 요구.

1921년 런던, 브뤼셀, 파리에서 제2회 범아프리카 회의 개최 "세계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to the World)"을 채택.

1923년 런던과 리스본에서 제3차 회의 개최.
식민지에 있어 아프리카인의 역할과 토지 및 자원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결의문 채택.

1920년대는 범아프리카주의가 큰 변화를 겪은 시기로 마커스 가베(Marcus Gabe)는 흑인계의 우월성, 아프리카 문화의 우월성 주장.

흑인 발전의 공간으로서의 아프리카 대륙 재건을 위해 아프리카 귀환 운동제창.

1944년 범 아프리카연맹결성.
제194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5회 범아프리카 회의에서 아프리카 민족주의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

식민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 인의 자주적 각성과 단결을 강조한 선언문 채택.

1958년 12월 제6차 범 아프리카 회의의 성격을 띤 아프리카 민족회의(All-African People's Conference) 개최 아프리카 연합국창설 주장.

1963년까지 아프리카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하면서 범아프리카주의의 주요 논제가 아프리카의 통일에 관한 것으로 확대.
2. 아프리카 단결기구 (OAU)

1) OAU의 설립과 의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주의가 종식되고 신생독립국이 대거 탄생하면서 범아프리카 주의 달성추구.
- 자유와 독립 획득, 독립과 자유의 공고화, 아프리카 국가간 통일과 지역 협력 형성, 아프리카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추구.
- 범아프리카주의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연합의 결성과 아프리카의 정치적 통일요구.
자국의 독립은 보호하되, 다양한 기능적 영역, 경제과학 교육 사회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증대.

정책적으로 이를 감독, 조화시키는 대륙적 차원의 기구 창설 열망.


OAU는 최초의 범아프리카 기구이자 아프리카 대륙에 기반을 최초의 정부간 조직.
2) OAU의 목적과 조직 및 역할

- 모든 회원국들의 평등한 주권을 주요 원칙으로 정함.
- 식민지배 종식과 독립, 인종분리정책 비동맹주의, 경제개발문제, 군비축소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협의.
- 가맹국의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개·조정·중재위원회의 의정서 제정.
OAU의 목적

- 아프리카제국의 통일과 단결의 증진.
- 아프리카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호협력과 노력의 조정 및 강화.
-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의 수호.
- 아프리카로부터 모든 형태의 식민지 불식.
- 유엔 헌장과 인권선언을 존중한 국제협력의 증진
- 방위 및 안전보장을 위한 제 협력
OAU의 조직

국가원수 혹은 기타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정부 수뇌회의.

외무장관 혹은 각 정부가 임명하는 각료회의.

수뇌회의에서 임명된 행정사무 국장과 사무차장 그 외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

수뇌회의에서 선출된 21인의 구성을 가진 중재, 조정, 중재위원회와 각료회의 산하에 5개의 특별위원회.
3) OAU의 한계

- OAU 자체의 능력 미약.
- 구조적 측면에서의 결함.
- 결정이나 결의를 강제하는 규정 부재.
- 내부 분쟁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대처와 통일된 정책표방의 어려움.
- 모든 권한이 수뇌회의에 집중되어 역내 분쟁해결의 유기적 기능 제한.
- 내정 불간섭과 국경불가침의 원칙의 지나친 강조로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결여.
1. 시르테(Sirte)선언과 AU 출범

※ 1999년 9월 OAU 제4차 특별회의에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아프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창설 제의.
※ 37차 OAU 정상회의에서 1년의 과도기간을 통한 아프리카 연합(AU)창설의 합의.
※ 2002년 7월 9일 AU체제가 공식 출범.
시르테 선언의 요지

- 2001년 제5차 특별 정상회의를 시르테에서 재개최하여 AU 헌장을 채택
- 2000년 7월 토고의 로메에서 개최될 제36차 OAU 정상회의에 헌장 초안을 제출토록 함
- 아부자(Abuja) 조약이 규정한 아프리카 중앙은행, 사법 재판소 등의 조속한 설립으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추진
2. AU의 목적과 특성

1) AU 주요 목표와 특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협력기구로서 새롭고 강력한 임무 수행.
- 세계화 추세에 대한 집단적 대처 능력.
- 인권보호와 증진,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강화, 선정(good governance) 및 법치 확보 등 강조.
- 성의 평등(gender equality) 및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을 촉진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추구.
<table>
<thead>
<tr>
<th>기관</th>
<th>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최고의사</td>
<td>정상회의(The Assembly of the Union)</td>
</tr>
<tr>
<td>결정기관</td>
<td>집행이사회(The Executive Council)</td>
</tr>
<tr>
<td>집행기관</td>
<td>사무국(The Commission)</td>
</tr>
<tr>
<td></td>
<td>상주대표위원회(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td>
</tr>
<tr>
<td>사법기관</td>
<td>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td>
</tr>
<tr>
<td>입법기관</td>
<td>범아프리카의회(The Pan-African Parliament)</td>
</tr>
<tr>
<td>자문기관</td>
<td>경제·사회·문화이사회(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uncil)</td>
</tr>
<tr>
<td>전문기관</td>
<td>전문기술위원회(The 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td>
</tr>
<tr>
<td></td>
<td>농촌경제/농업문제위원회</td>
</tr>
<tr>
<td></td>
<td>금융/재정분야위원회</td>
</tr>
<tr>
<td></td>
<td>무역/관세/이주문제위원회</td>
</tr>
<tr>
<td></td>
<td>산업/과학기술/에너지/자연자원/환경위원회</td>
</tr>
<tr>
<td></td>
<td>운송/통신/관광위원회</td>
</tr>
<tr>
<td></td>
<td>보건/노동/사회분야위원회</td>
</tr>
<tr>
<td></td>
<td>교육/문화/인적자원위원회</td>
</tr>
<tr>
<td>금융기관</td>
<td>아프리카중앙은행(The African Central Bank)</td>
</tr>
<tr>
<td></td>
<td>아프리카통화기금(The African Monetary Fund)</td>
</tr>
<tr>
<td></td>
<td>아프리카투자은행(The African Investment Bank)</td>
</tr>
</tbody>
</table>
3. AU에 대한 전망과 과제

1) AU에 대내적 입장

- 국가간 대내외적 이해의 대립.
- 국가간 경제발전 상황의 격차.
- AU 실현을 위한 과도한 주권 양도에 대한 거부감.
- 재정부담과 NEPAD 이행에 관하여 역내 국가간에 입장차이.
-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
2) 대외적 반응

-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합의사항이행의 어려움.
- 미약한 통치 구조로 인한 통합 계획, 조직 및 이행의 메커니즘의 결여.
- 한정된 인프라망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고비용.
- 기존의 다양한 지역 경제통합 노력실패.
2. AU의 현안 과제

- 경제 전반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최대위협인 만성적인 외채문제.
- 국제금융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의 전제조건인 지역분쟁해소.
- 에이즈 문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노동력 손실과 대규모 생산성 하락을 초래.
## <그림 2> HIV/AIDS 감염자 분포 (2001년 말)

<table>
<thead>
<tr>
<th>지역</th>
<th>감염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North America</td>
<td>950 000</td>
</tr>
<tr>
<td>Caribbean</td>
<td>420 000</td>
</tr>
<tr>
<td>Latin America</td>
<td>1 500 000</td>
</tr>
<tr>
<td>Western Europe</td>
<td>550 000</td>
</tr>
<tr>
<td>Eastern Europe &amp; Central Asia</td>
<td>1 000 000</td>
</tr>
<tr>
<td>North Africa &amp; Middle East</td>
<td>500 000</td>
</tr>
<tr>
<td>East Asia &amp; Pacific</td>
<td>1 000 000</td>
</tr>
<tr>
<td>South &amp; South-East Asia</td>
<td>5 600 000</td>
</tr>
<tr>
<td>Sub-Saharan Africa</td>
<td>28 500 000</td>
</tr>
<tr>
<td>Australia &amp; New Zealand</td>
<td>15 000</td>
</tr>
</tbody>
</table>

자료: UNAIDS
Ⅳ. AU체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관계
   - 탈냉전이후 친북성향의 국가들이 우리 나라와 수교를 맺고 협력관계 모색.
   - 유엔 안보리 및 경제사회 이사회 진출 지원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지지.
   - 2001년 316만불 상당의 무상원조제공.
   - 아프리카 국가들의 분쟁 해결, 민주화 추진 및 경제개발 노력을 위한 지원.
   - 교역규모는 약 1~2% 정도로, 라이베리아,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소수 국가에 편중.
<그림 3> 최근 5년간 대아프리카 주요국 수출 현황

수출 금액 비교

<table>
<thead>
<tr>
<th>년도</th>
<th>나이지리아</th>
<th>가나</th>
<th>남아공</th>
<th>라이베리아</th>
<th>앙골라</th>
</tr>
</thead>
<tbody>
<tr>
<td>1997</td>
<td></td>
<td></td>
<td></td>
<td>1,400</td>
<td></td>
</tr>
<tr>
<td>1998</td>
<td></td>
<td></td>
<td></td>
<td>1,200</td>
<td></td>
</tr>
<tr>
<td>1999</td>
<td></td>
<td></td>
<td></td>
<td>1,000</td>
<td></td>
</tr>
<tr>
<td>2000</td>
<td></td>
<td></td>
<td></td>
<td>800</td>
<td></td>
</tr>
<tr>
<td>2001</td>
<td></td>
<td></td>
<td></td>
<td>600</td>
<td></td>
</tr>
</tbody>
</table>

(단위: 백만US$; %)
자료: KOTIS
3. 민간자원에서의 협력 증진

- NGO 및 민간자원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참여 및 협력증진.
- 민간기업이 현지 투자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증진.
- 정부 고위 사절단 교환 및 학술적 교류,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의 확대.
- 정부와 학계 및 민간자원에서의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육성 지원노력.
- 기자재 공여, 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
V. 결론

- 해외 시장 확보와 아프리카의 풍부한 부존 자원 및 저임금 노동력 확보.
- 인도주의적 지원의 무상원조와 아프리카의 자립 기반지원.
-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지원확대.
- 국제기구의 지원 요건을 수용하는 개혁 의지, 국가신인도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국가별 개발사업 계획 및 투자 진출 유망 분야 관련 정보의 대아프리카 진출에 적극 활용.

AU의 중점 전략인 지식기반경제 형성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사업 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아프리카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체계 수립.
Sin-African Trade Relations: Problems and Suggestions

Guimei Yao
Associate Professor of IWAAS, CASS

The Sino-Africa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develops smoothly and has made a remarkable progres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bilateral trade value exceeded US$10 billion and the invest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Africa has begun to take shape. However, Comparing with the investment of USA, France and UK in Africa, China has a long way to go.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practical suggestion and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that exist in the Sino-Afric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attempt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ese enterprises in African Market.

1. The Development in Sino-Afric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recent years.

A. Sino-Africa trade cooperation
According to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the total export and import value between China and Africa has increased sharply from an average value of US$1 billion annually in the 1980s to over 10 billion in 2000. Bilateral trade value was about US$112.4 billion in 2002, an increase of 14.7 percent over 2001, in which Chinese export stood at US$6.96 billion, an increase of 15.9 percent. What's more, the growth of the export to Africa is much larger than those to other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same year Chinese import stood at US$5.43 billion, an increase of 13.2 percent.

So far, China has established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53 African countries and regions and has signed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with 39 of them, moreover China has signed bilateral investment encouragement and assurance agreements with 17 African countries, and agreements on avoiding double taxation with 4 African countries.
The Total Value of Import and Export between China and African Countries, 1998-2002
In Billion of US Dollar

Source: Ministry of Commerce, PR China.

B. Chinese investment in Africa
According to China's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y the end of 2000, China has established 499 enterprises in 47 African countries with an joint contractual investment reaching US$ 990 million, out of which Chinese investment was US$680 million, accounting for 8.2 percent of total Chinese investment abroad.

From the October of 2000 when the Forum of Sino-African cooperation was finished to the September of 2001 China established 58 enterprises in Africa with an joint contractual investment reaching US$ 89.53 million, 32 of which were manufactories, accounting for 55 percent, 22 of which were clothing factories, accounting for 38 percent, moreover, among the 55 enterprises there were 3 resource exploiting enterprises and one agricultural development enterprise which distributed in 28 countries. Chinese investments are mainly concentrated in sectors like light industry, machinery and electronic industry,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and pharmaceutical industry. South Africa, Kenya, Nigeria, Uganda and Sudan are principal destinations for Chinese investment.

Processing trading is promoted by Chinese government and welcomed by the African countries. These investment projects have helped to increase tax income for local countries and created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resulting in good economic returns and social benefits. In addition, more and more Chinese private enterprises have begun to focus on African market. They are earnest to expand their trade with African companies and injecting their investment into Africa.

At the same time there is investment of a few African countries (mainly

The problems in Sino-African trade relations
The Sino-African trade relation has been developed at a higher speed in the past two decades. However, compared with the clos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 Sino-African trade relation seems quite insignificant.

A. Small trade volume
Although the trading value has got a raise of several times, generally speaking, the proportion in their respective total trade volume is still relatively small. Taking 2000 as an example, the total Sino-African trade volume only accounted for 2.2 percent in China’s total foreign trade volume and about 3.67 percent in Africa’s. Compared with the trade volume between Africa and the western countries like USA and France (in 2000 the trade value between USA and the African countries to the south of Sahara amounted to US$29.4 billion, occupying 6.8 percent in Africa’s import or 23.6 percent in Africa’s export, at the same time the trade value between France and the countries in the same area amounted to US$14.2 billion, occupying 10.1 percent in Africa’s import or 6.3 percent in Africa’s export), the reasons for this situation are: on one hand, the main trading partners for both China and African countries are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obviously many Chinese products are not competitive in African market.

B. Unbalanced trade situation
For a long time except for a small amount of years, African countries have kept deficits in their trade relations with China. There are even some African countries that only import some goods from China without exporting anything to China, which caused a great negative influence on Sino-African trade relations.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is taking some positive measures to import more African commodities.

C. Over-concentration of trading partners
Presently the important trading partners of China concentrate mainly in Northern and Southern African continent. In 2000 the trade volume between China and South Africa,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of China exceeded US$ 2 billion, accounting for 20 percent of total
Sino-African trade volume. In the same year the trade volume between China and Angola, the second important trading partner of China, exceeded US$ 18 billion, accounting for 17.7 percent of total Sino-African trade volume. Egypt, Nigeria, Sudan and Gabon are also China's major trading partners.

**D. Low value-added commodity trade structure**

For a long time in Sino-African trading activities, China's primary export products had been the low-added commodities like textiles, clothing, light industry products and hardware, and China's main import products have been oil, timber, mineral products and fertilizer. In recent years, China began to export more and more machinery and electronic products to Africa, which not only enhanced the share of Chinese products in African market, but also intensified Africa's deficit. Another serious problem is that some Chinese enterprises export many low-qualified or even fake goods to Africa, which impact negatively on the whole China-made products even some world-known brand products.

**E. Chinese investment projects in Africa are small-scaled enterprises**

Recently some Chinese enterprises even some private business are interested in investing to Africa, nevertheless, due to different reasons China's total investment volume in Africa is still small, which can not be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with USA, France and Britain (from 1994 to 1998 USA's direct investment in Africa amounted to US$79 billion while France and Britain, both amounted to US$25 billion occupied the second and the third sea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Chinese investment projects in Africa are small-scaled enterprises without any definite and long-ranged goals; even in South Africa there is a shortage of skeleton projects that exert a significant function in Sino-African trade communications, which mainly results from the frequent conflicts and large amount of foreign loans on the African side, and neglect and incomprehension of the African market on the Chinese side.

**Suggestions and Measures on how to develop African Market rapidly**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he Sino-African trade relationship, the prospect of it is quite bright. The strong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sides supplies a practical material foundation for both sides to increase their business cooperation: the rich natural resources and potential market of Africa are of great strategic importance for China'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fast economic growth in China can also provide African countries
with more and more opportunities, especially after China’s entry into WTO, which will definitely make China open wider to the world.

NEPAD is a crucial act purporting to co-receive all kinds of challenges in the period when the economics of African countries become more and more globalized. African countries will go hand in hand in the unification of capital construction, fund, agriculture, environment, market and reg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economic and department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Therefore, there is bound to be a great expansion in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frica. It is beneficial for the Chinese enterprises to deeply develop African market by following the framework of “China-Africa Cooperation Forum” and integrating with NEPAD. Suggestions mainly as follow:

(I) Endeavor to promote the bilateral trade activity
   A) Extending publicizing activity to enhance inter-comprehension
   With Sino-Africa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developing further, both Chinese and African businessmen get a deep inter-comprehension, however, there is still quite a few misunderstanding about the markets of the two sides. Taking South Africa as example, many Chinese enterprises simply deem it as a market where they can promote the low-graded commodities and transfer the superfluous productivity and a country that can only export the primary products such as high-graded ores. Likewise, the enterprises of South Africa had not been enough acknowledgement of the notable changes in China since it opened to the world, nor they knew that China has become a country that can supply the cheap and nice commodities of all grades to fulfill the request of South African market. The complementarity of the commodities of the two countries has not been completely realized due to the incompreh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fore, China needs to publicize its commodities and market.

   B) Endeavoring to cut the trade deficit
   Generally speaking, China maintains surplus in the trading exchanges with the central Africa but suffers deficit in trading with the countries such as South Africa and Angola; moreover, China maintains surplus in the trading exchanges with the least-developed African countries that are quite concerned about taxes in spite of the low quantity of the exchanges. In order to mend the mentioned situation of deficit, it is suggested: firstly, make great effort to increase the import from Africa and grant the appropriate privilege to the commodities exported from African countries; secondly, Exerting all kinds of measures to promote the import from Africa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s of WTO.
C) Actively holding ‘Exhibition Fair of Chinese Commodities’
China has held several ‘Exhibition Fair of the Export Commodities’ in different African countries and from them has achieved a lot: the influence of Chinese commodities has been extraordinarily enhanced in the local and neighboring countries, to name a few. Currently, there are still many African countries that invite China to hold such kinds of Exhibition Fairs in their countries. However, Chinese Ex-im companies should determine the grades of the exhibits according to the local consumption levels. Generally speaking, it is suggested that the middle-graded and the low-graded commodities be the main exhibits with the high-graded ones being subordinates due to the local low purchasing power. Additionally, the date of the Exhibition Fair needs to be carefully studied. It’d better to hold the Exhibition Fair on African countries’ traditional festivals. For example, one may hold the Exhibition Fair in the Western Africa in December or January and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since there are many festivals during this period.

D) Broadening the trading thinking, promoting trade by investing
The local markets of many African countries are narrow, but entrepot trade there is highly developed and most of them enjoy the preferential treatment granted by "Lome Convention" of EU and the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 of USA. China can enhance the export by utilizing African countries’ channels for sale in domestic markets and exports. Chinese foreign trade enterprises may combine the bilateral trade with these countries with the entrepot trade to the other countries, with their focus on the multilateral entrepot trade. For example, there is no large market for cacao in China, but Chinese enterprises can process it into the semi-manufactured goods locally then sell them to the Europe or other regions. Besides, the supply of the textile goods has almost been saturated in the domestic market of China, at the same time, this kind of goods are treated unfairly and excluded in the European and American markets and there they are frequently anti-dumped. Supposed that Chinese textile mills invest to set up factories in African countries, they can enjoy the preferential conditions granted to Africa by Europe and USA so as to enhance the export of the textile goods to Europe and USA by steering clear of their trade bulwark, moreover, to drive the export of the relevant machines and the raw materials.

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institutions should support the foreign trade enterprises to exploit the African markets
Due to the rigorous supervision of foreign exchange in many African countries, it is hard for the Chinese enterprises to remit the money back
to Chin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ank of China and Ex-im Bank of China have set up their branches in Zambia and Coted' Ivoire, but the request of the Chinese enterprises has not been fulfilled. Therefore, all kinds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et up in the African countries, which enjoy a political stabilization, a favorable trend of macroeconomics, relatively mature financial establishments and fairly open policy to offer the efficient financial service to the Chinese enterprises. Additionally, because of the more political risks in African countries than in European and American developed countries, it is suggested to appropriate a fund to establish the relevant insurance so as to reduce the anxiety of the enterprises.

(1) Actively promoting the bilateral investment
A) Setting up "Fund for the Exploitation of the African Resources", and supporting the project of the exploitation of strategic resources abroad
With the rapid progress of China’s economics, some mineral resources are increasingly required, so the shortage of the supply has obviously restra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ics, which requires the resources abroad to be exploited and used. The African continent rich in mineral resources is bound to be a base abroad being able to supply the backbone resources that we lack. However, because of the considerable investments, much risks, long circles and slow effect-taking of the projects in resource exploitation, the ordinary enterprises, having no confidence and ability to take charge of them, miss the opportunity of investment so that China’s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African resources are beyond enough. Currently even in South Africa, a country known for its mineral resources, there is only one project of the exploitation and the process of chrome jointly invested by Steel and Iron Group of China and local enterprises. In order to propel the emergence of more projects of resource exploitation, it is suggested to set up “Fund for the Exploitation of the African Resources” which is on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s of the exploitation of the strategic resources such as mineral resources, forest, water conservancy and farm produce, offer the supply of free-interest and subsidizing to the enterprises, and take parts of the fund as the venture fund to encourage them to carry out joint-exploitation and joint-development with local enterprises. The products selling back to the domestic markets could not only solve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the resources, but also ameliorate the balance of trade, thus promote the Sino-African trade develop sound and smoothly.

B)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base of the projects" and leading domestic enterprises to develop the African markets
In carrying out the policy of walking abroad, more and more Chinese enterprises have invested in Africa. Nevertheless, many enterprises invest there unreasoningly without making an appropriate study on the African countries, nor a good survey about the local markets or their laws or regulations of the investment, nor a scientific argumentation of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which usually results in the pouring of the problems on the supply of the raw materials, craftwork and techniques, or the production security. Therefore, many enterprises close down due to the inefficiency. In order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base of the projects". It is up to the commercial office in Chinese embassies in the Africa countries based on the policy trend on the requirement of the foreign capital in African countries, to supply the useful information to the relevant departments in China, to do necessary research, adaptation, tracking and promotion on the pivot projects, and to direct the Chinese enterprises to carry out the projects that are of advantages in competition, development and resistance against the risks. Those domestic enterprises that will go to do research in Afric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nteraction and inter-promotion of the industrial chains. For example, the agricultural domain has a notable potential of cooperation, so the trade of chemical fertilizer, pesticides, good seeds, and agro-machines, moreover, the process industry of the farming products can be carried along with the progress of agriculture.

C) Establishing China-ventured enterprises adapting cooperation mechanism

At the beginning of investing in Africa, many Chinese enterprises adopted lower prices in business competition to contend for larger market share, thus the macroeconomic benefit were hurt. In order to deter the reappearance of this kind of phenomena,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cooperation-adapting mechanism of China-ventured enterprises. It is up to the commercial offices in the Chinese embassies in African countries to set up adaptation groups of business-crossed Chinese enterprises, and to hold meetings for communication timely so as to direct Chinese enterprises to extend the markets. Chinese embassy in South Africa has done well on this point. For example, in order to restrain the competition with low prices of TV of Hisense, Xococo and SVA when they invested in South Africa, the commercial office in Chinese embassy there set up “Adaptation Group of Chinese TV manufacturers in South Africa” and did much work to give them a correct direction. Currently, these four manufactures compete equally and cooperate in extending markets. To lower the cost, Xococo imports the molds from China, make TV shell with the plastic molding pressing equipment of and let Hisense’ local manufacturer to process integrate circuits.
D) Keeping away the risk in foreign exchange and establishing early-warning system

53 African countries and regions use more than 40 kinds of currencies. Most of these currencies can not be exchanged freely, and different countries adopt quite different foreign exchange policies, therefore, Chinese enterprises suffer a large loss. For example, in the second half of 2001 the dramatic devaluation of Rand in South Africa causes a large loss of Chinese enterprises. In the same year the worsen of the investing environment in Zimbabwe which caused the shortage of foreign exchange and devaluation of Zimbabwe’s dollar made Chinese enterprises there slump into dilemma. Sino-Zimbabwe joint ventures that invested with foreign exchanges in 2001 now suffered a great loss. Besides, the fact that the rate of the payoff of China invested enterprises was lower than the rate of the devaluation of the currency was also a disaster for Chinese enterprises there. In order to avoid the loss as much as possible, Chinese-invested enterprises should reinforce their consciousness against risks. What’s more, the commercial office in Chinese embassies in African Countries should pay much attention to the change of the policy of the foreign exchange and send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enterprises in time and give them some suggestion. In particular period, the offices, following the principle of postponing investing activity, should hold the lectures on the avoidance of the investment risks to direct the enterprises to invest correctly.

E) Making full use of free trade arrangement granted by Organization of the Unification of African regions, and broaden the trade communication with the central Africa.

Since the 1990s, the unification of the African economics has speed up. According to the survey, the degree of the unification increases by 4.7 percent every year from 1994 to 1999. Currently, the first free trade area on the African continent COMESA has started up and SADC free trade area is also in buil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ree trade areas not only intensifies the ability of the inner-trade, external trade and attraction of the investment of the member countries, but also offers a good opportunity for Chinese enterprises to carry out the ‘walking out’ policy. For example, COMESA is a market full of the potential possibility for investment and trad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products of any countries in this area can enter the market of any other member countries if they fulfill the regulations in the original producing area, what’s more, COMESA’s other member countries outside the free trade area reduce the tariff. Chinese enterprises can choose the favorable countries to establish factories with a concern to the resources, markets, policies and regulations of the different countries in the free trade area. Their products will enjoy the preferential tariff if they accord with the regulations in the
original producing area and do not simply process, assemble or package. Thus it can not only drive the export of the Chinese equipment, but also increase the export of some raw materials and semi-finished products so as to extend the Sino-African trade and enhance the competitive ability of Chinese products.

However, we also should acknowledge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existing in the economic unification in African regions. Many tentative plans have not been realized due to the lack of limitation mechanism in some communities. Even if the ultimate plan will be realized, its promotion to the economics would be limited because the economics of the member countries are weakly complemented. Therefore, whereas China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the participation into the unification of the African economics should be thought twice and appropriately operated. Currently we should put our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t the same time, work with some fairly developed area organizations to reduce the prices of part of the products and strive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in investment.
## Appendix:

### The total value of Export and Import between China and African Countries in 2001

<table>
<thead>
<tr>
<th>Country/region</th>
<th>The total trade value</th>
<th>Export value</th>
<th>Import value</th>
<th>Growth % over 2000</th>
</tr>
</thead>
<tbody>
<tr>
<td>Africa</td>
<td>1,079,952</td>
<td>600,657</td>
<td>479,285</td>
<td>1.9 18.1 -13.7</td>
</tr>
<tr>
<td>Algeria</td>
<td>29,234</td>
<td>22,235</td>
<td>6,999</td>
<td>47 28.6 199.8</td>
</tr>
<tr>
<td>Angola</td>
<td>76,755</td>
<td>4,572</td>
<td>72,183</td>
<td>-59.1 35.5 -60.8</td>
</tr>
<tr>
<td>Benin</td>
<td>52,049</td>
<td>52,043</td>
<td>6</td>
<td>46.1 40.5 -94.7</td>
</tr>
<tr>
<td>Botswana</td>
<td>1,423</td>
<td>1,423</td>
<td>-</td>
<td>23.9 24 -100</td>
</tr>
<tr>
<td>Burundi</td>
<td>116</td>
<td>116</td>
<td>0</td>
<td>-75.6 -68.1 -99.8</td>
</tr>
<tr>
<td>Cameroon</td>
<td>21,306</td>
<td>2,938</td>
<td>18,370</td>
<td>32.6 29.7 33.1</td>
</tr>
<tr>
<td>Cape Verde</td>
<td>221</td>
<td>221</td>
<td>-</td>
<td>-57.3 -57.3 -</td>
</tr>
<tr>
<td>Central Africa</td>
<td>196</td>
<td>57</td>
<td>139</td>
<td>204.5 66.1 362.2</td>
</tr>
<tr>
<td>Chad</td>
<td>29</td>
<td>28</td>
<td>1</td>
<td>-53.7 -54.4 -22.1</td>
</tr>
<tr>
<td>Comoro</td>
<td>50</td>
<td>46</td>
<td>4</td>
<td>66.5 57.2 693.2</td>
</tr>
<tr>
<td>Congo</td>
<td>22,003</td>
<td>3,818</td>
<td>18,184</td>
<td>-35.7 108.2 -43.8</td>
</tr>
<tr>
<td>Djibouti</td>
<td>4,764</td>
<td>4,732</td>
<td>32</td>
<td>-12 -12.5 1345.4</td>
</tr>
<tr>
<td>Egypt</td>
<td>95,321</td>
<td>87,289</td>
<td>8,032</td>
<td>5.1 8.4 -21.3</td>
</tr>
<tr>
<td>Equatorial Guinea</td>
<td>51,194</td>
<td>338</td>
<td>50,858</td>
<td>58.5 -5.5 59.2</td>
</tr>
<tr>
<td>Ethiopia</td>
<td>8,057</td>
<td>7,880</td>
<td>177</td>
<td>37.5 41.5 -38.4</td>
</tr>
<tr>
<td>Gabon</td>
<td>26,524</td>
<td>589</td>
<td>25,935</td>
<td>-22.4 33 -23.1</td>
</tr>
<tr>
<td>Gambia</td>
<td>7,251</td>
<td>7,251</td>
<td>-</td>
<td>17.7 17.7 -</td>
</tr>
<tr>
<td>Ghana</td>
<td>18,248</td>
<td>14,588</td>
<td>3,660</td>
<td>50.9 37.7 144.1</td>
</tr>
<tr>
<td>Guinea</td>
<td>4,410</td>
<td>4,406</td>
<td>4</td>
<td>29.5 29.5 102.5</td>
</tr>
<tr>
<td>Guinea-Bissau</td>
<td>830</td>
<td>830</td>
<td>-</td>
<td>72.8 79.6 -100</td>
</tr>
<tr>
<td>Coted'Ivoire</td>
<td>26,546</td>
<td>25,768</td>
<td>778</td>
<td>15.4 15.7 7.2</td>
</tr>
<tr>
<td>Kenya</td>
<td>14,481</td>
<td>13,893</td>
<td>588</td>
<td>5.7 4.4 52.7</td>
</tr>
<tr>
<td>Liberia</td>
<td>14,151</td>
<td>11,272</td>
<td>2,879</td>
<td>-12.3 -10.5 -18.4</td>
</tr>
<tr>
<td>Libyan</td>
<td>9,518</td>
<td>4,098</td>
<td>5,420</td>
<td>23 -21.7 116.3</td>
</tr>
<tr>
<td>Madagascar</td>
<td>8,170</td>
<td>7,286</td>
<td>884</td>
<td>5.2 2.3 37</td>
</tr>
<tr>
<td>Malawi</td>
<td>400</td>
<td>449</td>
<td>40</td>
<td>-29.2 -35 -</td>
</tr>
<tr>
<td>Mali</td>
<td>2,392</td>
<td>2,290</td>
<td>102</td>
<td>-32.1 -34.3 151.3</td>
</tr>
<tr>
<td>Mauritania</td>
<td>3,424</td>
<td>2,987</td>
<td>437</td>
<td>15.6 21 -11.6</td>
</tr>
<tr>
<td>Mauritius</td>
<td>9,614</td>
<td>8,718</td>
<td>895</td>
<td>-15 4 59...</td>
</tr>
<tr>
<td>Morocco</td>
<td>38,423</td>
<td>29,988</td>
<td>8,435</td>
<td>14.3 -10.5 -33.3</td>
</tr>
<tr>
<td>Mozambique</td>
<td>3,324</td>
<td>2,204</td>
<td>1,119</td>
<td>-0.7 10.5 -</td>
</tr>
<tr>
<td>Namibia</td>
<td>3,248</td>
<td>2,122</td>
<td>1,126</td>
<td>173.5 156.1 213.6</td>
</tr>
<tr>
<td>Niger</td>
<td>648</td>
<td>648</td>
<td>-</td>
<td>-7.7 -7.7 -</td>
</tr>
<tr>
<td>Nigeria</td>
<td>114,449</td>
<td>91,734</td>
<td>22,716</td>
<td>33.7 67... -</td>
</tr>
<tr>
<td>Reunion</td>
<td>770</td>
<td>770</td>
<td>-</td>
<td>32.8 33.1 -100</td>
</tr>
<tr>
<td>Country</td>
<td>2009</td>
<td>2008</td>
<td>2007</td>
<td>% Increase</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Rwanda</td>
<td>926</td>
<td>289</td>
<td>637</td>
<td>53.1</td>
</tr>
<tr>
<td>Sao Tome and Principe</td>
<td>126</td>
<td>126</td>
<td>-</td>
<td>968.2</td>
</tr>
<tr>
<td>Senegal</td>
<td>5,293</td>
<td>5,256</td>
<td>38</td>
<td>0.2</td>
</tr>
<tr>
<td>Seychelles</td>
<td>117</td>
<td>112</td>
<td>5</td>
<td>-32.4</td>
</tr>
<tr>
<td>Sierra Leone</td>
<td>1,200</td>
<td>1,199</td>
<td>0</td>
<td>38.3</td>
</tr>
<tr>
<td>Somalia</td>
<td>163</td>
<td>112</td>
<td>52</td>
<td>53.6</td>
</tr>
<tr>
<td>South Africa</td>
<td>222,223</td>
<td>104,912</td>
<td>117,311</td>
<td>8.4</td>
</tr>
<tr>
<td>West Sahara</td>
<td>89</td>
<td>89</td>
<td>-</td>
<td>-2.5</td>
</tr>
<tr>
<td>Sudan</td>
<td>115,802</td>
<td>21,989</td>
<td>93,813</td>
<td>500</td>
</tr>
<tr>
<td>Tanzania</td>
<td>9,343</td>
<td>9,015</td>
<td>329</td>
<td>3.2</td>
</tr>
<tr>
<td>Togo</td>
<td>10,898</td>
<td>10,875</td>
<td>23</td>
<td>35.5</td>
</tr>
<tr>
<td>Tunisia</td>
<td>10,938</td>
<td>10,617</td>
<td>320</td>
<td>10.6</td>
</tr>
<tr>
<td>Uganda</td>
<td>1,748</td>
<td>1,624</td>
<td>124</td>
<td>14.7</td>
</tr>
<tr>
<td>Burkina Faso</td>
<td>406</td>
<td>406</td>
<td>-</td>
<td>37.3</td>
</tr>
<tr>
<td>DR Congo</td>
<td>2,082</td>
<td>1,313</td>
<td>769</td>
<td>7.3</td>
</tr>
<tr>
<td>Zambia</td>
<td>7,452</td>
<td>3,884</td>
<td>3,568</td>
<td>95</td>
</tr>
<tr>
<td>Zimbabwe</td>
<td>14,816</td>
<td>3,327</td>
<td>11,489</td>
<td>-90</td>
</tr>
<tr>
<td>Lesotho</td>
<td>1,789</td>
<td>1,677</td>
<td>113</td>
<td>-</td>
</tr>
<tr>
<td>Swaziland</td>
<td>1,001</td>
<td>299</td>
<td>701</td>
<td>235.5</td>
</tr>
<tr>
<td>Eritrea</td>
<td>284</td>
<td>284</td>
<td>1</td>
<td>122.4</td>
</tr>
<tr>
<td>The other countries/regions in Africa</td>
<td>78</td>
<td>78</td>
<td>-</td>
<td>-47.2</td>
</tr>
</tbody>
</table>

Source: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Globaliz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ern Africa:
some theoretical perspectives

Prof. Won Yong Shin (Youngsan University, Korea)
e-mail wyshin@ysu.ac.kr

1. Introduction

Southern Africa is in a state of rapid flux. The last decade has witnessed a truly dramatic change in its political landscape. Event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region, have prompted a redefinition of the region's interaction. Internally, the majority of states are grappling with radical domestic transitio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outh Africa's transition to democracy, in particular, has stood the regional order on its head.

Externally, the demise of the Soviet empire and resultant diminishing of superpower rivalry have left a global vacuum in terms of ideology and military power. In Southern Africa, important spheres of influence disappeared overnight, begging the question of their replacement with other agendas.

At the same time, growing aid-fatigue developed world has sent a clear message to Africa, that me time had arrived to look inward for salvation. The former colonial masters are preoccupied with their own problems of integration and are struggling to define a new relationship with the vulnerable economies of the former East Bloc (which had ceased its own ideologically-motivated aid to the third World).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f Eastern Europe now present powerful competition to Africa for foreign aid and investment, and their proximity to the Western powers render their position more advantageous. Even in the US, a Republican Congress has verbalized the exasperation felt by many Americans (including erstwhile proponents) with aid to the third World, Africa in particular. The continent is seen as a black hole in which donated resources disappear, seemingly without effect.
On the top of these developments, current low economic growth in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has reduced capacity for (if not interest in) philanthropic policies vis-a-vis the third World. The emphasis now, is on performance: those developing nations which commit themselves to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rena, are awarded with investment, not aid.

Th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also changed. Globalization has reduced the socio-politico-economic distance between and among states, forcing them to "open up" to the world m order to compete for economic survival and political influence. Partly as a response to globalization, states are strengthening their international bargaining power by organizing themselves into regional trading blocs - some of which are already so far advanced, that political union hovers on the horizon. World politics is therefore increasingly governed by the emergence and competition of regional blocs such as the EU, ASEAN and NAFTA. As SADC acknowledged some years ago already:

"Integration is fast becoming a global trend---movements towards stronger regional blocs will transform the world,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ADC, 1992, P.3)

In order to prevent itself from economic and political and political marginalization Southern Africa has to come up with a similar response. Bernd Oden of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notes that the region is already partially integrated in a number of important ways, including trade and labour. (1993, P.14) The practical challenge the ahead is therefore the adjustment of present integration patterns, given the new global and regional circumstances. The debate in Southern Africa is no longer about going it alone, but rather about the degree to which co-operation, co-ordination (lately also) integration should be pursued.

The imperative for integration in SADC is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Growing numbers of issues the Southern Africa know no borders. The trade, refugee movements, migrant labour, water (the region's most precious resource) supply, environmental degradation, AIDS etc. need a co-ordinated regional response. Ohlson (1994, P.273) points out that the new buzzwords in Southern African regional relations are collective and common security good neighborliness; peaceful resolution of interstate conflict; co-operation; and integration.

2. Conceptual Background
2.1. Globalization

The various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of globalization mostly refer to a process which affects the global trading system: i.e. the lowering of policy impediments to the movement of the services and capital across national and regional boundaries, in search of profitable investments. Many observers simply that globalization is a result of liber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that it is the net result of the immense growth (widening as well deepening) of the rôle of private enterprise in human activity. The derived ideology, *globalism*, can simply be described as the movement towards a border-less world.

Globalization has in fact evolved as a result of many coinciding phenomena and circumstances among others the end of the bi-polarity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e rapid growth of global financial markets since the late seventies (aided by their deregulation); the massive growth of information, transport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osmosis of corporate activity, perforating transcending political borders and manifesting itself particularly in the phenomenal growt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n issues such as environmentalism and human right. These conditions combined, ensure that globalization increasingly affect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ocio-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Globalization in effect reduces the socio-politico-economic distance between and among states, individuals and companies.

The international "game" is, however, not necessarily fair, as it holds no safety nets for those who fail to compete successfully. Although globalization holds out the promise of growth and development, for many LDC’s it contains the risk of further materialization in the global economy. Many commentators have sympathy with the LDC’s, warning that globalization is inherently an anarchical process, respecting no rules or institutions, and feeding on a frenz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2.2. Regionalization

Oman defines regionalization as "the movement of two or more societies toward greater integration or greater pooling of their sovereignty" (1994, P.34) However, in any regional integration scheme, a plethora of issues are involved: among them (and this is not an exhaustive list) institutional, social,
demographic, trade, fiscal, monetary, legal, security and political issues. The principles and precepts underpinning regionalization become more complex as the degree of integration increases, necessitating an holistic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the integration process.

Regionalization can be *de jure* or *de facto*, depending on the type/level of integration and the legal/institutional framework supporting the process. *De jure* (or formalized) regionalization is most commonly driven by political forces, as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t can take various institutional shapes, from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to fully fledged economic or even political union. It can and often does involved a greater or less degree of hegemonic power by one of the constituents. Formalized regionalization has accelerated markedly over the past few decades, underpinned by market-driven integration. (Kritzinger Van Niekerk, 1996, P.8)

*De facto* regionalization, on the other hand, is driven by microeconomic forces, a more informal and spontaneous process. This type of regional integration is typically caused or accelerated by transborder barter or trade, investment and migratory flows. Southern Africa is a good example of *de facto* integration. What is significant for this paper, is the *de facto* regionalization commonly evolves into *de jure* regionalization, especially once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practical reality, are grasped by policy makers.

2.3.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Some see regionalization as a necessary, even unavoidable mezzanine step in the process of achieving global free trade. Others see regionalization as a buffer against the penetration onslaught of globalization, a means to pool resources in order to maximize bargaining power in a world where the rules change even more rapidly than the players.

Oman is of the opinion that the two phenomena are opposites in the sense that globalization is in essence a centrifugal process, and regionalisation a centripetal process. (1994,P.16) But they also tend to be mutually reinforcing. Regionalization is, in some instances, a reaction to the anarchy created by globalization - it thus feeds of the latter process. But it also fosters globalization insofar as it stimulates the microeconomic forces that drive globalization and the forces of competition within a region.

The two phenomena complement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both create opportunities for increased North-South integration, by enhancing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offer a simultaneous challenge to companies and governments, holding out at the same time the opportunity for exclusion from, or inclusion in, the emerging new world order.

2.4. Regional integration
Regional integration can be described as a gradu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political harmonization proces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sharing some common ground and interest with the aim of creating a supra-national identity. Harmonization, in turn, can be defined as a voluntary process of establishing mutually complementary policies, legislation, standards and practices within and among states. Integration can take place piecemeal or spontaneously on many different levels, ranging from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to a merge of national economies and, at the far end of the scale, erasure of political borders through ceding of sovereignty.

2.5. Southern Africa
It is necessary to agree on what is meant by "Southern Africa." It is the southern-most region of Africa. As with all other geo-political areas, the definition has some capacity to be shrunk or stretched arbitrarily. For purely practical reasons, this paper shall treat all those fourteen states within the borders of the current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as "Southern Africa": Angola, Botswana, Congo (Democratic Rep. of), Lesotho, Malawi,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Seychelles, South Africa, Swaziland, Tanzania, Zambia, and Zimbabwe. The definition of the region is therefore political.

3. Integration in Southern Africa

3.1. The roots on integration theory

3.1.1. Co-operation versus conflict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has always addressed the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and among states. Integration theorists have concentrated on the former, by emphasizing the integrative process at an international level as primarily consensual, and as being a product of convergent national interests.
Although it could be argued that integration of states follows naturally on the phenomenon of inter-state co-operation: regional integration as a multilateral policy objective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Before the Second World War, such initiatives were mainly geo-political manoeuvres. After the War, political theorists were more and more influenced by economic theory on the benefit—particularly in neutralizing nationalist aggression—of harmonizing economic (and eventually political) policy.

Latter-day integration theory has its roots in Europe, and indeed the idea of integrating Europe, and indeed the idea of integrating Europe has been persistent throughout the continent's history.

However, after World War Two, the necessity to fortress Europe against internal (nationalist expansionism) as well as external (the Soviet threat) aggression, became a compelling driving force in the quest for integration. In the mid-1950's, the pioneering work of (i.a.) Karl Deutch and Ernst Haas identified the unprecedented growth of common institutions in Europe as a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Soon thereafter, in the 1960's, a distinct new discipline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ecame visible, and the scholars concerned with it became known as "integrationists". (Keohane and Nye, 1987, P.363) The integrationists, 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sts, were (and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evolution of the Westphalian system, given certain conditions and co-operative inter-state behaviour, in the direction of new regional dispensations, with at least a degree of nation-state sovereignty sacrifice.

3.1.2 Moving beyond Europe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schemes after World War Two, especially in the Third World, added a new dimension to integration theory. Rapid decolonization coincided with Europe's post-war introspection, and for many of the brand-new nation states, inter-state conflict prevention was far less important than development per se. Regional integration became a means towards that end, the main priorities. This developmental approach to integration has alternately absorbed, questioned and argumented traditional integration theory.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development in Southern African region will broadly be measured against three models or paradigms of regional integration:
trade/market integration (originally known as "customs union theory"), development integration, and functional integration (including neo-functionalism and its more recent revisions)

3.2. THE MARKET INTEGRATION MODEL

3.2.1 Popular inspiration

With a few exceptions, all the regional integration efforts in Africa have been inspired by the market integration model—COMESA being a good example. The paradigm essentially views between co-operating partners are removed progressively, and in which the external trade regimes, and eventual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of the partners, are harmonized. Importantly, progress is deemed to occur in a linear way, moving from a Preferential Trade Area (PTA) through a Free Trade Area (FTA), a Customs Union and Common Market to an Economic Union and finally a Political Union. (Davies, 1996, P.2); Maasdorp (1992, P.136,137)

3.2.2 Levels of integration

In ascending order of integration, these level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i) A **free-trade area** involves the removal of quotas and customs tariffs (states retain their own external tariffs, but within the region, trade is partially or totally tariff-free);

ii) In a **customs union**, the free-trade area conditions are extended to include the adoption of a common external tariff against outside countries;

iii) In a **common market**, the customs union arrangements are extended to include the abolition of all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capital and labour among member countries;

iv) In an **economic union**, national economic policies are harmonized and supranational institutions are established;

v) **political union**, in which there occurs of powerful political supra-national institutions

3.2.3 Rejected by SADC
Ostergaard quotes vast literary evidence that this European-derived model is not applicable to Africa. (1993, P.40) In this regard, Gibb notes that the original (1980) SADCC blueprint emphatically rejected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the (European) model of trade liberalization and free-market principles.

SADDC’s 1992 Theme Document again rejected the traditional customs union/common market approach, stating that *laissez-faire* approach to regional integration, in a region with such gross disparities as Southern Africa, would be inappropriate. At the same time, the document recognised that regional project co-ordination could no longer be the major basis of SADCC strategy, because it had "only a limited impact in promoting deeper or wider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stated as follows: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have become no longer merely desirable, but imperative for growth, development and indeed survival." (1995, P224)

SADC is in fact now officially following a two-track approach to integration, i.e. trade integration combined with sectoral co-operation, with the ultimate aim of establishing a common market in Southern Africa. This latter goal has been embodied in its signing of a Trade Protocol in 1996, and its expressed aim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within a decade.

3.3. THE DEVELOPMENT INTEGRATION

3.3.1. A re-evaluation of the market integration paradigm

Although theorists agree that SADC’s approach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does not fit into traditional integration theory in any clear-cut way, its predecessor - SADCC - had identified the developmental integrative model as offering the most attractive strategy for Southern Africa.

This model developed as a gradual response to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customs union theory, and its emphasis on a *laissez faire* approach. It developed in earnest from the start of 1990’s, when failure of many integration schemes in South prompted critics to re-evaluate the market integration paradigm. Importantly, this approach does not equate simple liberalization as the main means to achieving developmental regionalization (although it does not reject liberalization as an option *inter alia*). Rather, it advocates a higher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than in the market integration model, and encompasses ways in which developing countries can implement economic integration in line with their own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the role of private economic actors activity in its sectoral development integration, is not rejected. SADC's high level of private sector activity in its sectoral development - especially in the areas of transport, communications and energy - is ample evidence.

Furthermore, development integration dose not focus on efficiency maximization of existing capacity, but rather on stimulation of that capacity in the first place. It link, in other words, the theory of development with the theory of integration. (Oden, 1993, P.33,34) The approach also addresses the need for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integration, and therefore provide for trade liberalization to be accompanied by compensatory and corrective measures, to assist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of the partners.

3.3.2 Connecting with the global economy

As mentioned already, the development-integration model does not reject trade liberalization per se. However, given the exogenous pressures on developing-integrating regions (WTO requirement, SAPs prescriptions, etc.) the emphasis is on accelerating regional trade integration at a faster pace than external trade liberalization - not by slowing down the latter! It does not advocate a high level of regional protectionism - but it wants the region's economic solidarity to act as a healthy buffer against the negativ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3.3.3 Political commitment

Davies notes that this approach encourages the co-ordination of both micro-and macro-economic policies among member states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integration. (1996, P4) The model therefore requires a much higher level of commitment within and among member states, than is the case with the market integration model - and of course a high level of political co-operation is necessary. (Mbuende, 1994, P.16) Measured against this model, it can be deduced that integration within SADCC had been more political than was obvious from its achievement in terms of supra-national structures.
The necessity for political co-operation can, however, paralyse the model when political disunity interferes with its developmental goals. Ostergaard is of the opinion that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development integration model can be avoided if the so-called neo-functional model is pursued, precisely because neo-functionalism works from the bottom upwards, instead of the other way round. (1993, P.39)

3.4. (NEO-)FUNCTIONALISM

3.4.1 Federalism and functionalism

According to Gibb (1995, P.217) most of the contemporary integration theories are based upon interpretations of the federalist and functionalist intellectual traditions concerned with European integ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Federalism promotes common political institutions to create co-operative unity among diverse groups, although it does not seek to eliminate the diversity in the political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Locally interpreted in the European context, the term could therefore embrace confederalism, as some federalists favour very loose, decentralized (confederal) arrangements.

The rival approach to integration in Europe, functionalism, developed in reaction to federalist ambitions for an institutionalized supra-national system in Europe. In objective the functionalists does not differ from the federalists: they want to establish a new world order by reducing the sovereign powers of nation-states. But functionalists consider the federalist approach to be politically unrealistic, and therefore advocate the concept of authority being linked to a specific functional activity.

The theorist David Mitrany, in particular, turned functionalism into an influential integration theory. He believed that state concerns were of an increasingly technical nature, and that such issues could be dealt with on a functional level, outside the politicized context of ideology or nationalism.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 422) The resultant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ould deliver immediate benefits from co-operation in basic functional areas and would ideally lead to a transnational
complex of economic and social organizations, which would reduce the risk of individual state aggression. Thus functionalism sought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the fundamental problem of security would be addressed.

By highlighting co-operative behaviour (which would transcend the capacity of the nation state to achieve satisfactory solutions by unilateral means) it encouraged integrative behaviour as a matter of pragmatism, because of expectations of joint rewards (or, as a corollary, penalties for non-participation) Mitrany used the term "ramification" to describe the gradual commitment to co-operation by states, as successful co-operation in one functional setting provided incentives for collaboration in other areas.

Functional areas which lend themselves to co-operative action include international trade, the environment, communications, migration, health, investment, transportation and ecology. This agenda of issues constitute so-called low politics, as opposed to the agenda of high politics-political-military security as espoused by realist theory.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421, 422)

Functionalism offers a more pragmatic approach to integrating sovereign states within structures where conflicts could be peacefully resolved. It explicitly avoids conflicts with nationalism. However, as states surrender more and more functional sovereignty to supra-national agencies, they will eventually find themselves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which their sovereign has been eroded. (Lemon, 1995, P.218,219)

3.4.2 Neo-functionalism and the spill-over effect

The founding architects of the first European Community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mbraced a "spill-over" strategy for integration, which boils down to a type of domino effect when integration is tackled step-by-step. This approach is often referred to as neo-functionalism, the intellectual descendant of functionalism. It developed over a period of 20 years (roughly 1955 to 1975) and remains the most sophisticated and comprehensive attempt a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urope. (Moravcsik, 1993,p.474)
The model presupposes an ultimate shift of loyalty and sovereignty from stat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would result from the inevitable political repercussions, or "spill-overs" of integration in functional areas. (Oden, 1993, P.39,40) Most of the focus of neo-functionalist theory has been on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potential to develop into a political union. Much emphasis is therefore placed o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elites, and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pace or direction of integr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lthough the process within (neo-)functionalism is different from the market integration model, the direction is still basically the same - a linear movement from economic integration towards political integration.

Several theorists have contributed to the literature on neo-functionalism, among these Ernst Haas, Philippe Schmitter,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Haas expanded Mitrany's "doctrine of ramification" into the concept of "spill-overs" - concluding that there was a marked tendency for people who had experienced gains from supra-national institutions in one sector, to favour integration in other sectors, even advocating it.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424) This "expansive logic" - applying experience to expectations - would then cause spill-overs from one sector into another, and led neo-functionalists to predict that integration in Europe would be self-sustaining.

4.3 NEO-FUNCTIONALISM AND NYE's integrative potential

Joseph Nye, among others, has refined the neo-functionalist theories of Haas. Nye's work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developing world, because he devise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conditions for integration, with research that includes studies on non-European regions. Integrative processes in more developed and less developed regions of the world, can therefore be compared. Central to his revised "neo-functionalist process model", is the concept of integrative potential; i.e. conditions which influence the nature of the original commitment to integration, as well as the scheme's subsequent evolution. He lists four of these conditions:

i) Symmetry (economic equality) of units: integration theorists generally accept that economies in an integration scheme should be compatible -
not necessarily in terms of actual size, but in terms of level of development, as measured by per-capita income levels. Nye makes the interesting observation that in developing regions however, homogeneity in the actual sizes of individual economies is more important than measuring comparative income levels.

ii) **Elite value complementarity**: Nye holds that it is important for elites within integration entities to agree on the necessity for integration, in order to provide impetus for the process.

iii) **Existence of pluralism**: The absence of pluralism in the *Third World*, is a specific obstacle to successful integration. Positive feedback from diverse groups is necessary to sustain integrative efforts.

iv) **Capacity of member states to adapt and respond**: here again, the *Third World* lack of state capacity falls short of Nye’s insistence on the importance of domestic stability and mutual-responsiveness within the political units of an integrative scheme.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428)

**4.4 NEO-FUNCTIONALISM IN THE DEVELOPING WORLD**

The sector-by-sector approach of the neo-functionalist model minimizes the problem of cost and benefit distribution among member states. In the *Third World*, the paradigm sets out from the premise that co-operation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collective projects, aimed at overcoming deficiencies in the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spheres, should have first priority. This would remove barriers to trade while at the same time generate a regional identity, which would pave the way for more substantial integration than hasty trade liberalization. (Davies, 1996, P.3)

Several observers have argued that SADC has already begun to implement elements of neo-functionalism. The replacement of SADCC with a formalized treaty, gave the new organization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set it on its way to becoming a supra-national authority. Rich (1994, P.33) is in fact of the opinion that regional relations in post-apartheid Southern Africa will increasingly be guided by neo-functionalist norms. The critique of neo-functionalism, however, may hold more realistic clues as to the integrative
direction of SADC.

3.5. **BEYOND NEO–FUNCTIONALISM**

3.5.1 *The logic questioned*

Neo-functionalism has been revised and critiqued, even by its own exponents. In the mid-seventies, for example, Haas developed reservations about the logic of incrementalism and spill-overs. For example, he did not foresee a common monetary policy as the logical next step after the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and a common agricultural policy in Europe.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425) In other words, the proliferation of complex technical issues, handled in a multilateral context, was not commensurate with the propensity of political elites to choose supra-national solutions.

Indeed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Union, formaliz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Maastricht Treaty) in 1991, has spawned theory which extends beyond neo-functionalism and which debates the adequacy of existing integration theory. Whereas neo-functionalist theory emphasized the spill-over of sector integration leading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the new approaches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policy convergence among governments in a regional integration scheme.* (Dougherty and Pfaltzgraff, 1997, P.433) The criticism maintains that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in themselves will not necessarily produce integration through functional co-operation.

In the same vein, post-neo-functionalist theorists, including Robert Keohane, Stanley Hoffmann and Andrew Moravcsik, have found the theory of integration being the result of supranational and transnational coalitions that largely bypass national governments, to be inadequate. Instead, they have increasingly started to relate international structural changes to *domestic political dynamics* in the member states.

3.5.2 *Moravcsik and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Moravcsik moved away from neo-functionalism towards a framework of analysis called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 *challenging the linear approach of the older theory, and the assumption thereof that integration would necessarily happen in an even, incremental and automatic*
At the core of his approach, lies the following three elements, which he calls "essential": the assumption of rational state behaviour, a liberal theory of national preference formation, and an intergovernmentalist analysis of interstate negotiation. His assumption of rational state behaviour, importantly, assumes rational reaction to *domestic* pressures. Therefore an understanding of states' domestic politics is a precondition for, not just a supplement to, the analysis of inter-state relations. His approach is liberal in the sense that civil society is seen as a fundamental actor in politics – determining the behaviour of governments. (1993, P.480-483)

According to Moravcsik, the following four dimensions of policy co-ordin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n integration study, as they have a practical value in the strategic planning of integration:

i)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regime;

ii) the range of issues in which policies are co-ordinated;

iii) the institutions of joint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iv)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substantive domestic policy adjustment (Moravcsik, 1993, P.479)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this conclu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Integration within SADC has not "followed the rules" of any traditional integration theory.

4. CONCLUSION

A popular view held by traditional integration theory, is that integration is a linear process, with political integration following on the economic. This tenet has not been proven. As a matter of fact, a process such as the one found in the EU has been political from the outset, and its political integration has accompanied and sustained economic integration, rather than "waiting for it to finish". Increasingly, theorists agree that – rather than any other factor –
the political will of members in an integrative scheme, remains of paramount importance in providing impetus to the process. This view is reflected indirectly by the Development Integration Model - which presupposes a high degree of state intervention and political commitment to the process - and by the recent revisions to the integrationist choices of governments.

In light of the divergent literature on the subject of integration theory, and the fact that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uropean experience, this paper has not attempted to apply any one school of integrationist theory to the situation in Southern Africa. Integrationist theorists are not agreed on how to measure integrative indicators, and neither do they agree on the catalysts to integration. Until a few years ago, the neo-functionalist model was thought to be the most authoritative models of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revisions of neo-functionalism, in particular, are proving useful for the complex study of integr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he process in Southern Africa has to be seen against an eclectic interdisciplinary background. At this stage SADC seems to pursue both a sectoral approach (which, some commentators claim, is informed by neo-functionalist norms) and market integration. Most certainly, the continued emphasis on the domestic priorities of participating governments, would also strongly support the liberal-intergovernmentalist model. According to SADC’s own analysis, it is committed to development integration - a model which combines elements of all the others, yet caters for the unique challenges of a developing region.

The region’s experience with integration will feed on, as well as inform, the constantly evolving theory behind international integration, especially as manifested in the Third World.
Bibliography


Davis, R. 1992: Integration or Co-operation in a Post-Apartheid Southern Africa: Some Reflections on an Emerging Debate; Cape Town: Published as Southern African Perspectives no 18; Centre for Southern Africa Studies,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 479 —
of Southern Africa


Oman, C. 1994: Globalization and Regionalisation: The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 Published by the OECD Development Centre.


SADC Secretariat. 1992: Towards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 Declaration;


SADC Secretariat. 1996: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ng Partners; Circular Note from the Secretariat, document no SADC/SC/1/96/8; Gaborone: Unpublished.

SADC Secretariat. 1996: The Windhoek Protocol, and various unpublished in-house communications on the integration of the SADC Parliamentary Forum into SADC.


Energy issues in East Asia and African oil and gas:
Presented at Preliminary Meeting for the East Asia Africanist Society (EAS)

Manabu Shimizu
Utsunomiya University, JAPAN

1. Various faces of Africa: poverty and energy resources

From 29 September to 1 October 2003 the Thir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convened with participation of delegates from 89 countries including 50 African countries. Japan’s basic policy for assistance is based, according to PM J. Koizumi, on three pillars, namely “human-centred development,” “poverty reduc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peace.” We are convinced, if the poverty is eradicated in the Sub-Saharan Africa and South Asia, a major challenge for the human being in the field of poverty is solved in general. In the North East Asia, although we have our own economic difficulties or problems to be solved, it is only natural that we should and could contribute to the big challenge of poverty reduction for the whole world.

At the same time we also observe a new emerging interest in the African continent among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other parts of the globe. Their interests originate in natural resources, particularly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The US has shown her interest in oil and gas in West Africa such as Angola and Nigeria besides the Persian Gulf, as the US dependence on the import of oil has already surpassed 50 percent of its consumption and energy security is one of their serious concerns. At the same time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an increasing demand for oil and gas among the North East Asia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besides Japan. China particularly has developed its economy rapidly and it is expected that its demand for oil and gas will increase rapidly. India is also increasing its demand for import of oil. However the capacity of supply in the South East Asia are not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of increase of their domestic demand. Of course the Middle East is and will be the major candidate for supply of oil to the North East Asia. However each country in the North East Asia or in Asia as a whole tries every possibility to find its own oil fields including those areas as far as Africa. When we discuss African issues we cannot evade the problem.
2. The Sept. 11 and Energy Situation

The Sept. 11 introduced new factors in the world oil market. Firstly, for the first time a specific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audi Arabia was put into doubt by some quarters in the US. Among the terrorists in the Sept. 11 development majority of them were Saudi nationals and Osama bin Laden of Al Qaida was suspected of mastermind of the attacks in New York and Washington. In this connection the political regime of Saudi Arabia was reexamined by some think-tanks which made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Saudi Arabia unstable to some extent, resulting in unstable the world oil market. However, the recent aggravation in Iraq minimized the issue as Iraq as an alternative source of oil lost its possibility for the time being. The importance of Saudi Arabia rose again in the eyes of the US energy policy.

Another factor was a strategic rapprochment between the US and Russia not only in their common fight against terrorism but also in the development in oil and gas industry. Russia intends to export its oil to the market in the US taking the place of the status of Saudi Arabia. These changes and instability in the infrastructure in the world oil market had also an impact on the oil and gas market in the East Asia. In this connection the oil and energy resources in the Caspian sea, Russian East Siberia and Sakahlin island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3. Japan’s stance and oil policy

In the Japanese government there are two schools concerning Japan’s policy towards energy security in the future. One school stands for “oil as strategic commodity” while another stands for “oil as an ordinary commodity.” The division of the two schools in the administration became apparent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The former insists to pursue her policies to establish and continue Japan’s cordial relations with oil exporting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Middle East in order to secure a steady flow of oil and gas. The latter focuses the formation of unified world market of oil and gas and insists it is not always necessary to have any specific relations with the oil exporting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a sufficient supply of oil and gas as we can get them in the world market.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schools weakened Japan’s stance towards the oil exporting countries in negotiations.

In 2000 Japan failed to extend its agreement of exploitation of Kakhji oil with Saudi Arabia and the Arabian Oil Company of Japan faced a serious crisis in its survival. All the details are not disclosed yet about the story behind the failure of negotiations to renew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audi Arabia. However, Japan’s stanc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agreement was not very steady and failed to get Saudi Arabia’s positive response. Japan’s fluctuating position was one of the causes in failing to get a renewal of agreement.

“The priority right for negotiation with Iran over Azadegan oil field was lost for
Japan in the end of June 2003. The Azadegan oil field was found near the border with Iran in 1998 and estimated exploitable oil reserve is 26 bl. bbls, which is the biggest in Iran. When President Khatami payed a visit to Japan in Nov. 2000, Iran gave Japanese companies the right of priority negotiations. Since then the Azadegan oil field was thought to be the most profitable project for Japan’s initiated oil fields which are exploited by Japan’s companies. However in the end of June the US government intervened in th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Iran by giving a warning to Japan of helping Iran to develop nuclear if Japan gives any economic assistance through the project. Japan failed to finalize the negotiations by the end of June and lost the right of priority negotiations.

As is shown in the above Japan’s interest in the Azadegan oil field was intensified by Japan’s failure in extending its contract of exploitation in the Khafji field with Saudi Arabia. The Japanese government was trying to compensate for the loss by getting another new one. In case of the Azadegan there are various problems. The Azadegan field is very near the border with Iraq. The quality of oil is very heavy. Iran demands the buy-back formula. The Agazaden oil field came to the fore when Japan was renovating drastically the Japan Oil Exploration Organization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Japan is trying to integrate semi-governmental oil and gas exploring companies into one core international oil company and the Azadegan was its first step. However, Japan forfeited its right to negotiate by the end of June 30 this year as the US pressure on Japan not to support financially Iran was intensified. However, we cannot overlook a recent rapid rise of Japan’s dependency of oil import from the Gulf. As of 2002 it is assumed that almost 90% of Japan’s import of oil did come from the Gulf, which is a menacingly high rate of dependency. Since the oil crisis in 1973 Japan’s policy orientation has been to diversify its sources of oil supply from the Gulf. The policy of diversification succeeded to some extent by investing in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However,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Japan found at its dismay that the former effort to diversify its sources of oil supply for the last two decades did not result in any stable diversification and did return back to the starting point.

4. China’s commitment to Africa in the field of oil exploration

It is remarkable that China is now energetically pursues to explore its own oil field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Africa. China’s stance for oil is clear in that China takes oil as “strategy commodity.” The National Oil Company in China is composed of three holding companies. They are the CNPC, Sinopec and CNOOC who have handed over their core activities to their subsidiaries. They compete in their effort to acquire new oil fields not only in China but also abroad.

As of 2001, CNPC has continued to expand its overseas geophysical prospecting operations. CNPC has 24 geophysical survey crews operating overseas, including 16 specializing in 2D seismic data acquisition and 8 specializing in 3D seismic data.
acquisition. A total of 7369 kilometers of 2D seismic data and 1974 square kilometers of 3D seismic data were acquired overseas in 2001. CNPC’s wholly owned subsidiary, Bureau of Geophysical Prospecting (BGP), has 17 seismic survey crews and 1 non-seismic survey crew operating in 8 countries worldwide, providing seismic data acquisition, processing, and interpretation services, as well as non-seismic services, to over 20 petroleum companies. As of the end of 2001, BGP had 6 overseas management divisions, located in North Africa, West Africa, Iran, Pakistan, Nor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with 16 branch offices established in Sudan, Libya, Nigeria, Iran, Pakistan, Myanmar (Burma), Peru, Venezuela, Yeme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Saudi Arabia, Kazakhstan, Turkmenistan, Mozambique,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BGP was awarded a contract from Agip in 2001 for 900 square kilometers of seismic data acquisition in Nigeria. It is noteworthy that African countries such as Sudan, Nigeria and Libya occup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strategy of CNPC. The success story of Sudan is one of the results of aggressive Chinese exploration.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China is the center of tempest because of its rapid increase of import of oil. According to the IEEA, China’s demand for oil increased for the last three years by 730,000 b/d every year compared with the US which increased its demand for oil by 420,000 b/d every year. According to US government forecasts China will replace Japan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oil consumer after the US this year. The US demand for oil is 19.7 million b/d in 2002 while China’s demand for oil will double to 10.9 million b/d by 2025. China was a net exporter of oil by 1992. However, in 1993 China became the net importer of oil because of increase of its domestic demand.

China’s oil policy is characterized by its intensive effort to gain oil fields under direct control as many as possible taking into an expanded demand for oil in the future. Although China is endowed with coal resources, environmental constraints hinder their extended use of coal in future. China has tried its best in exploring domestic potential of oil. However, it is expected that domestic production might begin to decreas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oil fields is the inevitable prerequisite and one of the urgent priorities for the general guideline of Chinese government.

When we discuss the Chinese policies for oil fields we can point out three outstanding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that China bases its own policy on the understanding that oil is in principle “strategic commodity.” Therefore China intends to enclose oil fields under the flag of China as many as possible. The second one is that China has to look for “niches” for oi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because most of the potentially promising oilfields are already under the hand or indirect influence of multinational oil majors. Inevitably those “niches” could be found in politically instable countries or geographically remote areas. It is only natural that African countries like Sudan and Nigeria are included in their plan. The third characteristics is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to the state enterprises engaged in oil exploration, namely China Petroleum and Sinopec with the intention of developing them as China’s Oil Majors. The state enterprises can expand its activitie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financial constraints too much. At the same time China can make use of political influence as a bargaining power with oil producing countries. China approached Central Asia, Russia, Iran, Iraq,
Saudi Arabia, Sudan, the Philippines etc. The exploration in South Sudan was one of the success stories for China’s venture for new sources of oil as is indicated in the above.

5. China–Japan conflict over expected pipelines from Russian East Siberia

We observe new controversies concerning routes of pipeline which connect Angarsk oil field in the Irkutsk oblasti in East Siberia with markets in the East Asia, because various interest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re reflected in the controversies. On Sept. 8th in 2001, Russia and China concluded an agreement to establish a pipeline from Angarsk and Daqing in the Heilong–jiang Sheng Provinve in the North East China, which covers 2400 km. This pipeline was thought to be a leading project for Russia–China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 project did not get a consensus among the ruling circles of Russia. The state monopoly of Transnefti Co. objected to the idea and proposed another route to Nakhodka facing the Pacific, by emphasizing the merit of the route which does not limit their market to China and emphasized its flexibility of wider market including Japan and China. Mikhail Khodorkovsky is of the view that Sakahlin offshore development is enough for diversification and energy security for Japan and support the China route. Mikhail Khodorkovsky is a chairman of the Russian biggest oil company Yukos and Yukos is expected to lay the pipeline to Daqing from Angarsk.

We observe a series of competition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oil reserves in East Siberia recently. In May in 2003 the Chinese Party chief Ho chose Russia as his first foreign country for his visit in the present capacity. He concluded an agreement with Russia for its export of oil to China through a pipeline from East Siberia. Yukos was the Russian counterpart and Sinopec was the China’s counterpart. According to the agreement the Yukos is expected to export 20 million ton every year from 2005 and 30 million ton every year from 2010 for 25 years. Against this initiative on the Chinese side on 17th June President Putin requested the visiting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Mr. Mori to send Japan’s delegation for exploring the potential oil fields in East Siberia. Russia wanted to know Japan’s eagerness to explore and develop East Siberia. In the end of June 2003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s Kawaguchi visited Vladostok and proposed to the Russian counterpar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oil pipeline from East Siberia by emphasizing the priority of Nakhodka pipeline. It was reported that she was ready to provide credit of $5–6 bl. for the construction of pipeline to the Pacific on the condition that Russia is ready to provide the Government guarantee. However Russia is reluctant to give government guarantee to an expected credit of Japan. Japan puts a special emphasis on the Nakhodka route as the oil from the East Siberia could decrease Japan’s dependence of oil on the Middle East by 20 percent which could strengthen Japan’s bargaining position against the Middle East. Japan has to pay the Asian premium of oil which is comparatively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prices.

Russia’s stance is not settled and looks for the two rout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for Russia to provide oil to Chin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At the same time, however, Russia wants to explore another possibility to explore oil and gas in
East Siberia because of economic necessities in the Eastern Part of Russia which suffer from the decline of economic activities and outflow of population.

6. To look for new chances of cooperation among the North East Asia and Asia Pacific as a whole.

The above picture shows us a new challenge for the countries in North East Asia for oil resources and energy as a whole. The pipeline issue from East Siberia predicts the necessity to cope with the energy issues in the North East Asia together among the countries. There could be cooperation in the common stock project, development in energy and oil saving technology. In this framework not only the middle east but also north Africa as well as the Sub Saharan Africa should be brought in, which does not mean our interest in Africa is limited to the natural resources including energy. The question how to promote productiv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East Asia and Africa expects much wider spheres of activities. As is mentioned in the above human security and ethnic conflicts demands their solutions. Africa has been neglected in the eyes of Asian people until now in general. Now the prevalent poverty in Africa could be another source of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not only for Africa but also for the entire globe. Africa has been for a long time continent which have specific relations with Europe and America. However, it is necessary now to have a new look at Africa so that Asia particularly the North East Asia could play a more positive role in the continent. Of course each country has a specific history and relations with African countries. For instance China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building the Tanzan railway in 1960s and also in the road construction in Yemen. South Korea contributed to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of Libya. Japan took an initiative in giving aid to Africa. Today’s preparatory conference is expected to initiate projects to find common fields for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reas, namely Africa and North East Asia.

This is not a final paper to be printed in the final report. Don't quote without author's written permission.
External Forces in the Peace Process of Africa: Case Study of Sierra Leone

ZHAN Shiming
Political Scientist and Research Fellow, IWAAS CHINA

CONTENTS

I. The Peace Process of Africa and the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I. The External Forces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A Case Study
III. Conclusion
IV. Some Comments

I. The Peace Process of Africa and the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new century, the 21st century, Africa is still the continent afflicted with ceaseless wars, clashes and conflicts. Apart from a variety of other reasons, no one would deny that continuous civil wars and internal conflicts are the single most important reason determining Africa's falling far behind the average level of the world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internal conflicts in Africa are caused, to a large extent, by the deep-rooted national, racial and religious problems, as well as by the complex intern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fighting for interest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s one of the key elements leading to the protracted wars and chaos in Afric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role of the external forces in the emergence and
deterioration of the conflicts in Africa has been declining, while at the same
time, the internal clashes of Africa has presented a tendency of self-development. On the one hand, most of the clashes are brought about by
internal factors, with no or little foreign involvement. Accordingl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external actors in preventing and solving the conflicts has
been falling down. Two reasons contribute to this kind of situation. First, the
drop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tanding of Africa makes it difficult for
Africa to continue to occupy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diplomatic strategi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not to say in those of the Western powers.
Secondly, owing to the heightening of the self-awareness of African countries,
they hope to solve the clashes by their own efforts. The presence of foreign
actors in Africa before the end of the Cold War had had a two-folded impact
on the conflicts of Africa. On the one hand they had, probably, led to or make
deteriorate the conflicts, whereas on the other hand, they had checked the
further worsening of these conflicts. In view of these situations, the gradual
exit of external forces from Afric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ill also
caused some two-sided results, since for one thing, it will help the solution of
some of the conflicts by sort of African formula, while for another, it will
some other conflicts out of control in some degree and within certain periods.
What’s more, most of the African countries are in great want of the political
willingness, financial ability and military organizations indispensable for the
conflict resolution, which cannot be made up for in a short period, thus
impeding them from dealing with the repeated internal clashes effectively. The
wars and chaos are still spreading in Africa. To African people, peace and
security is so inaccessible an extravagant wish. However, the cutting down of
foreign involvement in the peace process in African countries does not equal
to the complete withdrawal of these forces form this Continent. Either owing
to the duty of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UN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actuated by the aim of maintaining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r even due to the appeal and invitation by some African
countries themselves, the external forces are still playing a significant,
sometimes even a key,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some of the
conflict-afflicted African countries.

II. The External Forces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A Case Study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broke out in 1991 and was not brought to
an end formally until the end of 2001. Till now, by the joint effor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frica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seems that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has achieved an initial success. Not only an overall peace and security has been maintained, but also the reconstruction is going under way smoothly.

In May 2002, the then newly elected President Kabbah, in his inauguration speech, expressed his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d done his bit for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including Nigeria, Guinea, Ghana and Mali which constituted the West African Peace-Keeping Force, the UN Peace-Keeping Force,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fact, one critical factor, which had, arguably, contributed a lot to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was overlooked in President Kabbah’s speech, that is, the private-owned international mercenary troops participating in its civil war. My paper is just intended to make a simple analysis on the different roles played by the UN, the UK, the USA and the above-mentioned mercenary troops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The United Nations (UN)

It is because the other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part from the UK, have no significant and direct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in Sierra Leone that the UN reacted slowly to and remained undecided on the crisis of Sierra Leone at the beginning. In addition, the Kosovo Crisis occurring at the same time as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attracted much of the attention of the western powers. Although an African himself, only in February 1995, did Anna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UN, nominated a special envoy to Sierra Leone, who was authorized to discuss with the OAU and ECOWAS about the programmes of negotiations. The special envoy took and active part in the negotiations on the Abidjan Agreement and the Conakr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UF, the anti-governmental armed force. However, neither of the two agreements came into effect. On October 8 1997 a resolution was passed by the Security Council to lay an embargo on petroleum and arms deal in Sierra Leone. In June 1998, the Security Council set up a small group composed of 50 observers, whose major tasks were to supervise the disarmament of the armed force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state security forces and to provide relevant advice on such matters. On August 20 1998, the number of the military observers sent by the UN to Sierra Leone was increased to 210. In January 1999, due to the attack upon Freetown by the allied rebel forces the UN observers were forced to quit Sierra Leone. The role of the UN played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was very limited in that period.

It was from the end of 1999 on that the UN began to play a key role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After Nigeria declared that it would withdraw its troops from Sierra Leone, the UN Security Council approved, on
October 22, 1999, to set up another specially appointed envoy team consisted of at most 6,000 military staff, including 260 observers, so as to assist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and the concerned par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Lom Peace Agreement. After several adjustments, the number of the representatives in the envoy team was increased, at last, to 17,500, coming from more than 30 countries. The priorities of the special envoy team were still to provide aids to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to enlarge its scope of competence, to restore law and order, to realize nation-wide stability and to facilitate the forming of a political process favorable to carry out the program such as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to hold a free and just election in appropriate time. The envoy team had encountered numerous hardships in performing the tasks assigned to it and several hundred members of the peacekeeping force were even held hostage by the anti-governmental armed force. But it was only after the UN forces entered Sierra Leone that the peace process began to forge ahead.

On July 5, 2000, after realizing that the illegal diamond trade had deteriorated the domestic clashes of Sierra Leone,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a resolution numbered 1306, prohibiting impor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Sierra Leone the diamonds that had not got the licenses of product of origin issued by the government. In May 2001,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a resolution prohibiting Libya from exporting diamonds and its high officials from traveling abroad in order to punish Libya for its giving support to the anti-governmental forces of Sierra Leone. All of the foregoing measure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solution of the peace problem of Sierra Leone.

Many internal problems arose in the UN special envoy team to Sierra Leone. There is no exception to any of the former peacekeeping forces. An evaluation team sent to Sierra Leone by the UN in June 2000 found that not only serious management deficiencies existed in the envoy team, but the participating parties did not reach unanimity on the tasks and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envoy team. The evaluation team also pointed out that some of the groups of the envoy team even lacked in normal training and equipment. In the envoy team, the Indian commanders and the Nigerian forces frequently quarreled on such issues as the deployment and dispatchment of the forces. India and Jordan had even threatened to withdraw their own forces. In spite of these shortcomings,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world peace and security, the actions taken by the UN is correspondent, principally, to the duties it should take on.

**The United Kingdom (UK)**

The UK was the former suzerain state of Sierra Leone, and as well the single most important external force during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The UK has maintained an enduring economic relationship with Sierra Leone. A
number of British corporations, for instance, the Branch Energy, the Golden Prospects, the Standard Chartered and the Barclays, have long-established businesses in Sierra Leone. There is also a quantity of Britons residing in Sierra Leone. Except for demonstrating its special relationships with Sierra Leone, the small country in west Africa,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UK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had two other objectives, that is, first, to protect the threatened interests of the UK in Sierra Leone, and then, to show to the world that the UK is still an important actor in the African arena, capable of purporting its political and economic ambitions through military forces and diplomatic means.

Four kinds of measures had been taken by the UK in its intervention in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First of all, it provided logistical services and military trainings to the governmental armies of Sierra Leone and to the West African peacekeeping force. The governmental forces of Sierra Leone and the West African peacekeeping force not only received long-lasting trainings and consultations from the British military advisors, but a large quantity of subsidies amounting to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help them fight against the anti-governmental forces. During the civil war, as the major donor and leader of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UK had tried to raise funds for the re-construction of Sierra Leone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the UK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Sierra Leone for the disarmament and demobilization of the servicemen. Secondly, the UK had tried to assist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to put down the rebellion with the aid of the private-owned mercenary forces. The actions taken by the private-owned military and security-preservation corporations employed by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such as the Gurkha Security and the Executive Outcome, had obtained the tacit consent of the British Government and were financially supported by some British companies. In addition, the export of weapons to Sierra Leone by the Sandline International, although in infringement of the UN resolution, was directly supported by the British Foreign Ministry. The high commissioner of the UK to Sierra Leone had acted as the eyewitness fo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Sandline International and Kabbah's government, supported as well by the related officials of the British Intelligence Department. Thirdly, the UK had made great efforts to impose pressures on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The UK has always given support to the diplomatic efforts of African countries in solving the problem of Sierra Leone and the exile president Kabbah had been invited to the summit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of members of the Commonwealth. In the UN Security Council, a series of resolutions concerning Sierra Leone had been passed under the insistence of the UK. Fourthly, the UK was engaged in military actions in Sierra Leone directly. The military
action taken by the UK in Sierra Leone was the largest-scale only next to the Falkland Islands war of 1982. The British army sent to Sierra Leone was composed of 800 paratroopers, 40 special pilots, and 600 royal naval soldiers. In spite of the relatively limited scale, scope of action and duration of the British army in Sierra Leone, their mere existence had brought confidence to a lot of Sierra Leone citizens and even to the UN peacekeeping forces. The British army was regarded as the most professional of those stationed in Sierra Leone.

The UK is the only one among the five standing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ho has significant and direct interests in Sierra Leone. However, compared with its immediate military involvement in the peacekeeping of East Timor and Kosovo, it seemed that it reacted rather slowly in the crisis of Sierra Leone. It is even argued by some that what the UK really cares about is not the misery brought to the people of Sierra Leone by the war, but, on the contrary, the problem that who could take control of the mineral resources of Sierra Leone. But objectively speaking, the UK, in effect,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Just as what is said by Anna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UN, that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UK at least took some actions and done some things.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it is a fairly strange phenomenon that most of the clashes and conflicts in the world could not have been resolved if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single super pow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ot only possessing tremendous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s, but controlling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UN. What’s more, American national interests can be found in almost all over the world, with no exception to Afric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strategic position of Africa to America has declined sharply. The only one large-scale direct military intervening of America in Africa is in Somalia, the failure of which has made it suffering from the Somali Syndrome, dreading of the death and wounding of its servicemen, of the financial burdens and of the criticism thus incurred. In view of this situation, after the breaking out of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who has no direct an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America, the latter had only took some very limited actions, although not staying aloof. The only contribut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e realization of peace in Sierra Leone were made by way of diplomatic means as well as limited financial and humanitarian supports. At the beginning of the civil war, the United States supplied some logistical supports and trainings to Sierra Leonine armies and the Libyan forces assisting Sierra Leone. Besides these, it had always provided certain
supports to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Sierra Leone of the OAU and the ECOWAS and imposed diplomatic pressures to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onflict and to its neighbor Libya. It was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 standing by the UK, that the UN had passed the resolution on diamond embargo of Sierra Leone and Libya an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d decided to dispatch and station peacekeeping forces in Sierra Leone. Especially when it acknowledg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diamond smuggling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ts, it enhanced its attention attached to Sierra Leone. At last, it has provided some financial support to the re-construction of Sierra Leone after the end of the civil war.

**Private-owned Mercenary Forces**

During the ten years' of civil war in Sierra Leone, several private-owned mercenary forces had been invited and employed by the successive governments to take part in the fighting against anti-governmental forces. The most well-known among those invited is the Executive Outcome coming from South Africa but backed by the UK. From May 1995 on, the intervention of the Executive Outcome resulted in the successive victories of the governmental forces against RUF, transforming the situation to a point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Although the elected president Kabbah didn't like the presence of the Executive Outcome, he had to recognize that the timely joining of it provided very good service. It is, to a large degree, due to the military victory of the Executive Outcome that the RUF expressed willingness to peaceful negotiations, that the general election of Sierra Leone became possible and that millions of homeless refugees were able to return home.

However, the impacts and role of the Executive Outcome has often been overestimated, since the so-called stability and security brought about by it is, for the most part, very fragile and doesn't touch upon the deep-roote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auses behind the civil war of Sierra Leone.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motivation behind its military intervention is doubtful. It is just the many domestic clashes in these African countries that provide countless market opportunities and fortunes for such companies. They would undoubtedly be encountered with commercial failures if without such kinds of repeated and continuous conflicts.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and enlargement of such corporations is dependent on the lack of democracy, solidarity, law and order in Sierra Leone as such. Although the government of Sierra Leone had to pay a lot of cashes to them, it is difficult, or even impossible, for the foreign mercenary armies to restore peace, stability and democracy to the people of Sierra Leone. In the meanwhile, the temporary, volatile and compulsory stability is achieved at the great cost of the partial loss of national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sovereignty and of the
enormous humanitarian catastrophe.

III. Conclusion

It is clear from the case of the peace process of Sierra Leone that countries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Africa are still incapable of undertaking the expensive and complicated peacekeeping oper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led by the UN and Western developed countries will still be occupy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peace process of most of the countries suffering from internal disputes and conflicts. However, the role played by Africa itself is going to be strengthened. Th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will exert a more important effect in the peace process of Africa.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keenly realiz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the negligence of the development of Africa, in particular of the peace and stability of Africa, is destined to impact negatively upon the peace and development of the whole world. In short, the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of African countries afflicted with war and chaos should not be viewed as a financial and military burden, but a moral responsibility linked closely to the interests of the overall international society. Only by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lasting and irreversible peace and stability be achieved in Africa.

IV. Some Comments

Finally, I would like to make some comments on the role that China, Japan and Korea can play in the peace process of Africa. A number of advantages have already existed on the basis of which China, Japan and Korea could develop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African countries. None of the three countries has a history of colonizing Africa, thus no question is left over by history between them and Africa.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all exerting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s in Asia and even in the world. China in particular is one of the standing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 have noted that Japan and Korea have been participating more and more frequently in the re-construction of many African countries and among the donating countries Japan is bearing the largest share of peacekeeping expenses only next to the United States. As regards China, it has called, in many occasions,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how solicitud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Africa and sent peacekeeping staff to many of the African countries. But compared with the leading position occupied by the
west powers in the African peace process, the voice of Asia represented by China, Japan and Korea is still very weak. Despite that each of the three countries has its own unique diplomatic strategy and interests, they could, I think, cooperate in some respects in helping African countries realize peace, which will be beneficial not only for the enhancement of the influences of Asian countries in Africa and the world, but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African countries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economy.

Bibliography


Economic Cooperation in MENA Region

Seong Min Hong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CONTENTS

1. MENA
2.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3. Concluding Remarks

1. MENA

1) General background and objective of MENA

For the first time in recent history, Arab and Israeli business people met and interacted in an open forum to discuss the mutual benefits of regional commercial and scientific exchange from October 31 to November 2, 1994. Participants agreed to meet in the coming year to continue build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required to consolidate the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of the Casablanca Summit. The goal of Middle East/North Africa Economic Summit specified at Amman Declaration as follows:

"The goals of the Summit were to facilitate the expansion of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region, to cement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will ensure that end, and to work to enhance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is spirit, business leaders from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other regions were able to conclude a number of significant commercial and business transactions at the Summit that will help augment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region and contribute to its broad-based economic development. These ventures involved projects in the fields of tourism, tele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Reflecting this public-private partnership, a number of these ventures will benefit from government guarantees,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iddle East/North Africa Economic Summit, Amman Declaration; 1995).

2) MENA Summit

The first summit was presided by the Kingdom of Morocco. In August 1994, King Hassan II of Morocco, created a dramatic breakthrough in the glacial progress of contact and concrete accomplishment. He invited representatives of Middle East and North African countries, the United States,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to attend a three day conference in Casablanca, Morocco. This conference, which was conven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as an opportunity to discuss a framework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scientific exchange.

King Hassan II also invited business people from the region and from the developed world to attend the event and to begin the process of open discussion and discovery fundamental to the establishment of profitable economic relations on the eve of the 21st century. In response to the Monarch’s call, over 3,000 senior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leading economic figures from 61 countries attended the Casablanca Summit, from October 31 to November 2, 1994. Its main goal was to allow business people of the region to meet and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the Middle East.

The second Middle East/North Africa Economic Summit was held in Amman, Jordan under the patronage of His Majesty King Hussein bin Talal from October 29–31 1995. The Summit, cosponsor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with the support of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Japan, brought together government and business leaders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Europe, the Americas, and Asia.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e Amman Summit was the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Secretariat, based in Morocco (http://www.mena.org).

The third MENA Economic Summit took place in Cairo from November 12 to 14, 1996. 63 n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This is in addition to some 850 international companies and 1500 businessmen and investors. The summit is aimed at enhancing the peace process by widening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including Israel. One of the basic aims of the conference is to create a huge market for profitable investment in the region. It
also aims to open Arab markets to Israel. It is an attempt to fre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Arabs and Israel from political restrictions and is designed in essence to render powerless the Arab economic boycott of Israel (Hassan Tahsin, 1996: 1). And the fourth Summit will be held in Doha, Qatar in Autumn, 1997.

2.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MDF)

Some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at Amman Summit in 1995. A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ill be established in Cair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Tourism Board, the Middle East–Mediterranean Travel and Tourism Association, to facilitate tourism and promote the region as a unique and attractive tourist destinati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Business Council to promote cooperation and trade among the private sectors of the countries of the region. The formal inauguration of the Economic Summit Executive Secretariat, which is located in Rabat and works to advanc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moting contacts, sharing data, and foster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region. The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appreciation to the Moroccan Government for its contribution to this effort, and confirmed their support for its ongoing activities.

As a complement to the regional institutions called for at Casablanca, the Steering Group of the Multilateral Peace Negotiations has decided to establish REDWG Monitoring Committee Secretariat as a permanent regional economic institution to be based in Amman. All participating parties have agreed that this institution will promote and strengthe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regional parties strongly recommend that the Secretariat’s activities will cover the range of sectors within the REDWG Monitoring Committee’s work, ie infrastructure, tourism, trade, finance, and areas within the Copenhagen Plan of Action. The core partie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members of the Monitoring Committee undertake to finalize the appropriate document on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functions of this institution, which will be submitted to the next meeting of the REDWG plenary, with a view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stitution’s activities in the first half of 1996. This REDWG plenary will consider the matter, take appropriate action, and report to the upcoming meeting.
of the Multilateral Steering Group.

The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EDI) of the World Bank and the Government of Morocco, with the assistance of the Executive Secretariat of MENA Economic Summit, and on behalf of a diverse consortium of governmental, private sector, and NGO partners, is organizing a major conference, Knowledge and Skills for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Age in Marrakech, Morocco in 1997.

This conference will launch the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MDF), a broad partnership initiative devoted to harness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for improved policies to alleviate poverty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diterranean region. The MDF will pursue its objectives by organizing an annual development fair for the region, working to disseminate knowledge, and encouraging the formation of skills among the development community in the region (The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1997, http://www.mena.org).

The efforts of the Mediterranean Development Forum a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roughout the region, countries are confronting similar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 their economies become more integrated with the global economy. The principal objectives of the MDF initiative are to:

- help develop, codify, and distribute knowledge about best practice approaches to development (as well as development pitfalls) from those engaged in a broad range of related sectors in the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 create a dialogue within the region among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development community, and the private sector on the importance of knowledge, and on strategies for building and mobilizing knowledge; explore the critical role of learning and knowledge in building effective management, good governanc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rough lessons drawn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 investigate the impac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on economic growth, drawing attention to the interac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at enable them to harness technology in productive ways to meet regional needs (Objective of the MDF, 1997; http://www.mena.org).

The core participating countries are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Mediterranean, with the geographical reference used in its broad sense. This would include the countries of the Arab League, Iran, and Turkey.
3. Concluding Remarks

Various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Middle East after the peace treaty. Among them, it is noticeable that Israeli changed their mind. Nowadays Israelis take more flexible stand than befo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Palestinian State. Accordingly, it seems that these situations greatly affec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nter Arab and non-Arab. It also affects the economic cooperation that strengthens the economic bloc in the form of Arab unity in the Middle East.

In inter-Arab side, Syria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rab Common Market, having the main point of free trade and duty free with Egypt and six Gulf states including Syria on June 8, 1997. Mubarak, the Egyptian president welcomed it at once and came to an agreement for its foundation in Damascus on June 25. It is important that Egypt become a leading state in this trend. To discuss the Free Trade Zone issue as a previous stage of Arab Common Market, Egypt is reinforcing relations with Libya, Saudi Arabia and the neighbouring Arab countries. It is reported that Mubarak visited Libya to conclude the Free Trade Agreement on June 12, 1997 and discussed the comprehensive issues with Qadafi, Libyan president. After the peace treaty between Israel and PLO, it is a remarkable characteristics that Arab world strengthens the unity against Israel in Arab economic cooperation. In short, Arab countries make an effort to embody the establishment of Arab Common Market and Egypt hopes to play the major role among them.

In non-Arab side, Turkey established a new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D-8' that consists of Turkey, Iran, Indonesia, Malaysia, Pakistan, Bangladesh, Nigeria and Egypt in Istanbul on June 15, 1997. D-8 launched to compete with G-7. It is a Pan-Islamic economic organization that includes Arab, non-Arab, Asia and the Middle East. The Middle East countries struggle for survival under WTO system. Taking into account EU, they hope to unite in the form of Arab country or Islamic country. Another economic cooperation moves including MENA will follow the peace process of in the Middle East.

By the reason of it, 'Pan-Islamic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spreading widely in the region. In short, Pan-Islamic economic bloc aims tha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bloc, that is consisted of the developing countries beyond the Arab concept, reduce the political dispute and extend the geographical bound. These facts gives Turkey the opportunity as a mediator in the non-Arab economic cooperations.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moreover,
the reorganization of the Middle Eastern economic order is accelerating and the pattern of economic blocs tends to divide it into two parts, i.e. Arab vs Israel or advanced countries vs Islamic countries.
아랍아프리카센터 연혁

1998. 2. 1 아랍아프리카센터 창립
1998. 2. 20 제 1차 정기 세미나(김종도, Socialism of Qadhafi in Libya: 장촉동태극당) 개최
1998. 3. 10 아랍아프리카센터 개원 세미나 개최(분관 1층 세미나실)
1999. 3. 2 명지대학교 리서치 아카데미산업 연구센터 설립 접수인준
1999. 7. 22 한국연구소총람 편찬위원회 동체
1999. 2. 25 이슬람경제의 사상과 적용, 도서출판 민선
1999. 12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창간
1999.12.28 현대한아시아학술교류(이종택)
2000. 3.13 제1기 중동아프리카 체험컨설팅 과정 개설(3.13-6.13)
2000. 7.20 ISSN 1228-7444 획득
2000. 8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2권 제1호(통권2호) 발간
2001. 2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2권 제2호(통권3호) 발간
2001. 7.12 home page 개설; http://arabafro.web.riss4u.net
2001. 8. 8 제 26차 정기학술대회 개최(명지대 본관 3층 세미나실)
2001. 8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3권 제1호(통권4호) 발간
2002. 3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3권 제2호(통권5호) 발간
2002. 5 종합경제사회연구원과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공동발행 합의
2002. 8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4권 제1호(통권6호) 공동발간
2003. 2 아프로아랍 연구(AfroArab Study) 제4권 제2호(통권7호) 공동발간

아프로아랍 연구
제 4 권 제 2 호 2003. 2

04 심의 심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
14 이효영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23 강형식 아프리카 분쟁지역 다이아몬드 규제
42 홍성민 9·11 테러 사태와 북한
52 정성률 팔레스타인 분쟁의 구조와 민족적 원인: Herzl의 Jewish State 함의
60 김병일 중앙아시아 튀르크인들의 부식
76 성동기 중앙아시아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http://arabafro.web.riss4u.net
<table>
<thead>
<tr>
<th>연혁</th>
</tr>
</thead>
<tbody>
<tr>
<td>1993년 8월 15일</td>
</tr>
<tr>
<td>1994년 12월 29일</td>
</tr>
<tr>
<td>1995년 3월 31일</td>
</tr>
<tr>
<td>1995년 10월 9일</td>
</tr>
<tr>
<td>1996년 11월 2일</td>
</tr>
<tr>
<td>1997년 12월 29일</td>
</tr>
<tr>
<td>1998년 6월 30일</td>
</tr>
</tbody>
</table>

RESEARCH INSTITUTE OF THE EAST–WEST ECONOMY & SOCIETY (RIES)  
151-600 KWANAK P.O.BOX 49, SEOUL, KOREA Tel: 82-2-876-4249, Fax: 82-2-876-4349